



# 2020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임완섭

강지원·고혜진·김문길·김태완·안수란·최혜진·황도경·황주희·이지혜·고경표·구정진

박형준·정용문·황정하



**【연구책임자】**

**임완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진】**

**강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고혜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김문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안수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최혜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황도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황주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지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고경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구정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박형준**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연구위원

**정용문** 경남대학교 교수

**황정하** 전남대학교 부교수

---

# 제|출|문

##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귀부와 용역계약(2020. 6. 30.)한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0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조 흥 식

---





<b>제1장 서론</b>	<b>1</b>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과 방법	8
<b>제2장 부정수급과 사회보장급여의 개념과 범위</b>	<b>17</b>
제1절 부정수급의 개념과 범위	19
제2절 사회보장급여의 유형구분과 실태조사 범위	37
<b>제3장 기본조사 분석</b>	<b>47</b>
제1절 기본조사 개요 및 자료 현황	49
제2절 기본조사 결과 분석	52
제3절 현금급여 분석	71
제4절 부정수급 관리체계 현황과 미파악 사업 분석	82
<b>제4장 실태조사 분석</b>	<b>95</b>
제1절 실태조사 개요	97
제2절 실태조사 기본결과 분석	105
제3절 실태조사 심층분석	154
<b>제5장 주요 국가 사례 연구</b>	<b>207</b>
제1절 개요	209
제2절 미국의 사회보장 부정수급 관리와 함의	211
제3절 호주의 사회보장 부정수급 관리와 함의	257
제4절 한국의 현금급여 부정수급 관리와 함의	284

<b>제6장 결론 : 주요 결과와 정책함의</b>	<b>309</b>
제1절 기본조사	311
제2절 실태조사	319
제3절 사례연구	336
제4절 주요 영역별 함의 및 향후 실태조사 추진 방향	342
<b>참고문헌</b>	<b>357</b>
<b>부록</b>	<b>365</b>
[부록 1] 정부 주요 심사의 예산 규모 기준	365
[부록 2] 다사업 등 처리 현황	371
[부록 3] 기본조사표	374
[부록 4] 실태조사표	381
[부록 5] 부정수급 감지 편지(좌)와 전화 메시지(우)	394
[부록 6] 센터링크 모바일 앱(Express Centrelink)	395
[부록 7] 소득 최신화 과정	396
[부록 8] 센터링크 부정수급 고지서	397
[부록 9] 환수결정액 및 환수실적	398
[부록 10] 기본조사 포함 사회보험 사업	402
[부록 11] 부정수급 규모 미파악 사업 리스트	403

# 표 목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 1-1〉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 결정액 및 유형 .....	4
〈표 1-2〉 국고보조금 분야별 부정수급 환수 결정액 .....	5
〈표 1-3〉 부정수급 유형화1 .....	12
〈표 1-4〉 부정수급 유형화2 : 유형화1에 고의성 판단 불가 추가 .....	12
〈표 1-5〉 부정수급 유형화3 : 유형화2에 수급자를 서비스 수요자와 서비스 공급자로 구분 .....	13
〈표 1-6〉 부정수급 유형화4 : 유형화 3에 행위 주체간의 공모 여부를 추가 .....	13
〈표 2-1〉 사회 프로그램 오류 : type I , type II 오류 .....	23
〈표 2-2〉 e나라도움의 부정수급 유형화 .....	24
〈표 2-3〉 영국 고용연금부(DWP)의 부정수급 유형별 분류 .....	25
〈표 2-4〉 부정수급과 유사 개념 .....	28
〈표 2-5〉 사회보장사업 분류에 따른 사회보장급여 형태 (지원형태) .....	40
〈표 2-6〉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의 급여지원형태 비교 .....	41
〈표 2-7〉 사회보장급여 지원형태 현황 .....	42
〈표 2-8〉 사회보장급여 지원형태별 예산(집행액) 현황 : 2019년 기준 .....	43
〈표 3-1〉 기본조사 분석을 위한 기준변수 .....	52
〈표 3-2〉 사업지원형태 1 .....	53
〈표 3-3〉 사업지원형태 2 .....	53
〈표 3-4〉 자산기준 유무 .....	54
〈표 3-5〉 보장기관 .....	55
〈표 3-6〉 근거법령에 부정수급 관리근거 유무 .....	56
〈표 3-7〉 근거법령에 제시된 대응 조치 중 1순위 대응조치 .....	57
〈표 3-8〉 관련지침에 부정수급 관리 근거 유무 .....	59
〈표 3-9〉 부정수급 관리 전산시스템 운영여부 .....	60
〈표 3-10〉 사업지원형태별 부정수급 신고체계 운영여부 .....	61
〈표 3-11〉 부정수급 파악 여부 .....	62
〈표 3-12〉 사업지원형태별 부정수급 파악 방법 .....	63
〈표 3-13〉 사업지원형태별 부정수급 미파악 사유 (중복응답) .....	65
〈표 3-14〉 사회보장급여 환수 규모 : 198개 사업 대상 .....	66
〈표 3-15〉 부정수급 규모 : 환수결정액 기준 .....	68
〈표 3-16〉 부정수급 규모 : 환수실적액 기준 .....	70
〈표 3-17〉 현금급여 사업의 자산기준 유무 현황 .....	72

〈표 3-18〉 현금급여 사업의 보장기관 현황 .....	72
〈표 3-19〉 현금급여 사업의 부정수급 관리 근거법령 유무 .....	73
〈표 3-20〉 현금급여 사업의 근거법령에 따른 부정수급 관련 1순위 대응조치 .....	74
〈표 3-21〉 현금급여 사업의 부정수급 관련지침 유무 .....	75
〈표 3-22〉 현금급여 사업의 부정수급 규모 파악 여부 .....	76
〈표 3-23〉 현금급여 사업의 부정수급 규모 파악 방법 .....	77
〈표 3-24〉 현금급여 사업의 부정수급 규모 미파악 사유 (중복응답) .....	78
〈표 3-25〉 현금급여 사업의 부정수급 관리 전산시스템 운영여부 .....	78
〈표 3-26〉 부정수급 신고체계 운영여부 .....	79
〈표 3-27〉 현금급여의 부정수급 규모 : 환수결정액 기준 .....	81
〈표 3-28〉 현금급여의 부정수급 규모 : 환수실적 기준 .....	82
〈표 3-29〉 부정수급 관리체계 현황 .....	84
〈표 3-30〉 관리체계 유무에 따른 환수결정액 평균 .....	84
〈표 3-31〉 관리체계 현황별 환수결정액 평균 .....	85
〈표 3-32〉 관리체계 유무에 따른 환수결정액의 전체 예산 중 비율 .....	86
〈표 3-33〉 관리체계 현황별 환수결정액의 전체 예산 중 비율 .....	86
〈표 3-34〉 관리체계 유무별 환수결정 건수와 부정수급 건수 (평균) .....	87
〈표 3-35〉 관리체계 현황별 환수결정 및 환수실적 건수와 부정수급 건수 (평균) .....	88
〈표 3-36〉 각 관리체계 유무별 환수결정 및 부정수급 건당 금액 .....	89
〈표 3-37〉 관리체계 현황별 환수결정 및 부정수급 건당 금액 .....	89
〈표 3-38〉 부정수급 규모 현황 미파악 사유 .....	91
〈표 3-39〉 부정수급 규모 미파악 유형별 부정수급 관리 근거 현황 .....	92
〈표 3-40〉 부정수급 규모 미파악 유형별 예산집행액 현황 .....	92
〈표 3-41〉 부정수급 규모 미파악 유형별 보장기관 현황 .....	93
〈표 4-1〉 실태조사 결과 현황 : 완수율 .....	101
〈표 4-2〉 실태조사 분석을 위한 주요 변수 검토 .....	102
〈표 4-3〉 실태조사 사업 유형별 분류 결과 .....	103
〈표 4-4〉 응답자 특성 .....	106
〈표 4-5〉 응답부서 현황 : 구성원 수, 담당 사회보장사업 수 .....	107
〈표 4-6〉 해당 사업 현황 I : 업무담당자수, 월평균 신청자(건) 수 현황 .....	108
〈표 4-7〉 해당 사업 현황 II : 2019년 기준 예산 집행액, 수급자 수, 부정수급 관리 부서원수 .....	109





〈표 4-8〉 부정수급 관련 확인/적발을 위한 주요 조치 .....	112
〈표 4-9〉 부정수급 관련 확인/적발을 위해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조치 (1순위) .....	114
〈표 4-10〉 부정수급 관련 확인/적발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조치 (1순위) .....	116
〈표 4-11〉 부정수급 확인/적발 위해 파악해야 할 변동사항 (복수응답) .....	117
〈표 4-12〉 부정수급 확인/적발 조치(노력)과정에서 어려운 점 (1순위) .....	119
〈표 4-13〉 부정수급 관리 부서원이 부정수급 관련 업무에 투입한 업무량 .....	120
〈표 4-14〉 감사부서에서 부정수급 관리 여부 .....	121
〈표 4-15〉 감사부서에서 해당사업 외의 다른 복지/사회보장분야 사업 관리 여부 .....	122
〈표 4-16〉 감사부서 구성원 수 .....	123
〈표 4-17〉 부정수급 신고/접수 체계 자체 운영 여부 .....	123
〈표 4-18〉 자체 운영 신고/접수 체계 운영 형태 .....	124
〈표 4-19〉 부정수급 전담 조직 여부 .....	124
〈표 4-20〉 전담조직 설치 형태 .....	125
〈표 4-21〉 전담조직에 해당사업 포함 여부 .....	126
〈표 4-22〉 전담부서 부서원 .....	126
〈표 4-23〉 부정수급 관련 현황(환수결정액, 환수실적) 정기적 관리 여부 .....	127
〈표 4-24〉 부정수급 현황(환수결정액, 환수실적) 관리 방법 .....	128
〈표 4-25〉 부정수급 인지(접수) 경로 .....	130
〈표 4-26〉 부정수급에 대해 일반법 등에 규정된 조치 .....	131
〈표 4-27〉 실태조사 대상사업의 부정수급 수준 (응답자별 평균) .....	133
〈표 4-28〉 실태조사 대상사업의 부정수급 규모 (합계) .....	134
〈표 4-29〉 실태조사 대상사업의 행정처분 현황 (응답자별 평균) .....	135
〈표 4-30〉 실태조사 대상사업의 행정처분 현황 (합계) .....	136
〈표 4-31〉 실태조사 대상사업의 수사의뢰 및 형사고발 현황 (합계) .....	137
〈표 4-32〉 환수결정 이후 원활한 환수 여부 .....	138
〈표 4-33〉 환수과정에서 어려움 겪는 이유 .....	139
〈표 4-34〉 보장기관의 해당사업 초기상담 담당여부 .....	141
〈표 4-35〉 보장기관의 초기상담 시 부정수급 관련 주의사항 안내 여부 .....	142
〈표 4-36〉 보장기관 외 해당사업 초기상담 기관 : 보장기관이 초기상담을 담당하지 않는 경우 .....	143
〈표 4-37〉 초기상담시 주의사항 안내 여부 : 보장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이 초기상담을 담당하는 경우 .....	144
〈표 4-38〉 초기 상담시 부정수급 관련 주의사항 안내 대상의 범위 .....	145

〈표 4-39〉 수급자격 및 급여 적정성 조사 실시 여부 .....	146
〈표 4-40〉 수급자격 및 급여 적정성 조사의 대상 범위 .....	147
〈표 4-41〉 수급자격 및 급여 적정성 확인조사 대상 비율 .....	148
〈표 4-42〉 부정수급 교육 참석 여부 (2019년 기준) .....	149
〈표 4-43〉 부정수급 교육 참석 횟수 .....	150
〈표 4-44〉 부정수급 교육 주최 .....	151
〈표 4-45〉 부정수급 관리 및 예방 도움 정도 .....	152
〈표 4-46〉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것 (중복응답) .....	153
〈표 4-47〉 보장기관이 시군구인 공공부조제도 현황 .....	154
〈표 4-48〉 보장기관이 시군구인 공공부조제도 부정수급 접수 현황 .....	155
〈표 4-49〉 보장기관이 시군구인 공공부조제도 부정수급 관련 조치 현황 (전체 건수) .....	156
〈표 4-50〉 보장기관이 시군구인 공공부조제도의 환수 현황 (평균) .....	156
〈표 4-51〉 보장기관이 시군구인 공공부조제도의 행정처분 현황 (평균) .....	157
〈표 4-52〉 보장기관이 시군구인 공공부조제도의 부정수급 관리 현황 .....	158
〈표 4-53〉 감사부서의 해당 사업 관리 여부에 따른 부정수급 관련 조치 현황 .....	160
〈표 4-54〉 자체 운영 신고·접수 체계 여부에 따른 부정수급 조치 현황 .....	161
〈표 4-55〉 부정수급 전담조직 설치 여부에 따른 부정수급 조치 현황 .....	161
〈표 4-56〉 부정수급 전담조직 설치형태에 따른 부정수급 조치 현황 .....	162
〈표 4-57〉 부정수급 현황의 정기적 관리 여부에 따른 조치 현황 .....	163
〈표 4-58〉 부정수급 현황 관리 방법에 따른 조치 현황 .....	163
〈표 4-59〉 부정수급 교육 참여에 따른 부정수급 조치 현황 .....	165
〈표 4-60〉 진단적 기준 적용 사업 .....	167
〈표 4-61〉 진단적 기준 사업 부서의 구성원, 사회보장 사업 수, 월평균 신청자 수 .....	168
〈표 4-62〉 진단적 기준 사업 현황 .....	169
〈표 4-63〉 진단적 기준 사업의 환수결정 및 환수실적 (평균) .....	170
〈표 4-64〉 진단적 기준 사업 부정수급 환수실적 (합계) .....	170
〈표 4-65〉 진단적 기준 사업 부정수급에 대해 일반법 등에 규정된 조치 .....	171
〈표 4-66〉 진단적 기준 사업의 행정처분 (합계) .....	172
〈표 4-67〉 진단적 기준 사업: 감사부서에서 부정수급 관리 여부 .....	172
〈표 4-68〉 진단적 기준 사업: 부정수급 현황(환수결정액, 환수실적) 관리 방법 .....	173
〈표 4-69〉 진단적 기준 사업: 해당사업 초기상담 담당여부 .....	173



〈표 4-70〉 진단적 기준 사업: 초기상담 시 부정수급 주의사항 안내 여부 .....	174
〈표 4-71〉 진단적 기준 사업: 해당사업 초기상담 기관 .....	174
〈표 4-72〉 진단적 기준 사업: 부정수급 교육 주최 .....	175
〈표 4-73〉 보장기관이 시군구인 사회서비스 사업 현황 .....	180
〈표 4-74〉 보장기관이 시군구인 사회서비스 사업의 부정수급 관련 접수 현황 .....	181
〈표 4-75〉 보장기관이 시군구인 사회보장사업의 부정수급 관련 조치 현황 .....	181
〈표 4-76〉 보장기관이 시군구인 사회보장사업의 환수 현황 (평균) .....	182
〈표 4-77〉 보장기관이 시군구인 사회보장사업의 행정처분 현황 (평균) .....	183
〈표 4-78〉 부정수급 관리 현황 .....	184
〈표 4-79〉 감사부서 관리 여부에 따른 환수규모 및 지급정지 현황 (평균) .....	186
〈표 4-80〉 자체 운영 신고·접수 체계 여부에 따른 부정수급 조치 현황 (평균) .....	187
〈표 4-81〉 부정수급 전담조직 설치 여부에 따른 부정수급 관련 조치 현황 (평균) .....	187
〈표 4-82〉 부정수급 전담조직 설치형태에 따른 부정수급 관련 조치 현황 (평균) .....	188
〈표 4-83〉 부정수급 현황의 정기적 관리 여부에 따른 부정수급 관련 조치 현황 (평균) .....	189
〈표 4-84〉 부정수급 현황 관리 방법에 따른 부정수급 관련 조치 현황 (평균) .....	189
〈표 4-85〉 부정수급 교육 참여에 따른 부정수급 조치 현황 .....	190
〈표 4-86〉 보장형태별 보장기관 .....	193
〈표 4-87〉 부서 내 부정수급 관리 인원 배치 여부 .....	193
〈표 4-88〉 감사부서에서 해당사업(고용 및 일자리보장 사업) 부정수급 관리 여부 .....	194
〈표 4-89〉 보장기관에 부정수급 전담 조직 유무 : 고용 및 일자리보장 중심의 현황 .....	194
〈표 4-90〉 신고 및 접수체계 운영 .....	195
〈표 4-91〉 보장형태별 부정수급 확인 및 적발 노력 .....	196
〈표 4-92〉 고용 및 일자리보장 사업의 부정수급 확인 및 적발 노력 .....	196
〈표 4-93〉 보장형태별 부정수급 확인 및 적발을 위해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노력 (1+2순위) .....	197
〈표 4-94〉 고용 및 일자리보장 사업의 부정수급 확인·적발을 위해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노력 (1+2순위) .....	198
〈표 4-95〉 보장형태별 부정수급 확인 및 적발에 가장 효과적인 조치 (1+2순위) .....	199
〈표 4-96〉 고용 및 일자리보장 사업의 부정수급 확인 및 적발에 가장 효과적인 조치 (1+2순위) .....	199
〈표 4-97〉 보장형태별 부정수급 확인 및 적발을 위해 더 중점적으로 파악해야 할 변동사항 (복수응답) ...	200
〈표 4-98〉 고용 및 일자리보장 사업의 부정수급 확인·적발을 위해 더 중점적으로 파악해야 할 변동사항 (복수응답) .....	200



〈표 4-99〉 보장형태별 부정수급 확인 및 적발 과정에서의 어려움 (1+2순위) .....	201
〈표 4-100〉 고용 및 일자리보장 사업의 부정수급 확인 및 적발 과정에서의 어려움 (1+2순위) .....	201
〈표 4-101〉 보장형태별 부정수급 발생시 법률 및 지침상 규정된 조치 (복수응답) .....	202
〈표 4-102〉 고용 및 일자리보장 사업의 부정수급 발생시 법률 및 지침상 규정된 조치 (복수응답) .....	202
〈표 4-103〉 보장형태별 부정수급 접수 건수 (2019년) .....	203
〈표 4-104〉 보장형태별 부정수급 인지 경로 .....	203
〈표 4-105〉 보장형태별 부정수급 발생 여부 (2019년) .....	204
〈표 4-106〉 보장형태별 부정수급 발생시 환수조치의 수월성 .....	205
〈표 4-107〉 보장형태별 부정수급 발생시 환수과정이 어려운 이유 (복수응답) .....	205
〈표 5-1〉 연방정부의 부적정 지출 관리·운영 주체별 주요 역할 .....	213
〈표 5-2〉 2019년 미국 연방정부의 부적정 지출액 .....	227
〈표 5-3〉 연도별 미국의 부적절 지급액 (2012-2019) .....	227
〈표 5-4〉 2019년도 부적정 지급 원인별 지급액 .....	228
〈표 5-5〉 기관 IG(감사관)에 의해 보고된 IPERA 비순응으로 보고된 부적정 지출 추정치 .....	231
〈표 5-6〉 연도별 미국의 우선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부적절한 지급액 (2012-2020) .....	232
〈표 5-7〉 2019년 연방정부 부처·기관별로 확인된 부적정 지출액 .....	233
〈표 5-8〉 부적정 지출의 원인별 유형구분 .....	245
〈표 5-9〉 부정수급 유형별 규모 .....	260
〈표 5-10〉 사회보장 수급자 및 부정수급 .....	261
〈표 5-11〉 부정수급 제보 건수 .....	273
〈표 5-12〉 데이터 매칭 외부데이터 원천(external sources) .....	276
〈표 5-13〉 준수 프로그램 활동 (호주달러) .....	280
〈표 5-14〉 부정수급 대응 성과 (호주달러) .....	281
〈표 5-15〉 실태조사 대상 여부에 따른 예산 .....	289
〈표 5-16〉 부정수급 관리의 근거 및 신고체계 여부에 따른 현금급여 사업 현황 .....	290
〈표 5-17〉 현금급여 환수결정액 및 환수실적액 : 최대, 평균 .....	291
〈표 5-18〉 현금급여의 보장기관 유형 .....	292
〈표 6-1〉 주요 기준 변수별 현황 : 2019년 기준 .....	312
〈표 6-2〉 부정수급 미파악 사유 (중복 응답) .....	315
〈표 6-3〉 부정수급 관리 전산시스템, 신고체계 운영 여부 .....	316
〈표 6-4〉 부정수급 규모 : 환수결정액 기준 .....	317



〈표 6-5〉 부정수급 규모 : 환수실적 기준 .....	319
〈표 6-6〉 응답자 특성 .....	320
〈표 6-7〉 해당사업 담당자 수 및 부정수급 관리 부서원 수 (평균) .....	321
〈표 6-8〉 응답부서의 해당사업 부정수급 확인 및 적발 조치 .....	322
〈표 6-9〉 부정수급 확인 적발과정에서의 어려움 (1순위) .....	324
〈표 6-10〉 응답부서가 속한 보장기관 자체의 부정수급 관리 조직 현황 .....	326
〈표 6-11〉 부정수급 인지경로 (평균) .....	327
〈표 6-12〉 실태조사 대상사업의 부정수급 수준 (합계) : 자산 및 진단기준, 보장기관 .....	330
〈표 6-13〉 부정수급 조치실적 : 행정처분 (평균) .....	330
〈표 6-14〉 부정수급 조치실적 : 행정처분 (합계) .....	331
〈표 6-15〉 부정수급 조치실적 : 수사의뢰 및 형사고발 (합계) .....	332
〈표 6-16〉 환수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원활한 환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응답한 47.6% 대상) .....	332
〈표 6-17〉 초기상담 여부 및 부정수급 관련 주의사항 안내 여부 .....	333
〈표 6-18〉 수급자 자격 및 급여 적정성 조사 시 대상 범위 .....	334
〈표 6-19〉 부정수급 교육 참석 여부 .....	334
〈표 6-20〉 응답자가 참여한 부정수급 교육 주최 .....	335
〈표 6-21〉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	335
〈표 6-22〉 부정수급 조사대상 기관과 조사방법(안) .....	355

## 부표 목차

---

〈부표 1〉 여러 개 사업을 1개의 조사표로 보내준 경우(다사업)의 처리 결과 .....	371
〈부표 2〉 조사표를 각각 보내주었으나 통합이 필요한 사업 처리 결과 .....	373
〈부표 3〉 기본조사 환수결정액 총액 : 부정수급을 파악하고 있는 198개 사업 대상 .....	398
〈부표 4〉 기본조사 환수실적 총액 : 부정수급을 파악하고 있는 198개 사업 대상 .....	399
〈부표 5〉 기본조사 현금급여 환수결정액 총액 : 현금급여 78개 사업 .....	400
〈부표 6〉 기본조사 현금급여 환수실적 총액 : 현금급여 78개 사업 .....	400
〈부표 7〉 실태조사 대상사업의 부정수급과 오류수급 수준 (평균) .....	401
〈부표 8〉 실태조사 대상사업의 부정수급 및 오류수급 규모 (총액) .....	401
〈부표 9〉 기본조사 포함 사회보험 사업 .....	402
〈부표 10〉 기본조사 부정수급 규모 미파악 사업 리스트 (118개 사업) .....	403

# 그림 목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그림 2-1] World bank의 부정수급 유형화 : 고의성 여부 및 부정수급의 행위주체 .....	20
[그림 2-2] 귀책사유와 귀책결과(부정수급의 원인과 결과) .....	21
[그림 2-3] 부정수급과 유사 개념 구분(적격성과 수급 기준) .....	22
[그림 2-4] 부정수급과 사각지대의 유형화 .....	34
[그림 5-1] 부정수급 관리 방안 .....	214
[그림 5-2] 국가재정위원회(Chief Financial Offices Council, CFOC) 조직도 .....	215
[그림 5-3] 부적정 지출 방지를 위한 다부처 총괄위원회(ESC) 조직도 .....	217
[그림 5-4] ERM의 정책결정과정(policy framework) .....	220
[그림 5-5] 2019년 연방정부 프로그램별 부적정 지급액 .....	225
[그림 5-6] 2018년 기준 각 기관 감사(IG)가 IPERA 기준 준수 부처기관 수 .....	229
[그림 5-7] IPERA 미준수로 인해 보고된 부적정 지출 프로그램과 추정액(2016-2018) .....	230
[그림 5-8] 주요 프로그램별 총 지출액 .....	234
[그림 5-9] 주요 프로그램별 부적정 지급율 .....	235
[그림 5-10] 연방정부 주요 프로그램별 재정손실액(monetary loss)의 변화추이 .....	237
[그림 5-11] 우선 관리 프로그램(high-priority program) 정보 공개 예시(EITC) .....	239
[그림 5-12] 부적정 지출 분석 및 교정행동(corrective action) 절차 .....	244
[그림 5-13] 부적정 지출 예방을 위한 전략목표 체계 .....	254
[그림 5-14] 재정 왜곡 기소 의뢰 원천 .....	262
[그림 5-15] 사회보장 부정수급 기소 추세 .....	264
[그림 5-16] 복지부 조직 구조 .....	267
[그림 5-17] 부정수급 분류 모델 .....	269
[그림 5-18] 준수 프로그램 접근법 .....	271
[그림 5-19] 준수 프로그램 흐름도 .....	274
[그림 5-20] 사회보장급여 업무 프로세스 .....	288
[그림 5-2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업무 프로세스 .....	295
[그림 5-22]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	298
[그림 5-23] 교육급여 .....	299
[그림 5-24] 어린이집 지원 .....	302
[그림 5-25]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	304
[그림 5-26] 아동안전지킴이 .....	304
[그림 5-27]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	306



[그림 5-28] 모성보호 육아지원 .....	306
[그림 6-1] 개별 근거법령 유무, 근거법령에 제시된 1순위 대응조치*, 관련지침 유무 .....	313
[그림 6-2] 부정수급 파악 여부 및 파악 방법 .....	314
[그림 6-3] 부정수급 관리 전산시스템, 신고체계 운영 여부 .....	315
[그림 6-4] 부정수급 규모 : 환수결정액 적용 .....	317
[그림 6-5] 응답부서가 속한 보장기관 자체의 부정수급 관리 조직 현황 .....	325
[그림 6-6] 실태조사 대상사업의 부정수급 수준(합계액) : 전체 .....	328
[그림 6-7] 실태조사 대상사업의 부정수급 수준(합계액) : 자산 및 진단기준, 보장기관 .....	329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제 1 장

## 서론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 내용과 방법



# 제 1 장 서론

##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사회안전망에 대한 필요성과 복지수요의 증가는 사회보장제도 확대와 함께 사회 보장지출을 대폭 확대시키고 있음

○ 사회보장제도의 성숙과 복지 수요의 증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양적 성장과 함께 이에 수반되는 사회보장급여의 지출을 지속적으로 확대시키고 있음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제도의 성숙, 기초노령연금의 기초연금으로의 전환('14년 7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로의 개편('15년 7월), 아동수당 도입('18년 9월) 도입 등 사회보장급여의 보장수준 강화 또는 적용범위 확대가 이뤄지고 있음

\* 보건·복지 예산 : '17년 129.5조 → '18년 145조 → '19년 161조 → '20년 180.5조  
(나라살림 예산개요 각연도)

- 또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같은 미래사회 위기 대응과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사회적 위기에 대응하여, 사회보장급여 지출의 확대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및 가계경제의 위기해소를 위해 약 14.2조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됨(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9.23.)

○ 지속적인 사회보장제도의 확대 및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복지지출을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 전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

- 이러한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를 구성하고 있는 각 프로그램들이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이는 정부정책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국민들의 정부 정책에 대한 수용성 제고를

#### 4 2020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위해서도 필요

- 사회보장지출의 확대에 따라 부정수급 또는 부적정지출도 같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부정수급이 사회보장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게 된다면,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현황파악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방안 제시가 필요함

□ 즉, 사회보장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부정수급 관리를 통한 효율적 집행과 신뢰성 제고가 요구됨

○ 부정수급은 예산낭비 및 국민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신뢰성 측면에서 관리 및 축소되어야 할 문제임

- 사회보장급여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해당 예산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효율적 집행은 제도 운영의 필수적 요건이며,
-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 납부로 마련되는 사회보장급여가 거짓 또는 속임수 등과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인해 잘못 제공되고 있다면, 이는 신뢰성 훼손으로 이어져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표 1-1〉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 결정액 및 유형

(단위: 억 원)

구 분	합 계		과오수급(경과실 등)		의도적(고의·거짓)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9년(1~7월)*	120,869	647	117,124	485	3,745	162
(국고보조금)	119,511	601	116,602	469	2,909	132
(지방보조금)	1,358	46	522	16	836	30
'18년(1~12월)	42,652	388	34,264	226	8,388	162
(국고보조금)	40,856	349	33,941	216	6,915	133
(지방보조금)	1,796	39	323	10	1,473	29

자료: 관계부처합동(2019.10, p.4).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방안.

□ 정부는 사회보장제도의 양적 성장에 발맞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도입하여 수급자격이 없는 비수급자의 부적절한 수급을 적발하는 한편, 유사·중복사업을 정비하여 사회보장분야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강화시키고 있음

- 또한 범정부적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부정수급에 대응하고 있음('13년 12월 '복지사업 부정수급 제도개선 종합대책', '14년 12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 '18년 1월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 등) (임완섭 외, 2019)
-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대상자가 급여를 수급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그 규모도 증가하고 있어 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 국고보조금 사업 등을 살펴보았을 때 발생건수와 금액이 확대되었는데, 아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부정수급의 발생하는 분야는 주로 고용 또는 복지 등 사회보장급여와 관련된 영역임을 알 수 있음

〈표 1-2〉 국고보조금 분야별 부정수급 환수 결정액

(단위: 억 원)

	합계	고용	복지	산업	농림수산	문화	기타
부정수급액	601	368	148	53	16	15	1
(건수)	119,511	96,870	21,754	41	776	11	59

자료: 관계부처합동(2019.10, p.4).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방안.

- 따라서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발생 현황 및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그 규모와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활용한 부정수급 대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임
- '18년 12월 개정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함

제19조의2(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속임수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보장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회보장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 대하여 보장기관이 효과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그 발생 현황, 피해사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하지만, '사회보장급여'는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며, 부정수급의 개념도 각 제도 및 적용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 첫 번째로 실시되는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의 성공적인 수행과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에 적용할 사회보장급여의 범위 및 부정수급의 개념 설정이 필요함
- 이러한 범위 및 개념 설정과 2020년 실시될 부정수급 실태조사의 실효성 있는 수행을 준비하기 위해 연구용역으로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방안 연구”가 2019년에 수행됨
  - 해당 연구용역은 ‘사회보장급여법’에 의거하여, 2020년 실시되는 실태조사에서 초점을 맞춰야 할 부정수급은 수급자 또는 행정담당자의 ‘고의’에 의해 발생하는 ‘협의의 부정수급’임을 제시하고 있음
  - 그리고 제도별 부정수급 사후관리 체계에 대해서도 파악하였는데, 조사결과 4대 사회보험의 경우 공공부조 또는 사회서비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정수급 사후관리 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실태조사가 제도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부정수급 사후관리 체계가 잘 갖춰진 사회보험 제도보다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 실태조사 수행과 결과 공표에 있어 명확한 결과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협의의 부정수급’을 중심으로 본 연구용역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사회보장급여는 매우 광범위하고 실태조사는 매 3년 마다 실시되기 때문에 실태조사의 대상을 달리하여 접근하는 경우, 향후 사회보험에 대한 파악도 가능
  - 본 연구용역에서는 향후 실태조사의 범위와 조사방향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제시할 예정임
- 첫 번째로 실시되는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의 성공적인 수행과 실효성 있는 성과물 제시를 위해서는,
  - 본 실태조사에 적용될 부정수급 개념에 대한 정의와 조사 및 분석 방법, 사회보장급여 특성 및 유형별 구분, 실태조사 설계와 조사방법 제시, 분석방법 및 정책함의 도출 등 실태조사 전반에 걸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연구용역 수행이 필요

## 2. 연구 목적 및 기대효과

- 본 연구는 복지지출의 지속적인 증가와 이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부정수급의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20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수행의 성과 제고를 위해,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접근방법을 적용시켜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 그 결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부정수급 관리와 축소에 필요한 관련 정보 및 정책함의를 제시하여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집행을 제고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임
- 사회보장급여법(제19조의2) 및 그 시행규칙에 따라 ‘부정수급 발생 현황 및 유형’, ‘부정수급 사후관리’, ‘부정수급 관리조직 및 운영’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 사회보장급여의 소관부처 또는 보장기관이 부정수급 관리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활용한 기초자료를 생산
    - \* 보장기관 :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 부정수급의 정확한 유형별 규모와 부정수급 관리실태 파악을 통해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함의를 제시하고, 이를 통한 사회보장급여의 지속가능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활용
- 기대효과
  -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수급 유형별 규모 등 정책판단의 핵심적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부정수급 실태조사 수행 및 분석을 통해 부정수급 관리체계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 할 수 있는 정책 함의 및 제언 제시
    - 불필요한 재정누수 방지로 포용적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 제고
      - 그간 지적된 재정누수 사례 및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정비 개선함으로써

#### 상당 규모의 재정절감 효과 기대

- 부정수급의 규모와 특성에 대한 제시로 지금까지 지속되어온 부정수급 등의 비적격 수급에 대한 관행과 인식을 바꾸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의 간접적 사전 예방 효과 기대
- 부정수급에 대한 체계적·지속적 관리 틀 마련
- 3년 주기의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그 결과의 공표를 통해 부정수급 관리조직의 대응 능력제고 및 부정수급 관련 전담 인력 또는 부서에 대한 논의가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 활용방안

- 사회보장급여 전체 및 유형별 부정수급 규모 파악을 통해 부정수급의 발생 규모 및 심각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고
- 사회보장급여 급여 중 부정수급의 대응의 우선순위 사업의 선정과 각 사업별 관리조직 중 취약한 부문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판단의 객관적 근거자료로 활용 가능
- 해당 자료의 공개를 통해 부정수급 문제 해결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고, 다양한 행정자료 및 통계자료와의 결합을 통해 광범위한 사회보장 분야에서 정책집행의 효율성 제고
- 1차 조사에 해당하는 본 실태조사 수행 시 발생된 문제점과 특성을 분석하여 '23년 실시되는 2차 조사에 반영

## 제2절 연구 내용과 방법

### 1. 연구 내용

#### □ 실태조사 주요 내용

- 사회보장급여법(제19조의2) 및 그 시행규칙에 따라 '부정수급 발생 현황 및 유형', '부정수급 사후관리', '부정수급 관리조직 및 운영'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



## ○ (제19조의2 ①) :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 “보건복지부장관은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보장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회보장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 대하여 보장기관이 효과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그 발생 현황, 피해사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2조의2(실태조사 방법·내용 등)

- 부정수급 발생 현황 및 유형
- 부정수급 사후관리
- 부정수급 관리조직 및 운영
- 그 밖에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 □ 주요 연구 내용

## ○ 부정수급에 대한 개념적 접근과 유형화

## ○ 사회보장급여의 범위와 지원 유형별 현황 분석(현금, 현물, 대여·감면, 바우처, 시설입소, 프로그램, 자원봉사 등)

## ○ 기본조사

- 부정수급의 규모 제시(부정수급 발생 현황 및 유형)
- 부정수급의 유형별 현황 파악과 실태조사를 위한 기본정보 수집(예산, 사업 지원 형태, 보장기관, 부정수급 현황 파악 방법 등)

## ○ 실태조사(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2조의2)

- 부정수급 발생 현황 및 유형, 부정수급 사후관리, 부정수급 관리조직 및 운영, 기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파악
- 부정수급 관리조직 및 운영과 그 밖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 ○ 사례연구

- 해외 주요 사례국(미국, 호주) 및 한국의 부정수급 사례연구를 통해 국가별 제도적·맥락적 특성을 파악하여 기본 및 실태 조사의 정량적 분석결과를 보

완하고 관련 정책함의 제시

- 표적집단면접<sup>1)</sup> 결과의 일부를 정책함의 부문과 한국 사례 부문에 포함시켜 제시하였음

## 2. 연구 방법

□ 선행연구, 사업설명서, 행정통계 등에 대한 문헌연구

- 범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록 자료, 각 부처 예산 설명자료, 관련 법령, 사업지침 등 자료분석을 통해 사회보장사업별 특성 이해
  - 또한 관련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실태조사표 작성 및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는데, 특히 본 실태조사를 준비하기 위해 기 수행된,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방안 연구’에서 제시된 부정수급 개념·정의, 부정수급 유형 그리고 사회보장사업별 특성과 해외 사례연구를 반영하여 본 연구를 수행

□ 사례 연구 : 주요 선진국과 한국의 부정수급 관리 및 대응 방안 연구

-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관리시스템이 발전한 주요 선진국의 사례분석을 실시하여 부정수급에 대한 효과적인 사전적·사후적 관리방안 모색
- 선별적 복지제도가 발전된 영미형 자유주의 국가(미국, 호주 등)를 중심으로 살펴보되 한국의 경우 현금급여 중심의 사례연구를 실시하여 부정수급에 대한 주요 관리 체계 및 정책의 방향성 등을 파악
  - 기존에 수행된 연구가 각 국가별 부정수급 대응 현황 및 정책방향에 대한 전반적이고 광범위한 접근이었다면, 본 연구의 사례분석은 정책시사점과 함의가 큰 주요 프로그램에 집중
  - 최근 5년간의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접근하되 중요한 사례의 경우 최근 5년 이전의 사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한국의 경우 본 실태조사의 주된 초점

1) 사회보장급여들을 공통의 특성을 가진 사업집단으로 분류하고 분류된 집단중 기본조사와 실태조사로 파악하기 어렵거나 조사에 포함되었어도 보다 상세하고 맥락적인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 사업들을 표적집단면접 실시를 통해 사후관리·관리조직 개선 방향 등에 대한 함의 도출

인 현금급여를 중심으로 실시

- 이러한 사례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부정수급 관리 및 대응 방향에 대한 검토와 정책적 함의를 도출

○ 해외 사례연구는 각 국가별 맥락(context) 중심으로 파악하되,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시사점이 큰 제도 및 해당 제도의 변화를 중심으로 접근

- 또한 부정수급 규모(또는 현황)에 대한 집계 및 추정 방법, 공표 방법, 유사 부정수급 실태조사 추진 사례 여부 및 그 방법 등에 대한 파악을 통해, 한국의 부정수급 대응에 대한 정책함의 도출 및 향후(2023년 2차 조사 등) 부정수급 실태조사에 반영

□ 개념적 접근 방법 : 부정수급의 정의를 통한 실태조사의 파악 및 공표 범위 설정

○ 부정수급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사용되는 용어도 분야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 예를 들어, 국고보조금에 적용되는 ‘부정수급 유형별 표준DB’에 활용된 부정수급 개념은 협의의 부정수급과 광의의 부정수급을 포괄하여, 정확한 정의를 알지 못하는 경우 부정수급 규모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어려울 수 있음

○ 따라서 부정수급 정의에 대해 주요 사회보장급여별 현황을 살펴보고, 지금까지 연구되어온 부정수급 정의에 대한 고찰을 통해 본 실태조사에 적용할 부정수급의 정의와 유형화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부정수급과 사각지대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은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둘을 완전히 분리하여 파악하기 힘든 특징을 가지고 있음(임완섭 외, 2017)
- 본 연구용역에서는 아래 제시된 부정수급 유형화의 적용여부를 검토하였으며, 선행연구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부정수급의 유형 및 개념을 정리하여 제시하고 이를 본 실태조사에 적용

○ 부정수급 유형화를 통한 부정수급 규모 파악과 공표

- 해당 부처로부터 받은 사회보장사업별 '19년 예산 및 부정수급 규모 현황

집계 자료 분석을 통해 전체 부정수급 규모 및 유형 파악

\* 발주기관에서 공문 조치 및 취합(연구용역기관 협조)

- 기 수행된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방안 연구’는 물론 주요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부정수급 개념 및 정의, 유형화, 사회보장급여별 특성 등을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적절한 부정수급 유형화 방안을 적용
- 기 수행된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방안 연구’는 고의성 여부, 부정행위 주체, 주체간 공모여부 등의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4가지 안을 제시
- 유형화1 또는 유형화2는 중앙부처 소관과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사회보장급여별 기본 집계표로 적용하고 유형화3 또는 유형화4는 중앙부처 또는 보장기관의 담당자가 부정행위 주체를 서비스 수요자, 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행정담당자로 구분하여 파악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음
- 이렇게 제시된 각 집계표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최종적인 집계표 양식을 도출하고 이를 기본조사표에 적용(부록 3 참조)

〈표 1-3〉 부정수급 유형화1

대분류	부정행위 주체	중분류
고의성	수급자	기망
	행정담당자	부패
비고의성	수급자	수급자 오류
	행정담당자	행정 오류

자료: 임완섭 외. (2019a).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방안 연구.

〈표 1-4〉 부정수급 유형화2 : 유형화1에 고의성 판단 불가 추가

대분류	부정행위 주체	중분류
고의성	수급자	기망
	행정담당자	부패
비고의성	수급자	수급자 오류
	행정담당자	행정 오류
고의성 판단 불가	수급자	부적정 수급
	행정담당자	부적정 지출

자료: 임완섭 외. (2019a).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방안 연구.

〈표 1-5〉 부정수급 유형화3 : 유형화2에 수급자를 서비스 수요자와 서비스 공급자로 구분

대분류	부정행위 주체		중분류
고의성	수급자	서비스 수요자	기망
		서비스 공급자	기망
	행정담당자		부패
비고의성	수급자	서비스 수요자	수급자 오류
		서비스 공급자	
	행정담당자		행정 오류
고의성 판단 불가	수급자	서비스 수요자	부적정 수급
		서비스 공급자	
	행정담당자		부적정 지출

자료: 임완섭 외. (2019a).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방안 연구.

〈표 1-6〉 부정수급 유형화4 : 유형화 3에 행위 주체간의 공모 여부를 추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부정행위 주체		주체간 공모	
고의성	수급자	서비스 수요자	없음	서비스 수요자 기망
			있음	수요자와 제공자간 공모
		서비스 공급자	없음	수요자와 행정담당자간 공모
			있음	서비스 공급자 기망
	행정담당자		없음	수요자와 제공자간 공모
			있음	제공자와 행정담당자간 공모
			없음	행정 부패
			있음	수요자와 행정담당자간 공모
비고의성	수급자	서비스 수요자	수급자 오류	서비스 수요자 오류
		서비스 공급자	수급자 오류	서비스 공급자 오류
	행정담당자		행정 오류	행정 오류
고의성 판단 불가	수급자	서비스 수요자	부적정 수급	서비스 수요자의 부적정 수급
		서비스 공급자	부적정 수급	서비스 공급자의 부적정 수급
	행정담당자		부적정 지출	부적정 지출

자료: 임완섭 외. (2019a).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방안 연구.

#### □ 전문가 자문 및 사업담당자와의 인터뷰 등 의견 수렴

- 사회보장급여의 영역별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실태조사 조사표 작성, 결과 분석 및 제도개선안, 향후 실태조사 개선 방안 등 관련 자문 및 의견수렴
  - 전문가 자문위원은 주로 실태조사 범위에 해당되는 분야별로 매칭되어 조

사의 대상 및 범위, 세부 조사항목, 항목별 조사방법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

- 자문위원회는 연구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및 변경 등 탄력적으로 운용

○ 중앙부처·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 사회보장급여 및 부정수급 업무 담당자의 인터뷰 등 의견수렴

- 실태조사 전반에 걸쳐, 사업 담당부서 또는 부정수급 담당부서에 대한 의견 수렴을 실시하여 이번 실태조사 및 향후 수행될 실태조사에 대한 공감대 및 정책수용성 제고

□ 부정수급 규모 및 기본정보 파악 : 기본조사표 조사(기본조사)

○ 본 연구용역을 통해 파악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는 부정수급 규모를 파악하고 보장기관의 사회보장급여별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실태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들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

- 실태조사 파악을 위한 기본정보 : 예산규모, 사업지원형태, 보장기관, 부정수급 관리 여부, 부정수급 규모 등
- 기본조사의 경우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활용한 각종 분석 및 결과표 산출에 필요한 예산액, 보조사업명, 보장기관명, 부정수급 규모 등의 항목에 대해 자기기입식 조사를 실시

○ 발주부처의 행정력을 통해 사회보장급여별 소관부처로부터 부정수급 유형별 규모 등의 각종 기본정보를 집계자료 형식으로 수령

○ 수령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연구용역기관에서 입력 및 에러 체크를 실시하여 이를 데이터화시키고 분석

□ 부정수급 사후관리, 관리조직 및 운영 등 파악 : 실태조사표 조사(실태조사)

○ 약 360여개 사회보장사업 중 사업지원형태 및 예산규모 그리고 제도개선 사항 등을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 보장기관 담당자 대상의 설문조사 실시

- 모든 사회보장사업을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지원형태 중 예산규모와

정책제감도가 가장 큰 현금급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조사대상사업의로서의 중요도를 예산규모를 통해 1차적으로 판단하였음

- 기준이 되는 예산규모는 기획재정부 사전적격성 심사, 고용노동부의 고용영향 평가 등에서 적용되는 예산 기준인 100억 원을 적용함

#### ○ 조사방법

- 당초에는 실태조사의 정확성 제고와 원활한 수행을 위해 조사기관의 조사원이 조사대상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표를 전달하고 이를 취합하고 조사 내용에 대한 에딧팅\*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었음

\* 조사 완수율 향상 및 조사 결과의 질적 제고를 위해 조사표 취합 시 조사원이 조사 대상 기관을 방문하여 조사결과를 검토하고, 오류와 무응답 등에 대한 보완 및 수정작업을 조사대상과 같이 실시

- 하지만, 코로나19의 지속과 확산 우려로 인해 대면조사에서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조사로 변경
  - 실태조사는 기본적으로 조사 대상자 본인이 조사표에 직접 기입하는 ‘자기 기입식’ 방식으로 수행
  - 실태조사 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조사대상 정보(시군구, 사업부서, 담당자, 연락처)의 경우 기본적인 사항은 기본조사(집계조사)를 통해 파악
  - 기본조사를 통해 급여를 지급하고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보장기관을 확인하고 해당 담당자 및 연락처 등을 파악하는 부문은 발주부처와 연구용역기관의 역할 분담을 통해 수행

#### □ 맥락적·정성적 접근을 통한 제도개선 방안 도출 : 표적집단면접( FGI)

- 표적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FGI)은 면접의 대상이 되는 소수의 대상자와 집중적인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면접조사를 의미함
- 표적집단면접(FGI)을 통해 부정수급 유형 및 개선방안을 모색할 있지만, 이는 대상에 따라 적용을 달리할 수 있음

- 사회보장급여의 형태를 이용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지원으로 구분할 경우, 시설운영지원·프로그램 단위지원·인건비지원·시설설비지원 등의 주체가 되는 복지시설의 경우 이들을 관리하는 행정담당자에 대한 표적집단면접(FGI)를 통해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발생하는 부정수급 유형 및 관련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함의를 효과적으로 도출할 수 있으며,
- 이용자에 대해 직접 지원하는 사회보장급여의 경우, 이용자에 대한 부정수급 등 사후적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담당자에 대해, 실태조사로 파악하기 쉽지 않은 이용자 측면의 심층적인 부정수급 특성에 대해 맥락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

○ 이번 실태조사에서 조사 대상이 현금급여의 경우 이용자에 대한 직접지원에 해당하므로 현금급여를 관리하는 행정담당자들에 대한 표적집단면접(FGI)을 실시

□ 「2020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통계 공표 관련 유의 사항

○ 이번 실태조사는 시험적 작성통계로 ‘본 통계는 국가승인통계가 아니며 향후 국가승인통계로 신청할 예정임’





## 제2장

### 부정수급과 사회보장급여의 개념과 범위

제1절 부정수급의 개념과 범위

제2절 사회보장급여의 유형구분과 실태조사 범위



## 제 2 장 부정수급과 사회보장급여의 개념과 범위

### 제1절 부정수급의 개념과 범위

#### 1. 부정수급에 대한 개념적 접근의 필요성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2조의2(실태조사 방법·내용 등)에 따르면 부정수급 실태조사의 주요 과제중 하나는 ‘부정수급 발생 현황 및 유형’에 대한 파악임
  - 이는 부정수급을 유형별로 파악하여 그 규모를 제시하는 것을 의미
  - 부정수급의 개념은 광범위하기 때문에 다양한 기준과 조건에 따라 분류한 후 조사의 목적에 부합하는 분류방법을 적용할 수 있음. 이를 위해 기존 국내외 부정수급 유형화를 살펴보고 본 조사에 적합한 유형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함
- 즉, 부정수급 실태조사 실시를 위해서는 ‘부정수급’에 대한 개념적 고찰과 이를 통한 조작적 정의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조사범위에 해당하는 부정수급 유형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본 실태조사의 근거법인 사회보장급여법(제19조의2 ①)에 따르면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는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보장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회보장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 관한 조사임을 밝히고 있음
    - 한편, 기획재정부·한국재정정보원 또는 ‘e 나라도움’에서 적용되는 부정수급은 부정수급을 협의와 광의의 개념으로 분류하고 이를 파악하고 있음
    - 이외에도 부정수급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사용되는 용어도 분야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 부정수급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있어야만 본 실태조사에 그 규모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음
  - 따라서 부정수급 개념에 대해, 지금까지 연구되어온 부정수급 정의에 대한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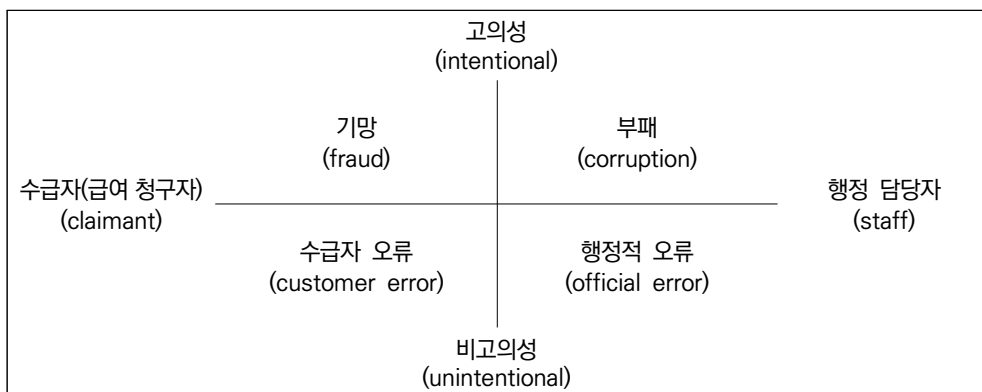
찰과 주요 사회보장급여에서 적용되는 개념적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본 실태조사에 적용할 부정수급의 정의와 유형화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정수급과 사각지대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관계이기 때문에 둘을 완전히 분리하여 파악하기 힘든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이러한 부정수급에 대한 개념적 특성과 범위 설정을 위해 먼저 지금까지 수행되어온 연구들 중 주요 연구들의 결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2. 기존 부정수급 유형화에 대한 고찰

- 부정수급 관련 유형화에 있어 World Bank(2010)는 고의성 여부와 부정수급 행위 주체 측면(서비스 수요자, 서비스 공급자)의 유형화를 제시하고 있음
- 복지 프로그램의 부정수급 유형을 고의성/비고의성, 수급자(수요자)/기관(공급자) 차원으로 구분하고 있어 부정 수급 요인 및 정책방향 도출에 활용
- 현재 e-나라도움에 적용되는 부정수급 기본 유형과 동일 : 기망(Fraud), 부패(Corruption), 수급자 오류(Customer Error), 행정적 오류(Official Error)

[그림 2-1] World bank의 부정수급 유형화 : 고의성 여부 및 부정수급의 행위주체



자료: World Bank(2010, p.3); 김문길 등(2015, p.17)에서 수정 및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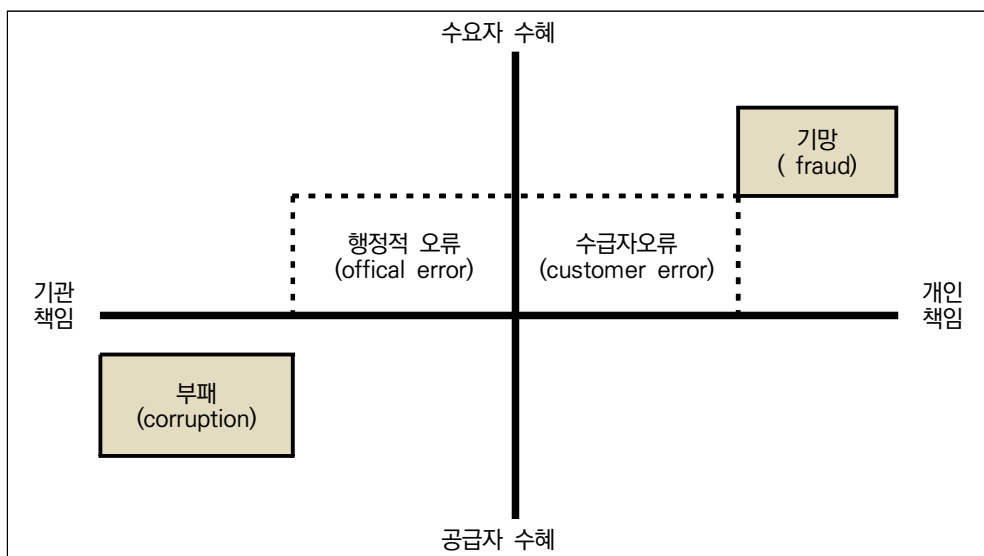
- 행정 담당자의 고의에 의해 발생하는 것은 '부패'에, 수급자(급여 청구자)의 고의에 의해 발생하는 것은 '기망'에 해당

- 한편, 고의성이 없고 수급자(급여 청구자)에게 발생하는 것은 ‘수급자 오류’에, 고의성이 없고 행정 담당자에게 발생하는 것은 ‘행정적 오류’에 해당

○ 원인-수혜 부정수급 유형(김문길 외, 2015)

- 부정수급의 주체와 부정수급액이 누구에게 귀착되는지에 따른 유형 분류

[그림 2-2] 귀책사유와 귀책결과(부정수급의 원인과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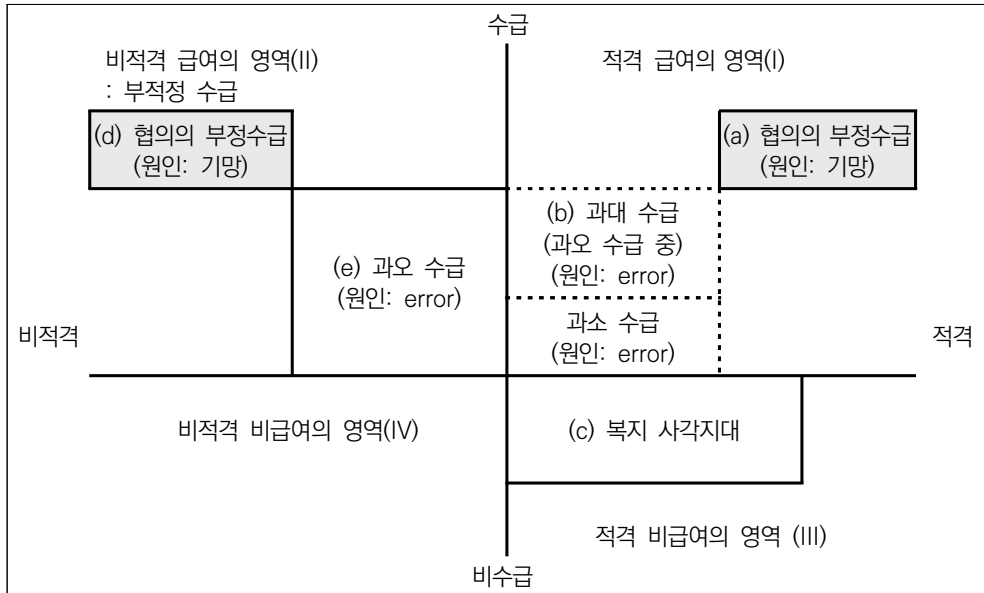


자료: 김문길 외(2015, p.19)에서 발췌 및 수정.

□ 권오성 등(2013)의 연구는 적격성과 수급 기준을 통한 부정수급의 영역 구분(아래 그림 ‘부정수급과 유사 개념 구분’ 참조)을 시도하였음

- 적격성과 비적격성 등 적격성 유무, 수급과 비수급의 수급 유무를 교차하여 적격성과 수급여부라는 두 가지 기준을 이용한다면, 복지 부정수급을 4가지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즉, ‘적격 급여의 영역 (I)’, ‘비적격 급여의 영역(II)’, ‘적격 비급여의 영역 (III)’, ‘비적격 비급여의 영역(IV)’으로 구분이 가능함
- 적격성에 따른 유형화는 대상자의 적격성 여부에 따라 수급과 비수급에 해당하는 부정수급과 사각지대의 유형을 구분하는데 활용됨

[그림 2-3] 부정수급과 유사 개념 구분(적격성과 수급 기준)



자료: 박경돈(2013); 권오성 등(2013, p.34)에서 재인용.

□ Klevin과 Kopczuk(2008, 2011)의 사회 프로그램 오류(임완섭 외, 2017 재인용)

○ 사회보장제도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 및 부정수급에 대한 분류와 관련하여 Klevin과 Kopczuk(2008, 2011)는 사회 프로그램 오류에 대한 분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음

- Type Ia 오류(불완전 수급)는 프로그램 설계로 적격한 개인 일부가 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발생
- Type Ib 오류(거부 오류)는 프로그램 설계로 인해 적격한 개인이 급여를 신청하고도 거부되는 경우
- Type II 오류(보상 오류)는 프로그램 설계로 인해 부적격자가 급여를 신청하고 급여를 수급하게 되는 경우

○ 위 유형구분에서 부정수급(비적격 수급)은 Type II errors(보상오류)에 해당되며, Type Ia 오류(불완전 수급)와 Type Ib 오류(거부 오류)는 사각지대(적격 비수급)에 해당됨

- 부정수급과 사각지대 즉 비적격 수급과 적격 비수급은 상충성을 갖는데, 두 개념의 상충관계를 설명하는데, 급여·자격요건·심사절차의 복잡성(Complexity)

## 이 활용됨

- 복잡성(Complexity)이 강화되면 적격성이 제고되어 부정수급은 축소될 수 있지만 사각지대는 확대될 가능성이 크며, 복잡성이 약화되면 적격성은 떨어지지만 사각지대가 감소될 가능성이 높아짐

〈표 2-1〉 사회 프로그램 오류 : type I, type II 오류

구분	수급	비수급	
		비신청	신청
적격	적격수급	type Ia 오류 (불완전 수급)	type Ib 오류 (거부 오류)
비적격	type II 오류 (보상오류 : 부정 또는 오류 수급)	비적격비수급	

자료: Klevin & Kopczuk(2008, 2011); 임완섭 외(2017, p.44)에서 수정 및 재인용.

## □ e 나라도움 「부정수급 유형별 표준 DB」상의 부정수급 유형화

- 현재, 기획재정부와 한국재정정보원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사업에 대한 유형별 부정수급 DB를 e나라도움 상에 구축 중에 있음
- 여기서 통용되는 부정수급은 부당한 방법 또는 과실로 보조금을 수급하여, 보조금법에 따른 환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
  - 의도적 기망·사기 등을 통해 보조금을 수급하는 경우와 비의도적 행정오류, 수급자 사업요건 인지 미흡 등으로 보조금을 과오 수급하는 경우를 모두 포괄
- 부정수급의 유형 분류(기획재정부, 2019b)
  - (대분류) 부정수급의 의도성과 부정행위 주체에 따라 구분
    - (기망) 수급자가 의도적으로 부정을 저지른 경우
    - (부패) 행정담당자가 의도적으로 부정을 저지른 경우
    - (수급자 오류) 수급자가 비의도(실수)로 부적정하게 수령한 경우
    - (행정적 오류) 행정담당자가 비의도(실수)로 부적정하게 지급한 경우
  - (중분류) 부정수급의 발생요인인 부정행위의 행태에 따른 분류
    - (기망/부패) 가족간거래, 공모, 임의처리, 허위

- (수급자오류/행정적오류) 증빙미비, 중복처리, 업무착오, 관리미비
- (소분류) 중분류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30개)
  - 예시) 중분류 중 ‘허위’는 ‘자부담금 대납’, ‘가격부풀리기’, ‘허위처리’로, ‘공모’는 ‘내부공모’, ‘외부공모’ 등으로 세분화

〈표 2-2〉 e나라도움의 부정수급 유형화

유형 구분		
대분류(4개)	중분류(8개)	소분류(30개)
기망 / 부패	가족간거래	가족등록 · 채용
		가족간거래
	공모	내부공모
		외부공모
	임의처리	무단 담보
		무단 양도
		무단 임대
		무단 인출
	허위	임의 사용
		자부담금 대납
		가격부풀리기
		허위처리
수급자 오류 / 행정 오류	증빙미비	전자세금계산서 미비
		카드영수증 미비
		기타 증빙
	중복처리	중복 등록
		중복 신청
		중복 증빙
	업무착오	규정 미숙
		절차 미숙
		사용 미숙
		거래처 착오
	관리미비	자격관리 미흡
		평가관리 미흡
		신청관리 미흡
		타당성 미검토
		과다 집행
		집행 오류
		정산 오류
		분리 계약

자료: 기획재정부. (2019b).



## □ 주요 선진국의 부정수급의 유형별 분류

## ○ 영국

- 영국의 고용연금부(DWP)는 부정수급을 사기 (Fraud), 신청 오류(Claimant Error), 사무 오류(Official Error) 등 3가지로 구분하고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음(임완섭 외, 2017)

〈표 2-3〉 영국 고용연금부(DWP)의 부정수급 유형별 분류

유형	내용
사기(Fraud)	신청자가 사회보장 급여의 기본 지급 조건에 맞지 않았음에도 고의성을 가지고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 오류 (Claimant Error)	신청자가 사회보장 급여에 필요한 정보를 모두 제공하지 않았거나, 신청자의 변화된 지위를 급여 조건에 따라 정확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
사무 오류 (Official Error)	고용연금부가 잘못된 관리 감독이나 절차 등으로 신청자의 급여가 거절 또는 지연된 경우나 신청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급여를 제공한 경우

자료: National Audit Office. (2015); 임완섭 외(2017, p.164) 재인용.

○ 호주<sup>2)</sup>

- 호주의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수급에 대해 “복지사업 급여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나 비도덕적 의도에 의해 부정하게 복지급여를 신청하고 수급하는 범죄 행위”로 정의(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 2012; 김상호, 2017, p. 1 재인용)
  - 실수(honest mistakes)보다는 의도적인 기망(deliberately fraud)에 집중하여 부정수급을 관리하고 조사하고 있음(DHS 홈페이지, 2019. 8.).
  - 부정수급을 주로 ‘비도덕적 의도’에 의해 복지급여를 신청하고 수급하는 ‘범죄 행위’로 규정하여, ‘의도적인 기망(deliberately fraud)’과 같은 협의의 개념으로 적용하여 부정수급을 조사하고 관리
- 부정수급의 유형으로 자산 신고 누락(undisclosed income or assets), 신분 위조(identity fraud), 가구원 수 및 부양의무자 미신고(undeclared family relationships), 해외 출국 미신고(residency and absence from

2) 임완섭 외(2019b, p.304)를 발췌하여 정리

Australia), 신청 정보 누락(study requirements), 거짓 정보(claiming for services not rendered)로 분류하여 조사(임완섭 외, 2019b)

○ 스웨덴<sup>3)</sup>

- 스웨덴의 보건사회부는 사회보험청으로 하여금 비리·과실을 측정하는 지표를 개발하도록 하도록 하고 다양한 부정수급 측정치를 하나의 품질보고체계인 'Qben II'로 통합하였음(2004년)
- 이에 따르면, 사회보험 부정수급의 유형으로 (1) 동시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 수급 청구(실업급여와 건강보험), (2) 잘못된, 속임수 정보에 의한 급여 청구, (3) 신고하지 않은 소득 등이 많은 것으로 보고됨
- 그리고 실업급여 분야 부정수급의 유형은 (1) 급여 수령과 동시에 불법 취업, (2) 실업급여 청구 직후 취업을 하거나 기타 급여를 받는 행위, (3) 잘못된 정보 제공 또는 속임수를 통해 실업급여를 청구하는 것 등으로 파악되었음(김찬수, 2009, pp. 32-33)

○ 그 외 국가들을 살펴보면, 캐나다의 경우 복지 부정수급은 초과지급을 야기한 기망과 실수로 분류할 수 있으며(권오성 외, 2013, p.23),

- 미국은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를 위해 부적절한 보조금 지급을 '고의적인 부정 및 사기', '비고의적인 지급 오류(과다 및 과소 지급)', '서류 미비 등으로 감사가 그 적절성을 판단할 수 없는 경우' 등으로 분류(원종학 외, 2019)

### 3. 부정수급 개념과 실태조사 적용

#### 가. 실태조사에 적용되는 부정수급의 개념

□ 본 실태조사에서 적용되는 부정수급의 개념 : 협의의 부정수급

- 부정수급을 행위 주체의 의도성 여부로 구분할 때 사회보장급여의 수급자 또는 행정담당자의 고의로 인해 발생하는 기망 또는 부패는 협의의 부정수급으

3) 임완섭 외(2018, p.231)를 발췌하여 정리.

로 분류할 수 있으며,

- 사회보장급여의 수급자 또는 행정 담당자의 실수 또는 오류로 인해 발생한 부정수급(오류수급)은 광의의 부정수급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 본 실태조사에서 주된 관심을 가지고 그 실태와 규모를 파악한 부정수급은 협의의 부정수급이며, 이러한 협의의 부정수급을 본 실태조사에 적용하게 된 이유는 ‘나. 실태조사 적용을 위한 부정수급 개념 검토’에서 제시하였음

#### 나. 실태조사 적용을 위한 부정수급 개념 검토<sup>4)</sup>

- 부정수급에 대한 유형화는 다양한 부정수급에 대한 개념을 일정 기준으로 분류하여 파악하는데 용이
  - 하지만 분류 기준과 방법이 상이하여 실태조사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논리적 근거와 사용에 타당성을 가진 부정수급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필요함. 즉 ‘부정수급’의 개념과 이에 따른 부정수급의 범위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음
  - 학술적으로 ‘부정수급’이란 단어는 폭넓게 활용하고 있으며, 속임수와 같은 고의성을 가진 행위의 결과로 볼 수 있음
  - 행위는 물론 사회보장급여 지급 또는 수급과 관련하여 비의도적으로 발생하는 실수와 오류도 부정수급의 개념 안에 포함되어 사용되고 있음
  - 하지만, 부정(不正)은 사전적으로 “올바르지 아니하거나 옳지 못함”이라는 의미(표준국어대사전, 2019.11.4. 인출)를 갖는데 의미 자체에 ‘옳지 않고 ‘바르지 않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
    - 따라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또는 공무원 등 행정담당자의 단순 실수 까지도 ‘부정수급’이란 용어에 포함시킬 경우 해당 문제(단순 실수나 오류 등)를 확대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음
  -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부정수급’의 개념을 법령 및 선행연구 등에 나타난 유사개념들과 비교하고 이를 통해 본 연구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 개념과

4) 임완섭 외(2019a)의 “제2장 개념적 접근과 유형화” 부분을 발췌 및 수정·보완하여 작성.

## 유형을 제안하고자 함

- 부정수급과 유사하게 사용되는 용어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것으로 ‘비적격 수급’, ‘불법수급’, ‘부적정 지출’ 또는 ‘부적정 수급(급여)’, ‘중복수급’ 등이 있음
- 비적격 수급은 적격 수급의 반의적인 표현으로 해당 대상자의 자격이 적격하지 않지만 사회보장급여를 수급하게 되는 상황을 의미함
- ‘불법수급’은 아래 표에서 제시된 것처럼 범법적 행위로 수급이 발생하게 되므로 반드시 처벌 등과 같은 법적 책임이 따르게 됨

〈표 2-4〉 부정수급과 유사 개념

유사용어	내용	특징
불법수급	- 불법적인 급여의 수급으로 부패와 범법적 행위를 의미함	- 법적 책임이 반드시 수반됨
부정수급	- 정당한 급여의 수급이 아닌 기망, 불법과 같은 기타 부당한 방법에 의한 수급과 과오(과실)에 의한 수급을 포괄함(광의의 개념)	- 부정수급의 규모 및 제재의 문제가 대두, 부정수급의 환수 문제가 중요함 - 기관책임 및 발생영역의 식별이라는 문제 발생
중복수급	- 단일 정책 대상자에게 특정 기간에 복수의 급여를 제공하는 것	- 단일 기관(사업)의 복수 지급 - 복수 기관(사업)의 복수 지급
부적정 수급(급여)	정당한 급여수급이 아닌 부당한 방법이나 행정기관의 실수에 의한 수급을 모두 포함 - 적정 급여(대상자를 정확하게 선정하여 정확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의 필수적 요건이라 할 수 있는 복지 대상과 관련된 인적 기준 및 정보, 소득 및 재산 관련 기준 및 정보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로 선정되어 급여를 수급하는 경우(보건사회연구원, 2011, p.60)	- 비적격자에 대한 과오(과실) 급여 제공과 부정수급을 모두 포함 - 과대 지급, 중복 지급뿐만 아니라 과소 지급으로 인한 수급을 모두 포함

자료: 최현수(2011); 권오성 등(2013, pp.21-22)에서 재인용 및 수정.

- ‘부적정 지출’은 행정담당자 또는 복지서비스 공급자 측면에서 급여의 지출이 적정하게 이뤄지지 못한 경우를 의미하며, ‘부적정 수급(급여)’은 복지서비스 수요자 입장에서 적정하지 않은 상태의 사회보장급여 수급을 의미
- ‘적정’은 사전적으로 ‘알맞고 바른 정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사회보장급여 부적정 지출은 사전적으로 접근해 볼 때 사회보장 지출이 알맞지 않고 바르지 않은 상태로 지출됨을 의미

- ‘부적정’은 일정한 기준, 조건, 정도 따위에 넘치거나 모자라게 지출됨과 동시에 바르지 않은 상태를 포괄하고 있어 개념상 ‘부정’의 개념을 포괄하여 사용되어 있음
- 부적정 지출과 부적정 수급(급여)은 기망(fraud) 등으로 인한 협의의 부정수급은 물론, 오류로 인한 과대·과소 수급까지 포괄한 개념으로 볼 수 있음
- 이는 부적정 수급(부적정 지출)이 부정수급은 물론 사각지대 영역까지도 포괄할 수 있는 개념임을 의미함(권오성 외, 2013; 김문길 외, 2015)

#### □ 제도 및 법 차원에서 부정수급과 유사개념에 대한 정의

##### ○ 개요

- 법령상 명시적으로 정의되었기 보다는, 부처의 예규·고시 등의 행정규칙 등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으로 규정
- 사회보장급여 상당부분은 보조금으로, 보조금통합관리지침(기재부)은 ‘환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부정수급으로 규정
- 고의성에 따라 비의도(수급자 오류·행정오류)·의도(기망·부패)로 분류 중
- 부정한 방법 여부와 관계없이 ‘환수’를 기준으로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실태조사의 부정수급의 범위도 현재 관리방식을 따름
- 대신 사회보장급여법상 규정을 고려하여 결과 공표시, 부정한 방법(기망·부패)에 의한 부문과 나머지(수급자 오류·행정오류) 부문을 구분하여 발표
  - 실태조사의 주된 초점은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임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②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급여를 받게 한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부정수급이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를 말함(보건복지부, 2019, pp.274-275)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의도적으로 불법을 행하거나 또는 상습적인 신고누락 및 지연신고로 부당하게 수급을 받는 경우로 볼 수 있음(협회의 개념)
- ‘부적정 수급’은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등 수급자 선정 및 급여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중 기 신고 된 자료의 변동에 대한 신고누락 및 지연신고로 인하여 과다하게 급여를 받는 경우를 말함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부적정 수급’이 3회 이상 계속될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보고 있음(보건복지부, 2019, p.274).

#### □ 부당청구(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7, p.9)

- 건강보험법령에서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이라 표현하고 있음
  - 통상 법령에서 사용하는 ‘부당’의 의미는 속임수를 쓰는 등 적극적으로 법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법령상의 기준을 위반하는 행위까지 포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7, p.9)
  - 법령상 기준위반은 건강보험법령에서 정한 요양급여기준, 진료수가 기준을 위반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자의 고의·과실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 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 부당청구로 인정
- 건강보험제도상의 부당청구는 의료 서비스 수요자(수급자) 측면에서는 급여수급이 이루어진 상태이지만, 서비스 공급자(요양기관) 입장에서는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급여를 받지 못한 상황으로 일반적인 부정수급 상황과는 다름
  - 부당청구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이미 급여(서비스)를 받은 상태라 사후적이지만 공급자는 급여를 받지 못한 상태이므로 사전적이라 할 수 있음
  - 국민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에는 다양한 환수사유 코드가 존재하는데 이중 부정수급액은 청구된 급여가 공급자에게 제공된 후 환수가 결정된 금액으로 볼 수 있음(협회의 개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통해 얻은 급여(서비스) 또는 부당이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9조), 의료급여법(35조), 국민건강보험법(제115조), 노인장기요양법(제15조), 사회서비스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 등에서는 공통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받은 급여(또는 서비스)에 대한 제재 방안을 규정하고 있음
- 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통한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 등에 대한 규정이 많은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고의성을 가진 협의의 부정수급으로 간주할 수 있음
  - 2020년 실태조사의 근거법인 ‘사회보장급여법’에서도 부정수급은 협의의 부정수급을 의미함

○ 사회보장급여법

- (제22조 ①) 수급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를 고의로 회피하거나 속임수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보장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회보장급여를 받게 할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한 보장기관의 장은 그 사회보장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회보장급여를 받거나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 할 수 있다
- (제19조의2 ①) :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 “보건복지부장관은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보장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회보장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 대하여 보장기관이 효과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그 발생 현황, 피해사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2조의2(실태조사 방법·내용 등)
  - 부정수급 발생 현황 및 유형
  - 부정수급 사후관리
  - 부정수급 관리조직 및 운영
  - 그 밖에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 보조금법

- “보조금법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①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략)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 부정수급 실태조사의 조사 내용으로서 부정수급 개념

- 부정수급은 크게 협의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기망과 부패와 광의의 부정수급에 포함되는 수급자 오류와 행정오류로 구분할 수 있음
  - World Bank 등의 국제기구와 기획재정부 및 한국재정정보원 등에서는 부정수급을 기망과 부패와 같은 협의의 부정수급과 함께 의도성이 없는 수급자 오류와 행정오류를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도 적용하고 있음<sup>5)</sup>
- 하지만, 실태조사의 근거되는 「사회보장급여법」에 제시된 부정수급은 협의의 부정수급을 의미하며, 상당수의 사회보장사업에서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사회보장급여법」 제19조의2에 따르면 부정수급을 “속임수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보장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회보장급여를 받게 한 경우”로 보고 있음
  - 또한 앞서 살펴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도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를, 건강보험법령상에서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을 부정수급으로 간주
  - 의료급여법(35조), 국민건강보험법(제115조), 노인장기요양법(제15조), 사회서비스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 등에서는 공통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부정수급으로 간주
  - 즉, 사회보장사업에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부정수급의 개념은 고의성을 가

5) 앞서 제시된 ‘2. 기존 부정수급 유형화에 대한 고찰’ 부문 참조 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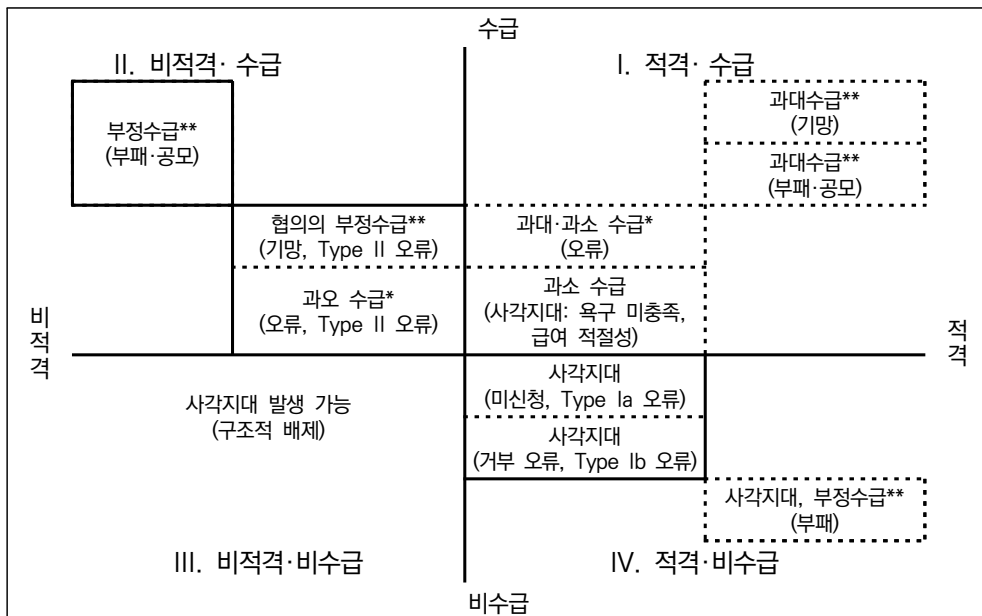
진 ‘협의를 부정수급’임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상당수의 사회보장사업에서 적용되는 부정수급 개념의 연속성과 다양한 부정수급 개념 적용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본 실태조사에서 파악하고 공개해야할 부정수급으로 협의의 부정수급에 초점을 맞춤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보장사업에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부정수급의 개념은 고의성을 특징으로 하는 ‘협의의 부정수급’이며, 이러한 의미로 사용되는 ‘부정수급’ 개념에 대한 일관성 유지와 다양한 정의로 인한 부정수급 범위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실태조사에서 그 규모 등을 파악하고 초점을 맞추어야 할 부정수급은 협의의 부정수급임
- 한편, 오류나 실수 등 비고의적으로 발생하는 광의의 부정수급의 경우 「사회보장급여법」에 근거한 실태조사의 범주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부정수급 사후관리 파악과 실태조사 결과의 활용성 제고를 위해 보조적으로 파악
  -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조직과 사후관리는 협의의 부정수급과 광의의 부정수급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사 수행 시 협의의 부정수급과 광의의 부정수급 규모 모두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비교함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정책함의를 도출할 수 있음
  - 또한 향후 World Bank 등의 국제기구와 기획재정부의 부정수급 관련 자료와의 비교를 위해 광의의 부정수급 역시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부정수급’이란 단어가 내포하는 부정적 의미와 함께 실태조사 결과 공표 시 발생할 수 있는 의미적 혼란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광의의 부정수급은 ‘오류 수급’으로 협의의 부정수급은 ‘부정수급’으로 구분하여 명칭하고자 함
  - 행위 주체가 의도적으로 부정을 저질러 이득을 취하는 수급자의 기망과 공급자의 부패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으로, 수급자 또는 공급자의 실수나 오류와 같이 행위 주체가 비의도적으로 사회보장 급여를 수령하거나 지급하는 경우 ‘오류 수급’으로 명칭

#### 4. 부정수급에 대한 유형화와 실태조사에 대한 적용

- 앞서 제시된 부정수급의 개념적 접근을 토대로 수급여부와 적격성 기준을 적용하면, 다양한 부정수급 형태를 포괄한 유형화를 실태조사에 적용할 수 있음
- 아래 제시된 유형화를 통해, 해당 부문에 대한 설문을 실태조사표와 표적집단 면접에 반영할 수 있음. 각 영역별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sup>6)</sup>
- 대상자의 급여 적격성과 해당 급여의 수급 여부를 기준으로 부적정 지출과 사각지대의 발생 영역을 ‘적격 수급’, ‘적격 비수급’, ‘비적격 수급’, ‘비적격 비수급’의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이러한 구분의 장점은 부정수급의 다양함 유형을 물론 사각지대도 유형별로 포괄하여 제시할 수 있는 데 있음(권오성 외, 2013; 임완섭 외, 2019b)

[그림 2-4] 부정수급과 사각지대의 유형화



주: 1) \* 과제의 연구범위에 해당, \*\*실태조사 공표 범위에 해당(단, 위 그림과 같은 세부적 구분은 불가능).

2) 괄호의 내용은 사각지대와 부정수급의 원인별 유형을 의미함.

자료: 권오성 외(2013, p. 34), 임완섭 외(2017, p. 48)에서 그림을 발췌해 수정 및 보완.

6) 이하의 내용은 임완섭 외(2017) 임완섭 외(2019b)의 내용을 발췌 및 수정·보완하여 작성.

○ I. 적격·수급 영역에서는 주로 급여 수준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는데, ‘과소수급’의 경우 명확한 분류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음

- 대상자의 욕구 미충족으로 발생한 과소수급은 전형적인 사각지대 형태(욕구와 급여의 불일치)이며, 비의도적인 오류로 인해 발생한 과소수급 역시 원래 받아야 할 급여보다 적게 받은 것이므로 급여 수준의 충분성 차원에서 사각지대에 속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일정한 기준 및 조건에 맞게 급여가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적정 지출로도 간주할 수 있음
- 부적정 지출은 부정수급의 유사개념으로도 활용되고 있어, 부적정 지출의 측면과 사각지대의 측면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과소수급에 대한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과대수급의 경우 위에 제시되지 않은 형태인, 행정담당자가 복지욕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수급이 발생할 수 있음
- 즉, 행정담당자가 대상자의 낮은 급여충분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고의적 성격의 과대수급이 발생할 수 있음. 이와 비슷한 이유로 사각지대 축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비적격 수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II. 비적격·수급 영역은 급여 적격성 즉, 급여에 대한 자격 차원의 문제가 발생함

- 해당 영역에서는 수급자격이 없는데 급여를 받게 되는 보상오류(Type II 오류)가 발생하는데, 복지 프로그램 수요자 또는 공급자의 비의도적 실수로 인해 발생하는 과오수급과 수급자 또는 행정담당자의 의도적 행위로 발생하는 협의의 부정수급인 기망 또는 부패로 구분됨
- 보상오류 외의 영역은 행정담당자의 부패 또는 행정담당자와 수급자의 공모로 발생하는 의도적 성격을 가지는 협의의 부정수급인 부패와 공모를 나타냄
- 행정담당자가 사각지대 축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고의성을 가진 비적격 수급(일종의 긍정적 부정수급)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귀책결과에서 행정담당자가 얻는 이득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의 비적격 수급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파악 필요

○ III. 비적격·비수급 영역은 제도의 적용 범위 문제를 의미함

- 구조적 배제는 현행 기준에 따를 때 사각지대와 부정수급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영역으로 볼 수 있지만, 사각지대 측면에서는 광범위한 욕구 미충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IV. 적격·비수급 영역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주된 영역임

- 해당 영역에서는 사각지대 문제 중 불완전 수급(급여에 대해 적절한 대상자가 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Type Ia 오류)이나 거부오류(급여에 대해 적절한 대상자가 급여를 신청하고도 급여가 거부되는 경우, Type Ib 오류)가 발생

○ 표적집단면접은 면접의 대상이 되는 소수의 대상자와 집중적인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면접조사를 의미함

- 표적집단면접을 통해 부정수급 유형 및 개선방안을 모색할 있지만, 이는 대상에 따라 적용을 달리할 수 있음
  - 본 연구용역에서는 현금급여를 대상으로 해당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보장기관의 업무 담당자에 대한 표적집단면접을 통해 부정수급 현황 및 관리방법, 정책 개선 방안을 정성적 접근을 통한 인터뷰 방식으로 수행
  - 이를 통해 실태조사로 파악하기 쉽지 않은 심층적인 부정수급 특성을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심사-선정-지급-모니터링 전반에 걸쳐 정성적·맥락적으로 파악
  - 부정수급, 오류수급과 함께, 부정수급과 사각지대 유형화에 있어 그 성격이 모호한 ‘과소수급’의 경우와 행정담당자의 고의성에 기인한 ‘부패’ 등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이 어려운 내용에 대해 접근
- 이번 실태조사에서 조사대상 급여를 현금급여로 초점을 맞출 경우 이는 이 용자에 대한 직접지원에 해당하므로 현금급여를 관리하는 행정담당자들에 대한 표적집단면접을 실시

○ 또한, 위 그림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본 연구과제의 연구 범위와 실태조사의 주요 공표 범위를 부정수급 유형화에 따라 제시할 수 있음

## 제2절 사회보장급여의 유형구분과 실태조사 범위<sup>7)</sup>

### 1. 사회보장급여의 정의와 범위

□ 본 연구용역은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수급 발생현황과 실태를 파악하는 조사이기 때문에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정의가 이뤄져야함

○ 사회보장급여에 대해 「사회보장기본법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보장급여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제시

- (사회보장급여법 제2조1) “사회보장급여”란 제5호의 보장기관\*이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한다

\* 보장기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 사회보장급여의 정의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회보장의 범위

-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함
-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서비스
  -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함
  - “공공부조”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함
  -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함

7) 임완섭 외(2019a)의 “제2장 개념적 접근과 유형화” 부분을 발췌 및 수정·보완하여 작성.

## □ 실태조사와 기본조사에서 사회보장급여의 범위

○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하면, 사회보장급여는 제도적으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구분될 수 있음

- 위에 제시된 정의된 명확하지만, 실제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특히 사회서비스의 경우 개념 정의와 범위설정에서 있어 논란이 있음

○ 법률적 정의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범위(조사 범위)

- 법률적 정의(사회보장급여법 제19조의 2,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르면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에 속하는 모든 사업이 해당
- 이는 중앙부처의 약 360개 사업(사회보장정보시스템 수록된 사업 기준)은 물론 별도의 공단조직을 통하여 전달되는 사회보험과 같은 기금 사업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사업이 모두 해당됨

○ 하지만 약 5만 7천개로 추산<sup>8)</sup>되는 지자체의 자체 복지사업을 모두 포괄하여 그 유형과 관리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시간 및 예산 제약으로 인해 불가능함

- 지자체의 자체 복지사업의 부정수급 실태 파악을 위해서는 해당 사업을 제도별·급여지원형태별 특성 등에 근거한 유형화 작업이 선제되어야 함
- 또한 조사 방법 역시 실태조사가 아닌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자료를 추출하고 그것을 취합하여 활용하는 빅 데이터 분석이 요구됨

○ 그리고 본 연구용역의 목적이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관리 및 대응에 대한 제도개선이기 때문에,

- 자체적인 부정수급 관리 조직 등 다른 사회보장급여에 비해 상대적으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예산액 대비 부정수급의 규모도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보험의 주요 급여는 제외
- 사회보험의 주요 급여(국민연금의 노령연금,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산재보험의 요양 및 장애 급여 등)는 제외되지만

8) 정홍원 외(2017, pp.49-50)는 자치단체의 예산서를 통해 자치단체 자체 사회보장사업 수를 파악하였음.

- 위 사업과 같은 재원을 가지지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사업(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시설급여·재가급여 등, 모성보호육아지원 등)은 포함됨
- 따라서 중앙부처 소관의 사회보장급여(사회보장정보시스템 범정부에 수록된 사업 기준)를 대상으로 기본조사와 실태조사 실시
  - 이번 실태조사 이후에 실시될 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과 주요 사회보험 사업에 대한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제6장의 '주요 영역별 함의 및 향후 실태조사 추진 방향'에서 검토하였음
  - 한편, 사회보장급여는 제도(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에 따라 구분하여 제시하기보다는 보다 직접적이고 제도개선에 대한 함의 도출이 용이한 형태(지원형태 등)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

## 2. 사회보장급여 지원형태별 유형 구분과 실태조사 대상 지원형태

- 사회보장급여간의 성격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방법으로 보장기관이 제공하는 급여를 그 지원형태별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 범정부 활용)
- 특히, 사회서비스의 경우 가장 광범위한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구분하는 기준도 다양한데, 그 중 한 가지 방법으로 프로그램들을 수요자에게 지원하는 방법과 공급자에게 지원하는 방법으로 구분 할 수 있음
  - 하지만, 공급자 지원의 경우 서비스 공급자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 등을 포함하고 있어 수요자 측면(현금, 현물, 바우처)에 비해 개념적 명확성이 상대적으로 불분명
-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명확한 분류기준으로서 사회보장정보원이 관리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에 '지원형태'라는 항목으로 제시되어 있음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2010년 사회보장사업 업무처리 효율화와 복지급여 이력관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구축되었으며,
    - 이 중 범정부 시스템은 각 부처 및 정보보유기관에서 제공하는 복지사업 정보와 지원대상자의 자격정보, 수급이력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임

(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지 참조)

- 범정부 시스템은 복지사업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보장기관이 제공하는 사회보장급여의 형태도 포함됨
- 지원형태는 7개(대여/감면, 바우처, 시설입소, 자원봉사, 프로그램, 현금, 현물)로 구분되어 제시되고 있음
- 위에 제시된 사회보장급여의 지원형태는 별다른 설명이 없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유사한 분류기준<sup>9)</sup>과의 비교를 통해 파악해 보면 다음과 같음
- 범부처 사회서비스 발전 방향(18.2.9)에는 과거 사회보장사업의 분류기준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사회보장사업의 분류 기준이 제시되어 있음
- 해당 자료의 경우 사회보장급여를 크게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보장으로 분류
  - 아래 <표 2-6>은 <표 2-5>를 공통적인 유형으로 묶어 유형화한 것임

<표 2-5> 사회보장사업 분류에 따른 사회보장급여 형태 (지원형태)

소득보장		사회서비스보장	
소득보장	교육 지원	주거 지원	비용지원
소득보장_자금대여	자산형성	고용 지원	비용지원_바우처
비용지원_세금·보험료			비용지원_감면-기회제공
기초보장			비용지원_대여
의료급여			현물지원_물품-이용기회
긴급복지			자원봉사
보상지원			공급자지원_시설운영
			공급자지원_사업단위
			공급자지원_인건비
			공급자지원_물품-이용기회
			공급자지원_시설설비등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8.2, p.39)

- 기본조사에서 조사된 사회보장급여의 지원형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범정부에 제시된 급여지원 형태와 전문가 검토 등의 확인 과정을 거쳐 파악하였음

9) 사회보장위원회 보고안전(관계부처 합동, 2018.2)으로 제출된 '범부처 사회서비스 발전 방향'을 정리하였음.



〈표 2-6〉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의 급여지원형태 비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범부처 사회서비스 현황 조사*상의 분류
1) 현금-① ⑥	① 서비스이용자_현금(대여비용, 비용감면, 기회제공 포함)
2) 현물-② ⑦	② 서비스이용자_현물(물품)
3) 바우처-③	③ 서비스이용자_바우처
4) 프로그램-⑤	④ 서비스공급자_시설운영지원
5) 자원봉사 ⑥	⑤ 서비스공급자_사업(프로그램)단위지원
6) 시설입소-④, ⑦	⑥ 서비스공급자_인건비지원
7) 대여/감면-①	⑦ 서비스공급자_시설설비등지원

주: 2018년 범부처 사회서비스 사업 현황 및 보장수준 관련 조사.

## □ 지원형태 설명

### ○ 현금급여

- 본인에게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시장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자에게 화폐 형태(현금)로 급여를 지급하는 급여형태로, 급여의 목적과 상관없는 용도로의 사용이 가능
- 급여의 대상이 해당 급여(서비스)의 수요자인 개인 또는 가구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현금형태(현금, 계좌이체 등)로 급여를 받은 경우를 의미

### ○ 현물급여

- 지원 대상자에게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직접 제공<sup>10)</sup>
- 예를 들어 교과서 지원에서, 해당 지원을 보장기관이 계좌이체 등으로 학생에게 직접 이전하면 현금급여 사업이지만, 보장기관이 학교에 교과서대를 지불하고 학교가 학생에게 교과서를 지급하게 되면 이는 현물급여가 됨.

### ○ 바우처

- 바우처는 이용 가능한 서비스의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표로, 정해진 용도 내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정부가 비용을 대신 지급하거나 보조하기 위해 제공한 증표(이용권)를 의미함

\* 바우처는 선택의 폭이 현물급여에 비해 넓고, 현금급여에 비해 제한적

10)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가 현금으로 지원을 받더라도 용도가 정해진 경우에는 현물로 분류함. 예를 들어 어떤 보장기 지원사업에서 대상자가 영수증 등의 증빙과 관계없이 현금으로 지원받는 경우는 현금급여로 분류하지만, 보장기를 구입한 영수증을 제출해야 급여가 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는 현물급여로 분류하였음.

## ○ 대여/감면

- (대여) 일정한 조건을 갖춘 지원 대상 집단에 대해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통상적인 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대여해 주는 것
- (감면) 일정한 조건을 갖춘 급여 수혜자 집단에 대해 어떤 재화나 서비스의 구입비용을 줄여주는 것(면제 포함)(수급자 지원)

## ○ 시설입소

- 지원 대상자가 입소(거주) 형태로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을 공급자가 운영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운영비(인건비, 부식비, 관리비 등) 등에 대한 관련 지원을 의미
- 관련 지원에 서비스 제공 비용도 포함되므로 아래 제시된 ‘프로그램’과 구분하기 모호한 측면이 발생. 따라서 급여 내용이 입소시설 운영과 해당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관련된 경우 ‘시설입소’로 선택

## ○ 프로그램

- 급여 수혜자가 이용하는 프로그램(사회서비스)을 제공하는 공급자(사회보장 관련 기관 포함)에게 해당 프로그램 단위로 예산(서비스 제공비용, 운영비 등) 등을 지원
- \* 사업(프로그램) 성격에 따라 다양한 지원형태 포함 가능

## ○ 자원봉사 : 자원봉사를 통한 서비스 공급

〈표 2-7〉 사회보장급여 지원형태 현황

(단위: 개, %)

지원형태	빈도	퍼센트
현금	78	24.7
현물	73	23.1
바우처	23	7.3
프로그램	92	29.1
시설입소	12	3.8
대여/감면	38	12.0
전체	316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a).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위한 기본현황 조사(원자료).

## □ 실태조사 대상 지원형태

- 지원형태는 사회보장급여가 어떠한 형태로 대상자에게 지급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기준변수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에서 해당 방식을 통해 사회보장급여를 분류하고 있어 새로운 분류기준을 만드는 것보다 용이한 장점이 있음
  - 급여의 주요 특성을 지원형태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정책함의 도출에도 용이하며, 광범위한 사회보장급여를 분류하는 기준으로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 대상선정에도 활용이 가능
- 따라서 2020년 처음 실시하는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에서는 지원형태를 바탕으로 사회보장급여들을 분류하고 조사대상을 한정할 필요가 있음
  - 사업지원형태는 크게 현금과 비현금 급여로 분류가 가능하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적용하는 방식으로 현금, 현물, 바우처, 프로그램, 시설입서, 대여/감면, 자원봉사 형태로 분류할 수 있음
  - 이러한 지원형태 중 정책체감도, 사업의 중요성, 정책함의 도출의 용이성 등이 크면서, 처음 실시되는 실태조사로서 향후에도 수행된 실태조사의 방향성을 도출에 기준이 될 수 있는 급여지원형태를 선택할 필요가 있음
- 현금급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
  - 현금급여는 대상자에게 급여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다른 지원형태에 비해 정책체감도가 가장 큰 지원형태임
  - 현금급여는 정책체감도도 크지만, 사업지원형태 중 예산규모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음

〈표 2-8〉 사회보장급여 지원형태별 예산(집행액) 현황 : 2019년 기준

(단위: 백만 원, %)

현금	현물	바우처	프로그램	시설입소	대여/감면	전체
44,584,505 (38.2)	31,108,351 (26.7)	12,376,146 (10.6)	9,647,387 (8.3)	324,108 (0.3)	18,562,017 (15.9)	116,602,514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a).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위한 기본현황 조사(원자료).

- 또한 현금급여는 사용용도가 정해진 비현금급여에 비해 급여 수급자의 재화나 서비스 선택의 자율성 보장됨
- 따라서 재화나 서비스의 자유로운 선택을 통한 효용 극대화를 통해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능하게 함(김태완 외, 2013, p.4)

### 3. 예산규모에 따른 실태조사 대상사업 범위<sup>11)</sup>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재된 모든 사업을 실태조사에서 조사하는 것은 조사의 효율성은 물론 효과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함
  - 이는 현금급여를 실태조사 대상으로 설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음
    - 사업 규모가 작아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적은 사업에 대한 부정수급의 규모 및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비효율적임
  - 일정 기준 이상을 충족시키는 현금급여를 대상으로 부정수급 실태를 조사하여 조사의 성과의 정책함의를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 정부는 다양한 예산 투입 사업에 있어 일정규모 이상의 예산 또는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평가(심사)를 실시하여 사업진행 여부 결정 또는 사업의 효과를 평가하는데 활용하고 있음
  - 기획재정부는 100억원 이상의 신규보조사업에 대해 해당 사업의 소관부처가 사전 적격성 심사를 실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신규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고용노동부의 고용영향평가의 경우도 예산 규모 100억 원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있음
    - 신규보조사업 적격성심사는 총사업비 또는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금액 중 국고보조금 규모가 100억 이상인 신규 보조사업에 대해 실시
    - 고용영향평가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전체와 함께 부처요구액 기준 연간 100억 이상 SOC 사업과 연간 100억원 이상 문화·예술 및 보건·복지분야

11) 해당 내용은 본 보고서의 '부록1'을 토대로 작성하였음. 자세한 사항은 '부록1' 참조.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이 그 대상이 됨

-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의 경우 기준금액을 500억원으로 설정
  -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 정보화 사업
  - 중기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사업기간의 정함이 없이 계속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5년간의 사업비 합계를 기준)인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 \* 중기재정지출은 국가재정법 제28조에 따라 제출하는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임(신규 사업 착수 이후 5년간 소요되는 재정지출을 합한 금액)
-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연간 예산이 100억원 이상인 사업은 사업 규모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본 연구 영역의 실태조사의 경우 100억원을 기준으로 그 대상을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500억원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할 경우 대상사업의 수가 적어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제한 할 수 있음
- 이러한 예산기준과 함께 예산 수준이 100억원 이상의 사업이라도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이 낮거나 제도 개선의 함의가 적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 최종적으로는 전체 78개의 현금 급여 사업 중 예산규모가 100억원 이상이면서 정책함의가 큰 것으로 예상되는 39개 사업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





## 제3장

### 기본조사 분석

제1절 기본조사 개요 및 자료 현황

제2절 기본조사 결과 분석

제3절 현금급여 분석

제4절 부정수급 관리체계 현황과 미파악 사업 분석





## 제3장 기본조사 분석

### 제1절 기본조사 개요 및 자료 현황

#### 1. 조사 개요

##### □ 조사 배경 및 목적

-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발생 현황 및 유형, 사후관리, 관리조직 운영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및 공개 의무화(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2조의2)
  -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의 규모의 파악과 실태조사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선 사회보장사업의 주요 정보를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부정수급 발생 현황 및 유형’, ‘부정수급 사후관리’, ‘부정수급 관리조직 및 운영’ 등을 파악해야 하는데, 전반적인 부정수급 관리 현황과 규모 및 유형에 대해서는 행정조사 차원의 집계 조사로 파악하는 것이 효과적임
- 사업 기본현황(사업정보, 부정수급 현황 등) 파악(부록 3 참조)을 통해 실태조사 대상 사업 및 기관 등을 선정하는 자료로 활용하고 부정수급 규모 공표에 활용

##### □ 조사대상 및 방법

- 범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된 21개 소관부처 359개 사회보장사업을 대상으로 예산, 사업지원 형태, 부정수급 현황 등을 조사(공문을 통한 집계)
- 사업별 소관부처 소관과에 공문으로 조사표를 발송하고 복지부가 직접 회수
- 작성기준 연도 : 2019년

##### □ 조사기간 : 2020. 7. 7. ~ 8. 11.

- 당초 조사 일정은 2020. 7. 7. ~ 7. 15.로 약 8일간 계획함
- 최종 조사표 회신일 기준 실 조사기간은 2020. 7. 7. ~ 8. 11.로 약 4주 소요됨

## 2. 기본조사 자료 현황

### 가. 기본조사표 제출 현황

□ 전체 조사대상 사업 359개 중 회수된 대상 사업은 모두 353개

○ 미회신 및 조사 제외 사업 총 6개

- 미회신 5건\* : 사업 성격이 사업 운영을 위한 경상적 인건비 지원 성격이거나, 해당 사업이 다른 사회보장급여 중 하나의 내역 사업으로 포함되어 별도의 조사가 필요 없는 경우 등

\* '북한이탈주민 사회보장 지원', '탈북학생 교육지원', '이동통신요금감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산재근로자 창업점포지원'

- 조사제외 1건\* : 2019년 사업 집행 내역이 없는 사업

\* '청소년한부모고교생교육비지원'

□ 회수된 대상 사업 353개 중 데이터 확인 후 최종 분석 대상 사업 수 316개

○ 1개 사업을 1개 조사표로 보내준 사업 274개 → 이중 사업 성격으로 인해 예산 등이 동일하게 기재된 3개 사업을 하나로 통합 후 분석대상 사업 수는 272개

○ 여러 사업을 1개 조사표로 보내준 사업 77개 → 통합 및 분리 후 분석 대상 포함 사업 수 42개

○ 1개 사업을 2개 조사표로 보내준 사업 수 2개 → 확인 후 분석 대상 포함 사업 수 2개

### 나. 사업 및 예산 정보 회신 현황

□ 최종 분석 대상 사업 수 316개 중 사업 및 예산 정보 확인이 가능한 사업 수 총 310개

○ 310개 사업들의 사업 예산 정보는 에디팅을 진행하며 보완함

- 담당자와 유선 통화 후 예산 내역 확인 및 보완을 진행함

- 위 사업들 중 비예산 사업의 성격으로, 사업 예산이 0원인 경우 총 9개\*

\* '국가유공자의 료급여증발급', '준주택지원(융자)',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주거안정

월세대출보증', '버팀목대출보증',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경감', 건보재정의 '건강보험 장애인 보장구', '지방세 비과세감면',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 예산 정보 미제출 사업 6개\* : 해당 사업들은 시도 교육청 예산 사업이거나, 시도교육청과 지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련 예산은 시도 교육청 또는 지자체 소관

\* 고교학비지원,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취약계층 우수인재 육성사업(꿈사다리장학제도),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급식비

- 예산 정보 미제출 사업도 다른 주요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분석 대상에 포함

- 310개 사업의 예산 집행액 총액은 116조 6,603억 원인 것으로 조사됨

#### 다. 부정수급(오류수급 포함) 규모 파악 여부 및 규모 회신 현황

- 최종 분석 대상인 316개 사업의 부정수급(오류수급 포함) 파악 여부와 이들 사업의 2019년 부정수급(오류수급 포함) 규모 제출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제출) 부정수급을 파악하고 있으며, 2019년 '부정수급 규모' 현황을 회신한 사업 수는 모두 198개

- 부정수급 규모가 '0원' 보다 큰 경우는 84개
- 부정수급 규모가 '0원( 또는 발생건수가 0건)'인 경우 114개

- (비해당) 부정수급을 파악하고 있지 않아, 2019년 '부정수급 규모' 현황도 없는 사업 수는 모두 118개

- 부정수급을 파악하지 않은 사업에 예산정보 미제출 사업 6개도 포함됨
- 이는 전체 조사 대상의 약 33%이며, 최종 분석 대상 사업의 약 37%에 해당
  - 부정수급을 파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약 58%가 '사업 성격상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음'으로 응답
  - 이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전체 조사대상의 약 삼분의 일이 부정수급 현황을 파악 및 제출하지 않는 것은 본 연구 결과의 한계점으로 볼 수 있음

## 제2절 기본조사 결과 분석<sup>12)</sup>

### 1. 기준변수 분석 : 사업지원형태, 자산조사 및 보장기관 형태

- 기본조사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기본조사 분석에 사용된 주요 기준변수인 사업지원형태 1, 사업지원형태 2, 자산조사기준, 보장기관 형태에 대해 파악
- 제시된 기준변수 중 사업지원형태와 보장기관 형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법정부)과 기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변수 값을 설정함
  - 특히, 사업지원형태의 경우 연구진 검토 등의 확인 과정을 거쳐 기본조사 결과에 반영하였음
- 한편, 자산조사기준은 각 사업별로 소득 또는 재산 기준의 유무를 파악하여 생성한 변수임

〈표 3-1〉 기본조사 분석을 위한 기준변수

구분	사업지원형태 1	사업지원형태 2	자산조사기준	보장기관 형태
변수값	1. 현금 2. 비현금	1. 현금 2. 현물 3. 바우처 4. 프로그램 5. 시설입소 6. 대여/감면	1. 있음 2. 없음	1. 지자체 또는 교육청 2. 특별지방행정기관 3. 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4. 기타 5. 2개 이상 보장기관

자료: 저자작성.

#### □ 사업지원형태

- ‘사업지원형태 1’은 사회보장급여의 지원형태를 현금과 비현금으로 구분한 것임
  - 즉, 급여(사업) 지원형태를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구분한 것으로, 본 연구용역의 주된 분석대상인 현금급여와 그 밖의 급여(비현금급여) 간의 비교를 통해 직관적인 규모의 비교가 가능
- ‘사업지원형태 2’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의 지원형태 유형을 적용한 것으로

12) 본 장에 제시된 통계는 시험적 작성통계로 ‘본 통계는 국가승인통계가 아니며 향후 국가승인통계로 신청할 예정임’

각 사업의 특성을 6가지 지원형태에 따라 보여주는 기본적인 핵심적인 변수임

- 해당 변수의 변수값은 기본조사를 통해 입력된 결과를 준용하되, 입력된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입력이 안 된 경우에는 응답자 확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입력 내용 확인, 연구진 검토 등을 통해 수정하였음
- ‘사업지원형태 2’의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사업 지원형태 유형중 하나인 ‘자원봉사’가 없는데, 이는 기본조사 실시과정에서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316개 사회보장급여 중 단 1개만이 ‘자원봉사’로 응답되었는데,
  - 해당 사업의 성격이 실제로는 ‘프로그램’에 해당되어 사업 지원형태를 ‘자원봉사’에서 ‘프로그램’으로 변경하였기 때문임.

○ ‘사업지원형태 1’에 대해 살펴보면, 현금급여 사업은 78개로 전체 급여의 24.7%를 차지했으며, 비현금 사업은 238개로 전체 급여의 75.3%를 차지함

- 1순위와 2순위를 모두 고려한 경우, 현금급여의 비중이 24.2%로 1순위 사업만 고려했을 경우 보다 약 0.5%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3-2〉 사업지원형태 1

(단위: 사업 수, %)

사업지원형태	1순위		1+2순위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현금	78	24.7	84	24.2
비현금	238	75.3	263	75.8
전체	316	100.0	347	100.0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a).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위한 기본현황 조사(원자료).

〈표 3-3〉 사업지원형태 2

(단위: 사업 수, %)

사업지원형태	1순위		1+2순위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현금	78	24.7	84	24.2
현물	73	23.1	85	24.5
바우처	23	7.3	24	6.9
프로그램	92	29.1	99	28.5
시설입소	12	3.8	16	4.6
대여/감면	38	12.0	39	11.2
전체	316	100.0	347	100.0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a).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위한 기본현황 조사(원자료).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급여 지원형태 분류 방식을 적용한 ‘사업지원형태 2’에서는,

- 전체 316개 분석대상 사업 중 프로그램이 29.1%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이어 현금(24.7%)과 현물(23.1%) 순으로 그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자산조사기준은 수급요건 중 소득 또는 재산 기준의 존재 여부에 따른 것으로,

- 사회보장급여 지원 대상의 소득 또는 재산을 근거로 급여 수혜의 여부 또는 정도를 결정하는 자산조사기준은 부정수급의 성격을 발생원인과 급여지급의 엄격성 차원에서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
- 전체 316개 사업 중 141개(44.6%) 사업은 급여선정기준에 자산조사기준이 있는 것으로, 175개(55.4%) 사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3-4〉 자산기준 유무

(단위: 사업 수, %)

자산조사기준 유무	빈도	퍼센트
있음	141	44.6
없음	175	55.4
전체	316	100.0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a).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위한 기본현황 조사(원자료).

□ 보장기관 변수는 해당 사업의 급여를 제공·관리하는 보장기관을 보여주는 것임

- 보장기관에 대한 형태 분류는 다음과 같음<sup>13)</sup>
  - ‘지자체 또는 교육청’은 보장기관이 보통 지방행정기관인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인 지방교육청인 사업들을 의미
  - ‘특별지방행정기관’은 특정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중 지역 업무를 해당 구역 안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당지역에 설치한 행정기관들로,
    - 지방국세청, 지방보훈지청, 지방경찰청, 출입국관리사무소, 고용센터 등이 있으며, 이는 국가사무를 해당 지역에서 처리한다는 부분에서 지방자

13) 행정안전부의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20.11월 인출)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분류 방법을 토대로 정리

치 사무를 하는 지방자치단체와는 구별됨(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 2020.

#### 11. 인출)

-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공공기관 지정 및 분류기준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을 의미하는 것임
    - 공기업은 일정기준을 충족한 공공기관 중 자체수입이 총수입의 50% 이상인 경우에 해당됨. 이중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자체수입이 총수입의 85% 이상인 경우 시장형 공기업(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등)으로 지정
    -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예, 국민연금공단, 신용보증기금)과 위탁집행형(예, 한국장학재단, KOTRA) 준정부기관이 있으며, 기타공공기관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으로 한국산업은행과 출연연구기관 등이 있음(국회예산정책처, 2019)
  - ‘기타’는 위 보장기관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 주로 중앙부처가 직접 관리하는 사업과 보장기관이 부처 부속기관, 민간기관인 사업이 해당됨
    - 여기서 부속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에 부속하여 그 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을 의미하며 시험연구, 교육훈련, 의료/문화/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들임. 국립보건원, 9개 국립병원, 국립현대미술관 등이 이에 속함
  - 또한 보장기관이 2개 이상인 경우도 하나의 보기로 묶어서 제시하였음
- 전체 316개 사업 중 보장기관이 지자체 또는 교육청인 경우가 126개(39.9%)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79개, 25.0%)과 기타(60개, 19.0%)가 뒤를 이었음

〈표 3-5〉 보장기관

(단위: 사업 수, %)

보장기관	빈도	퍼센트
지자체 또는 교육청	126	39.9
특별지방행정기관	38	12.0
공공기관	79	25.0
기타	60	19.0
2개 이상의 보장기관	13	4.1
전체	316	100.0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a).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위한 기본현황 조사(원자료).

## 2. 부정수급 관리 근거

### 가. 근거법령 유무 및 주요 대응조치

#### □ 근거법령 유무

- 316개 사업 중 145개(45.9%) 사업은 개별적 성격의 근거법령\*에 부정수급 관리 근거가 있고, 171개(54.1%) 사업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사회보장급여법」, 「보조금 관리 관한 법률」 등 사회보장사업 또는 국고보조금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령은 제외

- 부정수급 관리근거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지원형태에서는 바우처(73.9%)와 현금(64.1%)이, 보장기관에서는 특별지방행정기관(68.4%)이 높게 나타남

〈표 3-6〉 근거법령에 부정수급 관리근거 유무

(단위: 사업 수, (괄호) %)

분류	구분	있음	없음	계
사업지원 형태 1	현금	50 (64.1)	28 (39.5)	78 (100.0)
	비현금	95 (39.9)	143 (60.1)	238 (100.0)
사업지원 형태 2	현금	50 (64.1)	28 (35.9)	78 (100.0)
	현물	35 (47.9)	38 (52.1)	73 (100.0)
	바우처	17 (73.9)	6 (26.1)	23 (100.0)
	프로그램	19 (20.7)	73 (79.4)	92 (100.0)
	시설입소	3 (25.0)	9 (75.0)	12 (100.0)
	대여/감면	21 (55.3)	17 (44.7)	38 (100.0)
자산조사 기준	있음	71 (50.4)	70 (49.6)	141 (100.0)
	없음	74 (42.3)	101 (57.7)	175 (100.0)
보장기관	지자체 또는 교육청	59 (46.8)	67 (53.2)	126 (100.0)
	특별지방행정기관	26 (68.4)	12 (31.6)	38 (100.0)



분류	구분	있음	없음	계
	공공기관	35 (44.3)	44 (55.7)	79 (100.0)
	기타	21 (35.0)	39 (65.0)	60 (100.0)
	2개 이상의 보장기관	4 (30.8)	9 (69.2)	13 (100.0)
전체		145 (45.9)	171 (54.1)	316 (100.0)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a).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위한 기본현황 조사(원자료).

#### □ 근거법령에 따른 주요 대응조치(1순위)

- 전체 316개 사업 중 개별적 성격의 근거법령에 부정수급 관리 근거가 있는 145개 사업을 대상으로 주요 대응조치를 분석한 결과,
  - 76개(52.4%) 사업에서 환수, 징수,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등의 금전적 제재를 1순위로 부여하고 있었음
  - 37개(25.5%) 사업은 급여 지원중단을, 14개(9.7%) 사업은 경고, 영업정지, 자격정지, 시설의 등록·인가·자격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었음

〈표 3-7〉 근거법령에 제시된 대응 조치 중 1순위 대응조치

(단위: 사업 수, (괄호) %)

분류	구분	지원중단	금전적 제재	행정 처분	형벌	없음	공동 1순위 <sup>(2)</sup>	계
사업지원 형태 1	현금	22 (44.0)	25 (50.0)	0 (0.0)	1 (2.0)	0 (0.0)	2 (4.0)	50 (100.0)
	비현금	15 (15.8)	51 (53.7)	14 (14.7)	9 (9.5)	2 (2.1)	4 (4.2)	95 (100.0)
사업지원 형태 2	현금	22 (44.0)	25 (50.0)	0 (0.0)	1 (2.0)	0 (0.0)	2 (4.0)	50 (100.0)
	현물	4 (11.4)	22 (62.9)	3 (8.6)	6 (17.1)	0 (0.0)	0 (0.0)	35 (100.0)
	바우처	5 (29.4)	11 (64.7)	1 (5.9)	0 (0.0)	0 (0.0)	0 (0.0)	17 (100.0)
	프로그램	2 (10.5)	9 (47.4)	5 (26.3)	0 (0.0)	2 (10.5)	1 (5.3)	19 (100.0)
	시설입소	0 (0.0)	0 (0.0)	1 (33.3)	1 (33.3)	0 (0.0)	1 (33.3)	3 (100.0)
	대여/감면	4 (19.1)	9 (42.9)	4 (19.1)	2 (9.5)	0 (0.0)	2 (9.5)	21 (100.0)

분류	구분	지원중단	금전적 제재	행정 처분	형벌	없음	공동 1순위 <sup>(2)</sup>	계
자산조사 기준	있음	15 (21.1)	39 (54.9)	5 (7.0)	8 (11.3)	0 (0.0)	4 (5.6)	71 (100.0)
	없음	22 (30.1)	37 (50.0)	9 (12.2)	2 (2.7)	2 (2.7)	2 (2.7)	74 (100.0)
보장기관	지자체 또는 교육청	7 (11.9)	41 (69.5)	6 (10.2)	1 (1.7)	0 (0.0)	4 (6.8)	59 (100.0)
	특별지방행 정기관	16 (61.5)	10 (38.5)	0 (0.0)	0 (0.0)	0 (0.0)	0 (0.0)	26 (100.0)
	공공기관	12 (34.3)	18 (51.4)	0 (0.0)	5 (14.3)	0 (0.0)	0 (0.0)	35 (100.0)
	기타	2 (9.5)	6 (28.6)	6 (28.6)	3 (14.3)	2 (9.5)	2 (9.5)	21 (100.0)
	2개 이상의 보장기관	0 (0.0)	1 (25.0)	2 (50.0)	1 (25.0)	0 (0.0)	0 (0.0)	4 (100.0)
전체		37 (25.5)	76 (52.4)	14 (9.7)	10 (6.9)	2 (1.4)	6 (4.1)	145 <sup>(1)</sup> (100.0)

주: (1) 전체 사업 316개 중 근거법령이 있는 145개 사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임.

(2) 공동 1순위란, 복수의 주요대응조치를 응답한 사례들 중 1순위를 매길 수 없다고 응답한 사례들임.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a).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위한 기본현황 조사(원자료).

## 나. 관련지침 유무

□ 전체 316개 사업 중 관련지침(사업안내, 매뉴얼 등 포함)에 부정수급 관리 근거가 있는 사업들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 316개 사업 중 199개(63.0%) 사업이 부정수급 관리와 관련한 지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17개(37.0%)의 사업에는 부정수급 관련 지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사회보장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은 제외

〈표 3-8〉 관련지침에 부정수급 관리 근거 유무

(단위: 사업 수, (괄호) %)

분류	구분	있음	없음	계
사업지원 형태 1	현금	55 (70.5)	23 (29.5)	78 (100.0)
	비현금	144 (60.5)	94 (39.5)	238 (100.0)
사업지원 형태 2	현금	55 (70.5)	23 (29.5)	78 (100.0)
	현물	48 (65.8)	25 (34.3)	73 (100.0)
	바우처	20 (87.0)	3 (13.0)	23 (100)
	프로그램	46 (50.0)	46 (50.0)	92 (100.0)
	시설임소	7 (58.3)	5 (41.7)	12 (100.0)
	대여/감면	23 (60.5)	15 (39.5)	38 (100.0)
자산조사 기준	있음	50 (35.5)	91 (64.5)	141 (100.0)
	없음	108 (61.7)	67 (38.3)	175 (100.0)
보장기관	지자체 또는 교육청	86 (68.3)	40 (31.7)	126 (100.0)
	특별지방행정기관	27 (71.1)	11 (28.9)	38 (100.0)
	공공기관	56 (70.9)	23 (29.1)	79 (100.0)
	기타	21 (35.0)	39 (65.0)	60 (100.0)
	2개 이상의 보장기관	9 (69.2)	4 (30.8)	13 (100.0)
전체		199 (63.0)	117 (37.0)	316 (100.0)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a).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위한 기본현황 조사(원자료).

### 3. 부정수급 관리 전산시스템 및 신고체계 운영

#### 가. 부정수급 관리 전산시스템 운영여부

□ 316개 사업 중 부정수급 관리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은 151개(47.8%), 운영하지 않는 사업은 165개(52.2%)로 나타남

○ 현금급여가 비현금급여에 비해, 자산조사가 적용되는 사업이 그렇지 않은 사업에 비해 부정수급 관리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3-9〉 부정수급 관리 전산시스템 운영여부

(단위: 사업 수, (괄호) %)

분류	구분	운영	미운영	계
사업지원 형태 1	현금	51 (65.4)	27 (34.6)	78 (100.0)
	비현금	100 (42.0)	138 (58.0)	238 (100.0)
사업지원 형태 2	현금	51 (65.4)	27 (34.6)	78 (100.0)
	현물	33 (45.2)	40 (54.8)	73 (100.0)
	바우처	14 (60.9)	9 (39.1)	23 (100.0)
	프로그램	29 (31.5)	63 (68.5)	92 (100.0)
	시설임소	2 (16.7)	10 (83.3)	12 (100.0)
	대여/감면	22 (57.9)	16 (42.1)	38 (100.0)
자산조사 기준	있음	74 (52.5)	67 (47.5)	141 (100.0)
	없음	77 (44.0)	98 (56.0)	175 (100.0)
보장기관	지자체 또는 교육청	59 (46.8)	67 (53.2)	126 (100.0)
	특별지방행정기관	29 (76.3)	9 (23.7)	38 (100.0)
	공공기관	35 (44.3)	44 (55.7)	79 (100.0)
	기타	18 (30.0)	42 (70.0)	60 (100.0)
	2개 이상의 보장기관	10 (76.9)	3 (23.1)	13 (100.0)
전체		151 (47.8)	165 (52.2)	316 (100.0)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a).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위한 기본현황 조사(원자료).

## 나. 부정수급 신고체계 운영여부

□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부정수급을 신고할 수 있는 신고체계(부정수급 신고센터, 신고 홈페이지, 신고담당부서 등)를 운영하는 사업은 178개(56.3%), 운영하지 않는 사업은 138개(43.7%)로 나타남

○ 현금급여가 비현금급여에 비해, 자산조사 적용 사업이 그렇지 않은 사업에 비해, 보장기관 중에서는 공공기관이 부정수급 신고체계 운영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3-10〉 사업지원형태별 부정수급 신고체계 운영여부

(단위: 사업 수, (괄호) %)

분류	구분	운영	미운영	계
사업지원 형태 1	현금	54 (69.2)	24 (30.8)	78 (100.0)
	비현금	124 (52.1)	114 (47.9)	238 (100.0)
사업지원 형태 2	현금	54 (69.2)	24 (30.8)	78 (100.0)
	현물	39 (53.4)	34 (46.6)	73 (100.0)
	바우처	18 (78.3)	5 (21.7)	23 (100.0)
	프로그램	39 (42.4)	53 (57.6)	92 (100.0)
	시설입소	5 (41.7)	7 (58.3)	12 (100.0)
	대여/감면	23 (60.5)	15 (39.5)	38 (100.0)
자산조사 기준	있음	83 (58.9)	58 (41.1)	141 (100.0)
	없음	95 (54.3)	80 (45.7)	175 (100.0)
보장기관	지자체 또는 교육청	71 (56.4)	55 (43.7)	126 (100.0)
	특별지방행정기관	16 (42.1)	22 (57.9)	38 (100.0)
	공공기관	55 (69.6)	24 (30.4)	79 (100.0)
	기타	27 (45.0)	33 (55.0)	60 (100.0)
	2개 이상의 보장기관	9 (69.2)	4 (30.8)	13 (100.0)
전체		178 (56.3)	138 (43.7)	316 (100.0)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a).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위한 기본현황 조사(원자료).

#### 4. 부정수급 파악 현황

##### 가. 부정수급 규모 파악 여부

- 전체 316개 사업 중 198개 사업(62.7%)이 부정수급(오류수급 포함) 현황을 파악(기본조사의 ‘부정수급 규모’ 현황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사업지원형태별로 살펴보면, 바우처의 부정수급 규모 파악비율이 87.0%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현금(82.1%), 프로그램(55.4%), 대여/감면(52.6%), 현물(52.1%), 시설입소(41.7%) 순으로 나타남
- 응답 사업의 37.3%인 118개 사업은 부정수급 규모를 파악하고 있지 않음
  - 사업 성격에 따라 부정수급 규모 파악의 필요성이 적은 사업도 있어 파악 여부만으로 사업관리 노력 정도를 가늠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하지만 적지 않은 사업들이 부정수급 현황 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3-11〉 부정수급 파악 여부

(단위: 사업 수, (괄호) %)

분류	구분	파악	파악 안 함	계
사업지원 형태 1	현금	64 (82.1)	14 (18.0)	78 (100.0)
	비현금	134 (56.3)	104 (43.7)	238 (100.0)
사업지원 형태 2	현금	64 (82.1)	14 (18.0)	78 (100.0)
	현물	38 (52.1)	35 (48.0)	73 (100.0)
	바우처	20 (87.0)	3 (13.0)	23 (100.0)
	프로그램	51 (55.4)	41 (44.6)	92 (100.0)
	시설입소	5 (41.7)	7 (58.3)	12 (100.0)
	대여/감면	20 (52.6)	18 (47.4)	38 (100.0)
자산조사 기준	있음	84 (59.6)	57 (40.4)	141 (100.0)
	없음	114 (65.1)	61 (34.9)	175 (100.0)

분류	구분	파악	파악 안 함	계
보장기관	지자체 또는 교육청	78 (61.9)	48 (38.1)	126 (100.0)
	특별지방행정기관	27 (71.1)	11 (29.0)	38 (100.0)
	공공기관	54 (68.4)	25 (31.7)	79 (100.0)
	기타	28 (46.7)	32 (53.3)	60 (100.0)
	2개 이상의 보장기관	11 (84.6)	2 (15.4)	13 (100.0)
전체		198 (62.7)	118 (37.3)	316 (100.0)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a).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위한 기본현황 조사(원자료).

#### 나. 부정수급 파악 방법(부정수급을 파악하고 있는 경우)

□ 부정수급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고 응답한 198개 사업의 부정수급 규모 파악 방법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파악방법으로 ‘e나라도움’이 40.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e나라도움 외 전산시스템’(33.3%), ‘수기취합’(25.3%) 순으로 나타남

- ‘수기취합’ 비중이 전체의 사분의 일 정도라는 것은 부정수급 현황 관리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

〈표 3-12〉 사업지원형태별 부정수급 파악 방법

(단위: 사업 수, (괄호) %)

분류	구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외 전산시스템	수기취합	기타	계
사업지원 형태 1	현금	16 (25.0)	35 (54.7)	13 (20.3)	0 (0.0)	64 (100.0)
	비현금	65 (48.5)	31 (23.1)	37 (27.6)	1 (0.8)	134 (100.0)
사업지원 형태 2	현금	16 (25.0)	35 (54.7)	13 (20.3)	0 (0.0)	64 (100.0)
	현물	13 (34.2)	12 (31.6)	12 (31.6)	1 (2.6)	38 (100.0)
	바우처	8 (40.0)	6 (30.0)	6 (30.0)	0 (0.0)	20 (100.0)

분류	구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외 전산시스템	수기취합	기타	계
	프로그램	38 (74.5)	3 (5.9)	10 (19.6)	0 (0.0)	51 (100.0)
	시설입소	3 (60.0)	0 (0.0)	2 (40.0)	0 (0.0)	5 (100.0)
	대여/감면	3 (15.0)	10 (50.0)	7 (35.0)	0 (0.0)	20 (100.0)
자산조사 기준	있음	39 (46.4)	21 (25.0)	23 (27.4)	1 (1.2)	84 (100.0)
	없음	42 (36.8)	45 (39.5)	27 (23.7)	0 (0.0)	114 (100.0)
보장기관	지자체 또는 교육청	44 (56.4)	14 (18.0)	19 (24.4)	1 (1.3)	78 (100.0)
	특별지방행정기관	1 (3.7)	24 (88.9)	2 (7.4)	0 (0.0)	27 (100.0)
	공공기관	11 (20.4)	22 (40.7)	21 (38.9)	0 (0.0)	54 (100.0)
	기타	16 (57.1)	4 (14.3)	8 (28.6)	0 (0.0)	28 (100.0)
	2개 이상의 보장기관	9 (81.8)	2 (18.2)	0 (0.0)	0 (0.0)	11 (100.0)
전체		81 (40.9)	66 (33.3)	50 (25.3)	1 (0.5)	198 (100.0)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a).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위한 기본현황 조사(원자료).

#### 다. 부정수급 규모 미파악 사유(부정수급 규모를 파악하지 않은 경우)

- 부정수급 규모를 파악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118개 사업의 부정수급 규모 미파악 사유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음(2개 이상 중복으로 응답한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총 138개 사례에 대해 분석)
- 부정수급 규모를 파악하지 않는 주요한 이유로 '사업성격상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음'이 58.0%로 가장 높게 나타남. '집행기관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18.1%)가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 '업무과중' 관련(0.7%), '환수에 대한 규정 또는 지침이 없음'(2.9%)은 응답비율이 낮게 나타나, 미파악의 주 요인이 업무상의 어려움과 규정미비 등과 같은 사업여건보다는 해당사업 관리의 통상적인 관례에 근거할 가능성이 적지 않음



〈표 3-13〉 사업지원형태별 부정수급 미파악 사유 (중복응답)

(단위: 사업 수, (괄호) %)

분류	구분	사업성격 상 부정수급 발생 하지 않음	부정수급 규모가 작음	그동안 계속 관리 해오지 않아서	집행기관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과중 으로 부정수급 현황파악 여력 없음	환수에 대한 규정 또는 지침이 없음	기타	계
사업 지원 형태 1	현금	11 (61.1)	1 (5.6)	2 (11.1)	1 (5.6)	0 (0.0)	0 (0.0)	3 (16.7)	18 (100.0)
	비현금	69 (57.5)	2 (1.7)	0 (0)	24 (20.0)	1 (0.8)	4 (3.3)	20 (16.7)	120 (100.0)
사업 지원 형태 2	현금	11 (61.1)	1 (5.6)	2 (11.1)	1 (5.6)	0 (0.0)	0 (0.0)	3 (16.7)	18 (100.0)
	현물	25 (55.6)	0 (0.0)	0 (0.0)	9 (20.0)	0 (0.0)	2 (4.4)	9 (20.0)	45 (100.0)
	바우처	1 (25.0)	0 (0.0)	0 (0.0)	0 (0.0)	0 (0.0)	1 (25.0)	2 (50.0)	4 (100.0)
	프로그램	27 (61.4)	1 (2.3)	0 (0.0)	10 (22.7)	1 (2.3)	1 (2.3)	4 (9.1)	44 (100.0)
	시설임소	7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5 (100.0)
	대여/감면	9 (45.0)	1 (5.0)	0 (0.0)	5 (25.0)	0 (0.0)	0 (0.0)	5 (25.0)	20 (100.0)
자산 조사 기준	있음	39 (52.7)	3 (4.1)	0 (0.0)	15 (20.3)	0 (0.0)	2 (2.7)	15 (20.3)	74 (100.0)
	없음	41 (64.1)	0 (0.0)	2 (3.1)	10 (15.6)	1 (1.6)	2 (3.1)	8 (12.5)	64 (100.0)
보장 기관	지자체 또는 교육청	30 (52.6)	2 (3.5)	1 (1.8)	12 (21.1)	0 (0.0)	1 (1.8)	11 (19.3)	57 (100.0)
	특별지방행 정기관	7 (58.3)	0 (0.0)	1 (8.3)	2 (16.7)	0 (0.0)	1 (8.3)	1 (8.3)	12 (100.0)
	공공기관	19 (57.6)	1 (3.0)	0 (0.0)	5 (15.2)	0 (0.0)	2 (6.1)	6 (18.2)	33 (100.0)
	기타	23 (69.7)	0 (0.0)	0 (0.0)	5 (15.2)	1 (3.0)	0 (0.0)	4 (12.1)	33 (100.0)
	2개 이상의 보장기관	1 (33.3)	0 (0.0)	0 (0.0)	1 (33.3)	0 (0.0)	0 (0.0)	1 (33.3)	3 (100.0)
전체		80 (58.0)	3 (2.2)	2 (1.4)	25 (18.1)	1 (0.7)	4 (2.9)	23 (16.7)	138 (100.0)

주: 1개 사업에서 부정수급 미파악 사유를 2개 이상 중복 응답한 경우도 포함.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a).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위한 기본현황 조사(원자료).

## 5. 환수 및 부정수급 규모 현황

### 가. 환수 현황

- 기본조사를 통해 부정수급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먼저, 사회보장급여의 환수결정액과 환수실적액을 집계하였음
- 2019년 기준 전체 분석 대상 사업(316개) 중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규모' 현황을 제출한 198개 사업을 대상으로 유형별 환수 규모를 제시
- 환수결정액은 지급된 급여에 대해 보장기관이 환수하기로 결정한 금액을 의미하며, 기본조사에서는 각 급여별로 '19년(1년 동안)에 발생한 환수결정액의 합계를 조사하였음.
- 기본조사에서 환수실적액은 각 급여별로 '19년(1년 동안)에 보장기관이 실제 환수한 금액의 합계액을 의미(환수실적액은 '19년 환수결정액은 물론 그 이전에 환수가 결정되었다가 '19년에 실제로 환수된 금액까지 포함하여 조사)<sup>14)</sup>

〈표 3-14〉 사회보장급여 환수 규모 : 198개 사업 대상

(단위: 백만 원, %)

분류	구분	예산(A)	환수결정		환수실적	
			금액 (B)	(B/A)*100	금액 (C)	(C/A)*100
사업지원 형태 1	현금	44,418,534	35,897	0.081%	19,978	0.045%
	비현금	51,864,300	58,486	0.113%	51,849	0.100%
사업지원 형태 2	현금	44,418,534	35,897	0.081%	19,978	0.045%
	현물	24,508,646	1,156	0.005%	609	0.002%
	바우처	12,333,417	2,558	0.021%	1,313	0.011%
	프로그램	8,479,918	34,500	0.407%	31,771	0.375%
	시설입소	214,095	0	-	0	-
	대여/감면	6,328,224	20,272	0.320%	18,156	0.287%
자산조사 기준	있음	57,078,829	50,283	0.088%	33,880	0.059%
	없음	39,204,005	44,100	0.112%	37,947	0.097%

14) 환수실적액을 '19년 환수결정액만을 대상으로 파악할 경우 해당 연도에 대한 부정수급 발생과 환수 측면에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환수실적 각 건별로 환수결정 연도를 담당자가 직접 확인해야 하는 사업들과 조사기간과 조사내용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19년에 발생한 환수실적을 모두 조사하였음.

분류	구분	예산(A)	환수결정		환수실적	
			금액 (B)	(B/A)*100	금액 (C)	(C/A)*100
보장기관	지자체 또는 교육청	58,037,446	31,665	0.055%	17,541	0.030%
	특별지방행정기관	9,781,534	3,138	0.032%	723	0.007%
	공공기관	20,266,026	56,637	0.279%	50,870	0.251%
	기타	1,795,693	2,941	0.164%	2,572	0.143%
	2개 이상의 보장기관	6,402,135	1	0.000%	120	0.002%
전체		96,282,834	94,383	0.098%	71,827	0.075%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a).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위한 기본현황 조사(원자료).

□ 환수규모가 파악된 198개 사업을 기준으로, 환수결정액은 약 944억 원이며, 예산집행액 총액(약 96조 2,828억 원) 대비 환수결정액 규모는 약 0.1%로 나타남

○ 사업지원형태별로 살펴보면, 현금의 환수결정액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약 358억 원), 프로그램이 두 번째로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남(약 345억 원).

- 대여/감면은 부정수급 규모가 202억 원으로 세 번째로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난 반면, 시설입소의 경우 환수결정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예산집행액 대비 환수결정액 비율은 프로그램(0.41%)이 가장 높고, 대여/감면(0.32%), 현금(0.08%) 순으로 그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자산조사 기준으로 살펴보면, 자산조사가 없는 경우(약 441억 원)보다 자산조사가 있는 경우에(약 503억 원) 환수결정액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 보장기관별로는 공공기관(약 566억 원), 지자체 또는 교육청(317억 원)의 환수결정액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 환수실적액은 약 718억 원으로, 예산집행액 총액 대비 약 0.08% 수준으로 나타남

○ 사업지원형태별로 살펴보면, 프로그램의 환수실적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약 318억 원), 현금(약 200억 원)이 두 번째로 규모가 큰 것으로, 대여/감면(약 182억 원)이 세 번째로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예산집행액 대비 환수실적 비율은 프로그램(0.38%), 대여/감면(0.29%), 현금(0.045%) 순으로 그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자산조사기준으로 살펴보면 자산조사가 없는 경우(약 379억 원)가 자산조사가

있는 경우(약 339억 원)보다 환수실적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 환수결정액 규모는 자산조사기준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크지만, 환수실적은 자산조사기준이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

## 나. 부정수급 현황

### 1) 환수결정액 기준

□ 본 연구에서 ‘부정수급’은 행위 주체가 의도적으로 부정을 저질러 이득을 취하는 수급자의 기망과 공급자의 부패 등에 해당

○ 부정수급의 규모는 앞서 살펴본 환수결정액 중 수급자 또는 행정 담당자의 고의로 인해 발생한 부문을 집계하는 방식으로 파악<sup>15)</sup>

- 환수결정액 중 명백하게 의도적으로 발생한 규모만을 집계하였기 때문에 공식적 차원으로 확인할 수 있는 최소의 부정수급 규모로 볼 수 있음

○ 전체 분석대상인 316개 사업이 아닌, 부정수급 현황을 파악한 198개 사업을 대상으로 유형별 부정수급 규모 제시

○ 부정수급 규모는 예산집행액 대비 비율로도 제시할 수 있는데, 부정수급 현황을 파악한 198개 사업의 경우 예산집행액도 모두 파악되었음

※ 분석대상 316개 사업 중 6개 사업은 예산이 미제출 되었는데, 이 사업들은 부정수급 규모도 제출하지 않아 부정수급 규모를 제출한 198개 사업에 포함되지 않음

〈표 3-15〉 부정수급 규모 : 환수결정액 기준

(단위: 백만 원, %)

분류	구분	예산(A)	환수결정 (B)	부정수급 (C)	(C/B)*100	(C/A)*100
사업지원 형태 1	현금	44,418,534	35,897	7,138	19.9	0.016
	비현금	51,864,300	58,486	22,094	37.8	0.043
사업지원 형태2	현금	44,418,534	35,897	7,138	19.9	0.016
	현물	24,508,646	1,156	642	55.5	0.003

15) 환수결정액 중 수급자 또는 행정 담당자의 비고의적 실수로 발생하는 오류수급은 ‘부록 9’에 제시

분류	구분	예산(A)	환수결정 (B)	부정수급 (C)	(C/B)*100	(C/A)*100
	바우처	12,333,417	2,558	1,149	44.9	0.009
	프로그램	8,479,918	34,500	19,806	57.4	0.234
	시설입소	214,095	0	0	-	0
	대여/감면	6,328,224	20,272	497	2.5	0.008
자산조사 기준	있음	57,078,829	50,283	3,329	6.6	0.006
	없음	39,204,005	44,100	25,904	58.7	0.066
보장기관	지자체 또는 교육청	58,037,446	31,665	4,634	14.6	0.008
	특별지방행정기관	9,781,534	3,138	720	22.9	0.007
	공공기관	20,266,026	56,637	20,947	37.0	0.103
	기타	1,795,693	2,941	2,931	99.7	0.163
	2개이상의 보장기관	6,402,135	1	0	0	0
전체		96,282,834	94,383	29,232	31.0	0.030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a).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위한 기본현황 조사(원자료).

□ 2019년 기준 198개 사업의 예산집행액 총액은 약 96조 2,828억 원이며 환수결정액은 약 944억 원인데, 이중 부정수급 규모는 약 292억 원으로 환수결정액의 약 31%, 예산집행액 총액 대비 0.03% 수준임

○ 사업지원형태별로 살펴보면, 프로그램의 부정수급 규모가 가장 컸으며(약 198억 원), 그 다음은 현금(약 71억 원), 바우처(약 11억 원) 순으로 나타남

- 환수결정액 대비 비율은 프로그램(57.4%)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현금(55.5%), 바우처(44.9%), 현금(19.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부정수급 현황이 조사된 198개 사업 중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사업은 51개이며, 이중 부정수급이 발생한 사업은 2개인데도 프로그램의 부정수급 규모가 지원형태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장기요양급여\*에 기인한 것임

\* 기본조사에서 장기요양급여는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 기타재가급여를 포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조사됨. 해당 사업에서 프로그램에서 발생한 부정수급의 대부분이 발생

- 예산집행액 대비 부정수급 비율에서도 프로그램이 가장 높았으며(0.23%), 그 다음은 현금(0.02%), 바우처(0.01%)인 것으로 나타남

○ 자산조사기준으로 살펴보면, 자산조사기준이 없는 경우 부정수급 규모는 약 259억 원으로, 자산조사기준이 있는 경우(약 33억 원)보다 훨씬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보장기관별로는 공공기관의 부정수급 규모(약 210억 원)가 가장 크고 그 다음은 지자체 또는 교육청(약 46억 원)인 것으로 나타남
  - 환수결정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기타(99.7%)가 가장 높았으며, 공공기관(37%), 특별지방행정기관(22.9%) 순으로 나타남

## 2) 환수실적 기준

- 부정수급의 규모를 환수실적 중 수급자 또는 행정 담당자의 고의로 인해 발생한 부문을 집계하는 방식으로 파악<sup>16)</sup>
  - 환수실적은 환수결정을 전제로 발생, 즉 환수가 결정된 사업에 대한 실제 환수 금액을 의미, 하지만 본 조사에서는 2019년에 환수결정된 사업과 함께 그 이전에 환수결정된 사업들도 2019년에 환수가 이뤄진 경우 조사에 포함되었음.
    - 환수실적은 환수결정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환수결정액 기준 부정수급 규모의 보조적 지표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부정수급 규모가 파악된 198개 사업 기준, 예산집행액 총액은 약 96조 2,828억 원이며 환수실적액은 약 718억 원인데, 이중 부정수급 규모는 약 248억 원으로 환수실적액의 약 34.5%, 예산집행액 총액 대비 0.026% 수준임

〈표 3-16〉 부정수급 규모 : 환수실적액 기준

(단위: 백만 원, %)

분류	구분	예산(A)	환수실적 (B)	부정수급 (C)	(C/B)*100	(C/A)*100
사업지원 형태 1	현금	44,418,534	19,978	4,292	21.5	0.010
	비현금	51,864,300	51,849	20,477	39.5	0.039
사업지원 형태2	현금	44,418,534	19,978	4,292	21.5	0.010
	현물	24,508,646	609	294	48.3	0.001
	바우처	12,333,417	1,313	282	21.5	0.002
	프로그램	8,479,918	31,771	19,405	61.1	0.229
	시설임소	214,095	0	0	-	0
	대여/감면	6,328,224	18,156	495	2.7	0.008

16) 환수실적 중 수급자 또는 행정 담당자의 비고의적 실수로 발생하는 오류수급은 '부록 9'에 제시.

분류	구분	예산(A)	환수실적 (B)	부정수급 (C)	(C/B)*100	(C/A)*100
자산조사 기준	있음	57,078,829	33,880	1,627	4.8	0.003
	없음	39,204,005	37,947	23,141	61.0	0.059
보장기관	지자체 또는 교육청	58,037,446	17,541	1,584	9.0	0.003
	특별지방행정기관	9,781,534	723	616	85.2	0.006
	공공기관	20,266,026	50,870	20,005	39.3	0.099
	기타	1,795,693	2,572	2,563	99.7	0.143
	2개 이상의 보장기관	6,402,135	120	0	0	0
전체		96,282,834	71,827	24,768	34.5	0.026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a).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위한 기본현황 조사(원자료).

- 사업지원형태별로 살펴보면, 프로그램의 부정수급 규모가 가장 컸으며(약 194억 원), 그 다음은 현금(약 43억 원)인 것으로 나타남
  - 환수실적액 대비 비율은 프로그램(61.1%)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현금(48.3%), 바우처(21.5%) 및 현금(21.5%)의 순으로 나타남
    - 지원형태중 프로그램의 부정수급 규모가 가장 큰 이유는 앞서 살펴본 환수결정액에서 부정수급 규모가 프로그램이 가장 큰 이유와 동일
  - 예산집행액 대비 부정수급 비율에서도 프로그램이 가장 높았으며(0.23%), 그 다음은 현금(0.01%)인 것으로 나타남

### 제3절 현금급여 분석

- 대상자에게 직접 현금이 지급되는 현금급여는 대상자의 효용극대화 측면에서 다른 사업보다 우위가 있으며, 사회보장사업 지원형태 중 가장 예산규모가 큼
- 부정수급의 규모도 다른 지원 형태에 비해 크고, 첫 번째 실태조사 역시 현금급여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실태조사 대상을 포함한 78개 현금급여 사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현황 및 특성 파악이 필요

## 1. 현금급여의 기준변수별 현황 : 자산기준 유무 및 보장기관 형태

□ 본 절은 전체 316개 사회보장사업 중 사업지원형태가 ‘현금’인 78개 사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임

□ 자산기준 유무

○ 현금 급여 사업 78개 중 47개 사업(60.3%)은 자산기준이 없었던 반면 31개 사업(31.0%)은 자산기준이 있었음

〈표 3-17〉 현금급여 사업의 자산기준 유무 현황

(단위: 사업 수, %)

자산조사기준 유무	빈도	퍼센트
있음	31	39.7
없음	47	60.3
전체	78	100.0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a).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위한 기본현황 조사(원자료).

□ 보장기관 형태

○ 78개 현금 급여 사업의 보장기관으로는 지자체 또는 교육청을 보장기관으로 하는 사업이 35개(44.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보장기관으로 하는 사업이 26개(33.3%)로 많았음

〈표 3-18〉 현금급여 사업의 보장기관 현황

(단위: 사업 수, %)

보장기관	빈도	퍼센트
지자체 또는 교육청	35	44.9
특별지방행정기관 <sup>(1)</sup>	26	33.3
공공기관 <sup>(2)</sup>	8	10.3
기타 <sup>(3)</sup>	7	9.0
2개 이상의 보장기관	2	2.6
전체	78	100.0

주: (1) 특별지방행정기관: 보훈(지)청, 세무서, 고용센터 등, (2) 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3) 기타: 부처직접관리, 부처산하기관, 민간기관 등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a).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위한 기본현황 조사(원자료).



## 2. 현금급여의 부정수급 관리 근거

### 가. 근거법령 유무와 근거법령에 따른 주요 대응조치

- 현금급여 78개 사업 중 개별적 성격의 근거법령\*에 부정수급 관리 근거가 있는 사업은 50개(64.1%)인 것으로, 나머지 28개(35.9%) 사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사회보장급여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사회보장사업 또는 국고보조금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령은 제외

〈표 3-19〉 현금급여 사업의 부정수급 관리 근거법령 유무

(단위: 빈도수, (괄호) %)

분류	구분	있음	없음	계
자산조사 기준	있음	22 (71.0)	9 (29.0)	31 (100.0)
	없음	28 (59.6)	19 (40.4)	47 (100.0)
보장기관	지자체 또는 교육청	22 (62.9)	13 (37.1)	35 (100.0)
	특별지방행정기관	19 (73.1)	7 (26.9)	26 (100.0)
	공공기관	4 (50.0)	4 (50.0)	8 (100.0)
	기타	5 (71.4)	2 (28.6)	7 (100.0)
	2개 이상의 보장기관	0 (0.0)	2 (100.0)	2 (100.0)
전체		50 (64.1)	28 (35.9)	78 (100.0)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a).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위한 기본현황 조사(원자료).

- 현금급여 사업 78개 중 부정수급에 대한 근거법령이 있는 50개 사업을 대상으로 주요대응조치 1순위를 분석한 결과,

- 25개(50.0%)의 사업에서 환수, 징수,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과 같은 금전적 제재를 부정수급 대응조치 1순위로 조치하고 있었으며, 22개(44.0%)의 사업은 급여의 지원중단을 1순위 대응조치로 취하고 있었음

- 보장기관별로는 지자체 또는 교육청은 주로 금전적 제재를,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원중단을 주요 대응 조치로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20〉 현금급여 사업의 근거법령에 따른 부정수급 관련 1순위 대응조치

(단위: 빈도수, (괄호) %)

분류	구분	지원중단	금전적 제재	형벌	공동1순위 <sup>(2)</sup>	계
자산조사 기준	있음	7 (31.8)	14 (63.6)	0 (0.0)	1 (4.5)	22 (100.0)
	없음	15 (53.6)	11 (39.3)	1 (3.6)	1 (3.6)	28 (100.0)
보장기관	지자체 또는 교육청	5 (22.7)	16 (72.7)	0 (0.0)	1 (4.5)	22 (100.0)
	특별지방행정기관	15 (79.0)	4 (21.1)	0 (0.0)	0 (0.0)	19 (100.0)
	공공기관	1 (25.0)	3 (75.0)	0 (0.0)	0 (0.0)	4 (100.0)
	기타	1 (20.0)	2 (40.0)	1 (20.0)	1 (20.0)	5 (100.0)
전체		22 (44.0)	25 (50.0)	1 (2.0)	2 (4.0)	50 <sup>(1)</sup> (100.0)

주: (1) 전체 78개 사업 중 근거법령이 있는 50개 사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임.

(2) 공동 1순위란, 복수의 주요대응조치를 응답한 사례들 중 1순위를 매길 수 없다고 응답한 사례들임.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a).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위한 기본현황 조사(원자료).

## 나. 관련지침 유무

- 현금급여 사업 78개 중 55개(70.5%) 사업은 관련지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머지 23개(29.5%) 사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사회보장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등은 제외

- 이를 근거법령 유무와 함께 살펴보면, 근거법령이 있는 사업의 경우 80.0%가 관련지침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근거법령이 없는 사업의 53.6%만이 관련지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21〉 현금급여 사업의 부정수급 관련지침 유무

(단위: 빈도수, (괄호) %)

분류	구분	있음	없음	계
자산조사 기준	있음	25 (80.6)	6 (19.4)	31 (100.0)
	없음	30 (63.8)	17 (36.2)	47 (100.0)
보장기관	지자체 또는 교육청	25 (71.4)	10 (28.6)	35 (100.0)
	특별지방행정기관	17 (65.4)	9 (34.6)	26 (100.0)
	공공기관	6 (75.0)	2 (25.0)	8 (100.0)
	기타	6 (85.7)	1 (14.3)	7 (100.0)
	2개 이상의 보장기관	1 (50.0)	1 (50.0)	2 (100.0)
근거법령	있음	40 (80.0)	10 (20.0)	50 (100.0)
	없음	15 (53.6)	13 (46.4)	28 (100.0)
전체		55 (70.5)	23 (29.5)	78 (100.0)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a).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위한 기본현황 조사(원자료).

### 3. 현금급여의 부정수급 규모 파악 현황

#### 가. 부정수급 파악 여부

□ 부정수급 규모를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보면, 78개 사업 중 64개(82.1%) 사업이 부정수급 규모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14개(17.9%) 사업은 부정수급 규모를 파악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보장기관이 ‘공공기관’인 사업의 전부가 부정수급 규모를 파악하고 있었으며, ‘지자체 또는 교육청’을 보장기관으로 하는 사업의 82.9%와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보장기관으로 하는 사업의 76.9%가 부정수급 규모를 파악하고 있었음

○ 근거법령이 없는 사업의 60.7%가 부정수급 규모를 파악하고 있는 반면, 근거법령이 있는 사업은 94.0%가 부정수급 규모를 파악하고 있었음

○ 관련지침이 없는 사업은 65.2%가, 관련지침이 있는 사업은 89.1%가 부정수급 규모를 파악하고 있었음

〈표 3-22〉 현금급여 사업의 부정수급 규모 파악 여부

(단위: 빈도수, (괄호) %)

분류	구분	파악	파악 안 함	계
자산조사 기준	있음	26 (83.9)	5 (16.1)	31 (100.0)
	없음	38 (80.9)	9 (19.2)	47 (100.0)
보장기관	지자체 또는 교육청	29 (82.9)	6 (17.1)	35 (100.0)
	특별지방행정기관	20 (76.9)	6 (23.1)	26 (100.0)
	공공기관	8 (100.0)	0 (0.0)	8 (100.0)
	기타	6 (85.7)	1 (14.3)	7 (100.0)
	2개 이상의 보장기관	1 (50.0)	1 (50.0)	2 (100.0)
근거법령	근거법령 있음	47 (94.0)	3 (6.0)	50 (100.0)
	근거법령 없음	17 (60.7)	11 (39.3)	28 (100.0)
관련지침	관련지침 있음	49 (89.1)	6 (10.9)	55 (100.0)
	관련지침 없음	15 (65.2)	8 (34.8)	23 (100.0)
전체		64 (82.1)	14 (17.9)	78 (100.0)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a).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위한 기본현황 조사(원자료).

## 나. 부정수급 파악 방법(부정수급 규모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경우)

□ 부정수급 규모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응답한 64개 사업의 부정수급 규모 파악 방법을 분석한 결과,

○ ‘e나라도움 외 전산시스템’이 54.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e나라도움’(25.0%)과 ‘수기취합’(20.3%)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부정수급 규모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경우 부정수급 관리근거와 상관없이 ‘e나라도움 외 전산시스템’으로 파악하는 비율이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은 ‘e나라도움’인 것으로 나타남

〈표 3-23〉 현금급여 사업의 부정수급 규모 파악 방법

(단위: 빈도수, (괄호) %)

분류	구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외 전산시스템	수기취합	계
자산조사 기준	있음	12 (46.2)	10 (38.5)	4 (15.4)	26 (100.0)
	없음	4 (10.5)	25 (65.8)	9 (23.7)	38 (100.0)
보장기관	지자체 또는 교육청	15 (51.7)	9 (31.0)	5 (17.2)	29 (100.0)
	특별지방행정기관	0 (0.0)	20 (100.0)	0 (0.0)	20 (100.0)
	공공기관	0 (0.0)	3 (37.5)	5 (62.5)	8 (100.0)
	기타	1 (16.7)	2 (33.3)	3 (50.0)	6 (100.0)
	2개 이상의 보장기관	0 (0.0)	1 (100.0)	0 (0.0)	1 (100.0)
근거법령	근거법령 있음	12 (25.5)	26 (55.3)	9 (19.1)	47 (100.0)
	근거법령 없음	4 (23.5)	9 (52.9)	4 (23.5)	17 (100.0)
관련지침	관련지침 있음	14 (28.6)	28 (57.1)	7 (14.3)	49 (100.0)
	관련지침 없음	2 (13.3)	7 (46.7)	6 (40.0)	15 (100.0)
전체		16 (25.0)	35 (54.7)	13 (20.3)	64 (100.0)

주: 전체 78개 사업 중 부정수급 규모를 파악한다고 응답한 64개 사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임.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a).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위한 기본현황 조사(원자료).

#### 다. 부정수급 규모 미파악 사유(부정수급 규모를 파악하지 않은 경우)

- 부정수급 규모를 파악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14개 사업의 부정수급 규모 미파악 사유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2개 이상 중복으로 응답한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총 18개 사례에 대해 분석함)

- 부정수급 규모 현황을 파악하지 않는 주요한 이유로 ‘사업성격상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음’이 61.1%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3-24〉 현금급여 사업의 부정수급 규모 미파악 사유 (중복응답)

(단위: 빈도수, (괄호) %)

사업성격 상 부정수급 발생하지 않음	부정수급 규모가 작음	그동안 계속 관리 해오지 않아서	집행기관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과중으로 부정수급 현황 파악 어려움	환수에 대한 지침 없음	기타	계
11 (61.1)	1 (5.6)	2 (11.1)	1 (5.6)	0 (0.0)	0 (0.0)	3 (16.7)	18 (100.0)

주: 1개 사업에서 부정수급 미파악 사유를 2개 이상 중복 응답한 경우도 포함.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a).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위한 기본현황 조사(원자료).

#### 4. 현금급여의 부정수급 관리 전산시스템 및 신고체계 운영

##### 가. 부정수급 관리 전산시스템 운영여부

□ 사업지원형태가 현금인 78개 사업 중 부정수급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은 51개(65.4%)로 나타남

〈표 3-25〉 현금급여 사업의 부정수급 관리 전산시스템 운영여부

(단위: 빈도수, (괄호) %)

분류	구분	운영	미운영	계
자산조사 기준	있음	23 (74.2)	8 (25.8)	31 (100.0)
	없음	28 (59.6)	19 (40.4)	47 (100.0)
보장기관	지자체 또는 교육청	23 (65.7)	12 (34.3)	35 (100.0)
	특별지방행정기관	20 (76.9)	6 (23.1)	26 (100.0)
	공공기관	5 (62.5)	3 (37.5)	8 (100.0)
	기타	2 (28.6)	5 (71.4)	7 (100.0)
	2개 이상의 보장기관	1 (50.0)	1 (50.0)	2 (100.0)
근거법령	근거법령 있음	40 (80.0)	10 (20.0)	50 (100.0)
	근거법령 없음	11 (39.3)	17 (60.7)	28 (100.0)
관련지침	관련지침 있음	42 (76.4)	13 (23.6)	55 (100.0)
	관련지침 없음	9 (39.1)	14 (60.9)	23 (100.0)
전체		51 (65.4)	27 (34.6)	78 (100.0)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a).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위한 기본현황 조사(원자료).

- 근거법령이 있는 사업의 80.0%가 부정수급 관리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근거법령이 없는 사업은 39.3%만이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음
- 관련지침 유무에 따른 전산시스템 운영여부도 근거법령 유무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음

#### 나. 부정수급 신고체계 운영여부

- 현금급여 사업 78개 중 54개(69.2%)가 부정수급 신고체계를 운영하고 있었음
- 근거법령이 있는 사업의 76.0%가 부정수급 신고체계를 가지고 있었던 반면 근거법령이 없는 사업은 52.2%가 신고체계를 운영하고 있었음
- 관련지침 유무에 따른 신고체계 운영여부도 근거법령과 비슷한 결과를 나타냄

〈표 3-26〉 부정수급 신고체계 운영여부

(단위: 빈도수, (괄호) %)

분류	구분	운영	미운영	계
자산조사 기준	있음	24 (77.4)	7 (22.6)	31 (100.0)
	없음	30 (63.8)	17 (36.2)	47 (100.0)
보장기관	지자체 또는 교육청	26 (74.3)	9 (25.7)	35 (100.0)
	특별지방행정기관	15 (57.7)	11 (42.3)	26 (100.0)
	공공기관	7 (87.5)	1 (12.5)	8 (100.0)
	기타	4 (57.1)	3 (42.9)	7 (100.0)
	2개 이상의 보장기관	2 (100.0)	0 (0.0)	2 (100.0)
근거법령	근거법령 있음	38 (76.0)	12 (24.0)	50 (100.0)
	근거법령 없음	16 (57.1)	12 (42.9)	28 (100.0)
관련지침	관련지침 있음	42 (76.4)	13 (23.6)	55 (100.0)
	관련지침 없음	12 (52.2)	11 (47.8)	23 (100.0)
전체		54 (69.2)	24 (30.8)	78 (100.0)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a).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위한 기본현황 조사(원자료).

## 5. 현금급여의 환수 및 부정수급 현황

### 가. 환수결정액 기준

- 현금급여 78개 사업 중 부정수급 규모를 파악한 64개 사업을 대상으로 현금급여의 부정수급 규모를 파악
  - 64개 현금급여 사업의 예산집행액 총액은 약 44조 4,185억 원이었으며, 환수결정액은 약 359억 원으로 나타났는데, 환수결정액의 예산집행액 총액 대비 비율은 약 0.0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현금급여의 환수결정액 중 부정수급 규모는 약 71억 원으로, 환수결정액 대비 약 19.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sup>17)</sup>. 이는 예산집행액 총액 대비 약 0.016% 수준임
  - 자산조사기준 여부로 살펴보면 환수결정액은 자산조사기준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크지만, 부정수급액은 자산조사기준이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앞서 살펴본 전체 급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는데, 다만 현금급여의 경우 자산조사기준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의 부정수급 금액 비율이 전체 급여에서 나타난 비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보장기관의 경우 ‘지자체 또는 교육청’의 부정수급 규모가 약 31억 원으로 가장 컸으며, 기타(약 29억 원)가 두 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남
    - 지자체 또는 교육청의 경우 예산 규모가 다른 보장기관에 비해 크기 때문에 부정수급 규모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으며,
    - ‘기타’의 경우, 부정수급액은 지자체 또는 교육청보다 작지만 환수결정액 대비 부정수급액 비율은 훨씬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근거법령 또는 관련지침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환수결정액과 부정수급 규모 모두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남<sup>18)</sup>

17) 현금급여 사업의 환수결정액 중 수급자 또는 행정 담당자의 비고의적 실수로 발생하는 오류수급은 ‘부록 9’에 제시하였음.



〈표 3-27〉 현금급여의 부정수급 규모 : 환수결정액 기준

(단위: 백만 원, %)

분류	구분	예산(A)	환수결정액 (B)	부정수급액 (C)	(C/B)*100	(C/A)*100
자산조사 기준	있음	31,356,391	28,762	2,092	7.3	0.007
	없음	13,062,143	7,136	5,046	70.7	0.039
보장기관	지자체 또는 교육청	30,796,122	28,496	3,067	10.8	0.010
	특별지방행정기관	9,603,617	3,030	623	20.6	0.006
	공공기관	654,958	1,430	517	36.2	0.079
	기타	1,573,526	2,941	2,931	99.7	0.186
	2개 이상의 보장기관	1,790,311	0	0	-	0.000
근거법령	근거법령 있음	41,982,898	34,680	6,187	17.8	0.015
	근거법령 없음	2,435,636	1,217	951	78.1	0.039
관련지침	관련지침 있음	44,172,783	35,622	7,138	20.0	0.016
	관련지침 없음	245,751	276	0	0.0	0.000
전체		44,418,534	35,897	7,138	19.9	0.016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a).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위한 기본현황 조사(원자료).

## 나. 환수실적 기준

- 현금급여의 부정수급 규모를 환수실적 기준으로 살펴보면, 현금급여의 부정수급 규모는 약 43억 원으로, 환수실적액 대비 약 21.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sup>19)</sup>. 이는 예산집행액 총액 대비 약 0.01% 수준임
- 자산기준 여부로 살펴보면 앞서 살펴본 환수결정액과 유사하게, 환수실적액은 자산기준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크지만, 부정수급액은 자산기준이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보장기관의 경우 부처 산하기관, 민간기관 등이 해당하는 ‘기타’의 부정수급 규모가 가장 컸으며(약 26억 원), 지자체 및 교육청의 경우 두 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남(약 11억 원)
- 관리근거 측면에서는 근거법령이 있는 경우와 관련지침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부정수급 규모가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남

18) 이러한 결과는 인과관계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즉, 근거법령 또는 관련지침이 있어 부정수급 규모가 큰 것이 아니라 부정수급 발생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근거법령과 관련지침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음.

19) 현금급여의 환수실적 중 수급자 또는 행정 담당자의 비고의적 실수로 발생하는 오류수급은 ‘부록 9’에 제시함.

〈표 3-28〉 현금급여의 부정수급 규모 : 환수실적 기준

(단위: 백만 원, (괄호) %)

분류	구분	예산(A)	환수실적 (B)	부정수급 (C)	(C/B)*100	(C/A)*100
자산조사 기준	있음	31,356,391	15,237	908	6.0	0.003
	없음	13,062,143	4,741	3,384	71.4	0.026
보장기관	지자체 또는 교육청	30,796,122	15,794	1,055	6.7	0.003
	특별지방행정기관	9,603,617	644	544	84.5	0.006
	공공기관	654,958	849	130	15.3	0.020
	기타	1,573,526	2,572	2,563	99.7	0.163
	2개 이상의 보장기관	1,790,311	119	0	0	0
근거법령	근거법령 있음	41,982,898	19,480	4,145	21.3	0.010
	근거법령 없음	2,435,636	498	147	29.5	0.006
관련지침	관련지침 있음	44,172,783	19,871	4,292	21.6	0.010
	관련지침 없음	245,751	107	0	0.0	0.000
전체		44,418,534	19,978	4,292	21.5	0.010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a).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위한 기본현황 조사(원자료).

## 제4절 부정수급 관리체계 현황과 미파악 사업 분석

### 1. 부정수급 관리체계에 따른 환수 및 부정수급 규모

#### □ 부정수급 관리체계 현황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정수급 관리 근거는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근거법령(또는 관련지침)을 제외한 개별적 성격의 근거법령(또는 관련지침)에 부정수급 관리근거 수록 여부를 통해 파악하였고,
  - 부정수급 관리와 관련한 시스템 운영 현황은 관련 전산시스템 및 신고체계 운영 여부를 통해 파악하였음
- 이러한 부정수급 관리 근거와 관련 시스템 운영은 부정수급 관리체계의 주요 부문을 구성한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떤 사회보장사업에 대해서는 이러한 관리체계가 모두 작동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음
  - 이하에서는 이러한 부정수급 관리체계의 구비 현황을 중복을 감안하여 파악하였고, 이를 ‘관리체계 현황’으로 명명함

- 이러한 ‘관리체계 현황’을 부정수급 관리에 대한 성과 파악 기준으로 삼음
- 아래 표에서 ‘관리근거’는 근거법령 혹은 관련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전산관리’는 부정수급 관리 전산시스템의 운영을, ‘신고체계’는 부정수급 발생을 제보할 수 있는 신고체계가 존재함을 의미함
  - 위 관리체계 중 아무것도 갖추지 않은 사업의 경우 “관리체계 없음”이 되며, 각각의 관리체계를 조합하여 사회보장사업의 관리체계 현황을 살펴보았음
- 기본조사 분석대상인 316개 사업과 이중 부정수급 현황을 파악하여 제출한 사업 (198개)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관리체계를 살펴본 결과는 아래와 같음
  - 전체 316개 사업 중 33.5%가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 근거와 전산시스템 및 신고체계를 모두 구비하고 있는 나타남
    - 그 다음이 법령 혹은 지침만을 갖고 있고, 실제 관리를 위한 신고체계와 전산시스템은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17.1%)
    - 약 16%는 근거법령 혹은 지침과 신고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약 15%는 어떠한 관리 체계를 갖고 있지 못한 사업으로 파악되었음
  - 부정수급 현황을 파악한 사업들(198개)은 양상이 약간 달랐음. 성문화된 근거와 전산시스템, 신고체계 모두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이 48%로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었음
    - 이는 전체 사업보다 14.5%포인트 높은 것으로, 부정수급 현황을 파악한 사업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업들에 비해 부정수급 관리체계가 상대적으로 견고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한편, 관리근거와 신고체계를 지닌 사업이 15.7%였고, 관리근거와 전산시스템을 지닌 비율은 10.6%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체 비율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3-29〉 부정수급 관리체계 현황

(단위: 개, %)

구분	전체		부정수급 현황 파악 사업	
	빈도	%	빈도	%
관리체계 없음	48	15.2	10	5.1
신고체계	12	3.8	3	1.5
전산관리	6	1.9	5	2.5
전산관리+신고체계	9	2.8	7	3.5
관리근거	54	17.1	26	13.1
관리근거+신고체계	51	16.1	31	15.7
관리근거+전산관리	30	9.5	21	10.6
관리근거+전산관리+신고체계	106	33.5	95	48.0
계	316	100.00	198	100.00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a).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위한 기본현황 조사(원자료).

- 부정수급 현황을 파악하여 제출한 사업(198개)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관리 근거(근거법령, 관련 지침) 유무 및 부정수급 관리 관련 시스템(전산시스템, 신고체계) 운영 여부별로 환수결정액 규모 등을 살펴 본 결과,
- 부정수급 관리 근거가 있는 경우 및 관리 관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많은 환수결정액 및 부정수급액을 나타내고 있음
  - 특히 근거법령이 있는 경우 환수결정액과 및 부정수급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부정수급 관리 관련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두 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평균값 해석 시 주의해야 할 것은 아래 표 각 항목에 대한 중위값이 근거법령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0'이란 것에 있음
    - 즉, 환수결정 및 부정수급 규모는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몇몇 사업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에 유의해야 함

〈표 3-30〉 관리체계 유무에 따른 환수결정액 평균

(단위: 백만 원, 개)

구분		환수결정액	부정수급	오류수급	해당 사업 수
근거법령 유무	예	824	250	575	112
	아니오	24	15	9	86

구분		환수결정액	부정수급	오류수급	해당 사업 수
관련 지침 유무	예	612	189	423	152
	아니오	29	11	18	46
전산시스템 운영 여부	예	725	221	505	128
	아니오	22	14	8	70
신고체계 운영 여부	예	676	209	467	136
	아니오	40	14	26	62
전체		477	148	329	198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a).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위한 기본현황 조사(원자료).

○ 부정수급 관리체계 현황별로 살펴보면, 세 가지 관리 체계를 모두 갖춘 사업의 환수결정액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 다음이 관리근거와 전산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사업으로 나타났음

- 관리근거만 갖춘 경우가 세 번째였는데, 이는 법령·지침상의 근거로 인해 부정수급 관리에 대한 의무가 발생되어 신고체계 또는 전산관리만 있는 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환수결정액이 큰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관리근거와 전산관리가 부정수급 파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음

〈표 3-31〉 관리체계 현황별 환수결정액 평균

(단위: 백만 원, 개)

구분	환수결정액	부정수급	오류수급	해당 사업 수
관리체계 없음	0	0	0	10
신고체계	0	0	0	3
전산관리	3	0	3	5
전산관리+신고체계	0	0	0	7
관리근거	38	17	20	26
관리근거+신고체계	18	16	1	31
관리근거+전산관리	71	20	51	21
관리근거+전산관리+신고체계	962	293	668	95
전체	477	148	329	198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a).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위한 기본현황 조사(원자료).

## □ 예산 대비 환수결정액(부정수급 규모를 파악한 사업 대상)

- 관리체계 유무(여부)별로 살펴보면, 각각의 관리체계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환수결정액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았음
- 각각의 관리체계 있는 경우 환수결정액의 예산 대비 비율인 0.098% 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남

〈표 3-32〉 관리체계 유무에 따른 환수결정액의 전체 예산 중 비율

(단위: %, 개)

구분		환수결정액	부정수급	오류수급	해당 사업 수
근거법령 유무	예	0.100	0.030	0.070	112
	아니오	0.049	0.030	0.019	86
관련 지침 유무	예	0.114	0.035	0.079	152
	아니오	0.009	0.003	0.006	46
전산시스템 운영 여부	예	0.114	0.035	0.079	128
	아니오	0.010	0.006	0.004	70
신고체계 운영 여부	예	0.110	0.034	0.076	136
	아니오	0.020	0.007	0.013	62
전체		0.098	0.030	0.068	198

주: 집행예산이 없는 것으로 기재된 사업 제외.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a).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위한 기본현황 조사(원자료).

- 관리체계 현황별 결과를 살펴보면, 관리체계를 모두 갖춘 사업의 예산 대비 비율이 0.115%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두 번째로는 관리근거와 전산시스템을 갖춘 것이 높게 나타났음
- 관리근거에 신고체계 또는 전산시스템이 구비된 사업의 경우 환수결정액의 예산 대비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동일한 조건으로 볼 때 전산시스템이 신고체계보다 환수결정액에 더 큰 영향을 미침을 유추해 볼 수 있음

〈표 3-33〉 관리체계 현황별 환수결정액의 전체 예산 중 비율

(단위: %, 개)

구분	총 환수결정액	부정수급	오류수급	해당 사업 수
관리체계 없음	0.000	0.000	0.000	10
신고체계	0.000	0.000	0.000	3

구분	총 환수결정액	부정수급		해당 사업 수
		부정수급	오류수급	
전산관리	0.007	0.000	0.007	5
전산관리+신고체계	0.000	0.000	0.000	7
관리근거	0.009	0.004	0.005	26
관리근거+신고체계	0.013	0.012	0.001	31
관리근거+전산관리	0.105	0.029	0.075	21
관리근거+전산관리+신고체계	0.115	0.035	0.080	95
전체	0.098	0.030	0.068	198

주: 집행예산이 없는 것으로 기재된 사업 제외.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a).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위한 기본현황 조사(원자료).

- 지금까지 관리체계의 현황과 이에 따른 특성을 금액 위주로 살펴보았다면, 여기서는 파악 건수(환수결정 및 부정수급 건수)로 살펴보았음
- 근거법령과 관련지침이 있는 사업에서 환수결정 건수는 월등히 높았으며, 부정수급 건수 역시 월등히 높게 나타남
  - 환수결정 건수는 전산시스템 운영 여부에 따른 차이가 가장 컸으며, 신고체계 여부에 따른 차이는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아래 표의 평균 값 해석시 주의해야할 사항은 아래의 각 항목에 대한 중위값은 '0'이란 것에 있음. 즉 환수결정 및 부정수급 건수는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몇몇의 사업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함

〈표 3-34〉 관리체계 유무별 환수결정 건수와 부정수급 건수 (평균)

(단위: 건, %)

구분		환수결정건	부정수급건	부정수급비율
근거법령 유무	예	2,731	184	6.7
	아니오	868	11	1.3
관련 지침 유무	예	2,501	141	5.6
	아니오	9	2	22.8
전산시스템 운영 여부	예	2,961	168	5.7
	아니오	23	2	6.9
신고체계 운영 여부	예	2,236	141	6.3
	아니오	1,233	38	3.1
전체		1,922	109	5.7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a).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위한 기본현황 조사(원자료).

- 관리체계 현황별로 살펴보면서 환수 건수에 있어 전산관리시스템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음
  - 전산관리시스템이 다른 관리 근거와 결합되어 있는 사업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업의 비해 환수결정건수가 압도적으로 높았고, 부정수급 건수에 대한 파악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판단됨

〈표 3-35〉 관리체계 현황별 환수결정 및 환수실적 건수와 부정수급 건수 (평균)

(단위: 건, %)

구분	총환수결정건	부정수급건	부정수급비율
관리체계 없음	0	0	-
신고체계	0	0	-
전산관리	3	0	0
전산관리+신고체계	0	0	-
관리근거	59	4	5.9
관리근거+신고체계	3	1	24.7
관리근거+전산관리	3,567	107	3.0
관리근거+전산관리+신고체계	3,200	202	6.3
전체	1,922	109	5.7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a).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위한 기본현황 조사(원자료).

- 부정수급을 파악한 198개 사업에서 환수결정 건수가 1건 이상인 84개 사업과 부정수급 건수가 1건 이상인 사업 47개 사업의 발생건당 금액을 살펴보았음
  - 환수결정 건당 평균 금액은 24.8만원으로, 부정수급의 건당 평균 금액은 135.5만원으로 나타나, 부정수급의 건당 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것을 확인 할 수 있음
  - 근거법령과 신고체계를 살펴보면, 해당 관리체계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환수결정 및 부정수급의 건당 금액이 더 높게 나타남. 반면 관련 지침과 전산시스템의 경우 반대로 나타남



〈표 3-36〉 각 관리체계 유무별 환수결정 및 부정수급 건당 금액

(단위: 만원)

구분		환수결정	부정수급
근거법령 유무	예	30.2	135.9
	아니오	2.8	128.5
관련 지침 유무	예	24.5	133.8
	아니오	334.7	554.5
전산시스템 운영 여부	예	24.5	131.7
	아니오	94.4	854.0
신고체계 운영 여부	예	30.2	147.6
	아니오	3.2	36.9
전체		24.8	135.5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a).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위한 기본현황 조사(원자료).

- 관리체계 현황별 건당 금액을 살펴보면, 건당 환수결정액은 ‘관리근거+신고체계’인 경우가 가장 컸으며, 전산시스템만 있는 경우는 두 번째인 것으로 나타남. 그 다음으로는 관리근거만 있는 경우와 관리체계가 다 있는 경우로 나타남
- 건당 부정수급액은 환수결정액과 마찬가지로 ‘관리근거+신고체계’인 경우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관리근거만 있는 경우가 두 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남
- 신고체계의 경우 관리근거와 조합을 이룰 때 환수결정과 부정수급 건당 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즉, 신고체계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근거가 명확히 제시되어야 함을 알 수 있음
- 그리고 관리근거가 없는 경우 건당 부정수급 금액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실질적인 부정수급 관리를 위해서는 관리근거의 마련이 요구됨

〈표 3-37〉 관리체계 현황별 환수결정 및 부정수급 건당 금액

(단위: 만 원)

구분	환수결정	부정수급
관리체계 없음	-	-
신고체계	-	-
전산관리	123.1	-
전산관리+신고체계	-	-
관리근거	63.9	498.6
관리근거+신고체계	623.4	2,324.1
관리근거+전산관리	2.0	18.3
관리근거+전산관리+신고체계	30.0	145.1
전체	24.8	135.5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a).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위한 기본현황 조사(원자료).

## 2. 부정수급 규모 미파악 사업의 특성

□ 지금까지 부정수급 규모 현황을 파악한 사업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관리 체계를 살펴보았음. 여기서는 부정수급 규모를 파악하지 않은 사업을 대상으로 미파악 사유와 부정수급 관리체계와 관련된 특성을 살펴보고자 함

○ 단순히 부정수급 실적을 파악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부정수급 관리에 대한 근거법령 혹은 지침이 있는 사업이면서 파악하지 않고 있는 사업을 별도로 구분하여 특성을 살펴보았음

□ 부정수급 규모 미파악 사업의 미파악 사유

○ 총 316개의 사업 중 118개의 사업이 부정수급 규모를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68개의 사업이 부정수급 관리 관련 근거 법령 또는 지침이 있음에도 부정수급 규모를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부정수급 규모 현황을 파악하지 않는 이유 중 가장 많은 것은 “사업격상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음”으로, 미파악 사업 전체에서는 67.8%, 성문화된 관리 근거가 있는 미파악 사업에서는 58.8%를 차지

○ 이 두 집단의 차이점은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 사유인 “집행기관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서 발견되었음

- 미파악 사업 전체에서는 16.1%였으나, 근거법령과 지침이 있는 사업에서는 26.5%를 차지하고 있었음

○ 이는 부정수급의 규모 파악 여부가 사업 성격의 이유도 있지만 해당 사업에 부정수급 업무의 담당 주체가 어디인가라는 쟁점이 존재하는 경우 부정수급 규모 파악 등의 부정수급 현황관리가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

- 특히, 부정수급에 대한 성문화된 관리 근거가 있음에도 부정수급 규모 파악이 이뤄지지 않는 사업은 이러한 원인이 크게 작용할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음

〈표 3-38〉 부정수급 규모 현황 미파악 사유

(단위: 빈도 수, %)

구분	미파악		근거법령 또는 지침 있으면서 미파악	
	빈도	%	빈도	%
사업성격상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음	80	67.8	40	58.8
그동안 계속 관리해오지 않아서	1	0.9	1	1.5
집행기관 소관사항이기 때문	19	16.1	18	26.5
업무과중으로 여력이 없음	1	0.9	0	0.0
환수에 대한 규정 또는 지침이 없음	4	3.4	1	1.5
기타	13	11.0	8	11.8
전체	118	100.0	68	100.0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a).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위한 기본현황 조사(원자료).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정수급 관리 근거의 유무와 관리체계 현황을 살펴보면, 부정수급 규모를 파악하고 있는 사업, 그렇지 않은 사업, 근거법령 혹은 지침이 있음에도 파악하지 않는 사업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음
- 부정수급 규모를 파악한 사업에서는 관리체계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더 많았고 부정수급 관리체계를 모두 갖추고 있는 비율(48.0%)이 부정수급 규모 미파악 사업에서의 응답 비율(9.3%) 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근거법령 혹은 지침이 있으면서도 부정수급 규모를 파악하지 않은 사업의 경우, 관련지침의 구비 비율은 69.1%나 되는 것을 알 수 있었음
    - 전산시스템 운영 비율도 29.4%, 신고체계 운영 비율도 45.6%로, 비록 부정수급 규모를 파악한 사업에 비해 낮았으나,
    - 전체 미파악 사업의 비율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부정수급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은 상황이지만 부정수급 규모 파악과 같은 현황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러한 경향은 관리 근거를 종합한 관리체계 현황에서도 나타남

〈표 3-39〉 부정수급 규모 미파악 유형별 부정수급 관리 근거 현황

(단위: %)

구분		파악	미파악	근거법령 또는 지침이 있으면서 미파악	계
근거법령 유무	예	56.6	28.0	48.5	45.9
	아니오	43.4	72.0	51.5	54.1
관련 지침 유무	예	76.8	39.8	69.1	63.0
	아니오	23.2	60.2	30.9	37.0
전산시스템 운영 여부	예	64.6	19.5	29.4	47.8
	아니오	35.4	80.5	70.6	52.2
신고체계 운영 여부	예	68.7	35.6	45.6	56.3
	아니오	31.3	64.4	54.4	43.7
관리체계 현황	관리체계 없음	5.1	32.2	0.0	15.2
	신고체계	1.5	7.6	0.0	3.8
	전산관리	2.5	0.8	0.0	1.9
	전산관리+신고체계	4.5	1.7	0.0	2.8
	근거	13.1	23.7	41.2	17.1
	근거+신고체계	15.7	16.9	29.4	16.1
	근거+전산관리	10.6	7.6	13.2	9.5
	근거+전산관리+신고체계	48.0	9.3	16.2	33.5
전체		100.0	100.0	100.0	100.0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a).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위한 기본현황 조사(원자료).

## □ 부정수급 규모 미파악 사업의 예산집행액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았음

- 부정수급 규모 파악 사업의 총 예산집행액 평균이 부정수급 규모 미파악 사업에 비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음
- 부정수급 미파악 사업이 파악 사업에 비해 예산의 규모가 작긴 하였으나, 근거 법령 혹은 지침이 있으면서 부정수급 규모를 파악하지 않고 있는 사업은 평균 예산 규모가 작지 않았음

〈표 3-40〉 부정수급 규모 미파악 유형별 예산집행액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평균	합계
파악	평균	486,277	96,282,834
미파악	평균	181,426	20,319,680
근거법령 또는 지침 있으면서 미파악	평균	315,463	19,874,160
전체	평균	376,137	116,602,514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a).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위한 기본현황 조사(원자료).

- 보장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부정수급 규모 미파악 사업은 보장기관이 ‘지자체 또는 교육청’, ‘기타’인 경우가, 부정수급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사업은 ‘지자체 또는 교육청’, ‘공공기관’인 경우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근거법령 또는 지침이 있지만 부정수급 규모를 미파악한 사업의 경우도 ‘지자체 또는 교육청’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기타의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부정수급 규모 파악 여부에 따라 ‘기타’에 대한 응답비율과 공공기관에 대한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41〉 부정수급 규모 미파악 유형별 보장기관 현황

(단위: %)

	파악	미파악	근거법령과 지침 있으면서 미파악	계
지자체 또는 교육청	39.4	40.7	47.1	39.9
특별지방행정기관	13.6	9.3	10.3	12.0
공공기관	27.3	21.2	20.6	25.0
기타	14.1	27.1	20.6	19.0
2개 이상 보장기관	5.6	1.7	1.5	4.1
전체	100.0	100.0	100.0	100.0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a).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위한 기본현황 조사(원자료).





## 제4장

### 실태조사 분석

제1절 실태조사 개요

제2절 실태조사 기본결과 분석

제3절 실태조사 심층분석





## 제4장 실태조사 분석

### 제1절 실태조사 개요

#### 1. 개요

##### □ 목적

-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보장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에 대해 보장기관이 효과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부정수급 관련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

##### □ 대상 : 실태조사 대상 사업 선정 기준을 충족한 39개 현금급여 사업의 보장기관 업무담당자 4,679명에 대해 조사 실시

##### ○ 현금급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금급여는 사업지원형태 중 예산규모가 가장 크며, 현금으로 지급되는 특성으로 인해 정책체감도 역시 큰 지원형태임.
- 다른 지원형태에 비해 재화나 서비스 선택의 자율성 보장되기 때문에, 자유로운 선택으로 인한 효용 극대화를 통해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가능 (김태완 외, 2013, p.4)

##### ○ 기본조사에서 파악된 현금급여의 수는 78개임. 이 중 절반(50%)의 사업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39개)

##### ○ 실태조사 대상 사업 선정 기준

- 기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집행액 기준)이 100억 원 이상인 현금급여 사업 중 부정수급이 발생한 사업<sup>20)</sup>

20) 예산 기준은 제2장의 '제2절 사회보장급여의 유형구분과 실태조사 범위' 참조.

- 한편, 예산이 100억 원 이상인 현금급여 사업 중,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거나 부정수급 규모 현황을 파악하지 않은 사업들에 대해서도 사업의 중요도 또는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함의 도출이 큰 사업들도 포함되었는데, 이는 해당 사업들의 부정수급 예방에 대한 선제적 차원의 접근이 고려된 것임
- 미국의 경우 위험 관리적 접근 차원에서 지출프로그램의 예산 수준, 사업 성격에 따른 부적정 지출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예방차원의 부정수급 관리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제5장 제2절 참고)<sup>21)</sup>

○ 이렇게 선정된 39개 사업의 보장기관별 사업 담당자 4,679명을 대상으로 조사 실시

- 대상자 명단은 기본조사 대상인 사업 소관과의 협조 등을 통해 취합·작성

□ 조사기간 : 2020. 9. 25. ~ 10. 27.

- 당초에는 9월 4주에 조사를 착수하여 2주 이내 실사 완료하고 10월 23일까지 실태조사 데이터 및 기본 결과표를 제공할 예정이었지만,
- 코로나 19로 인해 면접원 조사(현장 수거 및 에딧팅)에서 온라인조사로 변경되면서 예상보다 응답률이 저조하고 조사의 순연이 발생
  - 조사표의 난이도가 높은 편이고 추석 이후 업무량 증가 등이 맞물려 조사 지연 발생, 또한 일부 기관의 대상자 협조 지연 등
- 실태조사 실시(온라인 조사)는 최종적으로 10월 27일에 완료되었고 입력데이터는 11월 2일에 제공되었으며, 이후 에러체크 작업을 실시

□ 조사방식

-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조사대상자가 온라인 조사표에 자기기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당초 조사원 방문조사를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접촉 방식으로 전환)

21) 부정적 지출 위험이 높은 프로그램들을 중심으로 우선관리 프로그램(High-Priority Program)을 지정하여, 모니터링 등 집중적 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는 12개월 동안 총 50억 달러를 초과하는 지출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량적인 방법으로 부적정 지출 위험도 평가를 수행하고 있음.

- 자기기업식 온라인 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전자메일 및 유선(전화)을 통해 조사 독려와 조사 내용 설명 실시
- 실태조사의 주요 조사 항목 (부록 4 실태조사표 참조)
  - 부정수급 발생 현황 및 유형 : 조사 대상 사업의 부정수급 규모(금액, 건수 등)
  - 부정수급 사후관리 현황
    - 부정수급 현황 관리의 정기성 여부 및 관리방법
    - 부정수급 관리를 위한 노력(변동사항 포함) 및 관리상의 어려움
    - 부정수급 인지 경로 및 주요 조치(지원중단, 환수 등 금전적 제재, 명단공표 등)
    - 부정수급 관련 조치실적(환수, 행정처분, 수사의뢰, 형사고발 등), 환수과정의 어려움
  - 부정수급 관리조직 및 운영
    - 해당사업의 응답부서 현황(부정수급 관리 인력 포함)
    - 보장기관 차원의 부정수급 관리 체계(감사부서, 신고·접수체계 등)
    - 부정수급 관리 전담 조직 여부 및 담당 인원의 규모
  - 그밖에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에 대한 안내
    - 부정수급 관리 제고를 위한 교육 여부
    - 해당 사업의 부정수급 예방 방향성 등 제도개선을 위한 응답자 인식

## 2. 실태조사표 작성의 방향성 및 보완과정

### □ 조사표 작성의 방향성

- 실태조사의 목적은 제도 개선이 중요
  - 정책 및 행정 담당자들이 부정수급에 대응하여 어떻게 정책을 설계하고 제도를 개선할지 판단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실태조사 결과 제공

#### □ 조사표의 작성 및 보완 과정

- 조사표 초안은 실태조사 준비를 위해 시행된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방안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연구진 수정을 통해 제시
- 조사표의 보완과 수정은 사회보장급여 모니터링 포럼(‘20.7.17), 실태조사 방향성 서면자문(‘20.7.31), 조사표 내용에 대한 서면자문(‘20.8.13) 등 전문가 자문 및 발주부서와의 상시적 협의를 통해 수행
- 전문가 자문 및 부처 협의 과정을 거쳐, 대상사업을 결정하고 조사표 내용을 확정
  - 조사대상은 지원형태가 현금급여이면서 예산(집행액)이 100억 원 이상인 사회보장사업 중에서 부정수급이 실제로 발생하거나 정책적 함의가 큰 사업으로 하였으며, 조사표는 공통 설문문항과 프로그램 유형별로 적용이 가능한 문항으로 구성
- 조사표의 구성은 사회보장급여법에 제시된 부정수급 실태조사의 주요 내용을 포괄하고 있으며, 본 실태조사에서 포괄하지 못하거나 심층적으로 다루지 못한 내용의 일부를 ‘제5장 주요 국가 사례 연구’의 한국 부문에서 제시

#### 〈조사표의 구성〉

- 응답부서 및 사업 현황과 업무량
- 응답부서의 부정수급 적발 노력 및 관리에 대한 업무량
- 응답부서가 속한 보장기관 차원의 부정수급 관리
- 부정수급 관리 현황과 실적
-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활동
-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교육
- 제도개선을 위한 인식 조사 항목

### 3. 실태조사 결과 현황 : 완수율

- 실태조사 결과 보장기관 669개소의 조사대상 4,679명 중 3,192명을 조사하여 완수율은 68.2%를 나타냄

〈표 4-1〉 실태조사 결과 현황 : 완수율

순번*	사회보장사업명	보장기관	보장기관 개소수	대상자수	완수율
1	교육급여	17개 시도교육청	17	17	94.1%
2	아동안전지킴이	민간경상보조사업자 (‘19년 대한노인회)	1	1	100.0%
3	진폐위로금지급	근로복지공단	6	6	50.0%
4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보훈지(방)청	27	27	63.0%
5	생활조정수당	보훈지(방)청		27	59.3%
6	보상금	보훈지(방)청		27	66.7%
7	고엽제후유의증수당	보훈지(방)청		27	63.0%
8	참전명예수당	보훈지(방)청		27	55.6%
9	무공영예수당	보훈지(방)청		27	51.9%
10	6.25자녀수당	보훈지(방)청		27	55.6%
11	국가유공자등간호수당	보훈지(방)청		27	51.9%
12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시군구청	233	229	55.9%
13	50.해산급여, 52.장제급여	시군구청		238	73.1%
14	생계급여	시군구청		242	71.9%
15	긴급복지	시군구청		243	81.1%
16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시군구청		254	77.6%
17	110. 장애인 특화형 일자리 제공, 142. 일반형 일자리 지원, 143.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	시군구청		260	66.5%
18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시군구청		229	58.5%
19	주거급여	시군구청		233	70.4%
20	기초연금	시군구청		234	83.3%
21	장애아동수당	시군구청		229	80.3%
22	장애수당	시군구청		229	75.5%
23	아동수당 지급	시군구청		229	55.0%
24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군구청		230	82.6%
25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시군구청		236	68.6%
26	어린이집지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교사겸직원장지원비)	시군구청		236	69.9%
27	지역공동체일자리	시군구청		213	55.9%
28	공공산림가꾸기	시군구청 국유림관리사무소	27	189 27	61.9% 74.1%
29	60세이상고령자고용지원금	고용센터	100	66	50.0%
30	모성보호 육아지원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포함) 급여, 육아휴직등 급여]			94	40.4%
31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77	42.9%
32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수당, 참여수당, 생계지원수당)			99	72.7%

순번*	사회보장사업명	보장기관	보장기관 개소수	대상자수	완수율
33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	20	50.0%
34	중증장애인지원고용(훈련수당)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	80.0%
35	대학생근로장학금지원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한국장학재단	1	1	100.0%
36	석면피해구제급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	1	100.0%
37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장려금 지급	농협, 축협, 산림조합 중앙본부	3	3	66.7%
38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장려제(EITC) 지원 확대)	국세청 산하 세무소	132	77	61.0%
39	창작준비금 지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1	1	100.0%
합계			669	4,679	68.2%

주: 순번은 사업을 보장기관별로 표시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고 실태조사에 사용된 번호는 <표 4-3>의 사업번호임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b).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 4. 실태조사 대상 사업 유형화 기준변수와 유형별 분류

##### □ 실태 조사 분석 주요 변수 검토

- 실태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업들은 사업지원형태 중 ‘현금’에 해당
- 대상자 선정기준 및 선정의 난이도(선정기준의 엄격성)를 반영하기 위해 자산  
조사 기준과 진단적 기준으로 급여를 구분하여 결과를 제시
  - 해당 기준들을 결합한 ‘자산 및 진단 기준’을 적용하여 선정(또는 급여수급)  
의 난이도를 감안한 결과를 제시

<표 4-2> 실태조사 분석을 위한 주요 변수 검토

구분	사업지원형태	자산조사 기준	진단적 기준	자산 및 진단(장애· 장해·상이) 기준	보장기관 형태별	보상적 기준
변수값	1. 현금 2. 현물 3. 바우처 4. 프로그램 5. 자원봉사 6. 시설입소 7. 대여/감면	1. 있음 2. 없음	1. 있음 2. 없음	1. 자산기준 2. 진단기준 3. 자산 및 진단기준 4. 없음	1. 지자체 또는 교육청 2. 특별지방행정기관 3.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4. 기타	1.보상적 2.비보상적

○ 보장기관 형태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통 지방행정기관인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인 지방 교육청을 하나의 유형으로 묶고, 보훈(지)청·세무서·고용센터 등을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 묶고,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을 공공기관으로 분류하여 보장기관 형태별 결과를 제시

- 그리고 앞서 언급한 세가지 유형에 포함되지 않은 보장기관은 ‘기타’ 기관으로 분류하였음

○ 보상적 기준은 급여 대상이 보훈대상자, 의사상자와 같이 사회적 또는 국가적으로 희생하고 공헌한 집단, 경제적으로 사회보험료 등을 납부한 사회보험가입자, 사회적 편견과 부당한 폭력 등으로 고통 받은 피해자 등인 경우에 해당

\* 보상적 기준은 주로 실태조사 데이터 유형화에 사용되었으며, 본 장에서는 ‘제3절 실태조사 심층분석’의 ‘2. 진단적 기준 적용 사업’의 보조적 지표로 활용

○ 실태조사 사업의 유형별 분류 결과는 아래와 같음

〈표 4-3〉 실태조사 사업 유형별 분류 결과

사업 번호	사회보장사업명	소관부처	보장기관	보장기관 구분	자산 및 진단 기준	보상적 기준
1	교육급여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1. 지자체 또는 교육청	1. 자산기준	2. 비보상적
2	아동안전지킴이	경찰청	민간경상 보조사업자	4. 기타	4. 없음	2. 비보상적
3	진폐위로금지급 (진폐근로자보호)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3. 공공기관	2. 진단기준	1. 보상적
4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국가보훈처	보훈지(방)청	2. 특별지방행정기관	1. 자산기준	1. 보상적
5	생활조정수당	국가보훈처	보훈지(방)청	2. 특별지방행정기관	1. 자산기준	1. 보상적
6	보상금	국가보훈처	보훈지(방)청	2. 특별지방행정기관	2. 진단기준	1. 보상적
7	고엽제후유의증수당	국가보훈처	보훈지(방)청	2. 특별지방행정기관	2. 진단기준	1. 보상적
8	참전명예수당	국가보훈처	보훈지(방)청	2. 특별지방행정기관	4. 없음	1. 보상적
9	무공영예수당	국가보훈처	보훈지(방)청	2. 특별지방행정기관	4. 없음	1. 보상적
10	6·25자녀수당	국가보훈처	보훈지(방)청	2. 특별지방행정기관	4. 없음	1. 보상적
11	국가유공자등간호수당	국가보훈처	보훈지(방)청	2. 특별지방행정기관	2. 진단기준	1. 보상적
12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보건복지부	시군구청	1. 지자체 또는 교육청	1. 자산기준	2. 비보상적
13	50. 해산급여, 52. 장제급여	보건복지부	시군구청	1. 지자체 또는 교육청	1. 자산기준	2. 비보상적
14	생계급여	보건복지부	시군구청	1. 지자체 또는 교육청	1. 자산기준	2. 비보상적
15	긴급복지	보건복지부	시군구청	1. 지자체 또는 교육청	1. 자산기준	2. 비보상적
16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보건복지부	시군구청	1. 지자체 또는 교육청	1. 자산기준	2. 비보상적

사업 번호	사회보장사업명	소관부처	보장기관	보장기관 구분	자산 및 진단 기준	보상적 기준
17	110. 장애인 특화형 일자리 제공, 142.일반형 일자리 지원, 143.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	보건복지부	시군구청	1. 지자체 또는 교육청	2. 진단기준	2. 비보상적
18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여성가족부	시군구청	1. 지자체 또는 교육청	1. 자산기준	2. 비보상적
19	주거급여	국토교통부	시군구청	1. 지자체 또는 교육청	1. 자산기준	2. 비보상적
20	기초연금	보건복지부	시군구청	1. 지자체 또는 교육청	1. 자산기준	2. 비보상적
21	장애아동수당	보건복지부	시군구청	1. 지자체 또는 교육청	3. 자산 및 진단기준	2. 비보상적
22	장애수당	보건복지부	시군구청	1. 지자체 또는 교육청	3. 자산 및 진단기준	2. 비보상적
23	아동수당 지급	보건복지부	시군구청	1. 지자체 또는 교육청	4. 없음	2. 비보상적
24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고용노동부	시군구청	1. 지자체 또는 교육청	4. 없음	2. 비보상적
25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보건복지부	시군구청	1. 지자체 또는 교육청	4. 없음	2. 비보상적
26	어린이집지원(교사근무환경개선 비,교사겸직원장지원비)	보건복지부	시군구청	1. 지자체 또는 교육청	4. 없음	2. 비보상적
27	공공산림가꾸기	산림청	시군구청 국유림관리사무 소	1. 지자체 또는 교육청 2. 특별지방행정기관	1. 자산기준	2. 비보상적
28	지역공동체일자리	행정안전부	시군구청	1. 지자체 또는 교육청	1. 자산기준	2. 비보상적
29	60세이상고령자고용지원금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2. 특별지방행정기관	4. 없음	2. 비보상적
30	모성보호육아지원(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포함) 급여, 육아 휴직 등 급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2. 특별지방행정기관	4. 없음	2. 비보상적
31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2. 특별지방행정기관	4. 없음	2. 비보상적
32	취업성공패키지(취업성공수당,참 여수당,생계지원수당)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2. 특별지방행정기관	1. 자산기준	2. 비보상적
33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 공단	3. 공공기관	2. 진단기준	2. 비보상적
34	중증장애인지원고용(훈련수당)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 공단	3. 공공기관	2. 진단기준	2. 비보상적
35	대학생근로장학금지원(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3. 공공기관	1. 자산기준	2. 비보상적
36	석면피해구제급여	환경부	한국환경산업 기술원	3. 공공기관	2. 진단기준	1. 보상적
37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장려금 지급	금융위원회	부처 직접 관리 (실제 관리하는 농협, 수협 등)	4. 기타	1. 자산기준	2. 비보상적
38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확대)	기획재정부	국세청 산하 세무소	2. 특별지방행정기관	1. 자산기준	2. 비보상적
39	창작준비금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3. 공공기관	1. 자산기준	2. 비보상적



## 제2절 실태조사 기본결과 분석<sup>22)</sup>

### 1. 응답자 일반특성 및 응답부서 사업 현황과 업무량

- 본 실태조사는 39개 현금급여의 보장기관 사업 담당자 4,679명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여 68.2%인 3,192명에 대해 조사를 완료함
- 응답자의 고용상태를 살펴보면, 공무원은 전체 응답자의 98.0%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공무원은 2.0% 인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의 고용상태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규직 공무원은 전체 응답자의 96.7%에 해당하며, (무기)계약직 공무원은 1.3%였으며, 정규직 민간 인력은 1.5%로 나타남
- 근무경력을 살펴보면, 공무원의 경우 3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응답자가 전체의 2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10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응답자는 23.5%를 차지하는 것을 나타남
  - 3~5년 미만과 10~15년 미만 그리고 15년 이상의 경우 비슷한 비중(17%대)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민간 인력의 경우 절반 이상(54.0%)이 3년 미만이 것으로 나타나 공무원 집단에 비해 경력과 관련한 숙련도 차원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응답자의 분포를 보장기관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87.2%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에 소속되어 있으며, 특별지방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소속된 응답자는 각각 11.7%와 1.0%로 나타남
  - 보장기관을 좀 더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군청이 32.1%, 시청이 27.7%, 그리고 구청이 26.9%인 것으로 나타남
  - 고용세터, 보훈(지)방청, 세무서, 국유림 관리사무소는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 분류되는데 이들에 대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에서 각각 5.5%, 4%, 1.5%, 0.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22) 본 장에 제시된 통계는 시험적 작성통계로 '본 통계는 국가승인통계가 아니며 향후 국가승인통계로 신청할 예정임'

〈표 4-4〉 응답자 특성

(단위: 수, %)

분류	구분	사례수	비율
전체		(3192)	100.0
공무원 여부	공무원	(3129)	98.0
	비공무원	(63)	2.0
고용상태	정규직 공무원	(3088)	96.7
	(무기)계약직 공무원	(41)	1.3
	정규직 민간인력	(47)	1.5
	계약직 민간인력	(16)	0.5
근무경력 (공무원)	3년 미만	(760)	24.3
	3~5년 미만	(544)	17.4
	5~10년 미만	(735)	23.5
	10~15년 미만	(546)	17.5
	15년 이상	(544)	17.4
근무경력 (민간인력)	3년 미만	(34)	54.0
	3~5년 미만	(7)	11.1
	5~10년 미만	(11)	17.5
	10~15년 미만	(1)	1.6
	15년 이상	(10)	15.9
보장기관 1	지자체 또는 교육청	(2784)	87.2
	특별지방행정기관	(373)	11.7
	공공기관	(32)	1.0
	기타	(3)	0.1
보장기관 2*	군청	(1026)	32.1
	시청	(885)	27.7
	구청	(857)	26.9
	고용센터	(176)	5.5
	보훈(지)방청	(126)	4.0
	세무서	(47)	1.5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6)	0.8
	국유림관리사무소	(24)	0.8
	교육청	(16)	0.5
	그 외	(9)	0.3

주: '보장기관 2'의 경우 응답 사례 수 기준 10개 이상인 사례에 대한 현황을 제시했으며 10개 미만인 사례는 '그 외'에 포함시켰음.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b).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 해당사업 응답부서의 현황을 구성원 수 및 담당하는 사회보장사업의 규모 등을 통해 살펴보면,

○ 응답부서의 평균 구성원 수는 23.7명이며, 관리자를 제외할 경우 18.8명임

- 지자체 또는 교육청의 구성원 수 평균(24.8명)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특별지방행정기관(16.5명), 공공기관(12.2명)은 평균보다 낮게 나타남
- ‘보장기관 2’로 살펴보면 군청이 26.9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세무서(25명), 구청(24.0) 순으로 나타남

○ 응답부서가 담당하는 사회보장사업 수(지자체 자체사업 제외)는 평균 20.6개

- 지자체 또는 교육청의 경우 평균 22.9개나 되었지만, 특별지방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사업 수는 각각 4.2개와 3.1개로 지자체에 비해 적은 사업수를 가지고 있음
- 지자체 또는 교육청에서 군청의 사업수가 28개로 가장 많았으며, 시청은 21.9개, 구청이 18.1개, 교육청은 3.5개로 나타남

〈표 4-5〉 응답부서 현황 : 구성원 수, 담당 사회보장사업 수

(단위: 명, 개)

분류	구분	사례수	부서의 구성원 수 (평균)		부서의 담당 사회보장사업 수 (평균)
			관리자 포함	관리자 제외	
	전체	(3192)	23.7	18.8	20.6
보장기관 1	지자체 또는 교육청	(2784)	24.8	19.5	22.9
	특별지방행정기관	(373)	16.5	14.0	4.2
	공공기관	(32)	12.2	10.1	3.1
	기타	(3)	23.3	19.7	1.0
보장기관 2	군청	(1026)	26.9	21.0	28.0
	시청	(885)	23.3	17.9	21.9
	구청	(857)	24.0	19.4	18.1
	고용센터	(176)	16.1	14.6	4.3
	보훈(지)방청	(126)	15.3	11.6	5.5
	세무서	(47)	25.0	22.0	1.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6)	12.3	10.4	3.5
	국유림관리사무소	(24)	9.4	7.5	2.4
	교육청	(16)	23.4	19.1	3.5
	그 외	(9)	15.4	12.4	1.5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b).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 해당 사업(실태조사 대상사업)의 보장기관 업무부서 담당자 수와 월평균 신청자 수를 살펴보면, 담당자 수는 평균 2명으로 고용센터(6.0명)와 세무서(20.7명) 등을 제외하고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해당사업(실태조사 대상사업)의 월평균 신청자 수는 약 584명으로 나타남

- 보장기관별 월평균 신청자 수를 살펴보면, 지자체의 경우 시청은 약 835명, 구청은 약 531명이었으며, 군청은 약 240명으로 지자체 중 가장 적었음
- 공공기관과 기타 기관은 각각 약 4,142명과 약 5,003명으로 지자체에 비해 평균 신청자 수가 많았는데 이는 지자체에 비해 공공기관과 기타 기관의 개소 수가 적기 때문임(표 4-1, 표 4-3 참조)

〈표 4-6〉 해당 사업 현황 I : 업무담당자수, 월평균 신청자(건) 수 현황

(단위: 명, 개, 건)

분류	구분	사례수	해당사업 담당자 수 평균 (부서관리자 제외)	해당사업 월평균 신청자수
	전체	(3192)	2.0	583.6
자산조사	적용	(2148)	2.2	545.4
	미적용	(1044)	1.5	662.2
진단적 기준	적용	(609)	1.2	105.0
	미적용	(2583)	2.2	696.4
자산 및 진단 기준	자산기준	(1791)	2.4	631.9
	진단기준	(252)	1.3	95.8
	자산 및 진단기준	(357)	1.2	111.5
	없음	(792)	1.6	842.4
보장기관 1	지자체 또는 교육청	(2784)	1.4	522.9
	특별지방행정기관	(373)	5.9	695.8
	공공기관	(32)	3.2	4,141.5
	기타	(3)	4.3	5,002.7
보장기관 2	군청	(1026)	1.2	240.4
	시청	(885)	1.4	835.3
	구청	(857)	1.7	530.7
	고용센터	(176)	6.0	499.4
	보훈(지)방청	(126)	1.2	233.2
	세무서	(47)	20.7	3,018.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6)	2.9	340.5
	국유림관리사무소	(24)	1.6	14.6
	교육청	(16)	1.3	937.9
	그 외	(9)	4.3	15,409.1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b).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 응답된 사업(실태조사 대상사업)의 예산집행액, 수급자 수, 부정수급 관리 부서원 수의 평균을 살펴보면,

○ 실태조사 대상사업의 2019년 기준 예산집행액은 7,852백만 원이며, 연도말 기준 수급자수는 3,988명, 부정수급 관리 부서원수는 2.0명으로 나타남

〈표 4-7〉 해당 사업 현황 II : 2019년 기준 예산 집행액, 수급자 수, 부정수급 관리 부서원수

(단위: 명, 백만원)

분류	구분	사례수	예산 집행액 평균 (국비+지방비)	수급자 수 평균 (연도말 기준, 명)	부정수급 관리 부서원수 평균
자산조사	전체	(3192)	7,852.5	3,987.5	2.0
	적용	(2148)	9,010.9	4,786.3	2.3
	미적용	(1044)	5,469.2	2,344.1	1.6
진단적 기준	적용	(609)	3,181.6	1,422.3	1.4
	미적용	(2583)	8,953.8	4,592.3	2.2
자산 및 진단 기준	자산기준	(1791)	10,617.4	5,492.4	2.4
	진단기준	(252)	6,341.4	1,675.6	1.3
	자산 및 진단기준	(357)	951.2	1,243.6	1.4
	없음	(792)	5,191.6	2,556.9	1.7
보장기관 1	지자체 또는 교육청	(2784)	7,481.7	3,871.5	1.7
	특별지방행정기관	(373)	10,304.4	4,821.2	4.9
	공공기관	(32)	10,656.5	4,425.1	2.8
	기타	(3)	17,226.7	3,343.7	4.0
보장기관 2	군청	(1026)	3,320.7	1,535.0	1.3
	시청	(885)	9,806.7	4,671.9	1.6
	구청	(857)	9,972.3	5,666.7	2.2
	고용센터	(176)	4,713.8	2,618.2	3.7
	보훈(지)방청	(126)	15,401.8	3,373.0	1.1
	세무서	(47)	22,747.8	19,407.9	20.7
	한국장애훈고용공단	(26)	11,755.0	5,193.0	2.8
	국유림관리사무소	(24)	172.3	14.6	1.5
	교육청	(16)	12,290.5	13,270.9	0.9
	그 외	(9)	9,673.2	1,846.1	3.2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b).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 자산기준만 적용되는 경우의 사업규모가 가장 컸고, 자산 및 진단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 사업규모가 가장 작았음

- 자산기준만 적용되는 경우 예산집행액 10,617백만 원, 수급자수 5,492명으로 사업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자산 및 진단 기준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예산집행액 951백만 원, 수급자 수 1,244명으로 사업규모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남
- 보장기관별로 살펴보면, 지자체 중에는 군청의 사업규모가 가장 작았고, 특별 지방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사업규모는 시청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 군청의 경우, 예산집행액이 3,321백만 원, 수급자수는 1,535명으로 사업규모가 가장 작았음
  - 기타기관(부속기관, 민간기관, 중앙부처 관리 사업 등)의 예산집행액이 다른 유형의 기관보다 컸지만, 수급자수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실태조사 대상사업에 대한 부정수급 관리 부서원수는 2명으로 나타남
  - 진단기준과 자산 및 진단 기준에 의한 차이는 크지 않으나 자산조사만 적용한 경우는 부정수급 관리 부서원이 2.4명으로 가장 높았음
  - 지자체별로는 구청의 부정수급 관리 부서원이 2.2명으로 시청(1.6명)과 군청(1.3명)에 비해 높았고 구청의 사업 담당자 수(1.7명) 보다도 많았는데, 이는 부정수급 관리 부서원에는 부서관리자도 포함되었기 때문임
    - 특별지방행정기관과 기타 기관의 부정수급 관리 부서원은 각각 4.9명과 4.0명으로 '보장기관 1' 중 가장 높았으며, 공공기관은 2.8명으로 지자체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세무서의 경우, 부정수급 관리 부서원 수가 20.7명으로 다른 보장기관에 비해 월등히 많으며, 앞서 살펴본 업무 담당자 수와 유사한 것을 볼 때 업무 담당자가 부정수급 관리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2. 응답부서의 부정수급 적발 노력 및 관리에 대한 업무량

- 응답부서가 담당 사업의 부정수급 관련 확인 또는 적발을 위해 어떤 조치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각 조치(노력) 사항에 대한 여부('예'. '아니로')로 파악하였음
- '정보시스템을 통한 변동사항 확인'으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상담 또는 전화 확인', '중복 급여·서비스 확인' 순으로 나타남

- ‘정보시스템을 통한 변동사항 확인’의 경우는 87.2%로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자산조사나 진단적 구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고, 보장기관별로 살펴보면 공공기관이 75%, 기타 기관이 66.7%로 전체 평균에 비해 낮았음
- 두 번째로 많이 응답된 조치는 ‘상담 또는 전화 확인’(68.8%)으로 나타났는데,
  - 진단적 구분이 적용되는 경우(58.3%)는 그렇지 않은 경우(71.3%)에 비해 낮은 응답비율을 보였으며,
  - 보장기관별로는 공공기관(84.4%)이 다른 보장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으며, 지자체 중에서 군은 6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중복 급여·서비스 확인’이 62.5%로 세 번째로 높게 응답됨
  - 자산조사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55.4%로 낮았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산조사 없이 진단기준만 적용되는 경우가 53.6%였고, 자산조사 및 진단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55.9%로 제시
  - 보장기관 구분에서는 공공기관에서 78.1%로 다른 보장기관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이외에 ‘기관 내 다른 부서, 타 기관 등의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상변동 등 변동사항 확인 요청’이 47.2%, ‘방문확인’이 37.3%, 그리고 ‘타 부서 및 기관에 대한 방문확인 요청’이 29.9%로 나타남
  - 앞서 살펴본 ‘정보시스템을 통한 변동사항 확인’의 응답 비율이 87.2%, 다른 부서 또는 타 기관 등의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상변동 확인 요청이 47.2%에 달한다는 것은 부정수급 관련 확인 또는 적발을 위해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상변동 등의 확인임을 알 수 있음
  - 방문확인은 부정수급 확인과 적발과 관련하여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되지만 그 효과가 큰 방법으로 볼 수 있는데,
    - 보장기관 중 공공기관(53.1%)에서 방문확인을 주로 적용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군청(40.3%)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4-8〉 부정수급 관련 확인/적발을 위한 주요 조치

(단위: %)

분류	구분	사례수	정보 시스템을 통한 변동사항 확인	타 부서·기관 정보시스템을 통한 변동사항 확인 요청	방문확인	타기관 방문확인 요청	상담 또는 전화 확인	기관 내 감사 부서에서 조사 요청	기관 내 전담부서에 협조 요청	중복 급여·서비스 확인	중점관리 대상자 관리	상급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의뢰	기타
자산조사	전체		87.2	47.2	37.3	29.9	68.8	11.8	13.9	62.5	21.6	9.9	2.5
	적용		86.1	52.0	36.7	33.8	68.9	10.9	13.6	66.0	24.5	9.2	2.0
	미적용		89.6	37.5	38.6	21.9	68.6	13.7	14.6	55.4	15.8	11.5	3.4
	적용		89.3	52.9	30.4	31.2	58.3	12.2	14.8	61.7	19.4	9.7	1.3
진단적 기준	미적용		86.8	45.9	39.0	29.6	71.3	11.8	13.7	62.7	22.2	10.0	2.7
	자산기준		85.4	51.3	39.0	34.2	72.3	11.1	13.3	65.7	25.3	9.5	2.4
	진단기준		88.9	48.8	37.7	30.6	67.1	15.1	14.3	53.6	18.3	13.1	2.8
	자산 및 진단기준		89.6	55.7	25.2	31.7	52.1	10.1	15.1	67.5	20.2	7.3	0.3
보장기관	없음		89.8	33.8	38.9	19.2	69.1	13.3	14.6	55.9	15.0	11.0	3.5
	지자체 또는 교육청	전체	87.2	45.1	37.9	29.6	67.4	9.9	11.5	61.9	20.9	9.0	2.5
		시	86.7	45.4	37.3	32.2	68.5	9.4	11.3	60.0	20.9	8.9	2.6
		군	86.8	39.1	40.3	25.0	64.8	9.4	9.6	61.2	21.2	5.8	2.5
		구	88.4	51.6	36.3	32.6	69.9	11.2	13.9	64.6	21.0	12.6	2.3
	특별지방행정기관		89.0	61.1	32.2	30.8	78.0	23.9	30.6	66.0	26.3	14.5	2.1
	공공기관		75.0	68.8	53.1	40.6	84.4	37.5	31.3	78.1	28.1	37.5	6.3
	기타		66.7	66.7	33.3	33.3	66.7	66.7	33.3	66.7	33.3	33.3	0.0
	(3)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b).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 해당사업의 부정수급 관련 확인/적발을 위해 응답부서가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조치에 대한 1순위 응답 결과는 ‘정보시스템을 통한 변동사항 확인’, ‘중복 급여·서비스 확인’, ‘상담 또는 전화 확인’ 순으로 나타남
- 부정수급 관련 확인/적발을 위해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조치로 ‘정보시스템을 통한 변동사항 확인’(67.0%)이 꼽힘
- 다른 조치들에 대한 응답비율이 10%에 미치지 못한 것을 고려할 때, 상당수의 보장기관 담당자들이 부정수급 확인 또는 적발을 위해 가장 오랜 시간을 투입하는 조치가 정보시스템 통한 변동사항 확인임을 알 수 있음
  - 보장기관별로 살펴보면, 공공기관은 34.4%, 기타 기관은 33.3%로 다른 보장기관에 비해 응답비율이 낮게 나타남
- 자신 및 진단기준이 모두 적용되는 경우, 정보시스템을 통한 변동사항 확인으로 응답한 비율(74.2%)이 가장 높았으며, 상담 또는 전화확인, 방문확인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기관 내 다른 부서, 타 기관 등의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상변동 등 변동사항 확인 요청에 많은 시간을 투입한다는 응답 역시 10.1%로 전체 평균(5.5%)에 비해 높았음
  - 반면, 상담 또는 전화 확인은 1.7%, 방문 확인은 1.1%로 전체 평균에 비해 낮았음
- 자산기준만 적용되는 경우, ‘정보시스템을 통한 변동사항 확인’에 가장 많은 시간을 소요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63.7%로 다른 기준들보다 낮게 나타남
- ‘중복 급여·서비스 확인’은 9.3%, 상담 또는 전화 확인’은 8.7%, 기관 내 다른 부서, 타 기관 등의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상변동 등 변동사항 확인 요청이 5.5%, 가정방문, 신상변동의심자 현장점검 등 방문확인이 4.7%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조치는 5% 미만의 응답을 보임

〈표 4-9〉 파장수, 근점, 회절/차별, 이를 위해 가지는 많은 시간과 타협한 점 (1상)

(단위: %)

분류	구분	사례수	정보시스템을 통한 변동사항 확인	타 부서·기관 정보시스템을 통합 변동사항 확인 요청	비문확인	타기관 비문확인 요청	상담 또는 전화 확인	기관 내 감사 부서에 조사 요청	기관 내 전담부서에 협조 요청	종북 급여·서비스 확인	중점관리 대상자 관리	상급기관 또는 수시기관에 의뢰	기타	
자산조사	전체	(3192)	67.0	5.5	4.7	1.4	8.7	0.4	0.9	9.3	0.7	0.3	1.1	
		적용	(2148)	65.4	7.0	3.8	1.6	8.7	0.4	1.1	9.9	0.8	0.2	1.0
		미적용	(1044)	70.3	2.6	6.5	0.9	8.9	0.3	0.5	8.0	0.3	0.5	1.2
	진단적 기준	적용	(609)	73.4	7.7	2.8	1.0	4.9	0.5	0.5	7.7	0.8	0.2	0.5
		미적용	(2583)	65.5	5.0	5.1	1.5	9.6	0.3	1.0	9.7	0.6	0.3	1.2
		자산기준	(1791)	63.7	6.4	4.4	1.8	10.1	0.4	1.2	10.1	0.8	0.2	1.2
자산 및 진단 기준	진단기준	(252)	72.2	4.4	5.2	1.2	9.5	0.4	0.0	5.6	0.8	0.0	0.8	
	자산 및 진단기준	(357)	74.2	10.1	1.1	0.8	1.7	0.6	0.8	9.2	0.8	0.3	0.3	
	없음	(792)	69.7	2.0	6.9	0.8	8.7	0.3	0.6	8.8	0.1	0.6	1.4	
		전체	(2784)	67.7	5.7	4.8	1.5	8.2	0.3	0.8	8.9	0.6	0.3	1.0
	지자체 또는 교육청	지	(885)	65.6	7.1	5.9	2.3	7.3	0.5	0.9	8.1	0.9	0.2	1.1
		사	(1026)	70.4	4.3	4.8	0.8	8.5	0.4	0.7	9.0	0.3	0.1	0.9
자치체		(857)	67.1	6.0	4.0	1.5	8.9	0.1	0.8	9.3	0.8	0.5	1.1	
보장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373)	64.9	4.0	2.4	0.8	12.1	0.5	1.6	11.3	0.5	0.3	1.6	
		공공기관	(32)	34.4	6.3	18.8	0.0	15.6	0.0	0.0	18.8	3.1	0.0	3.1
	기타	(3)	33.3	0.0	0.0	0.0	0.0	33.3	33.3	0.0	0.0	0.0	0.0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b).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 부정수급 관련 확인/적발에서 가장 효과적인 조치(1순위)로 ‘정보 시스템을 통한 변동사항 확인’, ‘중복 급여 및 서비스 확인’, ‘방문확인’ 순으로 응답됨

○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상변동 등 변동사항을 확인하는 것(64.7%)이 부정수급 확인 및 적발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조치로 응답되었음

- 이외에 ‘중복 급여 및 서비스 확인’이 10.6%, 가정방문이나 신상변동의심자 현장점검 등의 ‘방문확인’이 7.3%, ‘기관 내 다른 부서, 타 기관 등의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상변동 등 변동사항 확인 요청’이 6.0%, ‘상담 또는 전화확인’이 5.6%로 제시

- ‘방문확인’은 앞서 살펴본 주요 조치(표 4-8)에서는 다섯 번째,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입한 조치(표 4-9)에서도 다섯 번째로 응답되었지만, 가장 효과적인 조치에서는 세 번째로 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방문확인’이 투입되는 시간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효과가 큰 것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음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는 방문상담을 보건과 연계하고 정보연계를 확대하는 등 양적·질적 제고가 이뤄졌는데(복지부 보도자료, 2018), 이러한 측면이 부정수급 확인·적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음

○ ‘타기관 정보시스템 확인 요청’은 응답비율이 6%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조치는 앞서 제시된 표들과 유사하게 5% 대 이하의 응답률을 보임

○ 자산기준과 진단기준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 경우, ‘정보시스템을 통한 변동사항 확인’이 효과적이라는 응답은 64.1%로 자산 및 진단 기준에서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방문확인은 11.4%로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비율을 나타냄

- 자산기준과 진단기준 등이 없는 사회보장급여는 보통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대상에게 급여가 지급됨
- 이러한 경우 부정수급의 발생은 대상자의 사망, 출국, 혼인, 이혼 등 신상변동의 변화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함

〈표 4-10〉 부정수급 관련 확인/적발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조치 (1순위)

(단위: %)

분류	구분	시례수	정보 시스템을 통한 변동사항 확인	타 부서· 기관·정보 시스템을 통한 변동사항 확인 요청	방문 확인	타기관 방문확인 요청	상담 또는 전화 확인	기관내 감사부서 조사요청	기관내 전담부서 협조요청	중복 급여· 서비스 확인	중점관리 대상자 관리	상금· 수사기관 의뢰	기타
자산조사	전체	(3192)	64.7	6.0	7.3	1.4	5.6	0.6	1.2	10.6	1.0	0.4	1.1
	적용	(2148)	63.9	6.8	6.1	1.5	5.4	0.5	1.3	12.1	1.2	0.4	0.9
	미적용	(1044)	66.4	4.3	9.9	1.1	6.2	0.9	1.1	7.7	0.7	0.5	1.3
	적용	(609)	71.8	7.6	3.3	0.8	3.9	0.8	1.0	8.7	1.6	0.0	0.5
진단적 기준	미적용	(2583)	63.1	5.6	8.3	1.5	6.0	0.5	1.2	11.1	0.9	0.5	1.2
	자산기준	(1791)	62.6	6.4	6.9	1.7	6.1	0.3	1.2	12.1	1.1	0.5	1.1
자산 및 진단 기준	진단기준	(252)	73.4	6.0	5.2	1.2	7.1	0.4	0.0	4.4	1.6	0.0	0.8
	자산 및 진단기준	(357)	70.6	8.7	2.0	0.6	1.7	1.1	1.7	11.8	1.7	0.0	0.3
	없음	(792)	64.1	3.8	11.4	1.1	5.9	1.0	1.4	8.7	0.4	0.6	1.5
	전체	(2784)	65.5	5.9	7.7	1.5	5.3	0.5	0.9	10.3	1.0	0.5	1.0
보장기관	지자체 또는 교육청	지	62.7	7.1	8.5	1.8	5.4	1.0	1.1	9.6	1.4	0.5	0.9
		시	68.2	4.2	7.4	1.3	5.6	0.3	0.6	10.2	1.1	0.2	1.0
		자	65.6	6.5	7.2	1.5	4.8	0.1	1.2	10.6	0.7	0.7	1.1
		구	61.7	6.4	4.3	0.8	7.5	1.3	2.9	12.6	0.5	0.3	1.6
	특별지방행정기관	(373)	61.7	6.4	4.3	0.8	7.5	1.3	2.9	12.6	0.5	0.3	1.6
	공공기관	(32)	34.4	9.4	15.6	0.0	15.6	0.0	0.0	18.8	3.1	0.0	3.1
	기타	(3)	33.3	0.0	0.0	0.0	0.0	33.3	33.3	0.0	0.0	0.0	0.0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b).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 부정수급 확인 및 적발을 위해 파악해야 할 변동사항들은 다음 표와 같음

○ 부정수급 확인 및 적발을 위해 파악해야 하는 변동사항으로 전체의 23.2%가 '소득 및 재산 변동'을, 21.7%는 '중복수급'을 응답함

○ 자산 및 진단기준이 모두 있는 사업의 경우 ‘소득 및 재산 변동’을 파악해야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36.8%로 높았음

〈표 4-11〉 부정수급 확인/적발 위해 파악해야 할 변동사항 (복수응답)

(단위: %)

분류	구분	사례수	거주지 변동	가족관계 변경(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	가족관계 외 가구원 변동(교정시 설 입/출소, 군 입/제대, 실종 등)	사명의심 자 확인	출입국 내역(장기 출국자 파악) 또는 국적상실	소득/재산 변동	중복수급	징에, 상이, 장애, 근로능력 등의 판정변화	부양 의무자	법적용 배제(보호 제도 등)	순위변경 (보호제도 등)	기타
자산조사	전체	(6382)	10.5	12.5	6.3	7.4	6.0	23.2	21.7	4.6	1.9	1.2	0.4	4.4
	직용	(4294)	9.4	14.0	7.8	7.4	2.9	31.4	18.4	4.0	2.6	0.4	0.2	1.4
	미직용	(2088)	12.6	9.2	3.3	7.5	12.2	6.2	28.4	6.0	0.6	2.8	0.7	10.6
진단적 기준	직용	(1218)	9.1	8.9	6.2	8.9	5.7	25.0	15.9	15.7	1.3	1.0	0.4	1.9
	미직용	(5164)	10.8	13.3	6.4	7.1	6.0	22.7	23.0	2.0	2.1	1.3	0.3	5.0
	자산기준	(3580)	9.9	14.9	7.6	7.6	3.2	30.3	19.4	2.2	2.7	0.5	0.3	1.4
자산 및 진단 기준	진단기준	(504)	12.1	7.7	2.4	12.5	11.5	8.3	19.2	19.8	0.4	2.4	1.0	2.6
	자산 및 진단기준	(714)	7.0	9.7	9.0	6.3	1.5	36.8	13.6	12.7	2.0	0.0	0.0	1.4
	없음	(1584)	12.8	9.7	3.5	5.9	12.4	5.6	31.3	1.6	0.6	2.9	0.6	13.2
보장기관	지자체 또는 교육청	전체	(5566)	11.3	11.9	6.6	6.1	24.3	21.3	4.7	2.0	0.8	0.3	4.3
		시	(1769)	9.4	11.5	7.2	6.6	24.4	22.2	4.4	2.0	0.7	0.3	4.9
		자	(2052)	14.3	11.7	6.4	5.9	23.8	20.0	4.6	2.2	0.8	0.2	3.3
		체	(1713)	9.6	12.4	6.2	6.1	24.5	21.7	5.1	1.8	1.1	0.4	5.1
	특별지방행정기관		(746)	5.1	17.6	5.1	4.8	16.4	23.1	1.9	1.5	4.0	0.9	5.0
	공공기관		(64)	3.1	1.6	3.1	3.1	4.7	37.5	34.4	0.0	1.6	0.0	4.7
	기타		(6)	0.0	0.0	0.0	0.0	50.0	33.3	16.7	0.0	0.0	0.0	0.0

주: 사례 수는 중복응답을 합산한 값임.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b).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 응답부서가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하고 적발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한 1순위 응답을 살펴보면,

○ 사실관계를 확인할 ‘자료와 정보 부족’으로 응답한 비율이 26.8%로 가장 높았으며, ‘수급자 변동사항과 정보시스템 등록의 시차’ 문제가 25.0%로 응답됨

- 부정수급의 확인 및 적발 과정의 어려운 점의 절반 이상은 정확한 정보의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남
- 실제, 기존 시스템 간 연계 미흡 또는 공적정보 부족 등으로 사전자격 검증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가 존재
  - 예를 들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해외출국아동 정보 미연계로 해외장기 체류 아동에 대해 어린이집 기본보육료 지급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해외출국 아동 정보를 연계하고 보육일수를 과다하게 확인한 아동에 대한 보육료 결제를 제한하였음(관계부처합동, 2019.10.)
- ‘자료와 정보 부족’으로 응답한 보장기관별 특성을 살펴보면, 시청·군청·구청간 큰 차이가 없으나(각각 25.5%, 26.7%, 25.85), 특별행정기관은 응답비율이 31.4%로 보장기관 중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나타냄

○ 정보문제 이외의 항목으로 ‘업무과중 또는 인력부족’이 21.6%, 수급자 반발 등 민원대응이 14.5%, 부정수급 사실 확인을 위한 강제력 부족이 8.2%, 나머지 항목은 5% 미만으로 제시됨

○ 자산기준 및 진단기준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정보시차가 가장 중요한 어려움으로 제시되었고, 진단기준만 적용되는 경우는 자료와 정보 부족 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으로 제시

- 자산기준 및 진단기준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정보시스템 등록된 정보의 시차’는 33.9%로 전체평균(25.0%)보다 높고, 민원대응이 17% 수준으로 전체평균(14.5%)보다 높게 제시
- 진단기준만 적용되는 경우, 자료와 정보의 부족이 29.4%로 가장 높게 제시

〈표 4-12〉 부정수급 확인/적발 조치(노력)과정에서 어려운 점 (1순위)

(단위: %)

분류	구분		사례수	자료와 정보 부족	정보 시스템 등록된 정보의 시차	민원 대응	강제력 부족	업무 과중 또는 인력 부족	정보 공유의 어려움	제한적 정보 접근 권한	기타	
전체			(3192)	26.8	25.0	14.5	8.2	21.6	1.0	2.4	0.5	
자산조사	적용		(2148)	24.3	29.1	17.2	8.3	18.0	0.7	1.9	0.5	
	미적용		(1044)	31.8	16.6	9.0	8.0	28.9	1.6	3.4	0.7	
진단적 기준	적용		(609)	24.1	27.6	14.8	6.7	23.5	1.0	1.8	0.5	
	미적용		(2583)	27.4	24.4	14.5	8.5	21.1	1.0	2.6	0.5	
자산 및 진단 기준	자산기준		(1791)	25.1	28.1	17.2	8.5	17.5	0.9	2.2	0.5	
	진단기준		(252)	29.4	18.7	11.1	6.3	27.8	2.4	3.6	0.8	
	자산 및 진단기준		(357)	20.4	33.9	17.4	7.0	20.4	0.0	0.6	0.3	
	없음		(792)	32.6	15.9	8.3	8.5	29.3	1.4	3.4	0.6	
보장기관	지자체 또는 교육청	전체	(2784)	26.2	25.9	14.1	8.1	21.9	1.0	2.3	0.5	
		지 자 체	시	(885)	25.5	26.3	15.9	7.5	21.7	0.9	1.8	0.3
			군	(1026)	26.7	27.1	12.9	7.4	21.2	1.0	2.9	0.8
			구	(857)	25.8	24.5	13.7	9.6	22.9	1.2	2.0	0.5
	특별지방행정기관		(373)	31.4	19.6	17.4	8.0	19.8	0.8	2.9	0.0	
	공공기관		(32)	18.8	9.4	18.8	18.8	15.6	6.3	6.3	6.3	
	기타		(3)	66.7	0.0	33.3	0.0	0.0	0.0	0.0	0.0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b).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 부정수급 관리 부서원이 부정수급 관련 업무에 투입한 업무량은 전체 업무량의 약 18.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자산 및 진단기준이 모두 적용되는 경우와 자산 및 진단기준이 모두 없는 경우가 각각 16.5%, 16.9%로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진단기준만 적용되는 경우 19.3%로 평균보다 높게 제시됨
- 보장기관별 분류에서는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서 각각 19.4%, 30.0%로 평균보다 높게 제시되었으며, 지자체 중 구청의 업무량이 19.7%로 시청(18.1%)이나 군청(17.3%)에 비해 높게 나타남

〈표 4-13〉 부정수급 관리 부서원이 부정수급 관련 업무에 투입한 업무량

(단위: 사례수, %)

분류	구분		사례수	부정수급 관련 업무에 투입한 업무량	
자산조사	전체		(3192)	18.1	
	적용		(2148)	18.4	
		미적용		(1044)	17.5
진단적 기준	적용		(609)	17.6	
	미적용		(2583)	18.2	
자산 및 진단 기준	자산기준		(1791)	18.8	
	진단기준		(252)	19.3	
	자산 및 진단기준		(357)	16.5	
	없음		(792)	16.9	
보장기관	지자체 또는 교육청	전체	(2784)	18.2	
		지 자 체	시	(885)	18.1
			군	(1026)	17.3
			구	(857)	19.7
	특별지방행정기관		(373)	16.9	
	공공기관		(32)	19.4	
	기타		(3)	30.0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b).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 3. 응답부서가 속한 보장기관 차원의 부정수급 관리

□ 해당 사업의 부정수급을 감사부서에서도 관리한다는 응답비율은 전체의 38.8%이며, 감사부서에서 관리하지 않는다는 응답비율은 51.8%로 나타났고, 감사부서가 없어서 '해당 없음'으로 응답한 비율은 9.4%로 나타남

○ 진단기준만 적용되는 경우, 41.7%가 감사부서에서 부정수급을 관리한다고 응답해 평균보다 높음

○ 보장기관별 분류에서는 특별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서 각각 66.8, 84.4%, 66.7%로 평균보다 높게 제시되었음

- 지자체의 경우 시청 34%, 군청 33.4%, 구청 36.5%로 나타나 지자체 간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지만,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응답비율이 약 84%에 이르는 것과는 매우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음

• 이는 일정 분야에 대해 정부 대신 공공재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감사부서가 복지업무를 포괄한 광범위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부서에 비해 복지사업 부정수급의 관리가 더 용이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지자체의 경우 약 33%~36% 정도만이 감사조직에서 해당 급여들의 부정수급을 관리하고 있는데, 지자체의 특성과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업무 범위 및 조직 성격 등의 차이를 감안했을 때,
- 지자체의 경우 부정수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업부서 내에 전담인력 배치(또는 충원) 또는 별도 조직을 통한 관리 강화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음

〈표 4-14〉 감사부서에서 부정수급 관리 여부

(단위: 사례수, %)

분류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해당 없음
자산조사	전체			(3192)	38.8	51.8	9.4
	적용			(2148)	36.5	53.8	9.7
	미적용			(1044)	43.4	47.8	8.8
진단적 기준	적용			(609)	39.1	50.9	10.0
	미적용			(2583)	38.7	52.0	9.3
자산 및 진단 기준	자산기준			(1791)	36.3	53.8	9.8
	진단기준			(252)	41.7	47.2	11.1
	자산 및 진단기준			(357)	37.3	53.5	9.2
	없음			(792)	43.9	48.0	8.1
보장기관	지자체 또는 교육청	전체		(2784)	34.4	57.5	8.0
		지 자 체	시	(885)	34.0	57.7	8.2
			군	(1026)	33.4	58.7	7.9
			구	(857)	36.5	55.3	8.2
	특별지방행정기관			(373)	66.8	12.9	20.4
	공공기관			(32)	84.4	15.6	0.0
	기타			(3)	66.7	0.0	33.3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b).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 감사부서에서 해당 사업 외 다른 복지 및 사회보장분야 사업을 관리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의 67.8%로 나타남

○ 진단기준만 적용되는 경우와 자산기준과 진단기준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각각 75.0%, 74.9%로 감사부서에서 복지 및 사회보장 분야의 사업을 관리한다는 응답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음

- 보장기관별 분류에서는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서 각각 19.4%, 30.0%로 평균보다 높게 제시되었으며, 지자체 중 구청에서 감사부서가 관리한다는 응답이 72.4%로 시청이나 군청에 비해 높게 나타남

〈표 4-15〉 감사부서에서 해당사업 외의 다른 복지/사회보장분야 사업 관리 여부

(단위: 사례수, %)

분류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자산조사	전체			(2891)	67.8	32.2
	적용	(1939)			64.3	35.7
		미적용			(952)	74.9
진단적 기준	적용			(548)	70.1	29.9
	미적용			(2343)	67.3	32.7
자산 및 진단 기준	자산기준			(1615)	63.8	36.2
	진단기준			(224)	75.0	25.0
	자산 및 진단기준			(324)	66.7	33.3
	없음			(728)	74.9	25.1
보장기관	지자체 또는 교육청	전체		(2560)	67.7	32.3
		지 자 체	시	(812)	65.9	34.1
			군	(945)	65.8	34.2
			구	(787)	72.4	27.6
	특별지방행정기관			(297)	67.3	32.7
	공공기관			(32)	81.3	18.8
	기타			(2)	50.0	50.0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b).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 감사부서 평균 구성원 수는 9.9명, 감사부서 중 복지분야 부정수급 관리하는 평균 구성원 수는 2.6명으로 조사됨
- 보장기관별로는 지자체 중 시청과 구청은 감사부서 평균 구성원 수가 각각 11.6명, 12.6명인데 비해 군청은 5.4명으로 절반 수준임
- 복지분야 부정수급 관리하는 평균 구성원 수 역시 시청과 구청은 2.5명 수준인데 비해 군청은 1.8명으로 낮은 경향을 보임
- 공공기관은 감사부서 평균 구성원 수가 6.8명으로 전체평균에 비해 낮았으나, 감사부서에서 복지분야 부정수급을 관리하는 평균 구성원 수는 3.1명으로 전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16〉 감사부서 구성원 수

(단위: 명)

분류	구분		사례수	감사부서 평균 구성원 수	복지분야 부정수급 관리하는 평균 구성원 수
보장기관	전체		(3192)	9.9	2.6
	지자체 또는 교육청	전체	(2784)	9.8	2.2
		시	(885)	11.6	2.5
		군	(1026)	5.4	1.8
		구	(857)	12.6	2.5
	특별지방행정기관		(373)	11.8	5.8
	공공기관		(32)	6.8	3.1
	기타		(3)	11.0	11.0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b).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 부정수급 신고/접수 체계는 38%의 응답자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

○ 보장기관별로 살펴보면 시군구는 뚜렷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지만, 특별지방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서 부정수급 신고/접수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60.6%, 84.4%로 전체 평균에 비해 높게 나타남

〈표 4-17〉 부정수급 신고/접수 체계 자체 운영 여부

(단위: 사례수, %)

분류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보장기관	전체		(3192)	38.0	62.0
	지자체 또는 교육청	전체	(2784)	34.4	65.6
		시	(885)	36.3	63.7
		군	(1026)	31.8	68.2
		구	(857)	36.2	63.8
	특별지방행정기관		(373)	60.6	39.4
	공공기관		(32)	84.4	15.6
	기타		(3)	33.3	66.7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b).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 자체 운영 신고/접수 체계를 온라인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59.8%, 유선(전화)는 87.3%, 그리고 현장창구 운영은 61.9%로 제시

○ 보장기관별로 살펴보면 시군구는 뚜렷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지만, 모든 자체 운영기관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전체 평균에 비해 높게 나타남

〈표 4-18〉 자체 운영 신고/접수 체계 운영 형태

(단위: 사례수, %)

분류	구분		사례수	1. 온라인		2. 유선(전화)		3. 현장창구 운영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전체			(1212)	59.8	40.2	87.3	12.7	61.9	38.1	
보장기관	지자체 또는 교육청	전체		(958)	56.4	43.6	86.2	13.8	56.3	43.7
		지 자 체	시	(321)	56.1	43.9	83.5	16.5	56.1	43.9
			군	(326)	46.6	53.4	85.3	14.7	55.2	44.8
			구	(310)	67.1	32.9	90.0	10.0	57.7	42.3
		특별지방행정기관		(226)	70.4	29.6	90.7	9.3	84.5	15.5
	공공기관		(27)	92.6	7.4	96.3	3.7	70.4	29.6	
	기타		(1)	100.0	0.0	100.0	0.0	100.0	0.0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b).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 보장기관 내의 부정수급 전담 조직 여부에 대해 응답자의 19.6%가 보장기관 내에 자체적인 조직이 있다고 응답

○ 보장기관별로 살펴보면 시군구에 비해 다른 보장기관의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지방자치단체의 응답비율은 20% 미만이지만, 특별지방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서 부정수급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47.2%, 53.1%로 전체 평균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부정수급의 관리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사업부서 내에서의 부정수급 관리 강화 또는 별도 조직을 통한 관리 강화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표 4-19〉 부정수급 전담 조직 여부

(단위: 사례수, %)

분류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전체			(3192)	19.6	80.4	
보장기관	지자체 또는 교육청	전체		(2784)	15.5	84.5
		지 자 체	시	(885)	16.9	83.1
			군	(1026)	14.1	85.9
			구	(857)	15.9	84.1
		특별지방행정기관		(373)	47.2	52.8
	공공기관		(32)	53.1	46.9	
	기타		(3)	33.3	66.7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b).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 부정수급 전담조직의 설치형태는 사업부서들이 속한 국·실에 설치했다는 응답이 35.8%로 가장 높았으며, 감사조직에 설치했다는 응답이 27.5%로 제시. 감사조직 외 별도 조직(부서)으로 설치했다는 응답은 17.1%로 가장 낮았음
- 보장기관별로 살펴보면 ‘시군구 또는 교육청’의 경우 감사조직에 설치하는 경우(35.9%)가 ‘사업부서들이 속한 국·실’에 설치(35.2%) 하는 것보다 근소한 차이로 높았으며,
-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사업부서가 속한 조직에, 공공기관은 감사조직에 설치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표 4-20〉 전담조직 설치 형태

(단위: 사례수, %)

분류	구분			사례수	감사조직에 설치	감사조직 외 별도 조직(부서)으로 설치	사업부서들이 속한 국·실에 설치	기타
전체				(626)	27.5	17.1	35.8	19.6
보장기관	지자체 또는 교육청	전체		(432)	35.9	10.2	35.2	18.8
		지 자 체	시	(150)	39.3	11.3	30.7	18.7
			군	(145)	37.9	9.7	36.6	15.9
			구	(136)	30.1	9.6	38.2	22.1
	특별지방행정기관			(176)	6.3	34.7	38.6	20.5
	공공기관			(17)	29.4	11.8	23.5	35.3
	기타			(1)	100.0	0.0	0.0	0.0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b).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 응답자가 담당한 사업이 부정수급 관련 전담조직의 관리 대상으로 포함된 경우는 71.2%로 응답됨
- 자산 및 진단기준별 차이는 크지 않은데, 자산 및 진단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77.6%로 평균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 보장기관별로 살펴보면, 군청은 전담조직에 해당 사업이 포함되었다는 응답이 77.2%로 시청이나 군청에 비해 높았으며, 특별지방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서도 각각 80.1%, 94.1%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남

〈표 4-21〉 전담조직에 해당사업 포함 여부

(단위: 사례수, %)

분류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체			(626)	71.2	28.8	
자산조사	적용		(332)	66.9	33.1	
	미적용		(294)	76.2	23.8	
진단적 기준	적용		(97)	70.1	29.9	
	미적용		(529)	71.5	28.5	
자산 및 진단 기준	자산기준		(292)	66.4	33.6	
	진단기준		(57)	70.2	29.8	
	자산 및 진단기준		(40)	70.0	30.0	
	없음		(237)	77.6	22.4	
보장기관	지자체 또는 교육청	전체		(432)	66.9	33.1
		지 자 체	시	(150)	63.3	36.7
			군	(145)	77.2	22.8
			구	(136)	59.6	40.4
	특별지방행정기관		(176)	80.1	19.9	
	공공기관		(17)	94.1	5.9	
	기타		(1)	0.0	100.0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b).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 □ 전담부서 부서원 수는 평균 6.1명으로 조사됨

- 보장기관별로는 지자체 중 시청과 구청은 전담부서 부서원 수가 각각 5.6명, 5.3명으로 많은 편이었고, 군청은 3.7명으로 적었음
- 공공기관은 부서원 수가 9.4명으로 많았고, 공공기관은 3.1명으로 전체 평균보다 적었음

〈표 4-22〉 전담부서 부서원

(단위: 사례수, 명)

분류	구분			사례수	[평균]
전체				(3192)	6.1
보장기관	지자체 또는 교육청	전체		(2784)	4.8
		지 자 체	시	(885)	5.6
			군	(1026)	3.7
			구	(857)	5.3
		특별지방행정기관		(373)	9.4
	공공기관		(32)	3.1	
	기타		(3)	0.0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b).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 4. 부정수급 관련 관리 현황과 실적

□ 환수결정액, 환수실적과 같은 부정수급 관련 현황에 대한 정기적 관리에 대해 응답자의 50.3%가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응답

〈표 4-23〉 부정수급 관련 현황(환수결정액, 환수실적) 정기적 관리 여부

(단위: %)

분류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자산조사	전체		(3192)	50.3	49.7	
	적용		(2148)	49.7	50.3	
	미적용		(1044)	51.4	48.6	
진단적 기준	적용		(609)	52.1	47.9	
	미적용		(2583)	49.9	50.1	
자산 및 진단 기준	자산기준		(1791)	49.4	50.6	
	진단기준		(252)	53.2	46.8	
	자산 및 진단기준		(357)	51.3	48.7	
	없음		(792)	50.9	49.1	
보장기관	지자체 또는 교육청	전체	(2784)	48.6	51.4	
		지 자 체	시	(885)	47.8	52.2
			군	(1026)	47.5	52.5
			구	(857)	50.8	49.2
	특별지방행정기관		(373)	60.3	39.7	
	공공기관		(32)	78.1	21.9	
	기타		(3)	100.0	0.0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b).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 자산조사 및 진단적 기준의 적용 여부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음
  - 시군구청별로도 뚜렷한 차이가 없었지만, 구청의 응답비율이 시청과 군청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특별지방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서 부정수급 현황을 정기적으로 관리한다는 응답이 각각 60.3%, 78.1%로 전체 평균에 비해 높게 나타남
- 환수결정액, 환수실적과 같은 부정수급 관련 현황에 대한 관리방법은 전산시스템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43.1%로 가장 높았으며,

- 다음으로 전산시스템과 수기관리를 병행한다는 응답이 34.3%였음. 엑셀, 문서 등으로 수기관리를 한다는 응답은 18.7%였음

〈표 4-24〉 부정수급 현황(환수결정액, 환수실적) 관리 방법

(단위: 사례수, %)

분류	구분		사례수	전산시스템	수기관리 (엑셀, 문서 등으로)	전산시스템과 수기관리 병행	기타
자산조사	전체		(3192)	43.1	18.7	34.3	3.9
		적용	(2148)	42.3	19.5	34.0	4.2
		미적용	(1044)	44.8	17.0	34.9	3.3
진단적 기준	적용		(609)	46.0	21.0	30.9	2.1
	미적용		(2583)	42.5	18.1	35.1	4.3
자산 및 진단 기준	자산기준		(1791)	40.8	19.6	34.7	5.0
	진단기준		(252)	40.1	24.2	31.0	4.8
	자산 및 진단기준		(357)	50.1	18.8	30.8	0.3
	없음		(792)	46.3	14.8	36.1	2.8
보장기관	지자체 또는 교육청	전체	(2784)	41.7	20.5	33.9	3.8
		시	(885)	41.6	20.8	33.7	4.0
		군	(1026)	49.8	16.8	29.8	3.6
		구	(857)	32.7	23.8	39.6	4.0
	특별지방행정기관		(373)	53.4	5.1	37.3	4.3
	공공기관		(32)	43.8	18.8	31.3	6.3
	기타		(3)	66.7	0.0	33.3	0.0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b).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 자산조사 및 진단기준별로 살펴보면, 자산 및 진단 기준이 모두 적용된 경우에 서 전산시스템을 활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전산시스템과 수기관리를 병행하는 비중과 합치면 81% 정도였음
- 반면, 진단기준만 적용되는 경우가 전산시스템을 활용하는 비중이 가장 낮았지만, 자산기준만 적용되는 경우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보장기관별로 살펴보면 구청이 전산시스템과 수기관리를 병행한다는 응답이 39.6%로 가장 높게 제시되었으며,
- 특히, 특별지방행정기관과 기타 기관의 전산시스템 활용도가 높았음



- 부정수급을 인지하는 경로는 응답자 평균 13.5건으로 나타났는데, 이중 정기조사로 인지하는 것이 6.0건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정보연계가 4.4건이었음
- 자산조사 및 진단기준별로 살펴보면, 자산기준만 적용되는 경우가 22.9건으로 제시되었으며 이중 정기조사를 통한 확인이 10.4건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정보연계가 7.7건이었음
  - 반면, 진단기준만 적용되는 경우의 총 접수건수는 0.6건, 자산 및 진단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는 1.5건, 둘 다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2.0건이었음
- 보장기관별로는 시청, 구청이 각각 15.5건, 20.6건으로 군청(5건)에 비해 높았음
  - 시청과 구청의 경우 정기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을 인지 및 접수하는 건수가 각각 6.0건, 12.8건으로 군청(1.2건)과 뚜렷한 차이를 보임
  - 공공기관은 총계가 44.8건이었고, 이 중 43.8건이 정기조사를 통해 접수되었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총계가 14.1건이었는데 이중 11.9건이 정보연계를 통해 접수되었음

〈표 4-25〉 부정수급 인지(접수) 경로

(단위: 건)

분류	구분	사례수	총계 (접수건수)	제보_내부	제보_외부	감사	현장점검	정기조사	비정기조사	정보연계	타기관 조사의뢰	기타
자산조사	전체	(3192)	13.5	0.7	0.3	0.1	0.2	6.0	1.1	4.4	0.1	0.6
	적용	(2148)	19.3	0.9	0.4	0.1	0.2	8.8	1.5	6.4	0.1	0.9
	미적용	(1044)	1.6	0.1	0.1	0.0	0.3	0.3	0.2	0.4	0.0	0.1
	적용	(609)	1.2	0.1	0.0	0.0	0.1	0.4	0.2	0.1	0.0	0.1
진단적 기준	미적용	(2583)	16.5	0.8	0.4	0.1	0.2	7.3	1.3	5.4	0.1	0.8
자산 및 진단 기준	자산기준	(1791)	22.9	1.1	0.5	0.2	0.2	10.4	1.7	7.7	0.1	1.0
	진단기준	(252)	0.6	0.1	0.0	0.0	0.0	0.1	0.1	0.2	0.0	0.1
	자산 및 진단기준	(357)	1.5	0.2	0.1	0.0	0.1	0.6	0.3	0.1	0.0	0.1
	없음	(792)	2.0	0.1	0.2	0.0	0.3	0.4	0.3	0.4	0.0	0.1
보장기관	전체	(2784)	13.1	0.7	0.4	0.1	0.2	6.3	1.2	3.5	0.1	0.7
	지자체 또는 교육청	시	(885)	0.9	0.5	0.1	0.3	6.0	1.3	4.6	0.1	1.7
		군	(1026)	0.6	0.2	0.1	0.1	1.2	0.4	2.3	0.0	0.2
		구	(857)	0.7	0.5	0.1	0.3	12.8	2.0	3.9	0.1	0.3
	특별지방행정기관	(373)	14.1	0.4	0.1	0.1	0.2	0.6	0.3	11.9	0.1	0.4
	공공기관	(32)	44.8	0.1	0.3	0.1	0.0	43.8	0.1	0.1	0.3	0.0
	기타	(3)	1.7	0.0	0.0	0.0	0.0	1.7	0.0	0.0	0.0	0.0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b).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 부정수급에 대해 일반법, 개별법, 사업안내 등에 규정된 조치는 환수가 45.1%, 지원중단이 30.9%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음

○ 환수와 지원중단을 제외할 경우 ‘수사 의뢰 및 형사고발’(8.2%), ‘환수를 제외한 금전적 제재’(5.9%) 순으로 응답됨

○ 자산조사 및 진단기준별로 살펴보면, 자산 및 진단 기준이 모두 적용된 경우에서 환수와 지원중단이 각각 50.8%, 33.3%로 가장 높았음

○ 보장기관별로 살펴보면 큰 차이 없이 환수와 지원중단이 높은 비중을 나타냄

〈표 4-26〉 부정수급에 대해 일반법 등에 규정된 조치

(단위: %)

분류	구분		사례수	지원 중단 (지급 중지)	환수	환수를 제외한 금전적 제재	벌금, 징역 등 형벌	명단 공표	수사 의뢰 및 형사고발	기타	없음
전체			(6253)	30.9	45.1	5.9	3.9	1.6	8.2	1.6	2.8
자산조사	적용		(3967)	32.5	47.8	4.1	3.6	0.6	6.6	1.6	3.2
	미적용		(2286)	28.0	40.5	9.0	4.5	3.3	11.1	1.7	2.0
진단적 기준	적용		(1141)	33.7	48.3	5.3	3.0	0.8	6.0	0.9	2.2
	미적용		(5112)	30.3	44.4	6.1	4.1	1.7	8.7	1.8	2.9
자산 및 진단 기준	자산기준		(3288)	32.4	47.1	3.8	3.4	0.5	7.1	1.9	3.7
	진단기준		(462)	34.2	44.6	4.8	1.3	0.4	8.7	1.9	4.1
	자산 및 진단기준		(679)	33.3	50.8	5.6	4.1	1.0	4.1	0.1	0.9
	없음		(1824)	26.4	39.5	10.1	5.3	4.0	11.7	1.6	1.5
보장기관	지자체 또는 교육청	전체	(5354)	30.8	45.7	5.3	4.0	1.8	7.8	1.5	3.1
		시	(1691)	31.7	45.3	4.8	4.3	1.3	7.5	1.7	3.5
		군	(1925)	31.1	47.7	5.0	4.1	2.1	6.6	1.0	2.4
		구	(1699)	29.4	44.2	6.1	3.6	2.0	9.5	1.8	3.4
	특별지방행정기관		(824)	32.6	41.3	8.9	3.3	0.2	10.0	2.7	1.1
	공공기관		(69)	20.3	42.0	17.4	1.4	0.0	15.9	2.9	0.0
	기타		(6)	16.7	50.0	16.7	16.7	0.0	0.0	0.0	0.0

주: 사례 수는 중복응답을 합산한 값임.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b).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 실태조사 대상 사업들의 2019년 1년 동안 발생한 부정수급 수준과 규모를 응답자 기준 평균값과 합계액을 통해 살펴보았음

○ 부정수급 수준과 규모는 앞서 살펴본 기본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환수결정액(또는 환수실적) 중 수급자 또는 행정담당자의 고의로 발생한 부문을 집계하는 방식으로 산출하였음

□ 먼저, 실태조사 대상 사업들의 부정수급 수준을 응답자별 평균을 통해 살펴보면,

○ 환수결정액 기준으로 실태조사 대상 사업들의 부정수급 수준은 약 272만 원임

- 자산 및 진단기준별로 살펴보면, 자산기준만 적용되는 경우와 진단기준만 적용되는 경우가 각각 392만 원, 312만 원으로 평균보다 높았고, 자산 및 진단기준이 모두 적용되는 경우와 자산 및 진단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각각 94만 원, 109만 원으로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보장기관별로 살펴보면 시청과 구청은 군청에 비해 환수결정액 수준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시청과 구청의 부정수급은 각각 152만 원, 364만 원으로 군청(56만 원)에 비해 최소 두 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남

- 특별지방행정기관은 859만 원, 공공기관의 경우 1,364만 원으로 나타남

○ 환수실적 기준으로 대상 사업들의 부정수급 수준은 약 236만 원으로 나타남

- 자산 및 진단기준별로 살펴보면, 자산기준만 적용되는 경우와 진단기준만 적용되는 경우가 부정수급 수준이 상대적으로 큰 것은 환수결정액과 같음

- 보장기관별로 살펴보면 환수결정액과 마찬가지로 시청과 구청은 군청에 비해 환수결정액 수준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시청과 구청의 부정수급은 각각 100만 원, 203만 원으로 군청(30만 원)에 비해 최소 두 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남

- 특별지방행정기관은 1,154만 원, 공공기관의 경우 868만 원으로 나타났는데,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경우 환수결정액 기준 부정수급 수준(859만 원)보다 환수실적 기준 부정수급 수준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음

〈표 4-27〉 실태조사 대상사업의 부정수급 수준 (응답자별 평균)

(단위: 건, 천원)

분류	구분		사례수	환수결정액 기준		환수실적 기준		
				건	금액	건	금액	
전체			(3192)	3.3	2,725	2.3	2,359	
자산조사	적용		(2148)	4.9	3,281	3.3	2,987	
	미적용		(1044)	0.1	1,581	0.1	1,065	
진단적 기준	적용		(609)	0.1	1,347	0.1	787	
	미적용		(2583)	4.1	3,050	2.8	2,729	
자산 및 진단 기준	자산기준		(1791)	5.8	3,916	3.9	3,580	
	진단기준		(252)	0.1	3,122	0.1	1,883	
	자산 및 진단 기준		(357)	0.1	94	0.0	14	
	없음		(792)	0.2	1,090	0.2	805	
보장기관	지자체 또는 교육청	전체		(2784)	3.5	1,817	2.3	1,055
		지 자 체	시	(885)	1.6	1,522	1.7	998
			군	(1026)	0.7	564	0.5	296
			구	(857)	8.8	3,640	5.1	2,032
	특별지방행정기관		(373)	1.0	8,589	0.8	11,564	
	공공기관		(32)	16.8	13,639	16.8	8,677	
	기타		(3)	0.0	0.0	0.0	0.0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b).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 실태조사 대상 사업들의 부정수급 규모를 응답자의 합산금액을 통해 살펴보면,

○ 환수결정액은 기준으로 부정수급 규모는 약 87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결정건수는 10,636건으로 나타남

- 자산 및 진단기준별로 살펴보면, 자산기준만 적용되는 경우 부정수급 규모는 약 70.1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산기준과 진단기준이 모두 적용되지 않은 경우가 약 8.6억 원으로 나타남
- 자산기준만 적용되는 경우 결정건수도 1만 건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자산기준만 적용되는 경우가 부정수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보장기관별로는 지자체 또는 교육청의 부정수급 규모가 약 50.6억 원으로 가장 규모가 크고 그 다음은 특별지방행정기관(32억 원)인 것으로 나타남
- 시청과 구청의 부정수급은 각각 13.5억 원, 31.2억 원으로 군청(5.8억

원)에 비해 최소 두 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남

○ 환수실적액 기준 부정수급 규모는 약 75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적건수는 7,209건 인 것으로 나타남

- 자산 및 진단기준별로 살펴보면, 환수실적 기준 역시 환수결정액과 마찬가지로 자산기준만 적용한 경우에 그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자산기준과 진단기준이 모두 적용되지 않은 경우로 나타남
- 보장기관별로는 환수결정액 기준과 달리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부정수급 규모(43.1억 원)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지자체 또는 교육청(29.4억 원)인 것으로 나타남

〈표 4-28〉 실태조사 대상사업의 부정수급 규모 (합계)

(단위: 건, 백만원)

분류	구분		사례수	환수결정액 기준		환수실적 기준		
				건	금액	건	금액	
전체			(3192)	10,636	8,697.8	7,209	7,528.5	
자산조사	적용		(2148)	10,488	7,047.6	7,067	6,416.8	
	미적용		(1044)	148	1,650.2	142	1,111.8	
진단적 기준	적용		(609)	42	820.3	35	479.4	
	미적용		(2583)	10,594	7,877.4	7,174	7,049.1	
자산 및 진단 기준	자산기준		(1791)	10,469	7,014.0	7,051	6,411.8	
	진단기준		(252)	23	786.7	19	474.4	
	자산및 진단기준		(357)	19	33.6	16	5.0	
	없음		(792)	125	863.4	123	637.3	
보장기관	지자체 또는 교육청	전체		(2784)	9,713	5,057.6	6,362	2,937.4
		지 자 체	시	(885)	1,426	1,347.1	1,474	882.8
			군	(1026)	740	578.7	547	303.3
			구	(857)	7,537	3,119.8	4,330	1,741.2
	특별지방행정기관		(373)	386	3,203.7	310	4,313.4	
	공공기관		(32)	537	436.5	537	277.7	
	기타		(3)	0	0.0	0	0.0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b).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 아래 표는 부정수급 관련 금전적 행정처분의 평균값을 제시하고 있음

- 지급정지 건수는 0.9건이었고, 과태료와 과징금은 각각 36.8만 원, 24만 원이었고, 기타 금전적 처분은 218.5만 원이었음
- 자산조사 및 진단기준별로 살펴보면, 자산기준만 적용되는 사업의 경우는 과태료가 주로 부과되었고, 진단적 구분만 적용되는 사업의 경우는 과징금과 기타 금전적 처분이 주로 부과되었음
- 보장기관별로 살펴보면 군청과 구청의 경우, 기타 금전적 처분이 주로 부과되었고, 시청은 과태료가 주로 부과됨. 또한 특별행정기관은 과태료가 주로 부과되었고, 공공기관은 과징금이 주로 부과됨

〈표 4-29〉 실태조사 대상사업의 행정처분 현황 (응답자별 평균)

(단위: 건, 천원)

분류	구분		사례수	비금전적		금전적						
				지급정지	명단공표	과태료		과징금		기타		
				건	건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전체			(3192)	0.9	0.0	0.2	368.1	1.9	240.6	0.3	2,185.4	
자산조사	적용		(2148)	1.2	0.0	0.0	450.7	0.1	82.5	0.1	2,367.3	
	미적용		(1044)	0.2	0.1	0.6	198.3	5.8	565.8	0.6	1,811.1	
진단적 기준	적용		(609)	0.2	0.0	0.0	0.0	0.0	813.5	0.0	1,772.2	
	미적용		(2583)	1.1	0.1	0.2	454.9	2.4	105.5	0.3	2,282.8	
자산 및 진단 기준	자산기준		(1791)	1.5	0.0	0.0	540.5	0.1	99.0	0.1	2,839.2	
	진단기준		(252)	0.3	0.0	0.0	0.0	0.0	1,965.9	0.0	4,282.9	
	자산 및 진단기준		(357)	0.1	0.0	0.0	0.0	0.0	0.0	0.0	0.0	
	없음		(792)	0.1	0.1	0.8	261.4	7.6	120.3	0.8	1,024.6	
보장기관	지자체 또는 교육청	지 자 체	전체	(2784)	0.9	0.0	0.0	74.1	0.1	97.7	0.1	1,514.3
			시	(885)	0.7	0.1	0.0	214.0	0.0	11.3	0.1	39.1
			군	(1026)	0.7	0.0	0.0	0.0	0.0	12.3	0.0	3,287.5
			구	(857)	1.5	0.0	0.0	19.8	0.2	291.0	0.0	943.3
	특별지방행정기관		(373)	0.8	0.0	1.6	2,596.8	16.1	1.6	1.9	4,505.6	
	공공기관		(32)	0.1	0.0	0.0	0.0	0.1	15,481.3	0.1	33,728.1	
	기타		(3)	0.0	0.0	0.0	0.0	0.0	0.0	0.0	0.0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b).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 아래 표는 부정수급 관련 금전적 행정처분의 합계를 제시하고 있음

- 지급정지 건수는 2,838건이었고, 명단 공표건수는 135건임. 과태료와 과징금은 각각 1,175백만 원, 768백만 원이었고, 기타 금전적 처분은 6,976백만 원임
- 자산조사 및 진단기준별로 살펴보면, 자산기준만 적용되는 사업의 경우는 과태료가 주로 부과되었고, 진단적 구분만 적용되는 사업의 경우는 과징금과 기타 금전적 처분이 주로 부과되었음
- 보장기관별로 살펴보면 앞서 살펴본 평균에 대한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임
  - 군청과 구청의 경우, 기타 금전적 처분이 주로 부과되었고, 시청은 과태료가 주로 부과되었음. 또한, 특별행정기관은 과태료가 주로 부과되었고, 공공기관은 과징금이 주로 부과됨

〈표 4-30〉 실태조사 대상사업의 행정처분 현황 (합계)

(단위: 건, 백만원)

분류	구분		사례수	비금전적		금전적						
				지급정지	명단공표	과태료		과징금		기타		
				건	건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전체			(3192)	2,838	135	629	1,175.0	6,187	768.0	848	6,975.8	
자산조사	적용		(2148)	2,645	37	20	968.0	174	177.3	221	5,085.0	
	미적용		(1044)	193	98	609	207.0	6,013	590.7	627	1,890.8	
진단적 기준	적용		(609)	117	0	0	0.0	2	495.4	2	1,079.3	
	미적용		(2583)	2,721	135	629	1,175.0	6,185	272.6	846	5,896.5	
자산 및 진단 기준	자산기준		(1791)	2,607	37	20	968.0	174	177.3	221	5,085.0	
	진단기준		(252)	79	0	0	0.0	2	495.4	2	1,079.3	
	자산 및 진단기준		(357)	38	0	0	0.0	0	0.0	0	0.0	
	없음		(792)	114	98	609	207.0	6,011	95.3	625	811.5	
보장기관	지자체 또는 교육청	지 자 체	전체	(2784)	2,536	132	21	206.4	183	272.0	148	4,215.9
			시	(885)	596	82	14	189.4	4	10.0	101	34.6
			군	(1026)	685	19	1	0.0	3	12.6	23	3,372.9
			구	(857)	1,251	31	6	17.0	176	249.4	24	808.4
	특별지방행정기관		(373)	298	3	608	968.6	6,002	0.6	698	1,680.6	
	공공기관		(32)	4	0	0	0.0	2	495.4	2	1,079.3	
	기타		(3)	0	0	0	0.0	0	0.0	0	0.0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b).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 아래 표는 부정수급에 대한 조치로 수사의뢰 및 형사고발의 합계를 제시하고 있음

- 전체 수사의뢰 건수는 82건이었고, 형사고발 건수는 48건임
- 자산 및 진단기준별로 살펴보면, 자산기준만 적용되는 경우가 48건, 자산 및 진단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32건이었음
- 보장기관별로는 구청이 48건으로 가장 건수가 많았고, 다음으로 시청으로 20건이었음

〈표 4-31〉 실태조사 대상사업의 수사의뢰 및 형사고발 현황 (합계)

(단위: 사례수, 건)

분류	구분			사례수	수사의뢰_건수	형사고발_건수
전체				(3192)	82	48
자산조사	적용			(2148)	48	18
	미적용			(1044)	34	30
진단적 기준	적용			(609)	2	5
	미적용			(2583)	80	43
자산 및 진단 기준	자산기준			(1791)	48	18
	진단기준			(252)	2	5
	자산및 진단기준			(357)	0	0
	없음			(792)	32	25
보장기관	지자체 또는 교육청	전체		(2784)	76	34
		지 자 체	시	(885)	20	13
			군	(1026)	8	4
			구	(857)	48	14
	특별지방행정기관			(373)	5	8
	공공기관			(32)	1	6
	기타			(3)	0	0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b).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 아래 표는 환수결정 이후 원활한 환수가 이뤄지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음

- 전체응답의 52.4%는 원활한 환수가 이뤄지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 자산 및 진단 기준별로 살펴보면, 자산 및 진단 기준이 없는 경우가 71.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진단기준만 적용되는 경우가 55.6%였음
- 보장기관별로는 군청이 57.7%가 원활한 환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하였

고, 시청과 구청은 다소 낮았음. 특별지방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은 각각 53.4%, 71.9%가 원활한 환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

〈표 4-32〉 환수결정 이후 원활한 환수 여부

(단위: 사례수, %)

분류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체				(3192)	52.4	47.6
자산조사	적용			(2148)	44.9	55.1
	미적용			(1044)	67.8	32.2
진단적 기준	적용			(609)	53.2	46.8
	미적용			(2583)	52.2	47.8
자산 및 진단 기준	자산기준			(1791)	43.6	56.4
	진단기준			(252)	55.6	44.4
	자산 및 진단기준			(357)	51.5	48.5
	없음			(792)	71.7	28.3
보장기관	지자체 또는 교육청	전체		(2784)	52.0	48.0
		지 자 체	시	(885)	49.3	50.7
			군	(1026)	57.7	42.3
			구	(857)	48.4	51.6
	특별지방행정기관			(373)	53.4	46.6
	공공기관			(32)	71.9	28.1
	기타			(3)	100.0	0.0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b).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 아래 표는 해당사업의 환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업 담당자들이 꼽은 환수과정이 어려운 사유를 보여줌

〈표 4-33〉 환수과정에서 어려운 겪는 이유

(단위: %)

분류	구분	사례수	환수 대상자의 항의 등 민원대응	환수 대상자 소재 불분명	환수와 관련된 강제력 부족	환수 대상자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업무과중 또는 인력부족	환수방법의 한계	서류상 무재산 등 대상자의 재산은닉	경제적 취약성 등 실제로 환수금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	기타
자산조사	전체		(2752)	6.4	20.8	1.3	12.7	8.5	1.6	15.3	3.2
	적용	적용	(2156)	5.8	21.4	0.6	12.6	8.4	1.0	16.7	2.9
		미적용	(596)	8.6	18.6	3.9	13.3	9.1	3.9	10.6	4.2
		적용	(518)	32.8	6.2	20.8	15.1	6.9	2.7	13.7	1.2
진단적 기준	미적용		(2234)	29.5	6.4	20.8	12.2	8.9	1.3	15.7	3.6
	자산기준	자산기준	(1835)	30.1	5.7	21.1	11.9	8.7	1.0	17.4	3.4
		진단기준	(197)	30.5	6.1	17.3	12.7	7.1	5.6	16.2	3.0
		자산 및 진단기준	(321)	34.3	6.2	23.1	16.5	6.9	0.9	12.1	0.0
보장기관	없음		(399)	26.8	9.8	19.3	13.5	10.0	3.0	7.8	4.8
	지자체 또는 교육청	전체	(2415)	30.3	6.3	21.0	13.1	8.7	1.1	14.9	3.4
		시	(802)	31.5	5.9	18.7	14.5	8.4	1.2	15.7	3.5
		군	(777)	32.2	7.1	21.0	9.5	9.8	1.4	13.8	3.6
		구	(814)	27.4	5.8	23.1	15.5	8.0	0.7	15.2	2.9
	특별지방행정기관		(320)	30.3	6.9	20.6	10.6	6.9	4.4	17.2	1.9
	공공기관		(17)	5.9	5.9	5.9	0.0	11.8	17.6	35.3	0.0
	기타		(0)	0.0	0.0	0.0	0.0	0.0	0.0	0.0	0.0

주: 사례 수는 중복응답을 합산한 값임.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b).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 전체적으로 ‘환수 대상자의 항의 등 민원대응’을 응답한 비율(30.2%)이 가장 높았고 ‘환수와 관련된 강제력 부족’의 응답비율(20.8%)이 두 번째로, ‘업무과중 또는 인력부족’(12.7%)의 응답비율이 네 번째로 높게 나타남
  - 이러한 어려움들은 사업담당자인 응답자들이 해당 급여의 환수업무 및 이와 관련된 부정수급 확인 및 적발 관련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해당 사업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업담당자들이 환수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업담당자들의 업무과중과 부정수급 관련 민원 처리 및 권한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처리 과정의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
    - 사업담당자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해 부정수급 관련 조사 및 적발 등 부정수급 관련 업무를 전담 또는 분담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 등 전담인력 배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

## 5.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활동

- 대상자의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사업에 대한 소개와 함께 해당 급여에 대한 부정수급 관련 주의사항 등의 안내가 이뤄진다면, 정보부족으로 인한 부정수급의 발생을 예방하고 대상자의 부정수급 관련 경각심을 제고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음
- 해당사업 응답자의 초기상담 담당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응답자의 67.9%는 급여제공 시 초기상담을 담당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 자산 및 진단기준별로 살펴보면, 진단기준만 적용되는 경우가 83.7%로 초기상담을 담당하는 비중이 높았고, 다음으로 자산 및 진단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71.1%였음
- 보장기관별로는 군청의 67.1%가 초기상담을 담당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특별지방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은 각각 90.1%, 96.9%가 초기상담을 담당하고 있다고 응답

〈표 4-34〉 보장기관의 해당사업 초기상담 담당여부

(단위: %)

분류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자산조사	전체			(3192)	67.9	32.1
	적용			(2148)	64.9	35.1
	미적용			(1044)	74.1	25.9
진단적 기준	적용			(609)	65.8	34.2
	미적용			(2583)	68.4	31.6
자산 및 진단 기준	자산기준			(1791)	67.2	32.8
	진단기준			(252)	83.7	16.3
	자산 및 진단기준			(357)	53.2	46.8
	없음			(792)	71.1	28.9
보장기관	지자체 또는 교육청	전체		(2784)	64.6	35.4
		지 자 체	시	(885)	61.1	38.9
			군	(1026)	67.1	32.9
			구	(857)	65.9	34.1
	특별지방행정기관			(373)	90.1	9.9
	공공기관			(32)	96.9	3.1
	기타			(3)	66.7	33.3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b).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 해당사업 담당자가 초기상담 시 대상자에게 부정수급 관련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살펴보면,

- 응답자의 93.6%는 급여제공시 부정수급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 자산 및 진단기준별로 살펴보면, 진단기준만 적용되는 경우가 96.7%로 초기상담 시 부정수급 주의사항을 안내한다는 응답 비중이 높았고, 다음으로 자산 및 진단기준이 모두 적용되는 경우가 96.3%로 높은 비중을 제시
- 보장기관별로는 군청의 94.3%가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특별지방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은 각각 93.2%, 96.8%가 초기상담 시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고 응답

〈표 4-35〉 보장기관의 초기상담 시 부정수급 관련 주의사항 안내 여부

(단위: %)

분류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자산조사	전체			(2167)	93.6	6.4
	적용			(1393)	92.7	7.3
	미적용			(774)	95.1	4.9
진단적 기준	적용			(401)	96.5	3.5
	미적용			(1766)	92.9	7.1
자산 및 진단 기준	자산기준			(1203)	92.2	7.8
	진단기준			(211)	96.7	3.3
	자산 및 진단기준			(190)	96.3	3.7
	없음			(563)	94.5	5.5
보장기관	지자체 또는 교육청	지 자 체	전체	(1798)	93.6	6.4
			시	(541)	93.0	7.0
			군	(688)	94.3	5.7
			구	(565)	93.3	6.7
	특별지방행정기관			(336)	93.2	6.8
	공공기관			(31)	96.8	3.2
	기타			(2)	100.0	0.0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b).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 아래 표는 해당 기관에서 초기상담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사업의 초기상담 기관을 조사하였음

- 응답자의 64.5%는 초기상담 기관이 읍면동이라고 응답하였고, 16.3%는 시군구청이라고 응답함
- 자산 및 진단기준별로 살펴보면, 자산 및 진단기준이 모두 적용되는 사업의 89.1%의 초기상담 기관이 읍면으로 나타남
- 보장기관별로는 지자체 또는 교육청을 보장기관으로 하는 사업의 66.8%가 초기상담을 읍면동에서 담당하고 있었으며 보장기관이 특별지방행정기관인 사업의 30.0%와 25.0%가 초기상담을 고용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특별지방행정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었음

〈표 4-36〉 보장기관 외 해당사업 초기상담 기관 : 보장기관이 초기상담을 담당하지 않는 경우

(단위: %)

분류	구분		사례수	특별 지방 행정 기관	시군 구청	읍면동	공공 기관	고용 센터, 고용 복지 플러스 센터 등	지방 교육 행정 기관	기타	담당 기관 없음	
전체			(1150)	1.2	16.3	64.5	0.8	2.8	0.3	6.0	8.1	
자산조사	적용		(860)	0.6	12.3	74.7	0.7	2.8	0.5	4.9	3.6	
	미적용		(290)	3.1	27.9	34.5	1.0	2.8	0.0	9.3	21.4	
진단적 기준	적용		(234)	2.1	11.1	79.1	0.0	0.0	0.0	3.0	4.7	
	미적용		(916)	1.0	17.6	60.8	1.0	3.5	0.4	6.8	9.0	
자산 및 진단 기준	자산기준		(676)	0.7	13.0	70.7	0.9	3.6	0.6	6.1	4.4	
	진단기준		(50)	10.0	16.0	42.0	0.0	0.0	0.0	12.0	20.0	
	자산 및 진단기준		(184)	0.0	9.8	89.1	0.0	0.0	0.0	0.5	0.5	
	없음		(240)	1.7	30.4	32.9	1.3	3.3	0.0	8.8	21.7	
보장기관	지자체 또는 교육청	전체		(1108)	0.3	16.8	66.8	0.6	1.8	0.4	5.8	7.6
		지 자 체	시	(382)	0.5	12.8	69.1	0.8	3.1	0.0	7.1	6.5
			군	(378)	0.3	18.5	65.1	0.8	0.8	0.3	4.8	9.5
			구	(327)	0.0	18.3	67.3	0.3	1.5	0.0	5.5	7.0
	특별지방행정기관		(40)	25.0	2.5	5.0	5.0	30.0	0.0	10.0	22.5	
	공공기관		(1)	0.0	0.0	0.0	0.0	0.0	0.0	100.0	0.0	
	기타		(1)	100.0	0.0	0.0	0.0	0.0	0.0	0.0	0.0	

주: 사례 수는 중복응답을 합산한 값임.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b).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 보장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초기상담을 담당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초기상담 시 사업대상에게 부정수급 관련 주의사항이 안내되고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 해당 기관에서 초기상담시 부정수급 관련 주의사항이 안내되고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91.1%로 나타남
- 자산 및 진단기준별로 살펴보면, 진단기준만 적용되는 경우가 95.2%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자산 및 진단기준이 모두 적용되는 경우(91.3%)인 것으로 나타남
- 보장기관별로는 군청 응답자의 92.5%, 특별지방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응답자의 93.3%, 93.8%가 해당기관의 초기상담시 주의사항이 안내되고 있다고 응답

〈표 4-37〉 초기상담시 주의사항 안내 여부 : 보장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이 초기상담을 담당하는 경우

(단위: %)

분류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자산조사	전체			(3192)	91.1	8.9
	적용			(2148)	91.0	9.0
	미적용			(1044)	91.3	8.7
진단적 기준	적용			(609)	92.9	7.1
	미적용			(2583)	90.7	9.3
자산 및 진단 기준	자산기준			(1791)	91.0	9.0
	진단기준			(252)	95.2	4.8
	자산 및 진단기준			(357)	91.3	8.7
	없음			(792)	90.0	10.0
보장기관	지자체 또는 교육청	지 자 체	전체	(2784)	90.8	9.2
			시	(885)	89.4	10.6
			군	(1026)	92.5	7.5
			구	(857)	90.4	9.6
	특별지방행정기관			(373)	93.3	6.7
	공공기관			(32)	93.8	6.3
	기타			(3)	100.0	0.0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b).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 초기상담 시 부정수급 관련 주의사항 안내 대상의 범위를 살펴보면,

- 수급자 전부라고 응답한 비중이 79.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0.2%가 수급자 일부에게 안내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 자산 및 진단 기준을 살펴보면, 자산 및 진단기준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70.1%로 수급자 전부에게 안내한다는 비중이 가장 낮았음
- 보장기관별로 살펴보면, 시군구 간의 차이는 크지 않으나 특별지방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은 각각 70.1%, 80%의 응답자가 초기상담 시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고 응답



〈표 4-38〉 초기 상담시 부정수급 관련 주의사항 안내 대상의 범위

(단위: %)

분류	구분		사례수	수급자 전부	부정수급 고위험자	수급자 일부	기타	
	전체		(2908)	79.5	6.4	10.2	5.5	
자산조사	적용		(1955)	82.5	6.1	9.6	3.2	
	미적용		(953)	73.2	7.0	11.4	10.2	
진단적 기준	적용		(566)	82.7	6.9	10.1	2.3	
	미적용		(2342)	78.7	6.3	10.2	6.2	
자산 및 진단 기준	자산기준		(1629)	82.4	6.2	9.5	3.4	
	진단기준		(240)	82.5	8.3	9.6	2.5	
	자산 및 진단기준		(326)	82.8	5.8	10.4	2.1	
	없음		(713)	70.1	6.6	12.1	12.8	
보장기관	지자체 또는 교육청	지 자 체	전체	(2527)	80.7	5.8	9.6	5.2
			시	(791)	80.2	6.8	9.5	4.8
			군	(949)	81.8	5.1	10.1	4.3
			구	(775)	80.3	5.7	8.9	6.7
	특별지방행정기관		(348)	70.1	10.6	15.5	7.2	
	공공기관		(30)	80.0	10.0	3.3	6.7	
	기타		(3)	100.0	0.0	0.0	0.0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b).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 수급자의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조사 실시 여부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 응답자의 81.7%는 급여제공 시 수급자의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 자산 및 진단기준별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자산 및 진단기준이 모두 적용되는 경우가 82.6%로 다소 높았음
  - 보장기관별로는 군청의 83.7%가 수급자 자격 및 적정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특별지방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은 각각 81.8%, 90.6%가 적정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

〈표 4-39〉 수급자격 및 급여 적정성 조사 실시 여부

(단위: 사례수, %)

분류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자산조사	전체		(3192)	81.7	18.3
	적용	미적용	(2148)	81.7	18.3
		미적용	(1044)	81.8	18.2
진단적 기준	적용		(609)	82.1	17.9
	미적용		(2583)	81.6	18.4
자산 및 진단 기준	자산기준		(1791)	81.5	18.5
	진단기준		(252)	81.3	18.7
	자산 및 진단기준		(357)	82.6	17.4
	없음		(792)	81.9	18.1
보장기관	지자체 또는 교육청	전체	(2784)	81.6	18.4
		지자체	(885)	81.5	18.5
		군	(1026)	83.7	16.3
		구	(857)	79.8	20.2
	특별지방행정기관		(373)	81.8	18.2
	공공기관		(32)	90.6	9.4
	기타		(3)	100.0	0.0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b).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 수급자의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조사 시 대상 범위를 살펴보면,

- 조사의 대상범위가 해당 사업의 수급자 전부라고 응답한 비중이 77.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수급자 일부를 대상(12.9%)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 부정수급 고위험자로 응답한 비율은 9%로 나타나, 수급자 자격 및 급여 적정성 조사의 경우 특정 위험집단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지기 보다는 급여 대상 전반적으로 수행되는 것을 알 수 있음
- 자산 및 진단 기준별로 살펴보면, 진단기준만 적용가 경우가 수급자 전부에게 안내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0%로 다른 기준들보다 더 높게 나타남
- 보장기관별로 살펴보면, 특별지방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은 각각 71.1%, 72.4%가 수급자 전부에게 안내한다고 응답하여, 지자체 또는 교육청 보다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4-40〉 수급자격 및 급여 적정성 조사의 대상 범위

(단위: 사례수, %)

분류	구분		사례수	수급자 전부	부정수급 고위험자	수급자 일부	기타	
	전체		(2608)	77.0	9.0	12.9	3.8	
자산조사	적용		(1754)	78.6	9.2	12.3	2.6	
	미적용		(854)	73.7	8.5	14.2	6.3	
진단적 기준	적용		(500)	80.2	10.0	10.2	2.0	
	미적용		(2108)	76.2	8.8	13.5	4.2	
자산 및 진단 기준	자산기준		(1459)	78.3	9.1	12.6	2.6	
	진단기준		(205)	81.0	10.2	9.8	1.5	
	자산 및 진단기준		(295)	79.7	9.8	10.5	2.4	
	없음		(649)	71.3	8.0	15.6	7.9	
보장기관	지자체 또는 교육청	지 자 체	전체	(2271)	77.8	8.3	12.5	3.8
			시	(721)	76.3	9.0	14.1	3.5
			군	(859)	79.2	7.3	12.2	2.9
			구	(684)	77.5	8.9	11.3	5.3
	특별지방행정기관		(305)	71.1	13.4	16.4	3.3	
	공공기관		(29)	72.4	17.2	6.9	6.9	
	기타		(3)	100.0	0.0	0.0	0.0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b).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 수급자의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인조사 시 대상 비율을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 조사 대상 비율은 평균 61.5%으로 응답됨
- 자산 및 진단 기준별로 살펴보면, 자산기준 만 적용하는 경우가 62.1%로 가장 높았음
- 보장기관별로 살펴보면, 지자체간 차이는 크지 않으나 시청이 58.2%로 가장 낮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은 각각 58.9%, 70.1%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응답

〈표 4-41〉 수급자격 및 급여 적정성 확인조사 대상 비율

(단위: 사례수, %)

분류	구분			사례수	평균
자산조사	전체			(3192)	61.5
	적용			(2148)	61.9
	미적용			(1044)	60.9
진단적 기준	적용			(609)	60.6
	미적용			(2583)	61.8
자산 및 진단 기준	자산기준			(1791)	62.1
	진단기준			(252)	60.6
	자산 및 진단기준			(357)	60.5
	없음			(792)	60.9
보장기관	지자체 또는 교육청	전체		(2784)	61.7
		지 자 체	시	(885)	58.2
			군	(1026)	63.3
			구	(857)	63.6
	특별지방행정기관			(373)	58.9
	공공기관			(32)	70.1
	기타			(3)	100.0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b).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 6.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교육

□ 2019년 1년 동안 응답자의 부정수급 교육 참석 여부 현황을 살펴보면,

- 응답자의 18%는 부정수급 교육에 참석했다고 응답하였는데, 공무원의 응답비율(17.7%) 보다 비공무원의 응답비율(31.8)이 더 높게 나타남
- 응답자의 개인특성을 살펴보면, 정규직 민간인력이 40.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무기)계약직 공무원이 22.0%로 많았음
- 보장기관별로는 군청이 20.8%로 지자체 중에서 부정수급 교육 참석 비중이 가장 높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은 각각 25.5%, 40.6%의 응답자가 부정수급 교육에 참석했다고 응답

〈표 4-42〉 부정수급 교육 참석 여부 (2019년 기준)

(단위: 사례수, %)

분류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체			(3192)	18.0	82.0
개인특성: 고용상태	정규직 공무원			(3088)	17.7	82.3
	(무기)계약직 공무원			(41)	22.0	78.0
	정규직 민간인력			(47)	40.4	59.6
	계약직 민간인력			(16)	6.3	93.8
개인특성: 공무원 여부	공무원			(3129)	17.7	82.3
	공무원 아님			(63)	31.8	68.3
개인특성: 근무경력 (공무원 대상)	3년 미만			(760)	15.0	85.0
	3~5년 미만			(544)	14.2	85.8
	5~10년 미만			(735)	18.2	81.8
	10~15년 미만			(546)	16.1	83.9
	15년 이상			(544)	26.1	73.9
개인특성: 근무경력 (민간인력 대상)	3년 미만			(34)	26.5	73.5
	3~5년 미만			(7)	14.3	85.7
	5~10년 미만			(11)	45.5	54.6
	10~15년 미만			(1)	100.0	0.0
	15년 이상			(10)	40.0	60.0
보장기관	지자체 또는 교육청	전체		(2784)	16.7	83.3
		지 자 체	시	(885)	14.1	85.9
			군	(1026)	20.8	79.2
			구	(857)	14.7	85.3
	특별지방행정기관			(373)	25.5	74.5
	공공기관			(32)	40.6	59.4
	기타			(3)	33.3	66.7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b).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 □ 사업 담당자의 부정수급 교육 참석 횟수를 조사하였음

- 응답자는 평균 1.4회 부정수급 교육에 참여했다고 응답하였음
- 응답자의 개인특성을 살펴보면, 정규직 민간인력이 2.3회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약직 민간인력이 2회였음
- 보장기관별로는 시청과 구청이 참여 횟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보장기관별로는 구청이 1.6회로 시군구 중에서 횟수가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은 2.4회로 보장기관중 참여 횟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특별지방행정기관은 1.3회로 군청과 더불어 참여 횟수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표 4-43〉 부정수급 교육 참석 횟수

(단위: 사례수, 횟수)

분류	구분			사례수	평균
개인특성: 고용상태	전체			(575)	1.4
	정규직 공무원			(546)	1.4
	(무기)계약직 공무원			(9)	1.4
	정규직 민간인력			(19)	2.3
	계약직 민간인력			(1)	2.0
개인특성: 공무원 여부	공무원			(555)	1.4
	공무원 아님			(20)	2.3
개인특성: 근무경력 (공무원 대상)	3년 미만			(114)	3.6
	3~5년 미만			(77)	1.0
	5~10년 미만			(134)	1.2
	10~15년 미만			(88)	1.0
	15년 이상			(142)	1.5
개인특성: 근무경력 (민간인력 대상)	3년 미만			(9)	3.6
	3~5년 미만			(1)	1.0
	5~10년 미만			(5)	1.2
	10~15년 미만			(1)	1.0
	15년 이상			(4)	1.5
보장기관	지자체 또는 교육청	전체		(466)	1.4
		지 자 체	시	(125)	1.4
			군	(213)	1.3
			구	(126)	1.6
	특별지방행정기관			(95)	1.3
	공공기관			(13)	2.4
	기타			(1)	2.0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b).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 아래 표는 응답자가 참여한 부정수급 교육 주최를 조사한 결과임

- 정부부처가 주최한 경우는 37.5%였고 해당 기관 자체 교육이 36.7%였음. 광역시도는 18.7%로 세 번째로 응답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응답자의 약 56%가 중앙정부와 광역시도에 의해 수행되고 있지만 자체교

육의 비중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보장기관별로 살펴보면, 지자체 또는 교육청 사업의 41.1%가 부정수급 교육 주최를 정부부처라고 응답하였는데 이중 군청의 비율이 가장 높았음
- 특별지방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 자체 교육을 진행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3.8%, 84.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전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중앙 정부부처의 교육을 중심으로, 특별 지방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은 해당 기관 자체교육 중심으로 부정수급 교육이 수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4-44〉 부정수급 교육 주최

(단위: %)

분류	구분		사례수	정부부처	광역시도	특별지방 행정기관	해당 기관 자체 교육	기타
보장기관	전체		(675)	37.5	18.7	4.1	36.7	3.0
	지자체 또는 교육청	전체	(557)	41.1	22.6	2.0	32.5	1.8
		시	(143)	39.2	18.9	2.1	37.1	2.8
		군	(248)	47.2	20.6	2.0	29.8	0.4
		구	(164)	32.9	29.3	1.8	32.9	3.0
	특별지방행정기관		(104)	22.1	0.0	16.3	53.8	7.7
	공공기관		(13)	0.0	0.0	0.0	84.6	15.4
	기타		(1)	100.0	0.0	0.0	0.0	0.0

주: 사례 수는 중복응답을 합산한 값임.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b).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 부정수급 교육 참여자를 대상으로 교육이 부정수급 관리 및 예방에 도움이 되는 정도를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 응답자의 62.8%는 조금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으며, 32.9%는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음
- 지자체별로는 ‘도움이 안됨’으로 응답한 비중이 군청이 4.2%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별지방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은 각각 2.1%, 0% 인 것으로 나타남

〈표 4-45〉 부정수급 관리 및 예방 도움 정도

(단위: %)

분류	구분		사례수	크게 도움이 되었다	조금 도움이 되었다	도움이 안됨
보장기관	전체		(575)	32.9	62.8	4.3
	지자체 또는 교육청	전체	(466)	31.5	63.5	4.9
		시	(125)	34.4	60.0	5.6
		군	(213)	31.9	63.8	4.2
		구	(126)	28.6	66.7	4.8
	특별지방행정기관		(95)	35.8	62.1	2.1
	공공기관		(13)	53.8	46.2	0.0
	기타		(1)	100.0	0.0	0.0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b).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 □ 아래 표는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것을 조사한 결과임

- 응답자의 22.9%는 부정수급은 범죄라는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12.6%는 초기 상담시 부정수급 관련 주의사항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음
- 자산 및 진단 기준별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부정수급은 범죄라는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0%대로 가장 높았음. 보장기관별 응답 역시 유사하게 나타남
- 보장기관 담당자들은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사후적 처벌 또는 제재 강화보다는 부정수급은 범죄라는 인식의 확산과 상담을 통한 부정수급 관련 주의사항 안내 등을 통한 인식전환이 더 필요한 사항이라고 여기고 있음



〈표 4-46〉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것 (중복응답)

(단위: %)

분류	구분	사례수	부정수급은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	초기 상담시 부정수급 관련 주의사항 안내강화	선정 과정의 엄격성 강화	확인조사 강화	부정수급 적발 강화	보다 강력한 환수조치	차별강화	관련 기간 정보공유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 마련	부정수급 관련 인력 확대	관련 규정 정비	신고 포상금 도입 또는 확대	기타
자산조사	전체	(6381)	22.9	12.6	6.1	8.2	5.2	7.6	7.6	4.8	9.2	9.8	4.1	0.8	1.0
	적용	(4294)	22.3	13.5	6.8	9.3	4.4	8.2	7.3	4.5	7.5	10.3	4.3	0.8	0.9
	미적용	(2087)	24.1	11.0	4.8	5.9	6.8	6.6	8.2	5.3	12.6	8.9	3.5	0.9	1.4
	적용	(1218)	23.9	13.7	4.2	11.0	4.7	8.8	7.1	4.1	8.5	9.1	3.2	0.7	1.1
진단적 기준	미적용	(5163)	22.6	12.4	6.6	7.6	5.3	7.4	7.7	4.9	9.4	10.0	4.3	0.9	1.0
	자산기준	(3580)	22.2	13.4	7.3	8.3	4.3	7.9	7.4	5.0	7.6	10.4	4.5	0.9	0.8
	진단기준	(504)	25.6	13.9	3.8	6.3	4.6	7.7	7.5	6.9	10.5	8.1	3.0	0.8	1.2
	자산 및 진단기준	(714)	22.7	13.6	4.5	14.3	4.8	9.5	6.7	2.1	7.1	9.8	3.4	0.6	1.0
보장기관	없음	(1583)	23.6	10.0	5.1	5.8	7.5	6.2	8.5	4.8	13.3	9.1	3.7	0.9	1.5
	지자체 또는 교육청	전체	22.5	12.8	6.3	8.9	4.9	7.5	7.4	4.2	9.2	10.3	4.2	0.7	1.1
		시	21.6	13.3	6.0	8.1	5.3	7.1	7.0	3.8	9.9	11.8	3.9	0.8	1.3
		군	24.2	14.1	7.1	10.2	4.7	7.1	5.7	4.5	9.6	7.9	3.5	0.7	0.7
		구	21.5	10.6	5.8	7.9	4.7	8.3	10.1	4.3	7.9	11.7	5.2	0.7	1.4
	특별지방행정기관		26.0	11.3	5.2	4.2	6.7	8.7	8.3	8.7	9.2	6.4	3.1	1.7	0.4
	공공기관		20.3	15.6	1.6	0.0	7.8	7.8	12.5	7.8	7.8	12.5	3.1	0.0	3.1
	기타		33.3	33.3	0.0	0.0	16.7	0.0	0.0	0.0	0.0	0.0	16.7	0.0	0.0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b).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 제3절 실태조사 심층분석

#### 1. 자산조사 적용사업 : 보장기관이 시군구인 공공부조 제도 중심

##### 가. 시군구의 공공부조 제도 부정수급 관련 현황

- 실태조사 대상 사업 중 시군구가 보장기관인 자산조사 적용 공공부조(성) 제도는 8개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된 생계급여, 주거급여, 해산 및 장제급여, 자활근로(기초 및 차상위), 긴급복지지원과 기초연금과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임
- 실태조사 응답자 3,192명 중 1,458명(45.7%)이 시군구가 보장기관인 공공부조(성) 8개 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시군구별 응답자는 시 459명(31.5%), 군 523명(35.9%), 구 476명(32.6%)임
- 2019년 기준으로, 8개 사업의 예산 집행액은 평균 약 135억(전체 예산은 약 16조 2천억 원), 수급자 수 평균은 5,765명, 누적 참여인원은 20,975명임
-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예산집행액은 평균은 시청 약 144억 원, 구청 약 145억 원, 군청 약 51억 원이며, 수급자 수 평균은 시청 7,083명, 군청은 2,531명, 구청은 8,048명으로 나타나, 시청과 구청의 예산규모와 수급자 수가 군청에 비해 큰 것을 알 수 있음

〈표 4-47〉 보장기관이 시군구인 공공부조제도 현황

(단위: 백만원, 명)

구분	2019년 예산 집행액(국비+지방비)	수급자 수(연도말 기준)	2019년 누적 참여인원
전체 (N=1,458)	11,098 (16,181,308)	5,765	20,975
시 (n=459)	14,398 (6,608,533)	7,083	23,032
군 (n=523)	5,145 (2,690,865)	2,531	6,868
구 (n=476)	14,458 (6,881,910)	8,048	34,506

주: ( ) 안은 전체 합계를 의미.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b).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 부정수급 접수 실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574명으로 전체의 39.4%를 나타냈으며, 시군구별로 부정수급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시청 43.1%, 군청 31.2%, 구청 44.8%로 군청이 낮았음
- 부정수급 접수 건수는 총 28,217건으로, 시청 11,384건, 군청 2,734건, 구청 14,099건이 접수됨
- 부정수급이 접수된 시군구의 평균 접수 건수는 49.2건이었으며, 군청이 16.8건으로 낮았음. 구청이 66.2건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 높았음

〈표 4-48〉 보장기관이 시군구인 공공부조제도 부정수급 접수 현황

(단위: 개, %, 건)

구분	부정수급 접수가 있는 시군구 수	부정수급 접수 시군구 비율	부정수급 접수건수*
전체 (N=1,458)	574	39.4	28,217 (49.2)
시 (n=459)	198	43.1	11,384 (58.5)
군 (n=523)	163	31.2	2,734 (16.8)
구 (n=476)	213	44.8	14,099 (66.2)

주: \* ( ) 안은 부정수급 접수가 된 시군구의 평균값을 나타냄.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b).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 부정수급 관련 주요 조치(환수결정, 행정처분, 수사의뢰, 형사고발 등)에 대한 현황(전체 건수)을 살펴보면,
- 부정수급 환수결정 9,305건, 오류수급 환수결정 27,844건, 지급정지 1,643건 등으로 나타나, 주요 조치 중 오류수급의 환수결정 건수가 가장 많았음
-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는 13건, 수사의뢰 47건, 형사고발은 12건이었음
-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오류수급의 환수결정은 시청이 가장 많았으며 부정수급 환수결정은 구청이 가장 많았음
- 지급정지는 구청이 가장 많았으며, 수사의뢰와 형사고발은 구청이 많았고 군청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남

〈표 4-49〉 보장기관이 시군구인 공공부조제도 부정수급 관련 조치 현황 (전체 건수)

(단위: 건, %)

구분	환수결정		행정처분					수사의뢰	형사고발
	부정수급	오류수급	비금전적_지급정지	비금전적_명단공표	금전적_과태료	금전적_과징금	금전적_기타		
전체 (N=1,458)	9,305	27,844	1,643	36	13	173	123	47	12
시 (n=459)	1,266	14,018	430	2	12	2	100	12	6
군 (n=523)	700	1,877	85	18	0	0	21	3	0
구 (n=476)	7,339	11,949	1,128	16	1	171	2	32	6

주: \* ( ) 안은 전체 시군구 대비 해당 부정수급 조치 실적이 있는 시군구의 비율을 나타냄.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b).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 아래 표들은 환수결정과 환수실적의 유형별 평균을 나타낸 것으로, 환수결정을 보면 오류수급 환수결정 건수가 평균 19.1건이었으며, 부정수급 환수결정 건수는 이보다 적은 6.38건이었음

○ 환수실적을 살펴보면, 오류수급 환수실적은 평균 12.5건, 부정수급 환수실적은 4.21건이었음

- 시군구별로 보면, 전체적으로 군청이 낮고 반면에 구청의 환수결정 및 실적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됨

○ 행정처분은 전반적으로 평균 실적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지급정지가 평균 1.13건으로 많았음

- 지자체별로는 구청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행정처분이 많은 것으로 조사됨

〈표 4-50〉 보장기관이 시군구인 공공부조제도의 환수 현황 (평균)

(단위: 개, 건, 천원)

구분	환수결정_부정수급		환수결정_오류수급		환수실적_부정수급		환수실적_오류수급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전체 (N=1,458)	6.38	2,799.2	19.1	148,231.7	4.21	1,516.3	12.5	51,602.5
시 (n=459)	2.76	1,875.0	30.5	8,844.8	2.97	1,243.8	14.9	9,158.1
군 (n=523)	1.34	935.2	3.59	1,909.2	0.98	399.6	3.40	3,953.5
구 (n=476)	15.4	5,738.5	25.1	443,410.8	8.94	3,006.2	20.1	144,885.0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b).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표 4-51〉 보장기관이 시군구인 공공부조제도의 행정처분 현황 (평균)

(단위: 개, 건, 천원)

구분	지급정지	명단공표	금전적_과태료		금전적_과징금		금전적_기타	
	건	건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전체 (N=1,458)	1.13	0.02	0.01	0.009	0.12	121.6	0.08	2,335.1
시 (n=459)	0.94	0.004	0.03	0.03	0.004	0.004	0.22	75.4
군 (n=523)	0.16	0.03	0	0	0	0	0.04	6,443.7
구 (n=476)	2.37	0.03	0.002	0.002	0.36	372.4	0.004	0.004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b).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 나. 시군구별 부정수급 관련 관리조직 및 운영 특성

- 시군구별 부정수급 관리 특성을 다음 항목을 중심으로 파악함
  - 해당 사업의 부정수급을 감사실 등 감사부서에서 관리하는지의 여부
  - 자체적으로 운영 중(사업부처와 별도)인 부정수급 신고 및 접수 체계 유무
  - 기관의 부정수급 전담조직 설치 여부
  - 부정수급 관리 주기
  - 사업 담당자의 부정수급 교육 참여
- 감사부서 관리
  - 공공부조사업 부정수급을 감사실 등 감사부서에서 관리여부를 보면, 시군구의 35.8%에서 동 부서가 관리하고 있었으며, 55.6%의 시군구는 감사부서에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감사조직이 없는 시군구도 8.6% 수준임
  - 시군구별로는 큰 차이는 없었으나, 군청이 36.5%로 다른 시청이나 구청에 비해 다소 높았음
- 자체 운영 부정수급 신고 및 접수 체계
  - 시군구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부정수급 신고·접수 체계 여부를 분석한 결과,

32.1%의 시군구만 별도의 자체 운영체계가 있다고 응답

- 지자체별로는 시청이 36.6%로 높았으며, 다음으로 구청이 31.3%, 군청이 가장 낮은 28.9%로 조사됨

〈표 4-52〉 보장기관이 시군구인 공공부조제도의 부정수급 관리 현황

(단위: 개, %)

구분	감사부서 관리			자체 운영 부정수급 신고 및 접수 체계		부정수급 전담조직 설치		부정수급 현황 정기적 관리		부정수급 교육 참여	
	관리	관리하지 않음	해당 없음	있음	없음	설치	미설치	정기	비정기	참여	미참여
전체 (N=1,458)	522 (35.8)	810 (55.6)	126 (8.6)	468 (32.1)	990 (67.9)	191 (13.1)	1,267 (86.9)	752 (51.6)	706 (48.4)	242 (16.6)	1,216 (83.4)
시 (n=459)	161 (35.1)	264 (57.5)	34 (7.4)	168 (36.6)	291 (63.4)	67 (14.6)	392 (85.4)	241 (52.5)	218 (47.5)	60 (13.1)	399 (86.9)
군 (n=523)	191 (36.5)	286 (54.7)	46 (8.8)	151 (28.9)	372 (71.1)	66 (12.6)	457 (87.4)	271 (51.8)	252 (48.2)	115 (22.0)	408 (78.0)
구 (n=476)	170 (35.7)	260 (54.6)	46 (9.7)	149 (31.3)	327 (68.7)	58 (12.2)	418 (87.8)	240 (50.4)	236 (49.6)	67 (14.1)	409 (85.9)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b).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 □ 부정수급 전담조직 설치

- 부정수급을 전담하는 조직 설치 여부를 보면, 시군구의 13.1%가 갖추고 있었으며, 86.9%는 전담조직이 없었음
- 시군구에서 시청이 14.6%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군과 구청은 비슷한 수준이었음

#### □ 부정수급 현황 정기적 관리 여부

- 사업의 부정수급 현황(환수결정액, 환수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관리하는지를 보면 시군구의 절반 이상(51.6%)이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응답
- 시군구별로는 역시 큰 차이가 없었지만, 시청이 52.5%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 소폭 높았음

□ 부정수급 교육 참여

- 사업 담당자의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교육(관리, 예방, 조사기법 등) 참여 경향을 분석한 결과, 16.6%로 높은 수준은 아니었음
- 지자체별로는 군청이 22.0%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 높게 나타남

**다. 시군구별 관리 특성에 따른 부정수급 관련 조치 현황**

□ 시군구별 부정수급 관리조직 및 운영 특성에 따라 공공부조제도의 환수 및 지급 정지 실적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분석을 진행

- 부정수급 관리 특성은 감사부서 관리 여부, 자체 운영 부정수급 신고 및 접수 체계, 부정수급 전담조직 설치 여부 및 전담조직 설치 형태, 부정수급 관리 주기 및 관리방법, 사업 담당자의 부정수급 교육 참여 중심으로 분석

□ 감사부서 관리 여부에 따른 부정수급 관련 조치 현황

- 환수 결정은 감사부서 관리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임. 감사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우 부정수급은 적었으며, 반면에 오류수급은 높았음
  - 관리하지 않은 경우에도 결과가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상대적으로 오류수급의 발생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환수실적에서도 감사부서가 관리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오류수급의 발생 규모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환수결정보다는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은 측면은 시군구에서도 유사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음
- 행정처분(지급정지)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어서 감사부서의 관리가 없는 시군의 조치 건수가 높은 반면, 구청은 감사부서에서 관리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남

〈표 4-53〉 감사부서의 해당 사업 관리 여부에 따른 부정수급 관련 조치 현황

(단위: 개, 건, 천 원)

구분	감사부서 관리	빈도	환수결정_부정수급		환수결정_오류수급		환수실적_부정수급		환수실적_오류수급		행정처분_지급정지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전체 (N=1,458)	관리함	522	3.18	2,243	24.4	8,988	2.98	1,309	12.8	9,471	1.36
	관리하지 않음	810	9.12	3,261	17.6	260,674	4.77	1,701	13.4	84,973	1.10
	해당없음	126	2.03	2,133	6.52	2,252	5.67	1,183	5.1	11,627	0.36
시 (n=459)	관리함	161	1.52	1,098	51.4	13,891	1.15	705	17.1	19,461	0.68
	관리하지 않음	264	3.56	2,302	19.9	6,398	4.22	1,669	14.0	3,642	1.21
	해당없음	34	2.41	2,243	14.5	3,949	1.88	491	11.8	3,199	0.03
군 (n=523)	관리함	191	0.26	257	3.30	1,726	0.24	198	2.62	1,354	0.06
	관리하지 않음	286	2.28	1,538	4.10	2,214	1.62	598	4.19	1,726	0.21
	해당없음	46	0	0	1.63	777	0	0	1.74	28,593	0.30
구 (n=476)	관리함	170	8.05	5,558	22.5	12,504	7.79	3,131	20.2	9,128	3.47
	관리하지 않음	260	22.3	6,131	30.3	803,170	8.78	2,948	23.0	259,125	1.95
	해당없음	46	3.80	4,185	5.48	2,474	14.1	2,877	3.61	889	0.65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b).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 □ 자체 운영 부정수급 신고·접수 체계

○ 환수 결정과 실적에 있어 신고·접수체계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간 고의성 여부에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즉, 신고·접수체계가 없는 경우가 신고·접수체계가 있는 경우에 비해 부정수급 부문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양상은 시군구에서도 유사하며, 특히 구청에서 크게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이는 오류수급에서도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남

○ 행정처분(지급정지)은 자체 운영 신고·접수 체계가 없는 시군구의 평균 건수가 높게 나타남. 단, 군청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 군청은 자체 운영 신고·접수 체계가 있는 경우가 지급정지 건수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시청과 군청에 비해 그 수준이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4-54〉 자체 운영 신고·접수 체계 여부에 따른 부정수급 조치 현황

(단위: 개, 건, 천 원)

구분	자체운영 신고/접수 체계	빈도	환수결정_ 부정수급		환수결정_ 오류수급		환수실적_ 부정수급		환수실적_ 오류수급		행정처분_ 지급정지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전체 (N=1,458)	있음	468	1.75	1,351	17.6	14,369	2.07	808	12.8	20,042	0.78
	없음	990	8.57	3,484	19.8	211,512	5.22	1,851	12.3	66,522	1.29
시 (n=459)	있음	168	1.38	1,155	19.0	11,423	2.87	1,034	12.4	6,692	0.21
	없음	291	3.56	2,291	37.2	7,356	3.03	1,365	16.3	10,582	1.35
군 (n=523)	있음	151	0.39	154	4.16	2,337	0.34	107	3.3	1,919	0.27
	없음	372	1.72	1,252	3.36	1,736	1.23	518	3.5	4,779	0.12
구 (n=476)	있음	149	3.56	2,785	29.8	29,885	2.92	1,264	22.8	53,462	1.93
	없음	327	20.8	7,084	23.0	631,837	11.7	3,800	18.9	186,543	2.58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b).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 □ 부정수급 전담조직 설치 및 설치 형태

- 부정수급과 오류수급 모두 부정수급 전담조직이 설치되지 않은 곳의 조치 실적은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됨. 시청과 군청에 비해 구청에서 더욱 그러한 것으로 나타남

〈표 4-55〉 부정수급 전담조직 설치 여부에 따른 부정수급 조치 현황

(단위: 개, 건, 천 원)

구분	부정수급 전담조직	빈도	환수결정_ 부정수급		환수결정_ 오류수급		환수실적_ 부정수급		환수실적_ 오류수급		행정처분_ 지급정지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전체 (N=1,458)	있음	191	4.52	1,674	10.3	4,208	4.23	800	7.87	3,021	0.39
	없음	1,267	6.66	2,969	20.4	169,943	4.20	1,624	13.2	58,926	1.24
시 (n=459)	있음	67	2.10	2,289	15.7	5,123	1.64	890	11.8	3,265	0.34
	없음	392	2.87	1,804	33.1	9,481	3.20	1,304	15.4	10,165	1.04
군 (n=523)	있음	66	0.44	272	2.50	1,987	0.44	173	2.41	1,886	0.15
	없음	457	1.47	1,031	3.75	1,898	1.05	432	3.55	4,252	0.16
구 (n=476)	있음	58	12.0	2,560	12.9	5,678	11.5	1,408	9.53	4,029	0.71
	없음	418	15.9	6,180	26.8	504,149	8.59	3,228	21.6	164,429	2.60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b).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 부정수급 전담조직의 설치형태를 살펴보면, 감사조직과 별도조직을 두고 있는 것 보다는 사업부서에서의 역할이 주요한 것으로 나타남

- 공공부조제도의 특성을 고려하면 일정수준의 제도에 대한 이해와 행정과정에서 관리하는 경우가 효율적이라는 점에서 감사 혹은 별도조직에서 이를 관리하기 보다는 사업부서에서의 환수 등의 조치가 많이 나타나고 있음

〈표 4-56〉 부정수급 전담조직 설치형태에 따른 부정수급 조치 현황

(단위: 개, 건, 천 원)

구분	전담조직 설치형태	빈도	환수결정_ 부정수급		환수결정_ 오류수급		환수실적_ 부정수급		환수실적_ 오류수급		행정처분_ 지급정지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전체 (N=240)	감사조직	34	0.29	112	3.21	3,905	0.41	43	3.00	3,215	0.62
	별도조직	20	0.40	139	23.6	9,923	0.40	135	21.5	7,964	0.20
	사업부서	91	9.24	3,183	6.92	3,081	8.60	1,608	5.34	1,901	0.54
	기타	46	0.11	513	16.4	4,175	0.04	48	10.5	2,942	0
시 (n=83)	감사조직	14	0	0	0.21	71	0	0	0.29	93	0
	별도조직	7	0.57	142	10.0	1,491	0.57	131	8.71	1,079	0
	사업부서	28	4.71	4,599	13.1	7,215	3.71	2,018	10.8	4,063	0.82
	기타	18	0.28	1,310	33.9	7,210	0.11	123	23.6	5,342	0
군 (n=79)	감사조직	10	0	0	5.30	8,622	0	0	5.30	8,622	0
	별도조직	6	0.67	297	3.17	143	0.67	297	2.50	82	0.67
	사업부서	35	0.71	463	1.49	596	0.71	276	1.46	569	0.17
	기타	15	0	0	2.73	1,547	0	0	2.67	1,189	0
구 (n=78)	감사조직	10	1.0	382	5.30	4,555	1.4	145	4.50	2,179	2.1
	별도조직	7	0	0	54.6	26,739	0	0	50.7	21,605	0
	사업부서	28	24.4	5,166	7.54	2,055	23.4	2,864	4.71	1,404	0.71
	기타	13	0	0	8.08	3,006	0	0	1.62	1,643	0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b).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 □ 부정수급 관련 현황 관리의 정기성 및 관리 방법

- 부정수급 관련된 사항을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경우 부정수급 조치실적이 높았으며, 비정기적으로 관리하는 경우 오류수급의 조치실적이 높았음
- 시군구 역시 유사한 양상을 보여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군의 실적이 다소 낮고 시와 구의 전반적 실적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표 4-57〉 부정수급 현황의 정기적 관리 여부에 따른 조치 현황

(단위: 개, 건, 천 원)

구분	정기적 관리 여부	빈도	환수결정_부정수급		환수결정_오류수급		환수실적_부정수급		환수실적_오류수급		행정처분_지급정지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전체 (N=1,458)	정기	752	9.97	4,372	29.6	18,329	6.34	2,403	18.1	38,412	0.95
	비정기	706	2.57	1,124	7.90	286,598	1.93	572	6.46	65,653	1.32
시 (n=459)	정기	241	4.08	2,742	50.0	13,344	4.71	1,872	21.1	14,786	0.66
	비정기	218	1.29	916	9.07	3,871	1.05	550	8.06	2,936	1.24
군 (n=523)	정기	271	2.23	1,596	3.72	2,651	1.58	697	4.00	2,106	0.10
	비정기	252	0.38	225	3.45	1,111	0.33	80	2.77	5,940	0.23
구 (n=476)	정기	240	24.6	9,143	38.4	41,038	13.4	4,862	31.1	103,131	2.19
	비정기	236	6.08	2,276	11.6	852,604	4.45	1,119	8.94	187,347	2.55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b).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 부정수급 관련 현황 관리 방법에 따른 조치 상황을 보면 관리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 전체적으로 전산과 수기를 동시에 활용하는 경우 환수 결정 및 실적 모두에서 발굴 건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행정처분에 대한 조치에서도 동일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음

○ 시군구별로 보면, 군청에서 환수 결정 규모가 전산시스템에서 크게 나타났으며, 나머지에서는 전산과 수기를 활용한 경우가 환수결정 규모가 크게 나타남

○ 전산시스템을 활용해 부정수급을 발굴하거나 관리하는 것도 의미 있지만, 현재 공공부조 부문에서는 전산과 더불어 수기를 통한 관리 및 발굴이 함께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결과도 높은 것으로 조사됨

〈표 4-58〉 부정수급 현황 관리 방법에 따른 조치 현황

(단위: 개, 건, 천 원)

구분	부정수급 관리 방법	빈도	환수결정_부정수급		환수결정_오류수급		환수실적_부정수급		환수실적_오류수급		행정처분_지급정지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전체 (N=1,458)	전산시스템	628	2.19	945	9.99	9,855	1.94	559	8.79	8,399	0.28
	수기관리	250	0.30	477	29.2	14,072	0.25	196	5.68	36,133	0.26
	전산+수기	542	14.5	6,214	26.1	380,797	8.95	3,341	20.6	112,372	2.59
	기타	38	0	0	2.63	608	0	0	2.63	608	0.03

구분	부정수급 관리 방법	빈도	환수결정_ 부정수급		환수결정_ 오류수급		환수실적_ 부정수급		환수실적_ 오류수급		행정처분_ 지급정지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시 (n=459)	전산시스템	197	2.93	1,370	13.1	4,845	2.62	859	11.5	11,809	0.20
	수기관리	81	0.52	916	69.7	1,248	0.46	343	3.15	935	0.06
	전산+수기	166	3.89	3,111	34.9	18,079	4.88	2,252	26.0	10,834	2.31
	기타	15	0	0	0.20	203	0	0	0.20	203	0.07
군 (n=523)	전산시스템	286	0.43	282	3.81	2,333	0.39	158	3.39	1,866	0.17
	수기관리	66	0.02	39	3.40	1,480	0.02	6	3.85	19,892	0.02
	전산+수기	162	3.55	2,505	3.48	1,442	2.46	1,009	3.44	13,65	0.22
	기타	9	0	0	0	0	0	0	0	0	0
구 (n=476)	전산시스템	145	4.67	1,677	18.0	31,497	4.08	942	15.8	16,654	0.59
	수기관리	103	0.31	413	13.9	32,227	0.24	203	8.83	74,219	0.58
	전산+수기	214	31.0	11,429	36.5	949,332	17.0	5,951	29.4	275,167	4.59
	기타	14	0	0	6.93	1,433	0	0	6.93	1,433	0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b).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 □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교육

- 공공부조 사업을 기준으로 부정수급 예방 교육이 부정수급 조치에 일정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환수결정, 실적 등에서 건수를 기준으로 보면, 교육에 참여한 경우보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 발굴 건수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됨. 즉 교육을 통한 예방 효과가 일정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시청은 환수결정에서 오류수급을 제외하고는 교육참여가 미참여에 비해 발굴 건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군청 및 구청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음
- 행정처분(지급정지)은 역시 동일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음. 부정수급 교육 참여가 행정처분(지급정지) 건수를 낮추는데 영향을 주고 있고 있는 것으로 보임

〈표 4-59〉 부정수급 교육 참여에 따른 부정수급 조치 현황

(단위: 개, 건, 천 원)

구분	부정수급 교육참여	빈도	환수결정_ 부정수급		환수결정_ 오류수급		환수실적_ 부정수급		환수실적_ 오류수급		행정처분_ 지급정지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전체 (N=1,458)	참여	242	5.22	3,555	10.5	12,976	4.10	1,765	9.07	29,144	0.13
	미참여	1,216	6.61	2,649	20.8	175,149	4.23	1,467	13.2	56,072	1.32
시 (n=459)	참여	60	4.35	2,397	25.2	11,484	3.38	1,085	22.3	7,639	0.05
	미참여	399	2.52	1,796	31.3	8,448	2.91	1,268	13.8	9,386	1.07
군 (n=523)	참여	115	4.41	3,233	1.47	1,055	2.93	1,210	1.37	656	0.05
	미참여	408	0.47	288	4.19	2,150	0.42	171	3.98	4,883	0.19
구 (n=476)	참여	67	7.39	5,145	12.8	34,773	6.76	3,325	10.4	97,297	0.34
	미참여	409	16.7	5,836	27.1	510,351	9.30	2,954	21.7	152,680	2.70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b).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 라. 소결

- 자산조사를 기준으로 한 공공부조 제도는 저소득 및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마지막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일반조세를 재원으로 저소득 및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목적에 맞게 재원이 배분되고 필요한 대상자에게 지원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공공부조 제도에서 부정수급의 발생은 조세를 부담하고 있는 국민들의 해당 제도에 대한 신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제도의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적극적 부정수급 관리가 이뤄져야 함
- 자산조사형 공공부조제도의 부정수급을 관리 감독하기 위한 인프라 현황을 살펴보면, 별도의 감사부서에서 부정수급을 관리하는 경우는 35.8%, 자체적으로 부정수급 신고 및 접수체계를 가진 경우는 32.1%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음
  - 별도의 전담조직을 둔 경우는 조사대상 시군구의 13.1%에 불과함. 반면에 부정수급을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경우는 51.6%로 절반 이상의 지자체가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음

□ 사업부서 이외의 부정수급 관리 인프라 구축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이었지만, 부정수급에 대한 조치들이 정기적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부정수급에 대한 발굴 혹은 환수 결정과 실적을 보면 별도 조직을 통하기 보다는 사업부서에서 직접 찾아내고 조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자산조사형 공공부조제도는 상대적으로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하므로 별도 조직보다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부정수급을 관리하는 것이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었음
- 하지만 이로 인해 사업부서의 업무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 있는 상황임
- 따라서 부정수급 대응을 전담하는 특사경을 통해 사업부서의 업무부담을 줄이면서 부정수급 관리의 효과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 자산조사형 공공부조제도에 대해서는 부정수급 관리 강화를 위해 사업부서 내에서 부정수급을 발굴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과 인력 등을 충원하고 그것이 용이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업부서와 긴밀한 협조가 가능한 유연한 조직체계 편성이 필요

○ 부정수급 관련 예방교육은 부정수급에 대한 판단과 조치에 있어 긍정적 효과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부정수급에 대한 정기적 조사와 예방교육이 성과가 있다는 점에서 자산조사형 공공부조제도 담당자들의 주기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한편, 정부에서도 차세대 정보시스템 개발을 통해 전산시스템을 보완하고 있는데, 부정수급 발굴 측면에서 실시간 정보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2. 진단적 기준 적용 사업 : 장애인과 보훈대상 중심

### 가. 진단적 기준을 적용한 사업의 특성

□ 진단적 기준의 사업은 크게 ① ‘보상금’, ‘수당’, ‘위로금’, ‘급여’ 등 대상자의 ‘장애’ 및 ‘장해’ 발생으로 인한 추가적 비용의 보전 및 생계보조적 차원에서의 지원

사업과 ② ‘장애인 일자리’ 사업(장애인 대상 및 고용주 대상)으로 구분 할 수 있음

○ 진단적 기준의 적용을 받는 ‘장애’ 및 ‘장해’ 발생으로 인한 추가적 비용의 보전 및 생계보조적 차원에서의 지원 사업은 주로 ‘보훈처’사업이 대다수이며, 이외에 고용노동부의 ‘진폐근로자 보호를 위한 진폐위로금’과 환경부의 ‘석면 피해구제급여’가 있음

○ 진단적 기준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는 ‘장애인 특화형/ 일반형/ 복지 일자리 사업’과 ‘장애인고용장려금’, ‘중증장애인지원고용(훈련수당)’처럼 장애인 당사자 및 고용주에게 제공되는 장려금과 수당이 있음

〈표 4-60〉 진단적 기준 적용 사업

순번	사회보장사업명	소관부처	보장기관	보상적 기준	자산 및 진단 기준	보장기관 구분
1	보상금	국가보훈처	보훈지(방)청	1. 보상적	2. 진단기준	2. 특별지방행정기관
2	고엽제후유의증수당	국가보훈처	보훈지(방)청	1. 보상적	2. 진단기준	2. 특별지방행정기관
3	국가유공자등간호수당	국가보훈처	보훈지(방)청	1. 보상적	2. 진단기준	2. 특별지방행정기관
4	진폐위로금지급 (진폐근로자보호)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1. 보상적	2. 진단기준	3. 공공기관
5	석면피해구제급여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 보상적	2. 진단기준	3. 공공기관
6	110. 장애인 특화형 일자리 제공, 142. 일반형 일자리 지원, 143.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	보건복지부	시군구청	2. 비보상적	2. 진단기준	1. 지자체 또는 교육청
7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비보상적	2. 진단기준	3. 공공기관
8	중증장애인지원고용(훈련수당)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비보상적	2. 진단기준	3. 공공기관
9	장애아동수당	보건복지부	시군구청	2. 비보상적	3. 자산 및 진단기준	1. 지자체 또는 교육청
10	장애수당	보건복지부	시군구청	2. 비보상적	3. 자산 및 진단기준	1. 지자체 또는 교육청

자료: 저자 작성.

#### □ 진단적 기준을 적용한 사업의 특성

○ 진단적 기준을 적용한 사업은 대상자가 ‘장애’, ‘상이’ 및 ‘장해’를 가진 혹은 가지게 된 자로 의료적 진단을 통해 ‘장애’ 및 ‘장해’ 여부에 대한 판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됨

○ 보상적 성격의 사업과 비보상적 성격의 사업의 비중이 각각 50%로 나타났는데,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주로 보상적 기준의 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자체 또는 교육청의 경우 비보상적 기준의 사업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중 '장애아동수당'과 '장애수당'은 '비보상적 사업'인데, 사업 대상자가 '장애'를 가진 자로 의료적 진단을 통해 '장애' '상이' 및 '장해'여부에 대한 진단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자에 한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의 보전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임

□ 실태조사 응답자 3,192명 중 609명(19.1%)이 '진단적 기준' 적용 사업 담당자였음

○ 진단적 기준 적용 사업 담당자 중 '진단기준' 적용 사업의 담당자는 252명(41.4%), 진단+자산('자산 및 진단기준') 적용 사업 담당자는 357명(58.6%)인 것으로 나타남

□ 진단적 기준 사업부서의 구성원 수 평균을 살펴보면, 자산+진단 사업은 23.5명으로 진단기준 사업에 비해 2.3명 많았으며, 부서의 담당 사회보장 사업의 수(평균)은 자산+진단의 경우 34.2개로 진단기준 사업에 비해 8.4개 많았음

○ 해당 사업의 월평균 신청자 수도 자산+진단 사업은 111.5명인데 반해 진단기준 사업의 경우는 95.8명이었음

〈표 4-61〉 진단적 기준 사업 부서의 구성원, 사회보장 사업 수, 월평균 신청자 수

(단위: 명)

분류	구분	사례수	부서의 구성원 수 평균		부서의 담당 사회보장 사업 수 평균	해당사업 담당자 수 평균	해당사업 월평균 신청자수
			관리자 포함	관리자 제외			
진단적 기준	전체	(3192)	23.7	18.8	20.6	2.0	583.6
	적용	(609)	22.6	17.5	30.8	1.2	105.0
	미적용	(2583)	24.0	19.1	18.1	2.2	696.4
자산 및 진단 기준	자산기준	(1791)	24.9	19.8	16.3	2.4	631.9
	진단기준	(252)	21.2	16.3	25.8	1.3	95.8
	자산 및 진단기준	(357)	23.5	18.4	34.2	1.2	111.5
	없음	(792)	22.0	17.4	22.2	1.6	842.4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b).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 진단적 기준을 적용한 사업의 예산 및 수급자의 수는 진단적 기준 미적용 그룹에 비해 사업의 예산규모 및 수급자의 수가 훨씬 적은 것을 알 수 있음
- 진단기준만 적용된 사업의 평균 예산집행액은 63억 4천만 원 수준이며, 수급자 수는 약 1,676명, 누적 참여인원은 약 5,671명임
- 반면, 자산+진단기준 적용 사업의 예산집행액은 9억 5천만 원 수준으로 수급자 수는 약 1,244명, 누적 참여인원은 약 3,073명임
- 진단기준 적용 사업의 규모는 자산기준 적용 사업에 비해서는 적은 규모이지만, 자산+진단 기준 적용 사업에 비해서는 더 큰 규모임을 알 수 있음

〈표 4-62〉 진단적 기준 사업 현황

(단위: 명, 백만원)

분류	구분	사례수	2019년 평균 예산 집행액 (국비+지방비)	수급자 수 평균 (연도말 기준, 명)	2019년 누적 참여인원(명)
진단적 기준	전체	(3192)	7,852.5	3,987.5	14,741.8
	적용	(609)	3,181.6	1,422.3	4,156.7
	미적용	(2583)	8,953.8	4,592.3	17,260.8
자산 및 진단 기준	자산기준	(1791)	10,617.4	5,492.4	20,939.9
	진단기준	(252)	6,341.4	1,675.6	5,671.2
	자산 및 진단기준	(357)	951.2	1,243.6	3,072.5
	없음	(792)	5,191.6	2,556.9	8,907.2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b).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 나. 진단적 기준 적용 사업의 환수 현황

- 진단적 기준 적용 사업의 환수 현황을 살펴보면, 환수결정 및 환수실적에서 ‘부정수급’인 경우보다 ‘오류수급’인 경우에 건수와 금액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진단적 기준 적용 그룹의 환수 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진단적 기준 미적용 그룹과 비교했을 때 환수결정액(평균) 및 합계가 낮음
- ‘자산+진단’ 기준 사업의 경우는 진단 기준만 적용하는 사업에 비해 부정수급 규모는 적으나 오류수급 규모는 더 큰 것으로 나타남

〈표 4-63〉 진단적 기준 사업의 환수결정 및 환수실적 (평균)

(단위: 건, 천원)

분류	구분	사례수	환수결정_부정수급		환수결정_오류수급		환수실적_부정수급		환수실적_오류수급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전체		(3192)	3.3	2,724.9	10.8	7,840.7	2.3	2,358.6	7.6	7,418.1
진단적 기준	적용	(609)	0.1	1,347.0	0.7	4,664.6	0.1	787.2	0.6	11,073.5
	미적용	(2583)	4.1	3,049.7	13.2	8,590.4	2.8	2,729.0	9.3	6,554.9
자산 및 진단 기준	자산기준	(1791)	5.8	3,916.2	18.6	12,037.5	3.9	3,580.0	13.0	9,163.2
	진단기준	(252)	0.1	3,121.9	0.5	1,237.4	0.1	1,882.6	0.4	713.4
	자산 및 진단기준	(357)	0.1	94.2	0.9	7,083.7	0.0	13.9	0.7	18,386.5
	없음	(792)	0.2	1,090.2	1.1	779.9	0.2	804.7	0.9	648.4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b).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표 4-64〉 진단적 기준 사업 부정수급 환수실적 (합계)

(단위: 건, 백만원)

분류	구분	사례수	환수결정 부정수급		환수결정 오류수급		환수실적 부정수급		환수실적 오류수급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전체		(3192)	10,636	8,697.8	34,563	25,003.9	7,209	7,528.5	24,312	23,649.0
진단적 기준	적용	(609)	42	820.3	456	2,840.7	35	479.4	353	6743.8
	미적용	(2583)	10,594	7,877.4	34,107	22,163.2	7,174	7,049.1	23,959	16,905.2
자산 및 진단 기준	자산기준	(1791)	10,469	7,014.0	33,224	21547.1	7,051	6,411.8	23,243	16,392.9
	진단기준	(252)	23	786.7	132	311.8	19	474.4	93	179.8
	자산 및 진단기준	(357)	19	33.6	324	2,528.9	16	5.0	260	6,564.0
	없음	(792)	125	863.4	883	616.1	123	637.3	716	512.3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b).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 진단 기준 및 ‘자산+진단’ 기준 사업의 부정수급의 규모(건수)는 자산 기준 사업에 비해 월등히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진단적 기준’에서 적용하는 의학적 기준때문인 것으로 보임
- 진단적 기준 적용 사업은 부정수급 발생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는데,
  - 이는 복지부, 고용노동부(산재) 등 소관부처의 ‘장애’ 및 ‘장해’ 진단 및 판정 관련 체계 강화 등이 부정수급 발생을 어느 정도 억제한 측면이 있음(예: 국민연금공단에 장애등급 판정 위원회 및 장애정도 심사위원회를 둠)

- 때문에 진단적 기준 적용 사업에서는 ‘부정수급’의 문제 보다는 ‘사각지대’의 이슈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임
- 사업의 특성상 ‘장애’, ‘상이’ 및 ‘장해’로 인한 추가적 비용의 보전 및 생계보조적 차원의 지원 사업의 경우 급여 선정기준이 ‘장애인의 일자리’ 지원 사업보다 상대적으로 까다로와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이 더 작다고 볼 수 있음

#### 다. 진단적 기준 적용 사업의 부정수급 관련 조치 및 운영

##### □ 일반법 등에 규정된 부정수급 관련 조치

- 일반법 등에 규정된 부정수급 관련 조치 비율은 전반적으로 진단기준 및 자산+진단 기준 적용 사업이 자산기준 사업에 비해 높았음
- 규정된 조치 중 ‘지원 중단’은 진단기준 사업에서 비율이 가장 높았고, ‘환수’는 ‘자산+진단’ 사업에서 비율이 가장 높았음
- ‘수사 의뢰 및 형사 고발’의 경우는 진단기준 사업에서 비율이 가장 높았음

〈표 4-65〉 진단적 기준 사업 부정수급에 대해 일반법 등에 규정된 조치

(단위: %)

분류	구분	사례수	지원중단 (지급중지)	환수	환수제외 금전적 제재	벌금, 징역 등 형벌	명단 공표	수사 의뢰 및 형사고발	기타	없음
진단적 기준	전체	(6253)	30.9	45.1	5.9	3.9	1.6	8.2	1.6	2.8
	적용	(1141)	33.7	48.3	5.3	3.0	0.8	6.0	0.9	2.2
	미적용	(5112)	30.3	44.4	6.1	4.1	1.7	8.7	1.8	2.9
자산 및 진단 기준	자산기준	(3288)	32.4	47.1	3.8	3.4	0.5	7.1	1.9	3.7
	진단기준	(462)	34.2	44.6	4.8	1.3	0.4	8.7	1.9	4.1
	자산 및 진단기준	(679)	33.3	50.8	5.6	4.1	1.0	4.1	0.1	0.9
	없음	(1824)	26.4	39.5	10.1	5.3	4.0	11.7	1.6	1.5

주: 사례 수는 중복응답을 합산한 값임.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b).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 부정수급 조치실적 중 ‘행정처분(합계)’ 건수를 보더라도 자산 기준 사업보다 진단기준 사업과 자산+진단 사업의 수가 매우 적음

- 진단기준 사업보다 자산+진단 기준 사업의 행정처분(합계) 건수가 더 적음
- 부정수급 조치에서 ‘수사의뢰 및 형사고발’ 의뢰 건수는 진단적 기준 사업의 경우 자산 기준 사업에 비해 의뢰건수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진단적 기준 적용 사업의 행정 조치는 ‘지급정지’가 주를 이루고 있음

〈표 4-66〉 진단적 기준 사업의 행정처분 (합계)

(단위: 건, 천원)

분류	구분	사례수	지급정지건수	명단공표건수	금전적_과태료		금전적_과징금		금전적_기타	
			건	건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전체	(3192)	2,838	135	629	1,175.0	6,187	768.0	848	6,975.8
진단적 기준	적용	(609)	117	0	0	0.0	2	495.4	2	1,079.3
	미적용	(2583)	2,721	135	629	1,175.0	6,185	272.6	846	5,896.5
자산 및 진단 기준	자산기준	(1791)	2,607	37	20	968.0	174	177.3	221	5,085.0
	진단기준	(252)	79	0	0	0.0	2	495.4	2	1,079.3
	자산 및 진단기준	(357)	38	0	0	0.0	0	0.0	0	0.0
	없음	(792)	114	98	609	207.0	6,011	95.3	625	811.5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b).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 또한 진단기준 사업의 경우 감사부서에서 부정수급을 관리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자산+진단 기준 사업, 자산 기준 순으로 나타났음

〈표 4-67〉 진단적 기준 사업: 감사부서에서 부정수급 관리 여부

(단위: %)

분류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해당 없음
	전체	(3192)	38.8	51.8	9.4
진단적 기준	적용	(609)	39.1	50.9	10.0
	미적용	(2583)	38.7	52.0	9.3
자산 및 진단 기준	자산기준	(1791)	36.3	53.8	9.8
	진단기준	(252)	41.7	47.2	11.1
	자산 및 진단기준	(357)	37.3	53.5	9.2
	없음	(792)	43.9	48.0	8.1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b).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 진단적 기준 적용 사업 담당 공무원의 부정수급 업무 대응 방식

- 진단적 기준 적용 사업 담당 공무원의 부정수급 관리 방법은 진단적 기준 미적용 사업 담당 공무원에 비해 ‘전산시스템’ 활용 비중이 높았음
  - 이는 ‘자산+진단 기준’ 사업에서 ‘전산시스템’ 활용 비중이 높기 때문임
- 자산기준 사업은 ‘전산시스템’ 활용이 높은데 반해 진단기준 사업의 경우에는 여전히 ‘수기관리’와 같은 대응방식의 비율이 높았음

〈표 4-68〉 진단적 기준 사업: 부정수급 현황(환수결정액, 환수실적) 관리 방법

(단위: %)

분류	구분	사례수	전산시스템	수기관리(엑셀, 문서 등으로)	전산시스템과 수기관리 병행	기타
전체		(3192)	43.1	18.7	34.3	3.9
진단적 기준	적용	(609)	46.0	21.0	30.9	2.1
	미적용	(2583)	42.5	18.1	35.1	4.3
자산 및 진단 기준	자산기준	(1791)	40.8	19.6	34.7	5.0
	진단기준	(252)	40.1	24.2	31.0	4.8
	자산 및 진단기준	(357)	50.1	18.8	30.8	0.3
	없음	(792)	46.3	14.8	36.1	2.8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b).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 진단적 기준 적용 사업 담당 공무원의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활동

- 진단기준 적용 사업 담당 공무원의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활동은 ‘초기 상담’이 매우 높았으며, 이는 자산 기준 및 자산+진단 기준에 비해 월등히 높았음

〈표 4-69〉 진단적 기준 사업: 해당사업 초기상담 담당여부

(단위: %)

분류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체		(3192)	67.9	32.1
진단적 기준	적용	(609)	65.8	34.2
	미적용	(2583)	68.4	31.6
자산 및 진단 기준	자산기준	(1791)	67.2	32.8
	진단기준	(252)	83.7	16.3
	자산 및 진단기준	(357)	53.2	46.8
	없음	(792)	71.1	28.9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b).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 ‘초기 상담 시 부정수급 주의사항 안내’ 수행도도 높았음. 이는 자산+진단 기준 사업에 비해서도 약간 높음

〈표 4-70〉 진단적 기준 사업: 초기상담 시 부정수급 주의사항 안내 여부

(단위: %)

분류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진단적 기준	전체	(2167)	93.6	6.4
	적용	(401)	96.5	3.5
	미적용	(1766)	92.9	7.1
자산 및 진단 기준	자산기준	(1203)	92.2	7.8
	진단기준	(211)	96.7	3.3
	자산 및 진단기준	(190)	96.3	3.7
	없음	(563)	94.5	5.5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b).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 이들 ‘초기 상담 기관’은 대부분 ‘읍면동’이었는데, 특히 자산+진단 사업에서의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4-71〉 진단적 기준 사업: 해당사업 초기상담 기관

(단위: %)

분류	구분	사례수	특별 지방 행정 기관	시군 구청	읍면동	공공 기관	고용센터,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등	지방 교육 행정 기관	기타	담당 기관 없음
전체		(1150)	1.2	16.3	64.5	0.8	2.8	0.3	6.0	8.1
진단적 기준	적용	(234)	2.1	11.1	79.1	0.0	0.0	0.0	3.0	4.7
	미적용	(916)	1.0	17.6	60.8	1.0	3.5	0.4	6.8	9.0
자산 및 진단 기준	자산기준	(676)	0.7	13.0	70.7	0.9	3.6	0.6	6.1	4.4
	진단기준	(50)	10.0	16.0	42.0	0.0	0.0	0.0	12.0	20.0
	자산 및 진단기준	(184)	0.0	9.8	89.1	0.0	0.0	0.0	0.5	0.5
	없음	(240)	1.7	30.4	32.9	1.3	3.3	0.0	8.8	21.7

주: 사례 수는 중복응답을 합산한 값임.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b).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 부정수급 교육 주최를 살펴보면, 진단적 기준 사업에서 ‘해당 기관 자체교육’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진단적 기준 미적용 사업에 비해서도 그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진단기준과 자산+진단 사업에서도 해당 응답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다음은 ‘정부부처’가 주된 부정수급 교육주체인 것으로 나타남

〈표 4-72〉 진단적 기준 사업: 부정수급 교육 주체

(단위: %)

분류	구분	사례수	정부부처	광역시도	특별지방행정기관	해당 기관 자체 교육	기타
진단적 기준	전체	(675)	37.5	18.7	4.1	36.7	3.0
	적용	(107)	35.5	15.0	2.8	42.1	4.7
	미적용	(568)	37.9	19.4	4.4	35.7	2.6
자산 및 진단 기준	자산기준	(350)	36.3	17.7	2.0	41.7	2.3
	진단기준	(53)	34.0	11.3	5.7	39.6	9.4
	자산 및 진단기준	(54)	37.0	18.5	0.0	44.4	0.0
	없음	(218)	40.4	22.0	8.3	26.1	3.2

주: 사례 수는 중복응답을 합산한 값임.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b).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 라. 진단적 기준 적용 사업의 부정수급과 복지사각지대

### □ 복지사각지대와 부정수급 이슈

- 부정수급과 복지사각지대의 이슈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 즉,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을 강조할수록 복지신뢰도의 이슈는 증가하게 되고, 부정수급의 이슈도 증대할 수밖에 없음
- 반대로 복지 신뢰도 향상을 위한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 감독의 이슈를 강조할수록 복지사각지대의 이슈는 증대될 수밖에 없음

### □ 진단적 기준 적용 사업: 사각지대 이슈

- 2019년 7월 탈북민 한모(41)씨와 6살 아들 김모군이 숨진지 두달만에 발견: 한씨가 2019년 초 중국국적의 남편과 이혼하면서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으로 생활. 한씨의 아들은 뇌전증을 앓고 있어 유치원에서 아이를 받으려 하지 않아 한씨가 직장을 구할 수 없었음. 이들의 사망 원인은 굶주림으로 추정(임동현, 2019.9.5.)<sup>23)</sup>
- 2019년 8월 관악구 삼성동의 다세대주택에서 50대 장애인이 고독사 후 2주 만에 발견: 당뇨 합병증으로 2016년 한쪽 다리 절단후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임동현, 2019.9.5.)
- 2019년 9월 강서구의 가양동 한 아파트에서 80대 노모와 50대 지체장애인이 피살된 시신으로 발견: 평소 노모와 지체장애인 형을 돌봄 것으로 알려진 동생은 한강에서 시신으로 발견(임동현, 2019.9.5.)<sup>24)</sup>

- ‘방배동 발달장애인 모자 사건(2020.12.17.)<sup>25)</sup>’: 방배동의 한 주택에서 사망한지 5개월이 지난 것으로 추정되는 김모씨(60세, 여)의 시신이 발견,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들은 거리를 전전하며 노숙하다 민간 복지사의 도움으로 어머니의 죽음을 알릴 수 있었음

- 이러한 사례들은 ‘복지서비스’ 이용을 위한 당사자의 신청(신청주의), 그리고 ‘장애’ 등을 신청자가 증명해야 하는 다양한 증빙서류의 요구, 취약 및 위기가구에 대한 지속적인 사례관리 및 모니터링 부재 등의 이슈와 관련됨
  - 진단적 기준 사업의 경우 ‘장애’, ‘상이’ 및 ‘장해’의 증빙, 서비스 신청, 이사 등 거주지역 변화에 따른 관련 정보 반영 등이 주로 신청자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때문에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더라도 이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거나 관련 서류의 미비로 인해, 혹은 담당 공무원의 냉대 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복지사각지대의 이슈가 지속되고 있음
- 정부의 복지시스템은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신청주의’에서 ‘발굴주의’로 바뀌고 있음
  - 그러나 정작 사각지대 발굴을 담당하고 있는 주민 센터 및 구청의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과로, 직무 스트레스 등에 대한 구조적 문제는 여전한
  - 현재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수행하던 기존 업무에 ‘사각지대 발굴’ 등의 사업이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임
  - 사각지대 발굴을 지자체 중심으로 살펴보면, 시군구와 읍면동이 협력·연계를 통해 수행하고 있으나 시군구는 기획 중심의 업무를, 읍면동(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은 상담 및 잠재적인 위기가구 발굴 등 실질적인 사각지대 해소 업무를 담당
- 이는 부정수급 관련 업무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사회복지공무원들에게는 추가로 요구되는 업무임

23) 임동현. (2019.9.5.). 고독사, 살인... 없어지지 않은 ‘장애인 사각지대’. 시사주간, <http://www.sisaweekly.com/news/articleView.html?idxno=21681>

24) 임동현. (2019.9.5.). 고독사, 살인... 없어지지 않은 ‘장애인 사각지대’. 시사주간, <http://www.sisaweekly.com/news/articleView.html?idxno=21681>

25) 강수련, 이상학. (2020.12.17.). ‘방배동 모자’ 발견 복지사 “도움 거절하던 최씨 ‘엄마’ 꺼내자 말문,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152726>



-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부정수급 관련 업무는 그 특성상 읍면동보다는 시군구를 통해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며, 시군구에 부정수급 관련 전담인력(특별사법경찰 등)을 배치하여 담당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고 부정수급 관리의 효과성을 제고시키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

## 마. 소결

### 1) 진단기준만 적용되는 사업에 대한 부정수급 현황 관리 강화

- 진단적 기준 적용여부와 자산조사 기준 적용여부만으로 살펴보면, 진단적 기준 적용 사업의 부정수급 규모 자체는 자산조사 적용 사업에 비해 월등히 적음
- 기준을 좀 더 세분화시켜 자산기준과 진단기준을 동시에 적용한 사업의 경우를 살펴보면, 부정수급 규모가 매우 작게 나타나지만, 진단기준만 적용되는 사업은 자산기준만 적용되는 사업에 비해 부정수급의 규모는 작지만 앞서 비교했던 단순히 진단적 기준과 자산조사 기준으로 구분했을 때보다 부정수급 규모의 차이가 확연히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음
- 즉, 진단기준과 자산기준과 같이 적용되는 사업은 다른 사업에 비해 급여 수급 조건의 엄격성 강화로 부정수급이 적게 나타나는 것이고, 진단기준만 적용되는 경우 엄격성 완화로 부정수급의 규모가 크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진단적 기준 적용 사업 중 진단기준만 적용되는 사업에 대한 관리가 더욱 요구됨
- 이러한 사업들의 부정수급 관리 현황을 살펴보면,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는 비율이 자산기준과 진단기준이 동시에 적용되는 사업 그리고 자산기준만 적용되는 사업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 대신, 수기관리만 하는 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진단적 기준만 적용되는 사업에 대한 ‘전산시스템’의 적용 확대가 필요함을 알 수 있음
  - 이러한 전산시스템의 확대와 보완에 있어 호주와 같이 디지털 기술의 활용을 강화하고 행정 효율성을 고려한 전산시스템의 개발(업무에 따른 오류 등의 감소 포함)이 요구됨

## 2) 상담 시 수급자 대상 부정수급 관련 정보의 공지 등의 노력은 유지될 필요

- 현재 진단적 기준을 적용한 사업의 경우, 상담 시 부정수급 관련 정보 및 부정수급 주의사항 안내 등을 공지하고 있음
  - 최근 복지전달체계가 읍면동으로 단일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공지가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즉, 부정수급에 대한 예방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이는 진단적 기준 적용 사업에 대해서는 일반법 등에 규정된 부정수급 관련 조치가 타 사업에 비해 비교적 잘 되어 있으며, ‘진단’ 관련 의료체계와의 협력 및 관련 체계를 적절히 구성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 향후 수급자의 사업기간 내 변동 등에 대한 ‘고지 의무’를 보다 더 강화함으로써 사업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 측면의 오류수급 사례 등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음

## 3) 복지 사각지대를 위한 노력 확대

- 앞서 살펴보았듯이 진단적 기준 적용 사업의 경우에는 부정수급과 관련된 이슈의 검토에 있어 복지 사각지대의 이슈가 더욱 중요시 됨
  - 진단적 기준 적용 사업의 경우, 법률적으로 부정수급에 대한 내용의 공지가 명확하게 공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장애’ 및 ‘장해’ 진단 및 판정 관련 체계를 두고 있어 부정수급이 발생할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음
  - 때문에 진단적 기준 적용 사업에서는 ‘부정수급’의 문제보다는 ‘사각지대’의 이슈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임
- 여전히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필요함
  - 또한 복지신뢰도 향상을 위한 부정수급 관리 감독의 강화도 필요함

- 그러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 확대, 즉, 복지예산의 증대와 부정수급의 관리 감독의 강화를 위한 행정비용의 증대 모두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우리나라의 경우, 무엇을 우선으로 둘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요구됨
  - 특히나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북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 정부에 대한 신뢰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역사회 차원의 연대의식이 필요함
    - 북유럽 국가의 경우, 포용적 성격의 공적 부조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했고, 이는 복지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감수하더라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연대의식, 연대 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음
  - 지금 한국의 상황에서 이러한 연대의식, 연대 정신을 바랄 수 있는지? 정책적으로 무엇을 우선할 것인지? 동시에 가능한 것인지? 등 부정수급 관련 이슈에 따른 관련 이슈들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 필요함

### 3. 보장기관의 특성 :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의 사회서비스 중심

#### 가. 시군구 사회서비스 사업의 부정수급 현황

- 실태조사 대상 사업 중 시군구가 보장기관인 사회서비스 사업은 9개(사업명 기준 11개)로,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장애인 특화형 일자리 제공, 일반형 일자리 지원,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아동수당,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지원(교사근무환경개선비, 교사겸직원장지원비), 공공산림가꾸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임
- 실태조사 응답자 3,192명 중 1,310명(34.5%)이 위의 9개 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시군구별 응답자는 시 426명(32.5%), 군 503명(38.4%), 구 381명(29.1%)임

□ 2019년 기준으로, 9개 사업의 예산집행액은 합계액은 약 4조 4510억 원, 수급자 수는 2.16백만 명, 누적 참여인원은 6.65백만 명임

○ 시군구별 예산집행액은 시 2조 704억 원, 구 1조 6,644억 원, 군 7,162억 원이며, 수급자 수는 구는 약 103만 명, 시는 약 88만 명, 군은 약 25만 명, 누적 참여인원은 구는 약 305만 명, 시는 약 294만 명, 군은 약 66만 명임

〈표 4-73〉 보장기관이 시군구인 사회서비스 사업 현황

(단위: 백만 원, 명)

구분	2019년 예산 집행액 (국비+지방비)	수급자 수 (연도말 기준)	2019년 누적 참여인원
전체 (N=1310)	4,450,974 (3,397.7)	2,160,260 (1,649.1)	6,647,250 (5152.9)
시 (n=426)	2,070,422 (4,860.1)	883,611 (2,074.2)	2,935,436 (7,039.4)
군 (n=503)	716,202 (1,423.9)	251,323 (499.6)	660,836 (1,329.6)
구 (n=381)	1,664,350 (4,368.4)	1,025,326 (2,691.1)	3,050,978 (8,114.3)

주: ( )안은 평균값을 나타냄.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b).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 부정수급 관련 접수 실적이 있는 시군구는 332개로 전체의 25.3%를 차지함. 시군구별 접수 실적은 시 30.5%, 군 17.9%, 구 29.4%로 군이 가장 낮음

○ 부정수급 관련 접수 건수는 총 8,302건으로, 시 2,345건, 군 2,380건, 구 3,577건이 접수됨

○ 부정수급 관련 접수 실적이 있는 시군구의 평균 접수 건수는 25건으로 나타났으며, 수급자 수 및 누적 참여인원이 가장 많은 구청의 평균 접수 건수가 31.9건으로 가장 높음

〈표 4-74〉 보장기관이 시군구인 사회서비스 사업의 부정수급 관련 접수 현황

(단위: 개, %, 건)

구분	부정수급 관련 접수가 있는 시군구 수	부정수급 접수 시군구 비율	부정수급 접수건수*
전체 (N=1310)	332	25.3	8,302 (25.0)
시 (n=426)	130	30.5	2,345 (18.4)
군 (n=503)	90	17.9	2,380 (26.4)
구 (n=381)	112	29.4	3,577 (31.9)

주: \* ( ) 안은 부정수급 접수가 된 시군구의 평균값을 나타냄.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b).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 부정수급 접수 분석 결과와 유사하게, 환수, 행정처분, 수사의뢰, 형사고발 등 부정수급 관련 조치 실적이 있는 시군구의 비율도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오류수급 환수조치가 이루어진 시군구가 16.1%로 가장 많았으며, 부정수급 환수조치는 6.3%, 지급정지 행정처분은 3.7%의 시군구에서 이루어짐

〈표 4-75〉 보장기관이 시군구인 사회보장사업의 부정수급 관련 조치 현황

(단위: 개, %, 건)

구분		환수결정 _부정수급	환수결정 _오류수급	행정처분 _지급정지	행정처분 _명단공표	행정처분 _금전적 _과태료	행정처분 _금전적 _과징금	행정처분 _금전적 _기타	수사의뢰	형사고발
전체 (N=1310)	조치 사례	83 (6.3)	211 (16.1)	48 (3.7)	12 (0.9)	6 (0.5)	9 (0.7)	8 (0.6)	26 (0.2)	17 (1.3)
	총 조치 건수	398	1899	889	96	8	10	25	29	19
시 (n=426)	조치 사례	36 (8.5)	82 (19.2)	12 (2.8)	3 (0.7)	2 (0.5)	2 (0.5)	1 (0.2)	8 (1.9)	7 (1.6)
	총 조치 건수	160	882	166	80	2	2	1	8	7
군 (n=503)	조치 사례	16 (3.2)	54 (10.7)	12 (2.4)	1 (0.2)	1 (0.2)	2 (0.4)	2 (0.4)	5 (1.0)	4 (0.8)
	총 조치 건수	40	355	600	1	1	3	2	5	4
구 (n=381)	조치 사례	31 (8.1)	75 (19.7)	24 (6.3)	8 (2.1)	3 (0.8)	5 (1.3)	5 (1.3)	13 (3.4)	6 (1.6)
	총 조치 건수	198	662	123	15	5	5	22	29	8

주: \* ( ) 안은 전체 시군구 대비 해당 부정수급 조치 실적이 있는 시군구의 비율을 나타냄.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b).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 지급정지를 제외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시군구는 1% 미만으로 매우 낮음
-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부정수급 환수 조치가 시(8.5%)와 구(8.1%)에서 유사한 비율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군(3.2%)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부정수급 관련 접수 비율이 낮은 군은 부정수급 관련 조치 실적 비율도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표 4-76>과 <표 4-77>은 환수 유형별(환수결정, 환수실적) 평균 조치 현황을 나타낸 것으로, 부정수급 관련 조치 지자체의 비율이 낮으므로 평균 실적도 매우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환수의 경우 오류수급 환수 결정 건수가 평균 1.5건으로 부정수급 환수 결정 평균 건수(0.3건)보다 높음. 환수 실적도 환수 결정과 유사한 양상을 보임
  -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부정수급 환수결정 평균 건수는 구에서 가장 높은 반면, 오류수급 환수결정 평균 건수는 시에서 높게 나타남
- 행정처분은 비금전적 조치인 지급정지가 평균 0.6건, 명단공표가 평균 0.1건으로 나타나며, 군의 행정처분 지급정지 평균 건수가 1.2건으로 시, 구에 비해 높음

<표 4-76> 보장기관이 시군구인 사회보장사업의 환수 현황 (평균)

(단위: 개, 건, 천 원)

구분	환수결정_부정수급		환수결정_오류수급		환수실적_부정수급		환수실적_오류수급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전체 (N=1310)	0.3	736.2	1.5	1,168.0	0.2	547.0	1.1	883.8
시 (n=426)	0.4	1,142.1	2.1	1,473.5	0.3	732.2	1.5	939.3
군 (n=503)	0.1	178.0	0.7	370.9	0.1	187.6	0.6	290.2
구 (n=381)	0.5	1,019.2	1.7	1,878.6	0.2	814.4	1.3	1605.4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b).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표 4-77〉 보장기관이 시군구인 사회보장사업의 행정처분 현황 (평균)

(단위: 개, 건, 천 원)

구분	지급정지	명단공표	금전적_과태료		금전적_과징금		금전적_기타	
	건	건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전체 (N=1310)	0.6	0.1	0.0	157.6	0.0	72.3	0.0	619.3
시 (n=426)	0.4	0.2	0.0	444.6	0.0	23.5	-	-
군 (n=503)	1.2	0.0	-	-	0.0	25.1	0.0	5.8
구 (n=381)	0.3	0.0	0.0	44.6	0.0	189.2	0.1	2,121.8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b).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 나. 시군구별 부정수급 관리조직 및 운영 특성

□ 시군구별 부정수급 관리 특성을 다음의 항목을 중심으로 파악함

- 해당 사업의 부정수급을 감사실 등 감사부서에서 관리하는지의 여부
- 자체적으로 운영 중(사업부처와 별도)인 부정수급 신고 및 접수 체계 유무
- 기관의 부정수급 전담조직 설치 여부
- 부정수급 관리 주기
- 사업 담당자의 부정수급 교육 참여

□ 감사부서 관리

- 사업의 부정수급을 감사실 등 감사부서에서 관리하는지 분석한 결과, 33.2%의 시군구에서는 관리하고, 59.3%의 시군구에서는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감사조직이 없는 시군구는 7.5%임
- 시군구별로는 구의 감사부서 관리 비율이 37.5%로 가장 높았으며, 시 32.9%, 군 30.2%로 나타남

□ 자체 운영 부정수급 신고 및 접수 체계

- 중앙부처 차원의 신고·접수 체계가 아닌 시군구 자체 운영 중인 부정수급 신

고·접수 체계 여부를 분석한 결과, 37.3%의 시군구만 자체 운영 체계가 있다고 응답함

○ 시군구별로는 구의 자체 운영 체계가 42.3%로 가장 높았으며, 시 35.9%, 군 34.8%로 나타남

#### □ 부정수급 전담조직 설치

○ 부정수급을 전담하는 조직 설치 여부를 분석한 결과, 10.7%의 시군구만 전담 조직이 있다고 응답함

○ 시군구별로는 구가 20.5%로 가장 높았으며, 시 19.5%, 군 15.7%로 나타남

#### □ 부정수급 현황 정기적 관리 여부

○ 사업의 부정수급 현황(환수결정액, 환수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관리하는지 분석한 결과, 37.6%의 시군구가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응답함

○ 시군구별로는 구의 정기적 관리 비율이 51.2%로 가장 높았으며, 군 42.9%, 시 42.7%로 나타남

〈표 4-78〉 부정수급 관리 현황

(단위: 개, %)

구분	감사부서 관리			자체 운영 부정수급 신고 및 접수 체계		부정수급 전담조직 설치		부정수급 현황 정기적 관리		부정수급 교육 참여	
	관리	관리하지 않음	해당 없음	있음	없음	설치	미설치	정기	비정기	참여	미참여
전체 (N=1310)	435 (33.2)	777 (59.3)	98 (7.5)	489 (37.3)	821 (62.7)	140 (10.7)	1,070 (81.7)	493 (37.6)	717 (54.7)	222 (16.9)	1,088 (83.1)
시 (n=426)	140 (32.9)	247 (58.0)	39 (9.2)	153 (35.9)	273 (64.1)	83 (19.5)	343 (80.5)	182 (42.7)	244 (57.3)	65 (15.3)	361 (84.7)
군 (n=503)	152 (30.2)	316 (62.8)	35 (7.0)	175 (34.8)	328 (65.2)	79 (15.7)	424 (84.3)	216 (42.9)	287 (57.1)	98 (19.5)	405 (80.5)
구 (n=381)	143 (37.5)	214 (56.2)	24 (6.3)	161 (42.3)	220 (57.7)	78 (20.5)	303 (79.5)	195 (51.2)	186 (48.8)	59 (15.5)	322 (84.5)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b).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 □ 부정수급 교육 참여

- 사업 담당자의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교육(관리, 예방, 조사기법 등) 참여 경험을 분석한 결과, 16.9%만이 참여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 시군구별로는 군의 교육 참여가 19.5%로 가장 높았으며, 구 15.5%, 시 15.3%로 나타남

### 다. 시군구별 관리 특성에 따른 부정수급 관련 발생 현황

#### □ 시군구별 부정수급 관리조직 및 운영 특성에 따라 사회서비스 사업의 부정수급 관련 조치 실적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추가 분석을 진행함

- 부정수급 관리 특성은 감사부서 관리 여부, 자체 운영 부정수급 신고 및 접수 체계, 부정수급 전담조직 설치 여부 및 전담조직 설치 형태, 부정수급 관리 주기 및 관리방법, 사업 담당자의 부정수급 교육 참여 중심으로 분석
- 부정수급 관련 현황 분석결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장기관이 시군구인 사회서비스 사업의 부정수급 관련 조치 정도가 전반적으로 낮으므로, 부정수급 관련 조치 비율이 비교적 높은 환수와 행정처분(지급정지)을 중심으로 분석

#### □ 감사부서 관리 여부에 따른 부정수급 관련 조치(환수, 지급정지) 현황

- 환수규모는 부정수급의 고의성 여부, 감사부서의 관리 여부에 따라 시군구별로 다르게 나타남
  - 비고의적 환수 결정 즉, 오류수급에 대한 환수결정은 감사부서의 관리가 없거나 감사조직이 없는 시군구의 평균 건수가 더 높으나, 고의적 환수결정 즉,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결정 건은 감사부서의 관리 여부와 무관하게 유사
  - 시군구별 양상은 다소 다르게 나타나는데, 시는 감사조직의 관리가 있는 경우 다른 지자체보다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결정 평균 건수가 높게 나타남. 이는 환수실적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남
- 행정처분(지급정지)은 감사부서의 관리가 없는 시군구의 조치 건수가 높게 나타나며, 시군구별 동일한 양상을 보임

〈표 4-79〉 감사부서 관리 여부에 따른 환수규모 및 지급정지 현황 (평균)

(단위: 개, 건, 천 원)

구분	감사부서 관리	빈도	환수결정_ 부정수급		환수결정_ 오류수급		환수실적_ 부정수급		환수실적_ 오류수급		행정처분_ 지급정지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전체 (N=1310)	관리함	435	0.3	1,080.5	0.8	772.5	0.2	754.4	0.6	646.9	0.1
	관리하지 않음	777	0.3	627.5	1.7	1,407.7	0.2	489.2	1.3	1,065.1	1.1
	해당없음	98	0.1	69.5	2.5	1,022.2	0.2	84.8	1.5	497.4	0.1
시 (n=426)	관리함	140	0.6	2,321.7	1.6	1,326.1	0.2	1,111.0	1.3	1,111.2	0.0
	관리하지 않음	247	0.2	626.2	2.0	1,481.8	0.3	605.5	1.5	852.1	0.7
	해당없음	39	0.4	174.7	4.1	1,950.0	0.4	174.7	2.3	874.4	0.0
군 (n=503)	관리함	152	0.0	334.0	0.2	756.2	0.0	515.5	0.2	612.8	0.1
	관리하지 않음	316	0.1	122.7	1.0	221.4	0.1	50.6	0.9	162.0	1.9
	해당없음	35	-	-	0.2	46.6	-	-	0.2	46.6	0.1
구 (n=381)	관리함	143	0.3	658.8	0.5	247.9	0.3	659.3	0.4	228.7	0.1
	관리하지 않음	214	0.7	1,372.4	2.4	3,073.9	0.2	1,002.5	1.7	2,644.6	0.5
	해당없음	24	-	-	3.1	937.1	0.0	62.5	2.2	542.1	0.0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b).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 □ 자체 운영 부정수급 신고·접수 체계

○ 환수규모는 환수 유형 및 부정수급 관련 자체 운영 신고·접수 체계 유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 오류수급에 대한 환수결정 건수는 자체 운영 부정수급 신고·접수 체계가 없는 시의 평균 건수가 가장 큰 반면, 부정수급에서는 자체 운영 부정수급 신고·접수 체계가 있는 시의 평균 건수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한편 평균금액 측면에서 살펴볼 때, 자체 운영 신고·접수 체계가 있는 시가 가장 컸으며, 오류수급의 경우 자체 운영 신고·접수 체계가 없는 구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행정처분(지급정지)은 자체 운영 신고·접수 체계가 없는 시군구의 평균 건수가 높게 나타나지만, 시군구로 세분화하여 보면 구는 반대의 양상을 보임

〈표 4-80〉 자체 운영 신고·접수 체계 여부에 따른 부정수급 조치 현황 (평균)

(단위: 개, 건, 천 원)

구분	자체운영 신고/접수 체계	빈도	환수결정_ 부정수급		환수결정_ 오류수급		환수실적_ 부정수급		환수실적_ 오류수급		행정처분_ 지급정지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전체 (N=1310)	있음	489	0.5	897.8	1.1	1,149.9	0.2	379.2	0.8	969.1	0.2
	없음	821	0.2	639.9	1.6	1,179.3	0.1	647.0	1.3	832.9	1.0
시 (n=426)	있음	153	0.5	1,300.0	1.9	1,309.6	0.4	244.4	1.4	964.9	0.1
	없음	273	0.3	1,053.5	2.2	1,565.4	0.2	1,005.5	1.5	924.9	0.5
군 (n=503)	있음	175	0.1	426.6	0.3	367.0	0.1	296.2	0.2	312.1	0.1
	없음	328	0.1	45.4	0.9	372.9	0.1	129.6	0.9	278.5	1.8
구 (n=381)	있음	161	1.0	1,027.7	1.3	1,846.4	0.3	597.4	1.0	1,687.3	0.4
	없음	220	0.1	1,013.1	2.1	1,902.3	0.1	973.3	1.5	1,545.5	0.2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b).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 □ 부정수급 전담조직 설치 및 설치 형태

- 부정수급의 유형, 시군구 유형과 무관하게 부정수급 전담조직이 설치되지 않은 곳의 부정수급 관련 조치 실적이 높게 나타남

〈표 4-81〉 부정수급 전담조직 설치 여부에 따른 부정수급 관련 조치 현황 (평균)

(단위: 개, 건, 천 원)

구분	부정수급 전담조직	빈도	환수결정_ 부정수급		환수결정_ 오류수급		환수실적_ 부정수급		환수실적_ 오류수급		행정처분_ 지급정지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전체 (N=1310)	있음	240	0.1	990.8	0.6	898.7	0.1	877.6	0.4	712.3	0.1
	없음	1,070	0.3	679.0	1.6	1,228.4	0.2	472.8	1.3	922.2	0.8
시 (n=426)	있음	83	0.2	1,964.8	0.5	1,387.5	0.1	1,958.7	0.5	1,298.5	0.0
	없음	343	0.4	943.0	2.4	1,494.3	0.3	435.4	1.7	852.3	0.5
군 (n=503)	있음	79	0.1	298.5	0.1	289.6	0.1	30.0	0.1	289.6	0.0
	없음	424	0.1	155.5	0.8	386.0	0.1	216.9	0.7	290.3	1.4
구 (n=381)	있음	78	0.1	655.7	1.1	995.3	0.1	585.7	0.6	516.7	0.1
	없음	303	0.6	1,112.8	1.9	2,106.0	0.2	873.3	1.5	1,885.7	0.4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b).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 부정수급 전담조직의 설치된 시군구만을 대상으로 설치 형태별 부정수급 조치 실적을 분석한 결과, 감사조직 외 별도 조직(부서)으로 전담조직을 설치한 시군구의 환수결정 및 행정처분 실적이 높게 나타남

- 전담조직이 설치된 시군구에 비해 설치되지 않은 시군구의 부정수급 관련 조치실적이 더 높게 나타남
- 하지만 전담조직이 설치된 시군구의 전담조직 설치 형태별 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부서에 전담조직이 설치된 경우 부정수급 전담조직이 없는 경우보다 관련 조치실적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음

〈표 4-82〉 부정수급 전담조직 설치형태에 따른 부정수급 관련 조치 현황 (평균)

(단위: 개, 건, 천 원)

구분	전담조직 설치형태	빈도	환수결정 부정수급		환수결정 오류수급		환수실적 부정수급		환수실적 오류수급		행정처분 지급정지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전체 (N=240)	감사조직	121	0.1	369.0	0.4	202.4	0.0	148.6	0.2	157.2	0.1
	별도조직	24	0.5	441.8	1.8	1,890.0	0.3	420.8	0.7	435.5	0.3
	사업부서	60	0.2	3,001.2	0.8	2,293.3	0.2	3,001.2	0.8	2,220.8	-
	기타	35	0.0	70.7	0.1	235.3	0.0	70.7	0.1	235.3	0.0
시 (n=83)	감사조직	45	-	-	0.4	181.2	-	-	0.3	81.8	-
	별도조직	10	1.0	1,060.4	0.7	401.1	0.7	1,010.0	0.5	109.1	0.3
	사업부서	18	0.1	8,333.3	1.0	5,718.1	0.1	8,333.3	1.0	5,718.1	-
	기타	10	0.1	247.5	0.1	7.5	0.1	247.5	0.1	7.5	-
군 (n=79)	감사조직	45	0.1	471.7	-	-	0.0	0.5	-	-	0.0
	별도조직	8	-	-	0.3	75.0	-	-	0.3	75.0	-
	사업부서	18	0.3	130.7	0.3	1,221.1	0.3	130.7	0.3	1,221.1	-
	기타	8	-	-	0.3	37.5	-	-	0.3	37.5	-
구 (n=78)	감사조직	31	0.1	755.6	0.9	526.9	0.1	579.5	0.3	494.9	0.2
	별도조직	6	-	-	5.7	6,791.7	-	-	1.7	1,460.0	0.5
	사업부서	24	0.1	1,154.9	1.0	528.8	0.1	1,154.9	1.0	347.5	-
	기타	17	-	-	0.1	462.4	-	-	0.1	462.4	0.1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b).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 □ 부정수급 현황 관리의 정기성 및 관리 방법

- 부정수급 현황을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시군구의 환수결정, 환수실적 등이 높게 나타남
- 다만, 오류수급에 대한 환수결정에 있어 군의 경우 환수결정 조치 건수는 정기적으로 현황 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임

〈표 4-83〉 부정수급 현황의 정기적 관리 여부에 따른 부정수급 관련 조치 현황 (평균)

(단위: 개, 건, 천 원)

구분	정기적 관리 여부	빈도	환수결정_ 부정수급		환수결정_ 오류수급		환수실적_ 부정수급		환수실적_ 오류수급		행정처분_ 지급정지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전체 (N=1310)	정기	493	0.5	1,062.0	1.6	1,489.5	0.2	666.8	1.2	1,031.8	1.3
	비정기	717	0.1	466.7	1.3	902.0	0.1	447.9	1.0	761.4	0.2
시 (n=426)	정기	182	0.6	1,242.7	2.6	2,224.1	0.4	454.9	1.9	1,295.5	0.3
	비정기	244	0.2	1,067.0	1.7	913.6	0.2	939.0	1.2	673.5	0.4
군 (n=503)	정기	216	0.2	404.6	0.3	443.0	0.1	299.2	0.3	321.1	2.8
	비정기	287	0.0	7.4	1.0	316.6	0.0	103.6	0.9	267.0	0.0
구 (n=381)	정기	195	0.9	1,621.5	2.0	1,963.2	0.2	1,271.8	1.6	1,572.8	0.6
	비정기	186	0.2	387.9	1.5	1,790.0	0.2	334.9	1.0	1,639.5	0.1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b).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 부정수급 현황 관리 방법에 따른 조치 실적을 살펴보면, 부정수급과 오류수급  
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음

〈표 4-84〉 부정수급 현황 관리 방법에 따른 부정수급 관련 조치 현황 (평균)

(단위: 개, 건, 천 원)

구분	부정수급 관리 방법	빈도	환수결정_ 부정수급		환수결정_ 오류수급		환수실적_ 부정수급		환수실적_ 오류수급		행정처분_ 지급정지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전체 (N=1310)	전산시스템	531	0.2	277.7	1.5	1057.7	0.1	223.6	1.2	886.7	1.3
	수기관리	310	0.6	857.3	1.2	605.8	0.2	615.9	0.8	374.5	0.2
	전산+수기	401	0.3	1,374.5	1.9	1,447.9	0.2	1,014.7	1.4	924.7	0.3
	기타	68	-	-	0.0	2,941.2	-	-	0.0	2,941.2	-
시 (n=426)	전산시스템	171	0.4	366.2	2.3	2,089.6	0.2	202.2	1.7	1,649.8	0.6
	수기관리	103	0.5	1,119.7	1.7	898.2	0.4	975.0	1.0	467.8	-1
	전산+수기	132	0.3	2,337.7	2.4	1,347.5	0.3	1,340.3	1.9	528.9	-3
	기타	20	-	-	-	-	-	-	-	-	-
군 (n=503)	전산시스템	225	0.1	246.8	1.2	493.5	0.1	243.9	1.1	463.4	2.5
	수기관리	106	0.1	18.9	0.3	144.8	0.1	51.9	0.2	112.3	0.0
	전산+수기	144	0.1	222.1	0.4	417.8	0.1	235.9	0.3	207.0	0.2
	기타	28	-	-	-	-	-	-	-	-	-
구 (n=381)	전산시스템	135	0.1	216.9	0.9	690.7	0.1	216.9	0.8	625.7	0.1
	수기관리	101	1.3	1,469.5	1.6	791.6	0.1	841.6	1.2	554.4	0.6
	전산+수기	125	0.4	1,685.0	3.0	2,740.5	0.3	1,568.1	2.1	2,169.6	0.4
	기타	20	-	-	0.1	10000	-	-	0.1	10000	-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b).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 전체적으로 볼 때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결정금액은 수기관리를 하는 경우가, 오류수급에 대한 환수결정금액은 전산시스템과 수기관리를 병행하는 경우에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지급정지의 경우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경우 평균 건수가 가장 높았음
-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군의 경우 환수유형과 관계없이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경우 환수금액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교육

- 환수결정 실적은 환수유형과 시군구에 따라 사업 담당자의 부정수급 교육참여 영향이 다르게 나타남
  -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결정과 환수실적 금액은 사업 담당자의 부정수급 교육 참여 경험에 있는 경우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시군구별 양상은 다소 다르게 나타나는데, 구의 경우 부정수급 교육 참여 경험이 없는 경우에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결정 건수가 더 큰 특징을 보임

〈표 4-85〉 부정수급 교육 참여에 따른 부정수급 조치 현황

(단위: 개, 건, 천 원)

구분	부정수급 교육참여	빈도	환수결정_ 부정수급		환수결정_ 오류수급		환수실적_ 부정수급		환수실적_ 오류수급		행정처분_ 지급정지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전체 (N=1310)	참여	222	0.4	897.2	0.9	591.9	0.3	811.8	0.7	461.4	0.9
	미참여	1,088	0.3	703.3	1.6	1,285.5	0.1	493.0	1.2	970.0	0.6
시 (n=426)	참여	65	0.9	984.4	1.2	891.4	0.5	753.6	0.8	608.4	0.1
	미참여	361	0.3	1,170.5	2.2	1,578.3	0.2	728.3	1.6	998.8	0.4
군 (n=503)	참여	98	0.1	9.1	0.2	108.4	0.1	66.6	0.2	32.5	1.9
	미참여	405	0.1	218.9	0.8	434.4	0.1	216.8	0.7	352.6	1.0
구 (n=381)	참여	59	0.3	2,276.4	1.7	1,065.0	0.3	2,113.5	1.4	1,012.0	0.3
	미참여	322	0.6	788.9	1.7	2,027.7	0.2	576.4	1.2	1,714.1	0.3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b).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 행정처분(지급정지)은 평균적으로 사업 담당자의 부정수급 교육 참여 경험에 있는 시군구의 조치 실적이 더 높게 나타나지만, 시군구별로 세분화하면 시는 부정수급 교육 참여 경험이 없는 경우에 조치 실적이 더 높은 특징을 보임

## 라. 소결

- 부정수급 관리조직 및 운영 특성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보장기관 차원의 부정수급 관리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구가 시와 군에 비해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특히 군청의 감사부서 관리, 자체 운영 부정수급 신고·접수 체계, 전담조직 설치 비율이 가장 낮다는 점에서, 군청의 특성을 반영한 부정수급 관리 체계가 수립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
  - 군청은 전산시스템으로 부정수급 현황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정수급 조치 실적이 높게 나타남. 부정수급 전담 조직과 인력의 확보가 어렵다면, 전산시스템을 통한 부정수급 관리 효율화를 도모할 필요
- 시군구의 부정수급 관리조직 및 운영의 특성은 사회서비스 사업의 부정수급 현황에 상이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부정수급 유형별 차이가 있음을 확인함
- 부정수급(환수)은 감사조직이 관리하거나, 자체 운영 부정수급 신고·접수체계가 있거나, 부정수급 현황 관리를 정기적으로 하는 시군구에서 조치 실적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오류수급(환수)은 감사조직 관리, 자체 운영 부정수급 신고·접수체계, 부정수급 전담조직이 없는 시군구의 조치 실적이 높음
- 이러한 결과는 보장기관의 조직적 지원이 있을 경우 사회서비스 사업의 고의성 부정수급의 관리가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
  - 부정수급은 허위, 공모, 임의처리, 가족 간 거래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정기조사나 현장점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및 인력의 확보가 필수적
- 동시에 오류수급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 관리 노력이 병행될 필요
  - 오류수급은 전담조직과 신고 체계보다는 부정수급 관련 관리의 정기성 여부가 더 중요할 수 있음

- 사회서비스 사업의 부정수급 관련 현황 파악의 빈도를 높이고, 사업 특성에 따라 월별, 분기별 보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다만 부정수급 발생 비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부정수급 관리조직 및 운영 특성에 따른 부정수급 관련 현황 분석 결과는 경향성을 보는데 유용하나 일반화된 해석에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부정수급 관리의 정책 방향은 부정수급 적발이 목적이 되기보다는 부정수급 예방에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함
  - 부정수급 관리 노력을 기울일수록 적발되는 부정수급 건수는 높아질 수 있고, 그 결과가 사업 예산 배분이나 평가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시군구에서는 부정수급 관리에 소극적일 수 있음.
  - 따라서 궁극적으로 부정수급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적 차원의 조직 및 인력 지원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함

#### 4. 고용/일자리보장 사업

- 실태조사 대상 39개 사업을 주된 보장형태에 따라 소득보장과 고용 및 일자리보장으로 분류할 경우 16개 사업이 고용 및 일자리보장 사업에 해당하게됨. 해당 사업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결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

##### 가. 부정수급 관리 조직

- 소득보장과 비교할 때, 고용 및 일자리보장 사업의 보장기관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비중이 큰 편임
  - 전체 고용 및 일자리보장 사업의 보장기관이 지자체 및 교육청인 경우는 84.54%, 특별지방행정기관인 경우는 13.56%, 공공기관인 경우는 1.83%임
  - 고용 및 일자리보장 사업 중 일자리 사업은 지자체 및 교육청이 보장기관인 경우가 95.52%로 압도적으로 높으나, 자립 지원과 고용주 및 인건비 지원은



69.12%, 81.80%에 그침

〈표 4-86〉 보장형태별 보장기관

(단위: 개소 수, 열 %)

보장기관	소득보장	고용/일자리보장				전체
		전체	일자리	자립지원	고용주/인건비	
지자체/ 교육청	1,537	1,247	533	197	517	2,784
	89.52%	84.54%	95.52%	69.12%	81.80%	87.22%
특별지방행 정기관	173	200	24	72	104	373
	10.08%	13.56%	4.30%	25.26%	16.46%	11.69%
공공기관	5	27	0	16	11	32
	0.29%	1.83%	0.00%	5.61%	1.74%	1.00%
기타	2	1	1	0	0	3
	0.12%	0.07%	0.18%	0.00%	0.00%	0.09%
전체	1,717	1,475	558	285	632	3,192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b).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 고용 및 일자리보장 사업의 부정수급 관리 인원을 부서 내에 별도로 두지 않는 비중은 4.34%로, 소득보장(1.22%)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큼

○ 고용 및 일자리 보장 사업 중에서도 고용주 및 인건비 지원 사업에서는 별도의 부정수급 관리 인원을 두지 않는 비중이 5.38%로 가장 큼

〈표 4-87〉 부서 내 부정수급 관리 인원 배치 여부

(단위: 개소 수, 열 %)

구분	소득보장	고용/일자리보장				전체
		전체	일자리	자립지원	고용주/인건비	
부정수급 관리 인원 없음	21	64	19	11	34	85
	1.22%	4.34%	3.41%	3.86%	5.38%	2.66%
부정수급 관리 인원 있음	1,696	1,411	539	274	598	3,107
	98.78%	95.66%	96.59%	96.14%	94.62%	97.34%
전체	1,717	1,475	558	285	632	3,192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b).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 소득보장과 비교할 때, 고용 및 일자리보장 사업은 감사부서나 별도의 부정수급 전담 조직에서 부정수급을 관리하는 비중이 큼

○ 고용 및 일자리보장 사업 중에서도 자립 지원과 고용주 및 인건비 지원 사업의 경우, 감사부서에서 부정수급을 관리하는 비중이 각각 48.42%, 45.89%로 전체 실태조사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의 비중인 38.75%보다 큼

〈표 4-88〉 감사부서에서 해당사업(고용 및 일자리보장 사업) 부정수급 관리 여부

(단위: 개소 수, 열 %)

구분	소득보장	고용/일자리보장				전체
		전체	일자리	자립지원	고용주/인건비	
감사부서가 부정수급 관리	635	602	174	138	290	1,237
	36.98%	40.81%	31.18%	48.42%	45.89%	38.75%
감사부서가 부정수급 관리안함	894	760	330	124	306	1,654
	52.07%	51.53%	59.14%	43.51%	48.42%	51.82%
감사조직 없음	188	113	54	23	36	301
	10.95%	7.66%	9.68%	8.07%	5.70%	9.43%
전체	1,717	1,475	558	285	632	3,192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b).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 고용주 및 인건비 지원 사업의 경우, 보장기관에 부정수급 전담 조직을 두는 경우가 33.23%로 세부 사업 영역 중 가장 비중이 큼

〈표 4-89〉 보장기관에 부정수급 전담 조직 유무 : 고용 및 일자리보장 중심의 현황

(단위: 개소 수, 열 %)

구분	소득보장	고용/일자리보장				전체
		전체	일자리	자립지원	고용주/인건비	
전담 조직 있음	242	384	96	78	210	626
	14.09%	26.03%	17.20%	27.37%	33.23%	19.61%
전담 조직 없음	1,475	1,091	462	207	422	2,566
	85.91%	73.97%	82.80%	72.63%	66.77%	80.39%
전체	1,717	1,475	558	285	632	3,192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b).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 소득보장 영역보다 고용 및 일자리 보장 사업은 부서 내에 부정수급 관리 인원을 배치하여 부정수급을 관리하면서 관리부서나 부정수급 전담조직에서의 부정수급 관리를 병행하는 비중이 큼
- 특별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보장기관일 때 상대적으로 감사부서나 부정수급 전담 조직에서 부정수급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고, 부서 내에서의 관리와 감사부서 혹은 부정수급 전담조직에서의 관리를 병행하는 비중도 큼

## 나. 부정수급 신고 및 접수체계

- 소득보장 영역보다 고용 및 일자리보장 사업에서 자체적인 부정수급 신고 및 접수체계를 운영하는 비중이 커, 소득보장 영역은 33.66%, 고용 및 일자리보장 사업은 42.98%임
- 다만 내부에서의 편차가 큰데, 고용 및 일자리보장 사업 중에서 일자리 사업의 경우는 35.13%만이 자체 신고 및 접수체계를 운영하고 자립지원사업은 45.61%, 고용주 및 인건비 지원 사업은 48.73%가 자체 신고 및 접수체계를 운영함

〈표 4-90〉 신고 및 접수체계 운영

(단위: 개소 수, 열 %)

구분	소득보장	고용/일자리보장				전체
		전체	일자리	자립지원	고용주/인건비	
신고 및 접수체계 운영	578	634	196	130	308	1,212
	33.66%	42.98%	35.13%	45.61%	48.73%	37.97%
신고 및 접수체계 미운영	1,139	841	362	155	324	1,980
	66.34%	57.02%	64.87%	54.39%	51.27%	62.03%
전체	1,717	1,475	558	285	632	3,192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b).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 다. 부정수급 확인 노력 및 관리

- 소득보장 영역과 고용 및 일자리보장 영역 모두 부정수급 확인과 적발을 위해 정보시스템을 통한 변동사항 확인과 상담 또는 유선을 통한 확인, 중복급여 서비스 확인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

〈표 4-91〉 보장형태별 부정수급 확인 및 적발 노력

(단위: 개소 수, 보장형태 내 %)

구분	소득보장		고용/일자리보장	
	개소 수	비중	개소 수	비중
정보시스템을 통한 변동사항 확인	1,526	88.88%	1,259	85.36%
기관내 타부서, 타기관 등에 정보시스템을 통한 변동사항 확인요청	989	57.60%	519	35.19%
방문확인	733	42.69%	459	31.12%
기관내 타부서, 타기관 등에 방문확인 요청	700	40.77%	254	17.22%
상담 또는 유선을 통한 확인	1,232	71.75%	965	65.42%
기관 내 감사부서에 감사 또는 조사 요청	203	11.82%	175	11.86%
기관 내 부정수급 전담부서에 부정수급 관련 확인 등 협조 요청	265	15.43%	179	12.14%
중복급여·서비스확인	1,159	67.50%	837	56.75%
중점관리대상자 관리	463	26.97%	228	15.46%
상급기관에 조사 의뢰 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195	11.36%	122	8.27%
기타	23	1.37%	56	3.86%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b).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 고용 및 일자리보장 사업 역시 부정수급 확인 및 적발을 위해 정보시스템을 통해 변동사항 등을 확인하는 노력 등을 수행하고 있음

〈표 4-92〉 고용 및 일자리보장 사업의 부정수급 확인 및 적발 노력

(단위: 개소 수, 보장형태 내 %)

구분	일자리		자립지원		고용주/인건비 지원	
	개소 수	비중	개소 수	비중	개소 수	비중
정보시스템을 통한 변동사항 확인	451	80.82%	253	88.77%	555	87.82%
기관내 타부서, 타기관 등에 정보시스템을 통한 변동사항 확인요청	204	36.56%	153	53.68%	162	25.63%
방문확인	110	19.71%	99	34.74%	250	39.56%
기관내 타부서, 타기관 등에 방문확인 요청	93	16.67%	91	31.93%	70	11.08%
상담 또는 유선을 통한 확인	320	57.35%	229	80.35%	416	65.82%
기관 내 감사부서에 감사 또는 조사 요청	42	7.53%	48	16.84%	85	13.45%
기관 내 부정수급 전담부서에 부정수급 관련 확인 등 협조 요청	35	6.27%	47	16.49%	97	15.35%
중복급여·서비스확인	275	49.28%	218	76.49%	344	54.43%
중점관리대상자 관리	82	14.7%	63	22.11%	83	13.13%
상급기관에 조사 의뢰 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23	4.12%	26	9.12%	73	11.55%
기타	19	3.41%	10	3.5%	25	3.96%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b).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면, 자립지원 사업은 다른 유형들보다 기관 내 타부서 및 타기관 등에 정보시스템을 통한 변동사항 확인 요청(53.68%), 방문확인(34.74%), 상담 또는 유선을 통한 확인(80.35%), 중복급여 및 서비스 확인(76.49%)의 비중이 큰 편임
- 고용주 및 인건비 지원은 타 기관의 정보시스템을 통한 변동사항 확인 요청 등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이나, 방문확인(39.56%), 상담 또는 유선을 통한 확인(65.82%), 중복급여 및 서비스 확인(54.43%) 등의 비중이 큰 편임
- 위의 여러 노력 중 부정수급을 위해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조치는 소득보장 영역과 고용 및 일자리 보장 영역 모두 정보시스템을 통한 변동사항 확인임
- 고용 및 일자리 보장 사업은 소득보장보다 상담 또는 유선을 통한 확인에 상대적으로 많은 노력을 투입한다는 점이 특징적임

〈표 4-93〉 보장형태별 부정수급 확인 및 적발을 위해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노력 (1+2순위)

(단위: 개소 수, 보장형태 내 %)

구분	소득보장		고용/일자리보장	
	개소 수	비중	개소 수	비중
정보시스템을 통한 변동사항 확인	1,362	79.32%	1,122	76.07%
기관내 타부서, 타기관 등에 정보시스템을 통한 변동사항 확인요청	480	27.96%	234	15.86%
방문확인	244	14.21%	218	14.78%
기관내 타부서, 타기관 등에 방문확인 요청	124	7.22%	49	3.32%
상담 또는 유선을 통한 확인	473	27.55%	529	35.86%
기관 내 감사부서에 감사 또는 조사 요청	14	0.82%	22	1.49%
기관 내 부정수급 전담부서에 부정수급 관련 확인 등 협조 요청	39	2.27%	32	2.17%
중복급여·서비스확인	477	27.78%	409	27.73%
중점관리대상자 관리	52	3.03%	31	2.10%
상급기관에 조사의뢰 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10	0.58%	14	0.95%
기타	8	0.47%	15	1.02%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b).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면, 자립지원 사업은 다른 유형들보다 기관 내 타부서 및 타기관 등에 정보시스템을 통한 변동사항 확인 요청(22.46%), 상담 또는 유선

을 통한 확인(39.30%), 중복급여 및 서비스 확인(31.93%)의 비중이 큰 편임

- 고용주 및 인건비 지원은 타 기관의 정보시스템을 통한 변동사항 확인 요청 등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이나, 상담 또는 유선을 통한 확인(38.13%), 방문확인(21.84%) 등의 비중이 큰 편임

〈표 4-94〉 고용 및 일자리보장 사업의 부정수급 확인·적발을 위해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노력 (1+2순위)  
(단위: 개소 수, 보장형태 내 %)

구분	일자리		자립지원		고용주/인건비 지원	
	개소 수	비중	개소 수	비중	개소 수	비중
정보시스템을 통한 변동사항 확인	420	75.27%	213	74.74%	489	77.37%
기관내 타부서, 타기관 등에 정보시스템을 통한 변동사항 확인요청	105	18.82%	64	22.46%	65	10.28%
방문확인	47	8.42%	33	11.58%	138	21.84%
기관내 타부서, 타기관 등에 방문확인 요청	27	4.84%	13	4.56%	9	1.42%
상담 또는 유선을 통한 확인	176	31.54%	112	39.30%	241	38.13%
기관 내 감사부서에 감사 또는 조사 요청	8	1.43%	6	2.11%	8	1.27%
기관 내 부정수급 전담부서에 부정수급 관련 확인 등 협조 요청	3	0.54%	7	2.46%	22	3.48%
중복급여·서비스확인	152	27.24%	91	31.93%	166	26.27%
중점관리대상자 관리	16	2.87%	6	2.11%	9	1.42%
상급기관에 조사의뢰 또는 수사기관에 조사의뢰	3	0.54%	2	0.70%	9	1.42%
기타	10	1.79%	0	0.00%	5	0.79%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b).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 보장 형태를 막론하고 부정수급 적발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조치는 정보시스템을 통한 변동사항 확인으로, 소득보장은 78.39%가, 고용 및 일자리보장은 74.92%가 해당 조치를 1순위 혹은 2순위로 지목함

- 후순위로 소득보장 영역은 기관 내 타부서, 타기관 등에 정보시스템을 통한 변동사항 확인요청(28.71%)과 중복급여 및 서비스 확인(28.42%)이 주요하게 지적되었으나, 고용 및 일자리보장 영역은 상담 또는 유선을 통한 확인(29.02%), 중복급여 및 서비스 확인(28.20%)이 언급됨

- 특히, 자립지원 사업의 경우 중복급여 및 서비스 확인이 부정수급 적발에 효과적인 조치라는 응답의 비중이 36.49%로 다른 고용 및 일자리보장 사업 영역보

다 높으며, 고용주 및 인건비 지원 사업은 상담 또는 유선을 통한 확인이 효과적이라는 응답이 31.01%로 다른 사업보다 높음

〈표 4-95〉 보장형태별 부정수급 확인 및 적발에 가장 효과적인 조치 (1+2순위)

(단위: 개소 수, 보장형태 내 %)

구분	소득보장		고용/일자리보장	
	개소 수	비중	개소 수	비중
정보시스템을 통한 변동사항 확인	1,346	78.39%	1,105	74.92%
기관내 타부서, 타기관 등에 정보시스템을 통한 변동사항 확인요청	493	28.71%	242	16.41%
방문확인	300	17.47%	256	17.36%
기관내 타부서, 타기관 등에 방문확인 요청	129	7.51%	56	3.80%
상담 또는 유선을 통한 확인	371	21.61%	428	29.02%
기관 내 감사부서에 감사 또는 조사 요청	18	1.05%	32	2.17%
기관 내 부정수급 전담부서에 부정수급 관련 확인 등 협조 요청	45	2.62%	47	3.19%
중복급여·서비스확인	488	28.42%	416	28.20%
중점관리대상자 관리	62	3.61%	47	3.19%
상급기관에 조사 의뢰 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23	1.34%	21	1.42%
기타	8	0.47%	14	0.95%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b).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표 4-96〉 고용 및 일자리보장 사업의 부정수급 확인 및 적발에 가장 효과적인 조치 (1+2순위)

(단위: 개소 수, 보장형태 내 %)

구분	일자리		자립지원		고용주/인건비 지원	
	개소 수	비중	개소 수	비중	개소 수	비중
정보시스템을 통한 변동사항 확인	425	76.16%	211	74.04%	469	74.21%
기관내 타부서, 타기관 등에 정보시스템을 통한 변동사항 확인요청	116	20.79%	57	20.00%	69	10.92%
방문확인	50	8.96%	47	16.49%	159	25.16%
기관내 타부서, 타기관 등에 방문확인 요청	26	4.66%	19	6.67%	11	1.74%
상담 또는 유선을 통한 확인	152	27.24%	80	28.07%	196	31.01%
기관 내 감사부서에 감사 또는 조사 요청	8	1.43%	7	2.46%	17	2.69%
기관 내 부정수급 전담부서에 부정수급 관련 확인 등 협조 요청	4	0.72%	9	3.16%	34	5.38%
중복급여·서비스확인	143	25.63%	104	36.49%	169	26.74%
중점관리대상자 관리	23	4.12%	10	3.51%	14	2.22%
상급기관에 조사 의뢰 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3	0.54%	1	0.35%	17	2.69%
기타	10	1.79%	0	0.00%	4	0.63%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b).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 소득보장과 달리 고용 및 일자리보장에서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더욱 중점적으로 파악해야 할 사항으로 중복수급 여부 확인(65.76%)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

○ 특히 이는 고용주 및 인건비 지원 사업에서 그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나며, 일자리 사업과 자립지원 사업에서는 장애, 상이, 장해, 근로능력 등의 판정 변화와 소득 및 재산변동의 비중이 다른 고용 및 일자리 사업보다 높은 것이 특징적임

〈표 4-97〉 보장형태별 부정수급 확인 및 적발을 위해 더 중점적으로 파악해야 할 변동사항 (복수응답)

(단위: 개소 수, 보장형태 내 %)

구분	소득보장		고용/일자리보장	
	개소 수	비중	개소 수	비중
거주지 변동	311	18.11%	356	24.14%
가족관계변경	628	36.58%	167	11.32%
가구원 변동	297	17.30%	108	7.32%
사망의심자 확인	387	22.54%	87	5.90%
출입국내역, 국적상실	183	10.66%	197	13.36%
소득 및 재산 변동	962	56.03%	517	35.05%
중복수급	412	24.00%	970	65.76%
장애, 상이, 장해, 근로능력 등 판정변화	109	6.35%	187	12.68%
부양의무자	87	5.07%	36	2.44%
법적용 배제	27	1.57%	50	3.39%
순위변경	9	0.52%	14	0.95%
기타	22	1.28%	259	17.56%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b).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표 4-98〉 고용 및 일자리보장 사업의 부정수급 확인·적발을 위해 더 중점적으로 파악해야 할 변동사항 (복수응답)

(단위: 개소 수, 보장형태 내 %)

구분	일자리		자립지원		고용주/인건비 지원	
	개소 수	비중	개소 수	비중	개소 수	비중
거주지 변동	147	26.34%	44	15.44%	165	26.11%
가족관계변경	61	10.93%	36	12.63%	70	11.08%
가구원 변동	30	5.38%	46	16.14%	32	5.06%
사망의심자 확인	34	6.09%	14	4.91%	39	6.17%
출입국내역, 국적상실	99	17.74%	14	4.91%	84	13.29%
소득 및 재산 변동	235	42.11%	195	68.42%	87	13.77%
중복수급	327	58.60%	154	54.04%	489	77.37%
장애, 상이, 장해, 근로능력 등 판정변화	108	19.35%	44	15.44%	35	5.54%
부양의무자	22	3.94%	7	2.46%	7	1.11%
법적용 배제	9	1.61%	2	0.70%	39	6.17%
순위변경	6	1.08%	0	0.00%	8	1.27%
기타	36	6.45%	14	4.91%	209	33.07%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b).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 소득보장 영역보다 고용 및 일자리보장 사업에서는 부정수급 확인 및 적발 과정에서 수급자 변동사항 발생과 정보시스템 등록의 시차 및 민원대응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경우는 적은데 비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자료의 부족과 제한적인 정보접근 권한의 비중은 각각 49.49%, 14.03%로 높은 편임

○ 특히, 사실관계를 확인한 자료와 정보 부족의 문제와 제한적인 정보접근 권한은 일자리 사업과 고용주 및 인건비 지원 사업에서 다른 사업보다 어려움으로 지적되는 경향이 두드러지며, 자립 지원은 다른 고용 및 일자리 사업 유형보다 민원대응이나 강제력 부족 등의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있음

〈표 4-99〉 보장형태별 부정수급 확인 및 적발 과정에서의 어려움 (1+2순위)

(단위: 개소 수, 보장형태 내 %)

구분	소득보장		고용/일자리보장	
	개소 수	비중	개소 수	비중
사실관계를 확인할 자료와 정보 부족	652	37.97%	730	49.49%
수급자 변동사항 발생과 정보시스템 등록의 시차	824	47.99%	467	31.66%
수급자 반발 등 민원대응	659	38.38%	321	21.76%
부정수급 사실 확인을 위한 강제력 부족	435	25.33%	360	24.41%
업무과중 또는 인력부족	661	38.50%	706	47.86%
기관 간 정보공유의 어려움과 비협조	47	2.74%	85	5.76%
제한적인 정보접근 권한	110	6.41%	207	14.03%
기타	8	0.47%	14	0.95%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b).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표 4-100〉 고용 및 일자리보장 사업의 부정수급 확인 및 적발 과정에서의 어려움 (1+2순위)

(단위: 개소 수, 보장형태 내 %)

구분	일자리		자립지원		고용주/인건비 지원	
	개소 수	비중	개소 수	비중	개소 수	비중
사실관계를 확인할 자료와 정보 부족	274	49.10%	109	38.25%	347	54.91%
수급자 변동사항 발생과 정보시스템 등록의 시차	210	37.63%	102	35.79%	155	24.53%
수급자 반발 등 민원대응	124	22.22%	99	34.74%	98	15.51%
부정수급 사실 확인을 위한 강제력 부족	123	22.04%	93	32.63%	144	22.78%
업무과중 또는 인력부족	242	43.37%	123	43.16%	341	53.96%
기관 간 정보공유의 어려움과 비협조	33	5.91%	15	5.26%	37	5.85%
제한적인 정보접근 권한	84	15.05%	20	7.02%	103	16.30%
기타	4	0.72%	2	0.70%	8	1.27%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b).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 라. 부정수급 관리 현황 및 실적

□ 부정수급이 발생하면 보장 형태를 막론하고 환수와 지원중단을 하도록 법률과 지침에 규정되어 있음

○ 고용 및 일자리보장의 경우는 소득보장 영역보다 환수 조치 비중이 낮은 반면, 환수 이외의 금전적 제재와 명단공표 비중이 큼

□ 고용 및 일자리보장 사업은 소득보장 사업보다 법률이나 지침에 부정수급을 관리·감독하도록 규정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은데, 특히 일자리 사업이 그러한 것으로 나타남(‘없음’으로 응답한 비중이 약 15.8%)

〈표 4-101〉 보장형태별 부정수급 발생시 법률 및 지침상 규정된 조치 (복수응답)

(단위: 개소 수, 보장형태 내 %)

구분	소득보장		고용/일자리보장	
	개소 수	비중	개소 수	비중
지원중단	1,074	62.55%	857	58.10%
환수	1,609	93.71%	1,212	82.17%
환수 이외의 금전적 제재	136	7.92%	234	15.86%
벌금, 징역 등 형벌	128	7.45%	115	7.80%
명단공표	17	0.99%	81	5.49%
수사의뢰 및 형사고발	264	15.38%	249	16.88%
기타	24	1.40%	79	5.36%
없음	44	2.56%	130	8.81%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b).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표 4-102〉 고용 및 일자리보장 사업의 부정수급 발생시 법률 및 지침상 규정된 조치 (복수응답)

(단위: 개소 수, 보장형태 내 %)

구분	일자리		자립지원		고용주/인건비 지원	
	개소 수	비중	개소 수	비중	개소 수	비중
지원중단	296	53.05%	174	61.05%	387	61.23%
환수	396	70.97%	249	87.37%	567	89.72%
환수 이외의 금전적 제재	20	3.58%	36	12.63%	178	28.16%
벌금, 징역 등 형벌	15	2.69%	12	4.21%	88	13.92%
명단공표	4	0.72%	4	1.40%	73	11.55%
수사의뢰 및 형사고발	18	3.23%	32	11.23%	199	31.49%
기타	33	5.91%	18	6.32%	28	4.43%
없음	88	15.77%	18	6.32%	24	3.80%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b).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 보장형태별 부정수급 인지(접수) 건수는 소득보장이 평균 19.85건, 고용 및 일자리 보장이 6.20건임

○ 고용 및 일자리 보장 중에서 자립지원은 평균 2건으로 부정수급 접수 건수가 다른 사업보다 적은 편임

○ 2019년 부정수급이 1건 이상 접수된 사업 중 소득보장 영역은 정기 조사를 통해 접수된 것이 31.70%로 가장 많은데 비해, 고용 및 일자리 보장은 정보 연계를 통한 접수가 29.35%로 가장 많음

○ 특히, 일자리 사업은 과반 이상인 51.93%가 정보 연계를 통해 접수됨

〈표 4-103〉 보장형태별 부정수급 접수 건수 (2019년)

(단위: 건)

구분		개소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소득보장		1717	19.85	134.42	0	4194
고용/일자리 보장	전체	1475	6.20	55.55	0	1405
	일자리	558	11.18	65.33	0	687
	자립지원	285	2.00	7.26	0	96
	고용주/인건비 지원	632	3.69	58.15	0	1405
전체		3192	13.54	105.77	0	4194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b).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표 4-104〉 보장형태별 부정수급 인지 경로

(단위: 건, %)

구분		내부 제보	외부 제보	감사	현장 점검	정기 조사	비정기 조사	정보 연계	타기관 조사의뢰	기타
소득보장	평균	10.95	10.93	2.56	2.42	31.70	12.57	19.31	3.22	6.33
	표준편차	25.82	26.45	12.77	11.21	40.89	27.78	35.93	14.57	22.33
고용/ 일자리보장	평균	10.45	13.41	3.35	7.81	13.48	9.79	29.35	3.37	8.99
	표준편차	26.56	30.07	15.02	21.36	30.54	25.76	43.55	14.40	26.75
일자리	평균	6.13	6.38	2.32	6.77	11.47	8.77	51.93	2.36	3.88
	표준편차	18.34	19.82	11.91	21.15	29.32	25.44	46.83	11.80	17.47
자립지원	평균	9.37	10.19	6.63	3.89	15.65	15.70	27.74	1.30	9.53
	표준편차	24.28	27.18	22.35	14.81	32.81	32.35	42.90	4.44	28.35
고용주/ 인건비 지원	평균	14.87	21.58	2.05	11.29	13.76	6.74	11.09	5.61	13.01
	표준편차	32.75	36.72	10.48	24.59	30.13	20.05	30.56	19.60	31.33
전체	평균	10.80	11.68	2.80	4.05	26.19	11.73	22.35	3.27	7.14
	표준편차	26.03	27.61	13.49	15.21	38.95	27.21	38.65	14.51	23.77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b).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 한편 보장형태별 고용 및 일자리보장 사업의 부정수급 발생비율은 7.80%로 소득 보장사업(10.08%)보다 부정수급 발생 비중이 적은 것으로 보고됨
- 특히 고용 및 일자리보장 사업 중 일자리 지원 사업 영역에서의 부정수급 발생 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편임
- 한편 고용 및 일자리보장 사업 중 자립지원 영역의 경우 부정수급 발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105〉 보장형태별 부정수급 발생 여부 (2019년)

(단위: 개소 수, 열 %)

구분		개소 수	비중	
소득보장		발생하지 않음	1,544	89.92%
		발생	173	10.08%
고용/일자리 보장	전체	발생하지 않음	1,360	92.20%
		발생	115	7.80%
	일자리	발생하지 않음	542	97.13%
		발생	16	2.87%
	자립지원	발생하지 않음	242	84.91%
		발생	43	15.09%
	고용주/인건비 지원	발생하지 않음	576	91.14%
		발생	56	8.86%
전체		발생하지 않음	2,904	90.98%
		발생	288	9.02%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b).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 고용 및 일자리보장 사업은 소득보장 사업들보다 부정수급 발생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을 뿐 아니라, 환수결정 이후 환수가 비교적 원활하게 이뤄짐
- 특히, 고용주/인건비 지원 사업의 경우 환수조치가 원활하게 이뤄진다는 응답이 다른 유형의 사업들보다 더 높게 나타남
- 다만 자립 지원 사업은 원활하게 환수가 이뤄진다는 응답이 48.07%에 그쳐 다른 사업들보다 낮은 편임
- 자립지원 사업의 환수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살펴보면, 다른 사업보다 환수 관련 강제력의 부족과 함께 환수 대상자의 경제적 취약성 등 실제 환수금 납부능력이 없어 환수과정이 어려운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표 4-106〉 보장형태별 부정수급 발생시 환수조치의 수월성

(단위: 개소 수, 열 %)

구분		개소 수	비중	
소득보장		원활	695	40.48%
		원활하지 않음	1,022	59.52%
고용/일자리 보장	전체	원활	977	66.24%
		원활하지 않음	498	33.76%
	일자리	원활	351	62.90%
		원활하지 않음	207	37.10%
	자립지원	원활	137	48.07%
		원활하지 않음	148	51.93%
	고용주/인건비 지원	원활	489	77.37%
		원활하지 않음	143	22.63%
전체		원활	1,672	52.38%
		원활하지 않음	1,520	47.62%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b).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표 4-107〉 보장형태별 부정수급 발생시 환수과정이 어려운 이유 (복수응답)

(단위: 개소 수, 보장형태 내 %)

구분	소득보장		고용/일자리보장							
			전체		일자리		자립지원		고용주/인건비 지원	
	개소 수	비중	개소 수	비중	개소 수	비중	개소 수	비중	개소 수	비중
환수 대상자의 항의 등 민원대응	601	35.00%	229	15.53%	97	17.38%	74	25.96%	58	9.18%
환수 대상자 소재 불분명	125	7.28%	50	3.39%	25	4.48%	14	4.91%	11	1.74%
환수와 관련된 강제력 부족	387	22.54%	186	12.61%	71	12.72%	68	23.86%	47	7.44%
환수대상자의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	11	0.64%	25	1.69%	1	0.18%	3	1.05%	21	3.32%
업무과중 또는 인력부족	254	14.79%	96	6.51%	36	6.45%	26	9.12%	34	5.38%
환수방법의 한계	165	9.61%	70	4.75%	26	4.66%	18	6.32%	26	4.11%
서류상 무재산 등 대상자의 재산은닉	28	1.63%	16	1.08%	1	0.18%	3	1.05%	12	1.90%
경제적 취약성 등 실제 환수금 납부능력 부재	307	17.88%	115	7.80%	44	7.89%	47	16.49%	24	3.80%
기타	24	1.4%	63	4.27%	40	7.17%	6	2.11%	17	2.69%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b).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 마. 소결

- 고용 및 일자리 보장 사업은 세부 사업 특징에 따라 부정수급의 발생 형태와 관리, 보장기관 등이 상이하므로 각 유형에 맞는 접근이 요구됨
- 특별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보장기관인 고용 및 일자리보장 사업은 부서 내에서도 일부 부정수급을 관리하지만, 감사부서나 부정수급 전담 부서를 통해 부정수급을 관리하고 있어 기관 내 긴밀한 업무 협조가 부정수급 방지 및 관리·감독을 위해 필수적으로 보임
- 지자체를 통해 관리되는 고용 및 일자리보장 사업 중 일자리 사업 역시 부정수급이 주로 정보연계를 통해 적발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관 내, 기관 간 긴밀한 협조망이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중요할 것으로 보임
  - 아울러, 일자리 사업의 경우, 최근 그 중요성이 증대하고 수도 늘어나고 있으나 부정수급을 관리할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부정수급 관리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고용 및 일자리보장 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정보시스템의 개편을 꾀하는 것도 필요해 보임
  - 부정수급 확인 및 적발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할 자료와 정보의 부족이 소득보장 영역보다 두드러진 어려움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임
  - 고용 및 일자리보장 사업에서도 소득보장 영역과 마찬가지로 상담이나 유선을 통한 확인, 방문확인 등에 소요하는 시간이 많은 것에서도 유추할 수 있는 지점임
  - 방문이나 유선을 통한 조사로도 확인하기 어려운 정보들이 많으므로 전산망으로 확인 가능한 정보를 확대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정보 연계를 확대하는 것 등을 고민해볼 만함



## 제5장

### 주요 국가 사례 연구

제1절 개요

제2절 미국의 사회보장 부정수급 관리와 함의

제3절 호주의 사회보장 부정수급 관리와 함의

제4절 한국의 현금급여 부정수급 관리와 함의





## 제5장 주요 국가 사례 연구

### 제1절 개요

- 앞서 정량적 분석을 통해 기본 및 실태 조사에 수록된 개별 사실들에 대한 공통적 속성을 파악했다면, 본 장은 사례연구를 통해 사례국의 부정수급 관련 현황과 관리 체계에 대한 특성을 맥락적 차원에서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 사회보장 또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 관리에 있어 오랜 기간의 경험을 통해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갖춘 국가들의 사례 분석을 통해, 해당국가의 부정수급 관리의 방향성과 이에 조응하는 부정수급 대응 정책과 관리체계를 파악하여 부정수급 관리에 대한 정책함의 제시가 필요
- 하지만, 부정수급 대응에 성공적인 국가라 할지라도 해당국가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특수성이 작용하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정책과 조직체계가 한국에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우며,
  - 어떠한 사례연구든지 해당 사례가 절대적인 성공사례 또는 실패사례로 간주하기 어려운 상대적이고 특수한 환경이 존재함(임완섭 외, 2016, p.4)
- 따라서 사례국의 부정수급 및 사각지대 관리의 성과 및 우수성, 그리고 문제점과 그 원인을 객관적인 관점에서 정리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우리나라의 현금급여에 대한 부정수급 대응 및 관리 체계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실태조사 결과를 보완하고 보다 실질적인 정책함의 제안할 수 있음
- 본 장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해외사례의 경우 선진국의 부정수급 예방 또는 관리 조치 중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방안에 대한 것이며, 한국의 경우 현금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대응 및 관리체계 파악과 이를 통한 정책함의 도출임
- 해외 선진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부정수급 정책 발굴 및 우리 상황에 맞게 변형·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 한국 사례연구를 통해

## 현금급여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의 보완 및 보다 구체적인 정책함의 제시

- 본 연구에서는 부정수급 관련 사례 연구 국가로 미국, 호주, 한국을 선택
  - 이들 국가들은 선별적 복지를 특징으로 하는 국가들로, 선별적 복지제도들은 자산조사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거나, 근로를 조건으로 급여를 지급받거나, 급여지급에 기간제한이 부여 되는 등, 까다로운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급여가 지급되는 특성을 가짐
  -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부정수급이 발생하게 되며, 정부는 이러한 부정수급에 대해 보편적인 복지를 지향하는 국가들에 비해 적극적인 예방 및 관리정책을 수행하고 있음
  - 이러한 선별적 국가들 중 미국과 호주를 선택한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음
- 먼저, 호주의 경우 사회보장제도에서 공공부조 제도가 차지하는 역할이 매우 큼(임완섭 외, 2017)
  - 호주는 중앙집권적인 형태의 관리체계를 가지면서 범주적인 공공부조 제도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특히, 센트럴링크라는 다른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형태의 서비스 관리·운영의 전달체제로 정부의 주요한 복지서비스를 수요자에게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미국 역시 선별적 복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며, 공공부조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도 그 수급기간을 제한하는 등 수급자 통제방식의 복지제도를 운영 중에 있음
    - 또한 사회보장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나 노동부, 재무부 등 주무 부처별 감사실은 물론 감사청에서도 부정수급의 예방을 위한 강력한 대응을 수행하고 있음
- 미국과 호주의 사례연구를 통해 한국에 적용 가능한 부정수급 예방 및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한국에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 도출 필요
  - 또한 부정수급 규모(또는 현황)에 대한 집계·추정 방법, 공표 방법, 관련 실태조사 추진 여부 등을 파악, 한국의 부정수급 대응에 대한 정책함의 도출 및 향후 부정수급 실태조사 수행에 이러한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시

## 제2절 미국의 사회보장 부정수급 관리와 함의

### 1. 개요

- 미국은 2019년 기준 연방정부 지출액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규모가 크며 이에 따라 부정정 지출액 규모 역시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음(Yamakawa, 2018)
- 미국 연방정부의 2019년 총 지출액은 52,872억 달러이며, 부정정 지출액 규모는 약 1,750억 달러로 부정정 지출액의 규모는 약 3.3%정도임
  - 이 중 Medicaid, Medicare, EITC 등 3개의 주요한 연방정부 프로그램에 약 69.1%에 달하는 1,210억 달러의 부정정 정부지출이 집중되어 있음
  - 2002년 「부정정 지출 정보에 관한 법률(Improper Payments Information Act, IPIA)」이 제정되면서 부정정 지출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OMB 지침)이 마련되어 모든 정부부처로 하여금 그 지침의 구체적인 기준들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 미국에서 사회복지 부정수급 관리는 부정정 지출 관리의 틀에서 이루어짐
  - 미국에서의 부정정 지출은 “그릇된 원인(wrong reason)”에 의해, “그릇된 사람(wrong person)”에게 “그릇된 금액(wrong amount)”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이오, 2011, p.2)
  - 즉, 부정정 지출<sup>26)</sup>의 주요원인과 지출주체 및 부정정 지출금액 수준이 관리의 대상임을 알 수 있음
    - 한국의 부정정 지출에 대한 예방·대응에 대한 정책적 함의 도출을 위해서는 미국의 부정정 지출 관리운영 체계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부정정 지출(Improper Payments)에 대한 개념정의(U.S. OMB, 2018)
    - 부정정한 지급이란, “법, 계약, 행정절차 등 기타 합법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요구에 준하여 부적절하게 지급 또는 잘못된 금액(초과지급이나 과소지

26) 미국에서는 ‘fraud, waste, abuse, error’ 등을 포함하여 ‘improper payment’라고 일컫고 있음.

급 모두를 포함)을 지급한 것”을 의미함(U.S. OMB, 2018)

- 이러한 부적정한 지급은 다시 의도적인 부정수급(intentional fraud), 착오적인 지급오류(unintentional payment errors), 불충분한 자료(insufficient document)에 근거한 잘못 지급된 사례 등으로 그 유형을 구분해 볼 수 있음
- 이러한 부적정 지출의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부는 “정당한 사람(right recipient)이 정당한 이유(right reason)로 정당한 급여(right payment)를 정당한 시기(right time)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음(U.S. White House, 2009)

## 2. 부적정 지출(improper payments) 관리·운영 체계

### 가. 부적정 지출 관리운영 주체의 기능과 역할

□ 미국의 부적정 지출 관리 및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연방정부의 조직 체계는 다음과 같음(원종학, 허경선, 강동익, 2019. p.102)

#### ○ 예산관리청(Office of the Management of the Budget: OMB)

- 대통령 직속 기관인 OMB는 정책, 예산, 규제, 입법 등의 기획·실행을 관장
- 관련법에 근거, 정부보조금 관리 체계의 기본 틀을 기획 및 관리
- OMB circular(지침)를 마련, 이를 통해 정부기관의 보조금 관리 체계 규정

#### ○ 정부책임청(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

- 정부기관 감사원 역할 전반을 수행함(단, 의회산하 기관으로 의회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 있어서 한국 감사원과 차이가 있음)
- 연 평균 800~900개 정도의 감사를 진행
- 회계 감사뿐만 아니라 성과 감사 등도 수행
- 각 정부 기관이 부적정 지출 보고의 기준이 되는 OMB의 지침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감사
- 감사결과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안

## ○ 일반감사청(Office of the Inspector General: OIG)

- 각 정부 부처 내 내부 감사(Inspector General)를 두어 기관 자체의 개별 보고서 및 문건을 감사
- 부처 조직 내부의 부정(fraud)을 감사하고 정책 자문을 함
- 정부부처의 기관장과 미국 의회에 1년에 2회 반기별로 감사결과 보고
- OMB 지침에 의거하여 보조금 관리 전반과 부적절한 지출 관리 체계가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감사

〈표 5-1〉 연방정부의 부적정 지출 관리·운영 주체별 주요 역할

기관	주요 역할
예산관리청 (Office of the Management of the Budget: OM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정책, 예산, 규제, 입법 등의 기획 및 실행을 관장</li> <li>- 관련법에 근거하여 보조금 관리 체계의 기본 틀 기획 및 관리</li> <li>- OMB circular(행동 지침)를 통해 정부 기관의 보조금 관리 체계 규정</li> </ul>
정부책임청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사원 역할 전반을 수행함(단 국회산하 기관으로 국회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는 데 있어 한국 감사원과 차이가 있음)</li> <li>- 연 평균 800~900개 정도의 감사를 진행</li> <li>- 회계 감사뿐만 아니라 성과 감사 등을 수행</li> <li>- 각 정부 기관이 OMB의 보조금 관리 체계 지침을 충실히 이행하는지 감사</li> <li>-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안</li> </ul>
일반감사청 (Office of the Inspector General: OIG)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정부 기관은 고유의 Inspector General(감사)을 두어 내부 문건을 감사</li> <li>- 내부 부정을 감사하고 정책 자문을 함</li> <li>- 기관장과 미국 의회에 반년마다 감사결과 보고</li> <li>- OMB 지침에 의거하여 보조금 관리 전반과 부적절한 보조금 지급 관리 체계를 적합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감사</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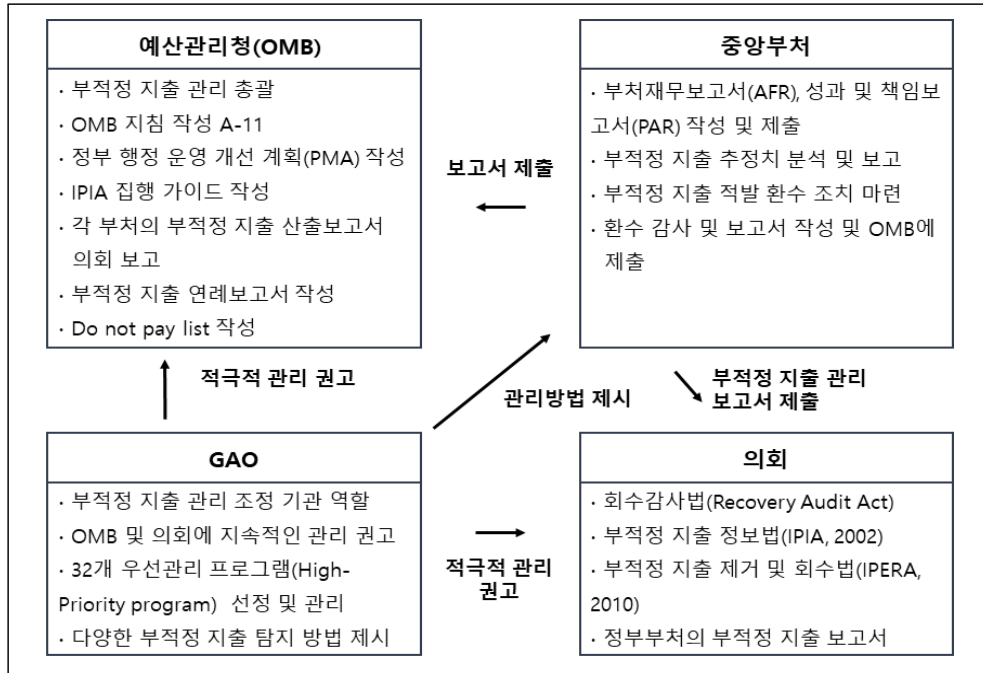
자료: <https://www.grants.gov>; 원종학 외. (2019). 부정수급 관리방식의 국제비교. p.101 내용 재구성.

□ 각 부처는 의무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부적정 지출규모를 연차별로 추정하여 보고할 의무가 있음

○ 각 부처조직에서 현재 추진 중인 프로그램과 활동에서 발생하는 부적정 지출 규모가 전체 사업 예산의 2.5%를 초과하거나 1,000만 달러를 초과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부적정 지출 추정액, 예상하는 회수 가능 금액, 회수 방법 등을 기술하여 성과보고서에 첨부함(오윤섭 외, 2016. p.214)

○ 미국에서 부적정 지출 관리의 주체 및 역할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음

[그림 5-1] 부정수급 관리 방안



자료: 오윤섭 외. (2016). 부정수급 및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모니터링 - 사회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p.57에서 발췌 및 저자 수정·보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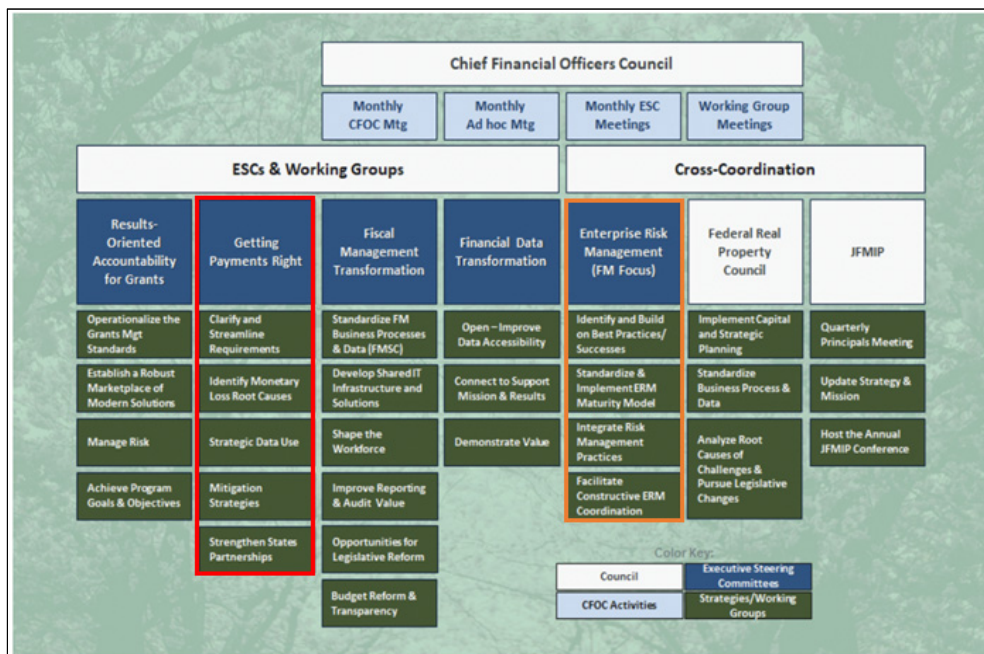
#### □ 국가재정위원회(Chief Financial Officers Council)(U.S. CFOC, 2020a)

- 본 위원회 조직은 1990년 최고재정담당관법(CFO Act: Chief Financial Officers Act)이 제정이 되면서 탄생함
- 위원회 조직에는 재정규모가 큰 연방정부 조직들의 최고재정담당관(CFO)과 부담당관, 예산관리청(OMB)의 고위담당관, 재무부의 고위담당관 등으로 구성되며, 미국의 국가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음
- 또한, 본 위원회는 위원회 참여 정부부처의 다음과 같은 다양한 활동들에 관한 협의 및 조정을 위해 설립됨
  - 재무 시스템의 통합 및 현대화
  - 재무정보의 질 개선
  - 재정 데이터 및 정보표준(information standards) 방안(내부 통제 체계

구축, 재무운영 및 조직을 규율하는 법제정 등) 마련

- 부적정 지출 대응과 관련해서는 [그림 5-2]에서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Getting Payment Right’과 같은 연방정부 부처 간 워킹그룹 조직 및 운영을 통해 부처 간 부적정 지출을 위한 원활한 협력을 이끌고 있으며, 개별 부처를 초월하는 ERM(위험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러한 협력체계를 보다 실질적으로 관리토록 하고 있음

[그림 5-2] 국가재정위원회(Chief Financial Offices Council, CFOC) 조직도



자료: U.S. CFOC. (2020e). Org. Structure. Retrieved from <https://www.cfo.gov/about-the-council/#orgstructure> 2020. 12. 05.

- 위원회 구성을 보다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음
  - 위원회의 위원장 역할을 예산관리청(OMB)의 행정부실장(Deputy Director for Management of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이 주로 수행함
  - 예산관리청의 연방정부 재정관리실 감사관(Controller of the Office of

Federal Financial Management)이 주로 행정부실장을 대신하여 조직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역할을 수행함

- 재무부 재무담당관(Fiscal Assistant Secretary of Treasury)
- 예산관리청, 노동부, 재무부, 보건복지부 등 연방정부 부처의 최고재정담당관이 포함됨

□ 부적정 지출 총괄위원회(Executive Steering Committee)(U.S. CFOC, 2020a)

○ 정부지출 무결점 우선지구(Payment Integrity Priority Area)를 위한 총괄위원회(Executive Steering Committee, ESC)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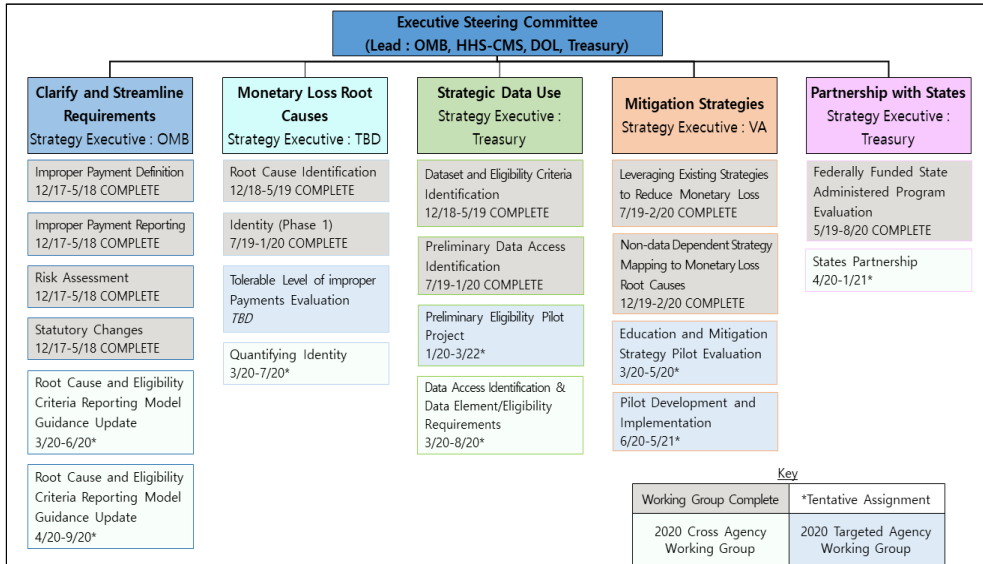
- 정부지출 무결점 우선지구란, 정부지출에 따른 금전적 손실의 최소화 또는 올바른 지출을 최고 우선순위로 둬으로써 납세자의 세금에 대한 책무를 다하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납세자에게 부적정 지출에 관한 정확한 정보나 근본 원인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역량을 확보하고자 구성됨.
- 정부지출 무결점 우선지구를 위한 총괄위원회 구성은 아래와 같음
  - 예산관리청(OMB),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재무부(Department of Treasury),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CMS(Center for Medicaid and Medicare Services)

○ 부적정 지출 총괄위원회의 기능

- OMB의 부적정 지출 지침을 명료하게 하고 부적정 지출의 근본 원인을 밝히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부처조직들 간 또는 각 정부(연방, 주, 지방정부 등)간 상호협력을 통해 다양한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워킹그룹(Working Groups, WGs)을 총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림 5-3]이 총괄위원회(ESC)의 조직도임



[그림 5-3] 부적정 지출 방지를 위한 다부처 총괄위원회(ESC) 조직도



자료: U.S. CFOC. (2020c). Executive Steering Committee. Retrieved from <https://www.cfo.gov/payment-integrity> 2020. 12. 05.

□ 감사위원회(Council of the Inspectors General on Integrity and Efficiency, CIGIE) from <https://www.ignet.gov/content/enterprise-risk-management-erm-working-group>

#### ○ 감사위원회의 위원회 목적

- 위험관리 인력의 전문성 증진을 위해 포럼을 개최하고, 각 부처 감사실(OIGs)에 자문을 제공하고 부처 간 커뮤니케이션을 개선함
- 전문 객원 강사를 통해 ERM(Enterprise Risk Management)<sup>27)</sup>의 최근 성과를 확산하고 있음
- 선진적인 실천방법의 상호교환을 독려하고 지식 공유 플랫폼을 개발함
- 감사위원회(CIGIE) 구성위원 및 ERM에 참여하고 있는 부처를 보조하기 위한 중견 전문인력을 확보 및 유지함
- 전문적인 ERM 워킹그룹과 상호협력을 제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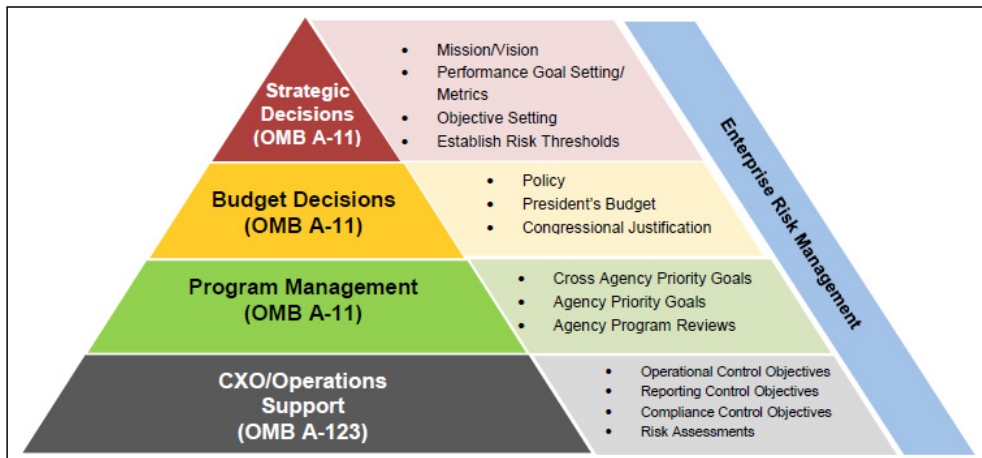
27) 미국정부는 부적정한 보조금 지급(Improper Payment)을 위한 관리 방안 수립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위험 관리 체계로 'Enterprise Risk Management' 체계를 도입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 OMB 지침(circular A123)에 의하여 정부 기관의 위험 관리 체계가 ERM 위주로 개편되었다(원종학 외, 2019).

- 감사기획 과정을 통해 ERM 위험 사정 접근(Risk Assessment Approach)을 집행
  - 감사 기획 분과그룹(Audit Planning Guide sub-group)은 각 감사계획을 지원하는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는 각 부처의 감사실 조직을 돕기 위해 결성됨
  - 각 기획과정은 ERM 원칙을 구체화하고 개별 기관이나 프로그램의 위험도 평가를 돕는 것으로 이뤄짐. 또한 그 과정은 OMB 지침 A-123, 부정수급 감소 및 데이터 분석법(Fraud Reduction and Data Analytics Act of 2015)의 준수를 촉진하고 있음
- 참여 부처/기관에서의 ERM 집행을 감사함
  - 분과그룹의 목표는 ERM 집행감사를 요청하는 감사실(OIG)를 위해 기준을 제시하고 최상의 실천사례를 공유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개발함
- 소규모의 감사실(OIGs)에서의 ERM
  - 선도적인 실천방법을 토론할 수 있는 포럼을 구성하여 협력을 도모하고 ERM과 관련된 프로젝트 상의 자원을 공유토록 함
  - ERM 집행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소규모 감사실의 니즈와 도전과 관련 해서 감사위원회(CIGIE community)에 도움을 요청토록 함
- ERM 실천 가이드 개발
  - 실천가 가이드 분과그룹은 각 감사실이 ERM을 개발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서 구축됨
  - 또한, 감사실의 미션과 목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상황을 확인하고 관리하기 위해 ERM 분석틀(Framework)을 개발하거나 집행하는 것을 지원함(위험관리활동을 감독하는 관리구조를 포함)
- OMB 지침(Circular) 번호 A-123은 ERM을 “단일 기관 내 위험을 부분적으로 언급하기 보다는 다양하게 연결된 총 영향효과를 포괄적으로 이해하게 함으로써 각 조직 내·외부의 전체적인 모습을 살필 수 있는 부처 횡단적인 접근방법 (agency-wide approach)”으로 정의하고 있음

- ERM은 provides 각 조직 미션의 성공적인 달성을 위해 효과적으로 자원 배분을 하는 데 통찰을 제공함과 동시에 조직 전체에 걸쳐서 각 조직이 처한 다양한 도전을 전략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토록 함
  - 각 조직의 전략적 목표 및 성과 목표 달성과 관련된 모든 위험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미션 달성과 관련한 위험을 측정하고 평가해야만 함
  - 부적정 지출과 관련해서, ERM 분석틀(framework)은 지출 무결점 위기(payment integrity risk)를 지원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음
    - 각 부처가 자신의 전략목표, 운영목표, 보고 및 순응목표를 달성하는 지출 무결점 위기를 관리토록 요구하고 있음
  - 부처별 무결점(integrity) 위기 관리의 수준은 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존재할 수는 있으나 각 부처의 핵심목표에 있어서는 공통적이며 본질적인 요소임
- 무결점 위기 관리가 이뤄지는 영역의 대표적 사례로는 다음과 같음
- 위기관리의 정도는 기관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급여지급에 있어서 무결점을 달성하는 것은 각 기관의 핵심 미션 달성에 근본적인 요소이며, 지출 무결점 위기는 다음과 같이 세분화되어 관리됨
    - 전략목표(Strategic) : 기관의 핵심 프로그램이나 목표에서 지출 무결점을 달성함
    - 운영목표(Operations) : 급여지출이 부정수급 없이 자격이 있는 수급자에게 이뤄지도록 관리함
    - 보고(Reporting) : 부처의 재정보고서와 관련된 데이터 무결점을 안정적으로 관리함
    - 순응(Compliance) - 부적정 지출 관련 법·규정과 OMB 지침의 순응정도를 보고함
- 종합적인 위험성 관리(Enterprise Risk Management, ERM)를 도입, 부적정 지출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운영(원종학 외, 2019, pp.105-106)

- 최상위의 종합적인 위험 관리 체계로 ERM(Enterprise Risk Management) 체계를 도입하여 운영
- ERM 체계 속에서 부적절한 지출(Improper Payment)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관리 방안 수립
- 2014년 이후 부적절한 지출 관리의 일환으로서 부정수급 관리 대책(Fraud Risk Management) 발표
- OMB 지침(A-123)에 따라 ERM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각 부처조직에 감사실(Offices of the Inspectors General, OIGs)을 두고 있음

[그림 5-4] ERM의 정책결정과정(policy framework)



자료: U.S. CFOC. (2016). Enterprise Risk Management (ERM) Playbook:  
<https://cfo.gov/wp-content/uploads/2016/07/FINAL-ERM-Playbook.pdf>. 2020. 12. 05.

- ERM의 정책결정 분석틀은 내용은 다음과 같음(U.S. CFOC, 2016)
  - [그림 5-4]에 제시된 ERM 체계는 각 부처조직의 전략적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임
  - 먼저, 각 부처조직은 자체적으로 수립한 전략목표와 비교해 위험 기준점을 설정할 뿐만 아니라 핵심 위험요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위험도 평가 및 우선순위 설정은 부처의 사업계획, 예산수립, 그

리고 성과목표 수립 등에 걸쳐 전략적 계획을 구체화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단계임

- OMB 지침(Circulars A-11과 A-123)에 의거해 수립된 ERM 지침 이외에, 예산관리청은 연방의 재정관리 절차에 위험 관리 절차를 통합하는 지침을 제공하고 있음
  - 이러한 위험관리 지침은 위험관리 뿐만 아니라 연방 재정정책위원회의 수립이나 정기적인 사업 검토를 통한 사업의 효율성 개선을 위한 데이터 보고, 증거활용을 위한 안내를 포함하고 있음
  - 또한, 이러한 과정은 최상의 실천방법을 확인하고 실행하기 위한 다부처 공동포럼 등을 포함하고 있음
- 정부 책임청(GAO)은 연방정부 내부통제를 위한 표준안을 발표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음
  - 이 표준안은 연방정부의 부처를 위한 효과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을 위한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 효과적인 내부 통제 시스템의 설계, 집행 및 운영을 위한 위 그림과 같은 전략적 결정(strategic decision), 예산안 결정(budget decision), 사업 관리(program management)와 사업운영 지원(operations support) 등으로 구성된 정책분석 틀(policy framework)을 제공하고 있음

□ 각 부처기관은 보조금 지출 관리 노력을 Agency Financial Report(AFR) 또는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Report(PAR)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원종학 외, 2019. p.105)

- 각 부처조직의 지출 기본 구조 및 주요 위험과 이에 대응하는 관리 및 개선방안 보고
- 부적절한 지출 관리와 부정수급 위험 관리방안 보고
- 감사청(OIG)은 각 부처의 보고서를 근간으로 지출 관리 체계를 감사

□ 부적정 지출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관련 입법 활동(Payment Integrity Legislation)

○ 「부적정 지출 정보에 관한 법률(Improper Payments Information Act of 2002, IPIA)」을 통해 OMB 지침 A-11 보다 더 강력한 요구사항이 정부기관에 부과됨(이오, 2011)

- 정부부처는 부적절한 지출 가능성이 있는 사업 및 활동을 검토하도록 규정됨(오윤섭 외, 2009)
- 각 부서의 최고 책임자는 담당 부서의 모든 프로그램의 부적정 지출 발생 위험을 평가하고, 고위험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대한 연간 부적정 지출 금액을 추정해야함
- 부적정 지출 추정액이 전체 사업 예산의 1%를 초과하는 경우와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가 부적정 지출 감소를 위해 취한 조치 등에 대한 보고가 의무화 됨(오윤섭 외, 2016, p.215)

○ 「부적정 지출 척결 및 환수법(Improper Payments Elimination and Recovery Act of 2010, IPERA)」

- 2010년 도입되어, 부적정 지출의 예방·확인·회수를 위해 기관별로 부적정 지출금액을 추정케 하고 환수감사(recovery audit)를 통해 부정수급액을 환수하고 재정관리 개선프로그램을 마련하게 함(이오, 2011)
- 부적정 지출 의심 사업에 대해 최소 3년마다 점검하고, 부정이나 과실로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기 위해 실시하는 환수감사(recovery audit) 실시 대상을 연간 예산이 10만 달러 이상인 사업으로 정하되 비용-효과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오윤섭 외, 2016)

○ ‘IPERA 2010’은 2012년「부적정 지출 척결 및 환수개선법(Improper Payments Elimination and Recovery Improvement Act of 2012, IPERIA)」으로 개정됨(원종학 외, 2019, p.119)

- 해당 법 개정을 통해 OMB는 부적정 지출을 줄이기 위한 목표치를 매년 설정하고 반기 또는 분기별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해마다 특별한 관리·감독 및 검토가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리스트로 작성하게 됨

- Do Not Pay(DNP) 시스템 : 온라인 기반으로,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이 이뤄지기전 공급자의 자격을 보다 정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연계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데이터 매칭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DNP 시스템 구축

○ 「부적정 지출 조정법(Federal Improper Payments Coordination Act of 2015, FIPCA)」

- 부적정 지출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부처 간 정도의 공유 및 활용을 개선토록 하고 있음
- 부적정 지출 예방을 위해 데이터 접근과 사용과 관련한 부처 기관들 간의 가이드라인 제시

○ 「부정수급 감소 및 데이터분석법(Fraud Reduction and Data Analytics Act of 2016, FRDAA)」

- 부정수급(fraud)과 부적정 지출과 관련한 재정적·행정적 관리체계 구축
- 부적정 지출 해소를 위해 OMB가 주축이 되어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음

○ 「지출 진실성 정보법(Payment Integrity Information Act of 2019, PIIA)」

- 기존의 부적정 지출과 관련 법령을 수정하고 재조정하는 것이 주요한 부분이며, 연방정부로 하여금 부적정 지출 감소하는 요건을 수립함
- 예산관리청(OMB)는 부적정 지출 요건 준수와 부적정 지출 해결에 있어서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유인책을 실험하는 1개 이상의 실험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예산관리청으로 하여금 사회보장청에 의해 관리되는 사망자 데이터를 개선하여 사망자 데이터에 대한 연방정부의 활용도를 개선노력을 하도록 하고 있음
- 지출 진실성을 위한 부처 간 워킹그룹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3. 부적정 지출(improper payments)의 현황 및 성과

□ 2019년 미국의 부적절한 정부지출금액은 약 1,750억 달러로 추정되며, 이는 전년도 보다 약 15.9%가 증가하는 약 240억 달러 증가한 금액임(U.S. GAO, 2020a, p.250).

○ 부적절한 정부지출금액은 과소수급(under payment)과 과대수급(over payment)을 모두 포함한 개념으로, 약 78개 정부 주요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부적절 지급액을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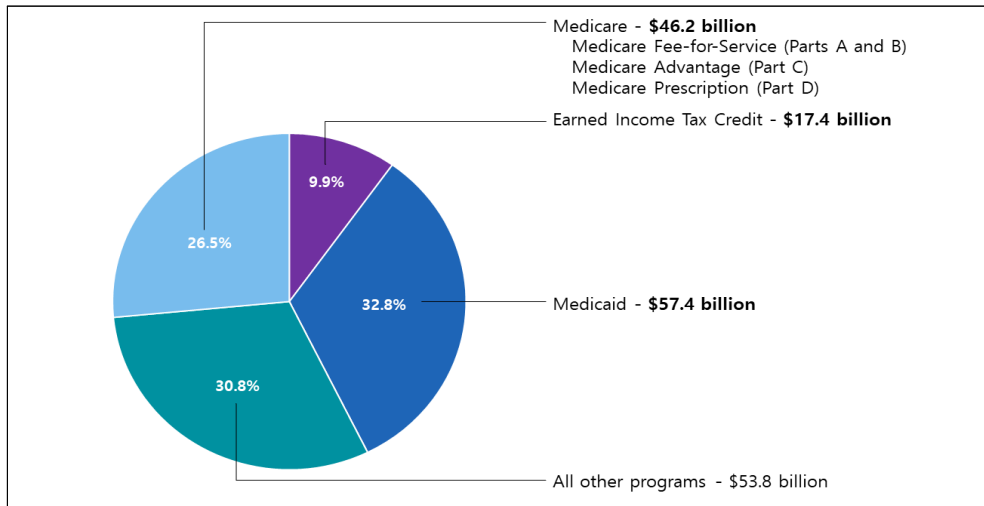
- 부적절 지급액은 과대지급액이 791억 달러(약 45.2%), 과소지급액이 129억 달러(7.4%)로, 확인되지 않은 741억 달러(42.4%), 법·규정의 미비로 인한 부적정 지출로 산정되는 87억 달러(약 5%) 등으로 구분 가능
- ‘고 위험 목록’에 해당하는 우선관리 프로그램(High-Priority Programs)에 대한 부적절 지출액은 1,370억 달러임(U.S. GAO, 2020a, p.250).

○ 부적정 지출액인 1,750억 달러 중 가장 규모가 큰 주요한 연방정부 프로그램(Medicaid, Medicare, EITC) 3개에 1,210억 달러(약 69.1%)가 집중되었음

- Medicare 프로그램의 경우, 의료적으로 불필요한 서비스 등에 비용지출을 했거나 불충분한 서류에 따라 잘못 비용지급을 한 경우가 많음
- Medicaid 프로그램의 경우, 의료면허가 정지되거나 문제가 있어 자격이 없는 의료제공자에게 비용이 지급된 경우가 많음
- EITC 프로그램의 경우, 급여정보가 확인불가능하거나 컴퓨터 시스템의 한계로 인해 잠재적으로 자격이 없는 수급자에게 잘못 지급한 경우가 포함되어 있음



[그림 5-5] 2019년 연방정부 프로그램별 부적정 지급액



자료: U.S. GAO. (2020b). PAYMENT INTEGRITY: Selected Agencies Should Improve Efforts to Evaluate Effectiveness of Corrective Actions to Reduce Improper Payments Report to Congressional Addressees.

○ 각 부처별 재정보고서(AFRs) 성과 및 책임보고서(PARs)에 포함된, 2019년 기준 비적정 정부지출의 유형과 원인 그리고 2018년 기준에서의 유의미한 변화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음(U.S. GAO, 2020a, pp.8-9)

- 2019년 전체 부처별로 집계된 부적정 지출액인 1,750억 달러는 다음과 같이 세분화됨
  - 과다지출(over payments), 총 791억 달러(약 45.2%)
  - 과소지출(under payments), 총 129 억 달러(약 7.4%)
  - 알려지지 않음(unknown), 총 741 억 달러 (약 42.4%)
  - 법·규정 미비로 인한 기술적 부적정 지출(technically improper due to statute or regulation), 총 87 억 달러(약 5%)
  - 금전적 손실(monetary loss)로 보고된 액수는 총 746억 달러(약 42.7%)
- 2019년 각 부처별로 부적정 지출로 집계된 총 1,512억 달러를 그 발생 원인별로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음
  - 불충분한 서류(Insufficient documentation): 약 741억 달러(약 42.4%)

- 행정적 착오(Administrative or process error): 약 391억 달러(약 22.4%)
- 자격여부 확인 불가능(Inability to authenticate eligibility): 약 380억 달러(21.8%)

- 2019년도는 2018년에 비해 약 240억 달러가 증가했음. 이 중 1,000만 달러 이상 변동이 있는 프로그램의 개수는 총 11개 프로그램이며, 이중 6개 연방정부 프로그램은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5개 프로그램은 감소함

□ 2018년과 2019년 사이 부적정 지출에서 크게 변화가 있는 프로그램의 종류와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U.S. GAO, 2020b)

○ 보건복지부(HHS)

- 메디케이드(Medicaid) 프로그램의 경우, 약 211억 달러의 부적정 지출 증가를 보고하고 있으며 그 원인은 주로 지급오류율(Payment Error Rate Measurement, PERM)의 자격요건 재통합으로 인해 발생함
- 보건복지부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수급자 자격결정으로 인한 부적정 지출을 2014년에 수립된 자격기준으로 최근까지 보고된 대리추정치(proxy estimate)를 적용하여 보고하고 있었으나, 현재에는 이러한 자격기준 대리추정치에 대한 업데이트 작업을 수행 중임
  - 2019년 보건복지부(HHS)는 미국 전체의 1/3 정도가 되는 17개 주에서 자격결정(eligibility determinations) 기준에 기인한 부적정 지출액을 산정하였고 나머지 34개 주에서는 정부에서 정한 대리추정치(proxy estimate)를 적용하여 부적정 지출을 추정하고 실정임
- 또한 불충분한 자격관련 서류문제로 발생하는 이것은 주로 소득이나 자산에 확인이 불가하여 발생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음
- 2019년 보건복지부 재정보고서(AFR)는 메디케이드의 부적정 지출의 주요 인으로 서비스 제공기관의 선별 및 등록요건(screening and enrollment requirements)에 대한 불순응에서 비롯되는 오류라고 볼 수 있음
- 반면에 메디케이드 FS(Fee-for-Service, Parts A and B) 프로그램의 경

우, 약 27억 달러 규모의 부적정 지출 감소를 2019년의 성과로 나타남

- 이것은 특히 가정보건(home health)분야에서의 감소폭이 큰 것으로 설명될 수 있음

○ 재무부(Department of the Treasury)

- 2019년 재무부의 2개 프로그램이 ‘상당한 부적정 지출’(susceptible to significant improper payments)이 가능성이 높은 프로그램 목록에 포함됨. 즉, Additional Child Tax Credit(약 72억 달러),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약 21억 달러) 등이 높게 보고됨

〈표 5-2〉 2019년 미국 연방정부의 부적정 지출액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8년	2019년
모든 프로그램	150,660	118,982
- 과대 지급	138,595	79,100
- 과소 지급	12,066	12,900
최우선순위 프로그램	136,644	106,490

자료: PaymentAccuracy. (2020). Annual Improper Payments Datasets. Retrieved from paymentaccuracy.gov 2020. 12. 05.

- 연도별 연방정부 전체 부적절 지급액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 잠시 감소하다가 다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5-3〉 연도별 미국의 부적절 지급액 (2012-2019)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부적절한 보조금 지급액	107,681	105,921	124,607	136,951	144,413	140,871	150,660	174,800

자료: PaymentAccuracy. (2020). Annual Improper Payments Datasets. Retrieved from paymentaccuracy.gov 2020. 12. 05.

〈표 5-4〉 2019년도 부적정 지급 원인별 지급액

(단위: 10억 달러)

부적정 지급 원인(root cause) 유형	2019년 부적정 지급액(기관보고 추정치)	비율(%)
불충분한 서류	74.1	42.4
행정적 오류	39.1	22.4
수급자격 입증 불가	38.0	21.8
프로그램 설계 및 구조적 문제	14.1	8.0
의료적 필요	5.4	3.1
데이터 확인 불가	3.5	2.0
기타	0.6	0.3
소계	174.8	100.0

자료: PaymentAccuracy. (2020). Annual Improper Payments Datasets. Retrieved from paymentaccuracy.gov 2020. 12. 05.

□ 부적정 지급원인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aymentAccuracy, 2020)

○ 불충분한 서류 문제

- 급여지출의 정확성을 증명하는 데 요구되는 근거서류(문서)의 부족에서 비롯된 원인임. 예를 들면, 급여의 수급자 기준을 지지할 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 서류 없이 정당한 급여액이 지급되었거나 정당한 수급자에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임

○ 행정적 오류(Administrative or process errors)

- 행정적 오류는 잘못된 자료 입력이나 분류, 그리고 잘못된 신청이나 급여지출 과정에서 나타남. 예를 들면, 정당한 자격이 있는 수급자가 데이터 입력 실수로 인해 과도한 급여 또는 과소한 급여를 받은 경우 등을 말함

○ 수급자격 확인 불가(Inability to authenticate eligibility)

- 기관이 수급자격 기준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자료에 대한 접근 불능이나 필요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함

○ 프로그램 설계 및 구조문제(Program design or structural issue)

- 프로그램의 설계나 구조적 문제로 인해 부적정 지출이 발생한 경우임. 예를 들면, 정확한 지급을 확정하기 위한 정보가 충분히 수집되는 것과 관계없이 지급시기 급여를 제공토록 하는 법적 규제가 있는 프로그램이 그러한 사례임

## ○ 의료적 필요(Medical neces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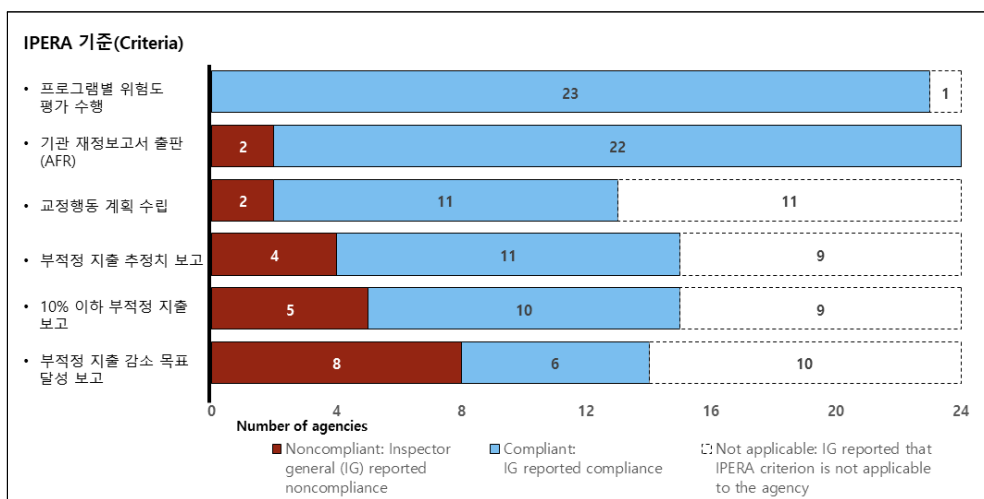
- 의료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의료적 처치에 요구되는 커버리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서비스나 물품을 제공한 경우임
- 예를 들면, 의료적 기록이 전동 휠체어 급여조건(coverage requirement)을 충족하지 못한 환자에게 그것을 제공하는 경우 등이 있음

## ○ 데이터 확인불가(Failure to verify data)

- 연방정부의 보조금을 집행하는 연방, 주, 지방정부 또는 제3의 주체가 해당 수급자의 특정 급여 수령여부를 결정할 만한 적합한 데이터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임. 이 경우, 요구되는 데이터는 존재하며 해당기관이 이 데이터에 대한 접근도 가능하나 급여지급 이전에 해당 데이터와 급여를 비교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음

□ 예산관리청(OMB)이 선정한 우선관리 프로그램 중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대한 부적절 지급액 추이 및 현황을 살펴보면 [그림 5-6]과 같이 나타남(U.S. GAO, 2020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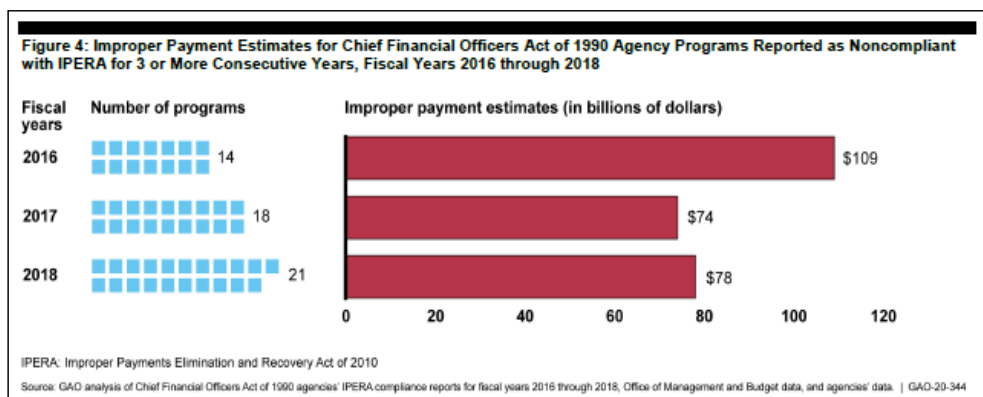
[그림 5-6] 2018년 기준 각 기관 감사(IG)가 IPERA 기준 준수 부처기관 수



자료: U.S. GAO. (2020a). Payment integrity: Federal agencies' estimates of FY 2019 improper payment.

- 2010년 IPERA 제정 후 8년이 경과한 현재, 기관 감사관(IGs)에 의해 보고된 내용에 의하면 24개 최고재정담당관법(CFO Act) 참여 기관 중 절반이 IPERA 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 IPERA의 6가지 기준원칙(criteria)과 관련하여, 각 기관의 감사관(IGs)은 각 프로그램별 위험 사정(risk assessments)을 수행요건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음. 또한, 24개 부처기관 중 22개(92%) 기관이 성과 및 책임보고서(PAR)와 재정보고서(AFR) 제출요건을 충족함
- 2018년 기관 감사관의 보고서에 기초하여, 각 기관은 부적정 지출과 관련한 IPERA가 요구하는 연차별 부적정 지출 감소 목표치 제시 및 요구요건(requirement)을 가장 흔하게 따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요건이 적용되는 14개 부처기관 중 8개(57%) 부처기관 감사관만이 자신들의 부처기관이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음
- IPERA 요구조건에 두 번째로 가장 흔하게 보고되고 있는 영역은 부처별 보고된 부적정 지출률을 10%이하로 관리하는 것으로 이러한 요구조건이 적용되는 15개 부처기관 중 5개 부처기관(33%)이 이러한 요구를 따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5-7] IPERA 미준수로 인해 보고된 부적정 지출 프로그램과 추정액(2016-2018)



자료: U.S. GAO. (2020b). PAYMENT INTEGRITY: Selected Agencies Should Improve Efforts to Evaluate Effectiveness of Corrective Actions to Reduce Improper Payments Report to Congressional Addressees.

- PERA 기준 준수하고 있지 않은 프로그램의 수는 2016년부터 2018년 사이 14개에서 21개로 프로그램의 수는 7개나 증가하였으나 부적정 지출액은 오히려 1,090억 달러에서 780억 달러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18년 기준 부적정 지출액을 연방정부의 각 부처별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그 금액을 집계한 결과 362억 달러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EITC가 184억 달러, 지역사회 보호가 79.9억 달러, SSI 프로그램이 47.5억 달러 등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5-5〉 기관 IG(감사관)에 의해 보고된 IPERA 비순응으로 보고된 부적정 지출 추정치

(단위: 백만 달러)

부처	프로그램	추정금액
농무부	식품 및 영양 서비스 (학교조식프로그램)	469.3
	식품 및 영양서비스(WIC)	194.2
국방부	민병대급여(Civilian Pay)	85.0
	국방재정 및 회계서비스	15.0
	여행급여(travel pay)	365.3
	군인건강수당	91.2
	군인 급여	305.8
	퇴직수당	314.4
보건복지부	아동건강보험 프로그램(CHIP)	1,389.6
	가정위탁보호(foster care)	29.8
	메디케이드(Medicaid)	36,249.7
	TANF	미보고
노동부	실업보험	3,743.5
재무부	EITC	18,443.5
보훈부	여행급여	216.0
	전역자 건강프로그램	85.3
	장기요양서비스 및 지원	2,059.1
	물품 및 물자	829.2
	지역사회 보호	7,998.1
조달청	공간대여료	16.7
사회보장청	SSI	4,757.4
소계		77,658.2

자료: U.S. GAO. (2020b). PAYMENT INTEGRITY: Selected Agencies Should Improve Efforts to Evaluate Effectiveness of Corrective Actions to Reduce Improper Payments Report to Congressional Addressees.

○ OMB에 의해 우선관리 프로그램(High-Priority Program)으로 관리 운영되는 주요한 프로그램의 부적정 지출액의 연도별 추이변화는 <표 5-6>과 같음

- 2019년 기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은 573억 달러로 가장 규모가 크며, 그 총액 역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 다음으로는 173억 달러로 EITC 프로그램이며, 연도별 증감추이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5-6> 연도별 미국의 우선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부적절한 지급액 (2012-2020)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추정)
실업수당 (Unemployment Insurance (UI))	10,296	6,225	5,604	3,530	3,854	4,066	3,743	2,855	2,690
학생융자 (Direct Loan)	-	1,056	1,532	1,284	3,868	3,863	3,753	483	507
연방정부 장학금 (Pell Grant)	829	731	682	562	2,213	2,210	2,302	646	624
아동 건강보험 (CHIP)	704	646	612	632	738	1,236	1,389	2,736	-
메디케이드 (Medicaid)	19,235	14,376	17,492	29,125	36,253	36,731	36,250	57,358	-
메디케어 FFS (Medicare FFS)	29,571	36,033	45,754	43,326	41,085	36,208	31,618	28,908	32,203
메디케어 파트C (Medicare Part C)	13,100	11,767	12,229	14,117	16,183	14,352	15,554	16,728	22,933
메디케어 파트D (Medicare Part D)	1,593	2,091	1,931	2,234	2,394	1,296	1,318	607	756
임대주택 지원 (RHAP)	1,229	1,324	1,029	1,282	1,702	-	-	-	-
중소기업청 보증 허가 (7(a) Guaranty Approvals)	233	511	605	848	167	234	118	26	99
연금제도 (OASDI)	3,223	2,448	2,952	5,038	3,672	2,578	6,158	2,651	4,130
생활보조금 (SSI)	4,738	4,335	5,107	4,765	4,201	5,020	4,757	5,528	4,196
근로장려세제 (EITC)	12,600	14,500	17,700	15,600	16,763	16,232	18,443	17,351	18,000
학교 점심 급식 (FNS National School Lunch Program (NSLP) Total Program)	1,557	1,774	1,748	1,773	1,820	1,875	1,155	1,142	1,125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추정)
학교 아침 급식 (FNS School Breakfast Program (SBP) Total Program)	752	831	923	875	890	958	469	461	461
보훈 보상 (VA Compensation)	-	321	713	1,361	377	456	399	53	58
장기 서비스 및 지원 (VA Purchased Long Term Services and Support)	-	-	123	875	1,179	1,890	2,059	2,125	2,165
지역사회 케어 (VA Community Care)	-	-	311	2,143	3,587	5,258	7,998	7,212	7,322

자료: PaymentAccuracy. (2020). Annual Improper Payments Datasets. Retrieved from paymentaccuracy.gov 2020. 12. 05.

#### □ 연방정부의 부처별로 확인된 부정수급액(PaymentAccuracy, 2020)

○ 연방정부의 각 부처별로 부적정 지출로 확인된 부적정 지출 총액은 1747.8억 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부처별 부적정 지출액은 <표 5-7>과 같음

- 그 중 보건복지부(Health and Human Services, HHS)에 의한 적발 금액이 1,066억 달러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재무부(Department of Treasury)가 266.2억 달러, 보훈부(Department of Veteran Affairs)가 119.9억 달러,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가 86.8억 달러 등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5-7> 2019년 연방정부 부처·기관별로 확인된 부적정 지출액

(단위: 백만 달러)

구분	부정수급액	
	2018	2019
보건복지부(HHS)	86,462.3	106,671.7
국방부(DoD)	1,193.1	8,680.2
농무부(USDA)	6,104.8	6,762
철도 퇴직위원회(RRB)	89.8	-
환경보호청(EPA)	0.3	22.5
노동부(DOL)	3,817.8	2,928.7
주택도시개발부(HUD)	85.8	80.5
사회보장청(SSA)	10,915.3	8,180
조달청(GSA)	16	-
보훈부(VA)	14,735.1	11,990.4
국토안전부(DHS)	70.6	76.6
재무부(Treasury)	18,443.5	26,6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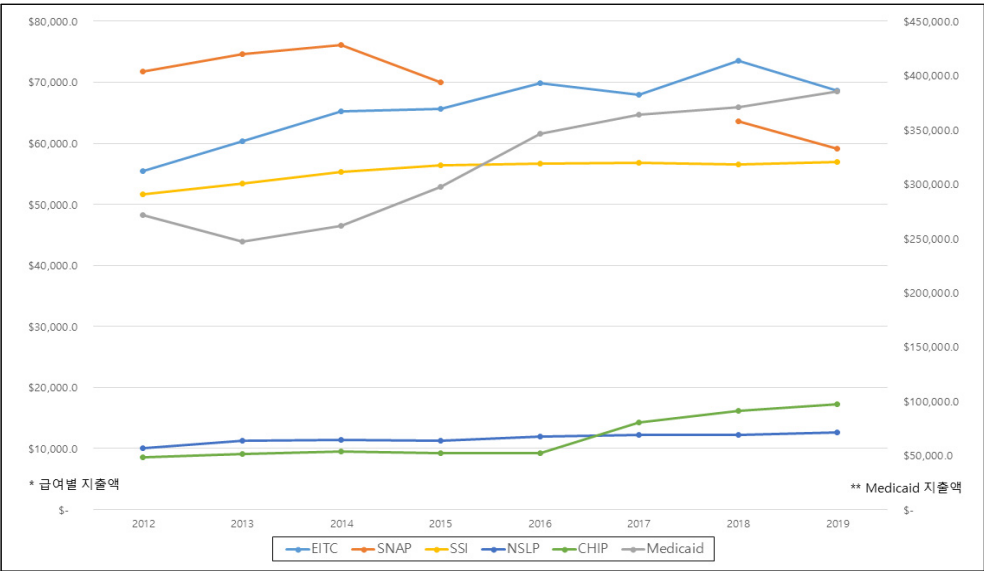
구분	부정수급액	
	2018	2019
인사관리처(OPM)	355.5	339.4
교육부(ED)	6,055	1,133
교통부(DOT)	1,006	395.7
국가 및 지역협력서비스(CNCS)	76	91.9
연방방송통신위원회(FCC)	296.6	285.4
중소기업청(SBA)	936	522
전체	150,659.5	174,787

자료: PaymentAccuracy. (2020). Annual Improper Payments Datasets. Retrieved from paymentaccuracy.gov 2020. 12. 05.

□ 주요 연방정부 프로그램 의 총지출액과 부적정 지출액의 현황 및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5-8]과 같이 나타남

○ 2019년 현재 보건복지부의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이 3,849.9억 달러로 가장 지출 총액의 규모가 가장 크며 재무부의 EITC 프로그램이 686.9억 달러로 그 다음으로 지출금액이 큰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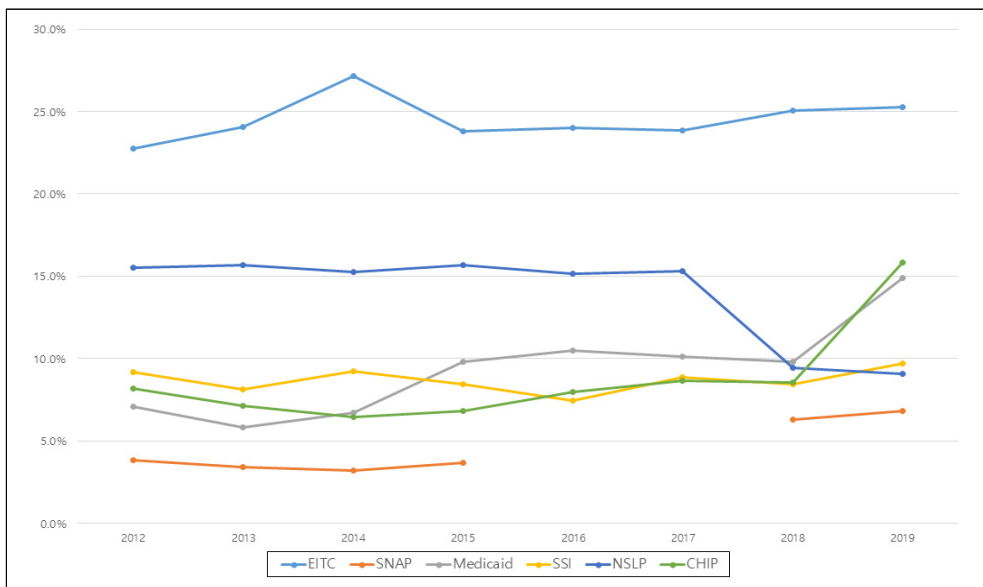
[그림 5-8] 주요 프로그램별 총 지출액



주: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자료: PaymentAccuracy. (2020). Annual Improper Payments Datasets. Retrieved from paymentaccuracy.gov 2020. 12. 05.

- 2019년 현재 중앙정부 프로그램 중 부적정 지출 비율은 EITC 25.26%, CHIP 15.83%, 메디케이드 14.90%, SSI 9.70%, NSLP(National School Lunch Program) 9.08%, SNAP(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6.08% 등의 순으로 높은 비율의 프로그램인 것으로 나타남
- EITC 프로그램은 부적정 지출 비율에서 2012년부터 연속해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최근 몇 년 동안에는 CHIP 프로그램,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SNAP(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등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에 NSLP(National School Lunch Program)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5-9] 주요 프로그램별 부적정 지급율



주: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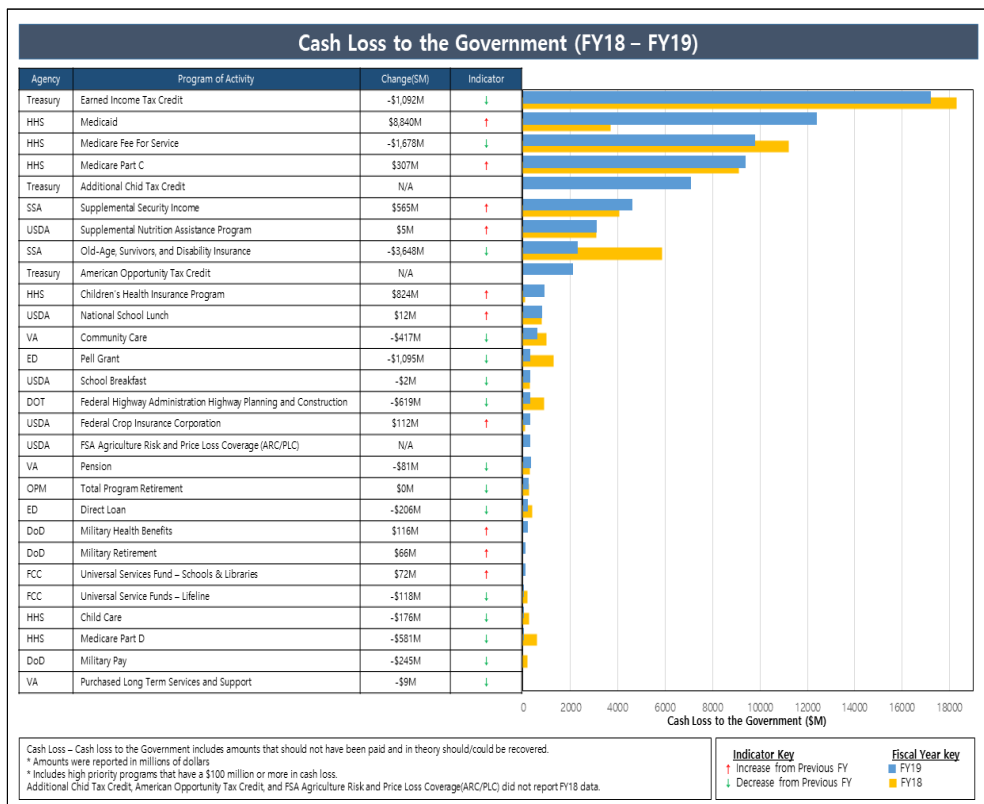
자료: PaymentAccuracy. (2020). Annual Improper Payments Datasets. Retrieved from paymentaccuracy.gov 2020. 12. 05.

- 연방정부 주요프로그램별 부적정 지출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손실액 규모를 2018년과 2019년 사이 변화를 분석한 내용은 [그림 5-10]과 같음

- 2018년과 비교해 2019년 변화가 가장 큰 프로그램은 메디케이드로 2018년 대비 88.4억 달러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SSI 프로그램 역시 전년대비 5.6억 달러가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됨
- 이에 반해 메디케어 FFC(fee for service)가 2018년에 비해 16.7억 달러가 감소하였으며 EITC 프로그램도 전년도 대비 10.9억 달러나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 연방정부 프로그램 중 부적정 지출액 규모가 가장 큰 메디케어(462억 달러), 메디케이드(574억 달러), EITC(174억 달러)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이 다양한 부적정 지출 방지 노력에 따라 점차 그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해 볼 수 있음(U.S. CFOC, 2019)
  - 먼저 메디케어(16.8억 달러 감소)나 EITC 프로그램(10.9억 달러 감소)은 2018년과 비교해 부적정 지출에 기인해서 발생하는 재정손실액 규모액이 크게 감소하는 성과를 획득하였음
  - 이러한 성과의 이유로는 먼저, 부처별 주요한 재정적 손실을 초래하는 부적정 지출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별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여하거나 OMB 지침에 열거된 핵심 지표를 활용한 문제 진단적 방법을 사용함
    - 둘째, 부적정 지출 발굴 및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최상의 방법(best practice)을 공유 및 확산함
    - 셋째, 부적정 지출에 관한 OMB 지침에 열거된 근본적 원인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부적정 지출 예방을 위한 부처별 최상의 방법의 적용을 위한 매뉴얼(playbook)을 제작하여 공유함
    - 넷째, 재정적 손실규모가 큰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며, 부적정 지출 데이터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자료수집 방법의 현대화 노력을 수행함
  - 그러나, 메디케어나 EITC 프로그램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은 오히려 전년도와 비교해 88.4억 달러나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대부분 대상자 자격기준 연도를 여전히 2014년에 적용하고 있는 것에서 비롯한다고 볼 수 있음

- 이 또한 최근 연도로 자격기준을 업데이트(reintegration)하는 완료되는 시점에는 크게 완화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음. 현재까지 17개 주의 경우에는 작업이 끝났으며 아직 33개 주는 작업이 진행 중임(House Republican Policy Committee, 2020)

[그림 5-10] 연방정부 주요 프로그램별 재정손실액(monetary loss)의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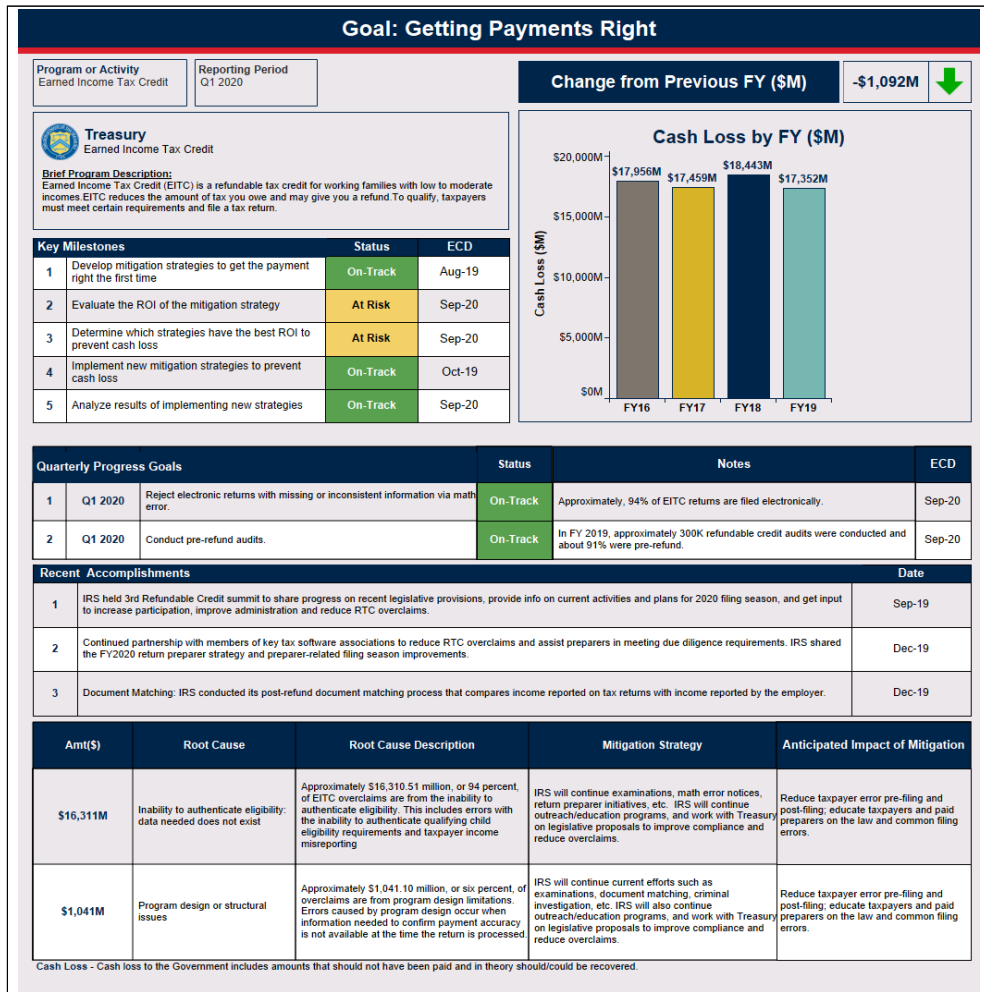
자료: U.S. CFOC. (2019). Cash Loss to the Government. Retrieved from [www.cfo.gov/payment-integrity](http://www.cfo.gov/payment-integrity) 2020.12.05.

□ 이와 별도로 우선 선정 프로그램은 추가적으로 연방정부 홈페이지(paymentaccuracy.gov)에 부적절한 보조금 지급에 대한 정보 공개하고 있음[그림 5-11] 참조(U.S. CFOC, 2020b)

○ 우선 선정 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을 관장하는 정부 기관, 총보조금 지급액, 부적절한 지급 추정액 보고

- 프로그램 담당 관리자, 부적절한 보조금 지급액 목표치, 대응방안 및 정책 성공 정도 등도 공개
  - 이외에도 확인된 부정수급액, 회수액 등 다양한 정보 공개
  - 연방정부는 부적정 지출 규모가 연간 20억 달러를 초과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관리 모니터링하여 이들을 고위험도 프로그램으로부터 제거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납세자에 대한 최고의 보답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아, 관련 홈페이지(<https://www.paymentaccuracy.gov/payment-accuracy-high-priority-programs/>)에 공개적으로 게시함
  - 우선관리 프로그램(High-priority programs)은 예산관리청(OMB)에 의해 지정되며,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처는 부가적인 보고요건을 의무화하고 있음
    - 2018년부터 재정손실 금액이 1억 달러가 넘는 프로그램을 우선관리 프로그램(High-Priority Programs)에 포함시킴으로써 부당한 정부지출을 최소화하여 정부의 효율 개선의 기회로 삼고 있음
  - [그림 5-11]은 부적정 지출 비율이 가장 높은 EITC의 정보 공개 사례를 예시한 것임
- 또한 모든 정부 부처 조직은 매년 기관 재무보고서(Agency Financial Report) 또는 성과 및 책임 보고서(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Report)를 통해 추정치를 포함한 부적절한 보조금 지급 현황을 의회 및 대통령에게 보고함(U.S. CFOC, 2020d)
- 보고서를 바탕으로 기관의 감사(Inspector General)는 의무 사항을 충실히 수행하였는지 감사
  - 정부책임청(GAO) 역시 절차적 적절성과 보고 내용과 방법의 적절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감사를 선택적으로 실시

[그림 5-11] 우선 관리 프로그램(high-priority program) 정보 공개 예시(EITC)



자료: U.S. CFOC. (2020b). Earned Income Tax Credit Getting Payments Right Scorecard. Retrieved from <https://www.cfo.gov/wp-content-2/uploads/2020/06/Earned-Income-Tax-Credit-Getting-Payments-Right-Scorecard-FY-2020-Q1-2020>. 12. 05.

#### 4. 부적정 지출(improper payments) 관리전략 및 회수방안<sup>28)</sup>

□ 부적정 지출의 관리지침은 다음과 같은 법령에 의해 명시된 요구사항에 근거하여 수행됨

28) 부적정 지출에 대한 관리전략 및 회수방안에 대한 내용은 주로 U.S. GAO(2020b)의 내용을 참고하여 요약·정리하였으며, 원종학 외(2019), 이오(2011) 등에서도 발췌 및 수정하여 작성

- 부적정 지출 정보에 관한 법률(Improper Payments Information Act of 2002, IPIA)
- 부적정 지출 척결 및 환수법(Improper Payments Elimination and Recovery Act of 2010, IPERA)
- 부적정 지출 척결 및 환수개선법(Improper Payments Elimination and Recovery Improvement Act of 2012, IPERIA)
- “심각한 부적정 지출(Significant Improper Payments)”<sup>29)</sup> 가능성이 낮은 프로그램이나 활동
  - IPERA는 현재 매년 부적정 지출 추정치를 보고하지 않는 프로그램들의 경우라도 부적정 지출 위험성을 평가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심각한 부적정 지출의 가능성이 낮은 프로그램으로 분류되더라도 3년에 적어도 1회 정도는 해당 프로그램 부적정 지출 위험도를 평가토록 하고 있음
- “심각한 부적정 지출 가능성이 높은 프로그램이나 활동(Programs or Activities Susceptible to Significant Improper Payments)”
  - 심각한 부적정 지출 가능성이 있는 프로그램으로 분류 되면, 각 부처기관은 매년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부적정 지출을 추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함
- 부적정 지출 위험(Improper payment risk)의 평가·관리는 ERM 체계의 일환으로 수행되며, 구체적 운영방안은 OMB 지침(A123 Appendix C)에 의해 규정
  - 부적절한 보조금 지급 위험성 평가(원종학 외, 2019, p.109)
    - 각 기관은 운영하는 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3년 주기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며, 위험성 평가에 고려되는 주요 요소로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
      - 신규 사업인지 여부

29) IPIA에 의하면, 부적정 지출 중 ‘심각한 부적정 지출’을 다음과 같은 범주에 해당할 경우에 일컫고 있다. 첫째, 프로그램 지출 중 부적정 지출의 비중이 1.5%이상이나 1,000만 달러이상을 초과할 경우이며, 둘째, 부적정 지출의 비중과 관계없이 1억 달러이상일 경우이다.



- 사업의 복잡성 정도
- 사업 및 지급액 규모
- 보조금 지급이 직접 혹은 하위 사업자를 통하여 이루어지는지 여부
- 사업의 주요 내용(예산, 담당 부서, 행정 절차 등) 변경 여부
- 담당자(공무원 등)의 경험, 교육, 훈련 정도
- 일반감사(Inspector General), 정부책임청(GAO)의 감사 내용
  - 정성적인 방법 혹은 정량적인 방법으로 평가
  - 단 규모가 연 50억 달러가 넘는 프로그램은 정량적 기법으로 위험성 평가
- 통계적으로 유효한 방법으로 추정할 것을 권장함

#### □ 연간 부적정 지출액 추정(Annual Improper Payment Estimates)

- IPERA 법령에 근거하여 심각한 부적정 지출 가능성이 있는 프로그램으로 분류되면 통계적으로 유효한 부적정 지출액 추정치를 산출토록 하고 있음

#### □ 연차별 보고(Annual Reporting)

- 연차별 보고는 예산관리청(OMB)와 기관의 재정보고서와 성과 및 책임보고서 등으로부터 요구되는 연간 데이터 요구에 부합하게 수행되어야 함. 또한 연간 지출 무결점(annual payment integrity) 보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OMB 지침(circular) A-136을 참조하여 보고토록 함

#### □ 우선관리 프로그램(High-Priority Programs)

- IPERIA는 예산관리청(OMB)에게 부적정 지출이 가장 높은 사례 프로그램의 경우 우선관리 프로그램(High-Priority Programs)으로 지정토록 하고 있음
- 이러한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부적정 지출을 줄이기 위한 반기 또는 분기별로 구체적인 실행(action)방안을 제출토록하고 있음

□ 부적정 지출 방지(Preventing Improper Payments)

- 심각한 부적정 지출 가능성이 있는 프로그램의 경우, 부적정 지출의 원인(root causes)을 확인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부적정 지출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교정적 행동(corrective actions)방안을 수행토록 하고 있음

□ 지출에 대한 내부적 통제(Internal Control Over Payments)

- ERM(Enterprise Risk Management)의 운영 틀(framework)을 준용하여 부적정 지출에 대응하면서, 부적정 지출에 대한 내부적 통제장치 구축과 다양한 부적정 지출 방지활동들을 연결할 필요가 있음

□ 과다지급 회수 감사(Payment Recapture Audits)<sup>30)</sup>

- 모든 기관들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근본적인 요구사항은 정부의 어떠한 재정적 손실에 대해서 기관별로 회수(recovery) 노력을 하는 것임
- IPERA는 연간 1백만 달러 초과하거나 기관에 비용·효과적이라면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서 부적정 지출에 대한 지급 회수 감사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이러한 지급 회수 감사 수행을 위한 요건으로는 심각한 부적정 지급 가능성이 높은 프로그램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뤄짐

□ 연간 감사 순응도 조사(Annual Inspector General Compliance Review)

- IPERA는 모든 부적정 지출 유형에 책임성 요소를 부과하고 있음
- 매년 모든 부처기관의 감사(Inspector General)는 해당기관의 연간재무보고서와 성과 및 책임보고서를 통해 보고된 부적정 지출을 조사하여 각 기관이 IPERA와 예산관청(OMB) 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잘 따르고 있는지를 결정함

30) 과다지급 회수 감사(Payment Recapture Audits)란, 과다 지급된 정부 보조금을 적발하기 위한 특별 감사로써 일반적인 회계감사와는 차별적으로 수행됨. 특히, 연 지출이 100만 달러 이상인 사업은 과다지급 회수 감사 프로그램을 운영해야하며, 여기에서의 과다지급 회수 감사 프로그램이란 감사와 적발 및 과다지급 보조금 회수를 위한 절차까지를 포괄한 종합적인 계획을 의미함(원종학 외, 2019).

□ 부정수급자 지불 방지(Do Not Pay: DNP) 시스템 구축

- DNP Initiative는 부적정 지출을 확인하거나 예방하는데 있어서 연방정부를 지원함
- 따라서 DNP Initiative는 연방정부가 부적정 지출 확인과 예방을 위한 지급자 격기준을 원활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음

□ 급여통합(Payment Integration)은 각종 급여 지급 시 재무부에 보내지는 각 기관의 급여 파일을 기능적으로 매칭하는 것을 말함

- 연방정부는 예산관리청의 예외적 인정을 제외하고 이러한 급여통합 기능을 활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기존의 데이터 매칭 과정이 IPERIA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어떻게 충족하고 있는지를 제시토록 하고 있음
- 잘못된 매칭을 해소하기 위해 각 부처조직은 매칭과정을 보다 정교하게 수행할 수 있는 규칙을 개발하기 위해 재무부와 협력토록 하고 있음

□ 온라인 단일조사(Online single search)

- 온라인 통합 조사를 통해 DNP 운용시스템 내 각 기관의 공인된 가용한 데이터 베이스와 각 주체를 매칭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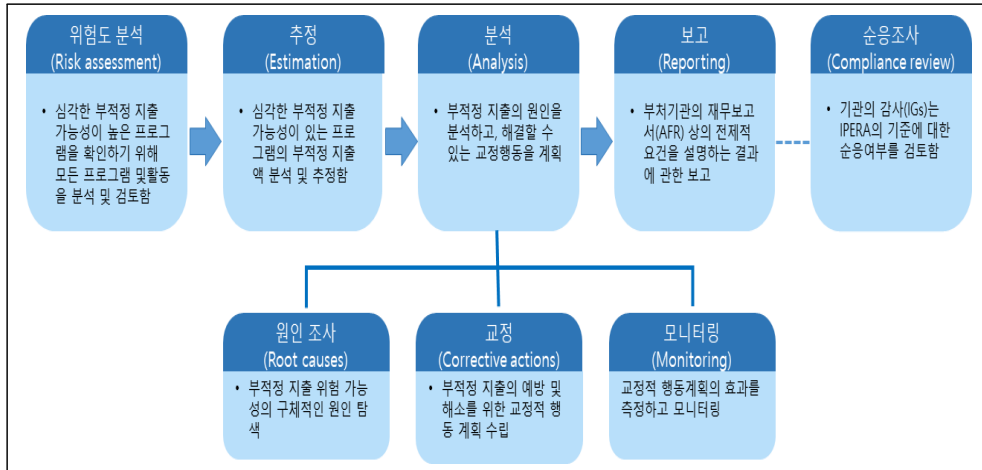
□ 일괄매칭(Batch matching)

- 일괄매칭이란, 단번에 공인된 가용한 데이터베이스와 다양한 주체를 매칭할 수 있게 하는 과정을 말하며, 이러한 단일 매칭이나 묶음 매칭방법은 지출이 이뤄지기 전후에 수행될 수 있음

□ 지속적 모니터링(Continuous monitoring)

- 지속적 모니터링은 데이터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기존의 공인된 활용가능한 데이터 소스와 기관의 파일을 매칭하는 것을 말함

[그림 5-12] 부적정 지출 분석 및 교정행동(corrective action) 절차



자료: U.S. GAO. (2020b). PAYMENT INTEGRITY: Selected Agencies Should Improve Efforts to Evaluate Effectiveness of Corrective Actions to Reduce Improper Payments. p.6.

□ IPIA는 총괄사업기관으로 하여금 OMB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부적정 지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의 절차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림 5-12]

- 첫째, 심각한 부적정 지출 가능성이 있는 프로그램을 확인하기 위해 모든 프로그램을 분석 및 검토함
- 둘째, 심각한 부적정 지출로 분류된 프로그램의 부적정 지출 추정치를 분석함
- 셋째, 부적정 지출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러한 부적정 지출을 줄일 수 있는 교정적 행동계획을 개발함
- 넷째, 선결요건을 언급하는 분석결과를 보고함
- [그림 5-12]는 부적정 지출의 원인분석과 이러한 부적정 지출을 감소시킬 수 있는 교정적 행동계획 등의 절차를 설명하고 있음

□ 미국의 부적정 지출 대응에 있어 예방을 중요시하는 정책 기조를 가지고 있음

- 효과적인 부적정 지출 대응을 위해 유형별 부적정 지출 규모를 가능한 정확히 추계하고 주요 유형에 대한 원인을 제거하는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그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오윤섭 외, 2016)

- 따라서 각 연방정부는 부처 또는 제도 특성에 맞게 별도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OMB의 승인을 받아 부적정 지출 금액을 추정하고, 그 결과를 OMB와 연방의회에 보고하고 있음(임완섭 외, 2019a, p.215)

○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OMB 지침 A-11에 의해 부적정 지출 규모가 전체 사업 예산의 2.5%를 초과하거나 1000만 달러를 초과하는 사업을 선정하고, 부적정 지출 추정액, 예상하는 회수 가능 금액, 회수 방법 등 전략을 세워 추진하고 그 성과를 보고해야 함(이오, 2011)

- 부적정 지출정보에 대한 법률(IPIA, '02)에 의해 부적정 지출 추정액이 전체 사업 예산의 1%를 초과하는 경우와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가 부적정 지출 감소를 위해서 취한 조치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함(임완섭 외, 2019a, p.215)

〈표 5-8〉 부적정 지출의 원인별 유형구분

원인 유형		주요 내용
① 프로그램의 구조적 문제		· 프로그램의 설계 등 구조적인 원인에 의해 잘못 지급됨
② 자격확인 불능	데이터 접근불가	· 관련 데이터가 존재하나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없음
	관련 데이터의 부재	· 급여지출에 앞서 자격조건을 점검할 만한 데이터가 없음
③ 확인(증명) 불가	사망데이터	· 사망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재정데이터	· 급여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 또는 가구의 재정적 자료의 부재
	제거된 당사자 데이터	· 연방정부 급여지급이 박탈된 개인이나 기관
	최수 데이터	· 현재 투옥 중인 개인
④ 행정적 오류	기타 자격 데이터	· 위에 열거된 사항 이외의 이유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
	연방정부	· 신청자나 급여지급에 잘못된 자료 입력, 분류 및 처리 등에 의한 행정적 오류
	주 또는 지방정부	
	기타	
⑤ 의료적 필요		· 의료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해당 의료적 처치가 급여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⑥ 불충분한 서류		· 급여지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문서가 불충분한 경우
기타		· 위에 열거된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는, 부정수급으로 분류될 수 있는 '기타'의 경우

자료: U.S. GAO. (2018a). Analysis of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Circular No. A-123, Appendix C, Requirements for Payment Integrity Improvement. | GAO-20-33.

□ 다양한 원인과 유형으로 발생하고 있는 부정수급 등 부정적 지출을 사전적으로 차단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현실적인 판단 하에 예방 차원의 대책과 사후적 대책의 병행하여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향을 지향

○ 미국 정부는 비리 또는 과실 등에 대해 적발보다는 방지(예방)에 초점을 두었으나 효율적으로 부정적 지출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예방과 탐지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음(오윤섭 외, 2009, p.18)

- 예방 차원 방지대책을 통해 직접적으로 정부지출감소, 간접적으로 부정한 방법 시도 방지 등의 목표 달성 등을 기대할 수 있음
- 또한 정기적· 부정기적 점검(감사)을 통한 비리 적발, 데이터 공유, 데이터 마이닝 등 통계적 기법 활용 등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비리통제가 가능

□ 부적절한 보조금 지급액 관리 체계는 예산관리청의 안내지침(OMB Guidance Circular A-123, Appendix C)을 따름

○ 각 기관은 3년 주기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부적정 지출 위험이 높은 프로그램을 분류·선정하고, 이렇게 선정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매년 부적정 지출액을 추정토록 하고 있음(U.S. OMB, 2018, p.10)

- 부적정 지출 위험이 높은(significant improper payment) 프로그램은 연간 총 부적정 지급액 규모가 (1) 전체 프로그램 지출의 1.5%를 초과하면서 금액이 1,000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또는 (2) 1억 달러를 초과할 경우에 지정됨

○ 위험성 평가(Risk assessment)

- 위험성 평가 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 요소에는 사업의 신규 여부, 사업의 복잡성, 연간 지급 규모, 보조금 지급 주체, 사업 주요 내용(예산, 담당 부서, 절차 등)의 변경 사항, 담당자의 교육 수준, 기관 감사 내용이 포함됨(U.S. OMB, 2018, pp.11-12)

○ 체계적 방법론(Systematic Method)

- 모든 부처기관은 3년에 1회 모든 프로그램에 체계적인 검토를 시행해야 하

며, 그 검토결과에 각 프로그램이 심각한 부적정 지출로 분류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임

#### ○ 위험요인(Risk Factors)

- IPERA 규정에 의거하여 부적정 지출 위험성을 평가할 경우, 모든 기관은 심각한 부적정 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위험요인으로 고려할 수 있음
  - 첫째, 해당 프로그램이 부처기관에 처음 도입된 것인지 여부 / 둘째, 합리적인 지출액 산출과 관련해서 해당 프로그램이 복잡한 것인지 여부/ 셋째, 연간 지출액의 크기/ 넷째, 급여의 지급자격결정이 해당기관과 별도의 기관에 의해서 이뤄지는지 여부(예, 주정부, 지방정부, 지역사무소 등)/ 다섯째, 해당 프로그램의 재원, 수행주체, 절차 및 과정에서 있어서의 상당한 변화가 있는지 여부 / 여섯째, 프로그램 자격결정이나 정확한 지출 확인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수준, 경험, 훈련 유무 등 / 일곱째, 정확한 지급확인을 방해하는 운영결과 또는 기관 감사(IG)나 정부책임청(GAO)의 감사보고서 상의 심각한 흠결 등

#### ○ 정량적 방법(Quantitative Method)

- 2020년 이전에는 부적정 지출 위험도 평가는 정성적 또는 정량적으로 방법으로 활용함
- 2020년부터는 12개월 기간 동안 총 50억 달러를 초과하는 지출 프로그램은 체계적인 검토 방법으로 정량적인 평가방법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 단, 2020년 이전에 정성적인 방법을 활용한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그 방법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음. 단, 이전에 활용한 정성적인 방법이 합리적으로 지지한 것으로 IPERA 이행점검(compliance review) 결과를 통해서 언급이 되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용토록 하고 있음
- 지출 총액이 50억 달러가 넘으나 새롭게 도입된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첫 번째 부적정 지출 위험도 평가 시 정량적 또는 정성적인 방법을 모두 활용할 수 있음

○ 정성적인 방법(Qualitative Method)

- 12개월 기간 동안 50억 달러 이하의 총 지출액인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정성적인 또는 정량적인 방법을 통해 체계적인 평가를 수행할 수 있음 (예, 위험도 평가 설문조사 등)
- 필요한 경우, 각 부처는 이러한 체계적 평가가 도움이 될 만한 다른 기존의 절차나 과정을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음
- 예를 들면, 해당 부적정 지출 위험도 평가 설문지를 개발하거나 사용하도록 하였다면, 내부통제 설문지와 같은 기존의 유사한 도구를 준용해서 사용할 수 있음. 또한 심각한 부적정 지출 프로그램으로의 분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정성적인 방법이 요구된다면 사용할 수 있음

○ 심각한 부적정 지출로 분류가 가능한 기타 프로그램

- 예산관리청(OMB)은 사례별 기준에 따라 결정함(예, 감사보고서가 해당 기관의 위험도 평가 또는 부적정 지출 결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경우)
- 프로그램의 지출액 규모나 정성적 평가가 적합하다는 기관 감사(IG)의 동의와 관계없이 예산관리청(OMB)은 사례별 기준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음

○ 위험도 평가 결과 부적정 지출 위험이 높은 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다음 회계 연도에 통계적으로 유효한 추정치를 산출해야함(U.S. OMB, 2018, pp.14-19)

- 첫 번째 단계: 통계 표본 추출 및 추정 방법 설계
  - 연간 총 금액은 과대 지급액과 과소 지급액을 더한 총 합임
  - 기관은 부적정 금액 추정을 위한 표본 추출과 추정 방법을 통계 전문가를 통해 설계해야 하며, 문서화 하여 당해 6월 30일까지 OMB에 제출해야함
- 두 번째 단계: 통계 표본 추출 및 추정 방법 내용
  - 통계 표본 추출 및 추정 방법에는 확률표본 추출, 부적정 지출 값에 대한 가정, 적절한 표본 규모, 정확성(통계적으로 유의하며 엄격함/통계적으로 유의함/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표본 설계 문서, 추정 공식 문서, 방식의 업데이트와 변화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우선 관리 프로그램(High-Priority Programs) 선정

○ 예산관리청(OMB)는 부적정 지출 비율과 관계없이 부적절한 지출액이 연간 20억 달러가 넘는 프로그램을 우선 관리 프로그램으로 지정함(U.S. OMB, 2018, p.25)

- 우선 관리 프로그램이 있는 기관은 추가 보고 의무를 지님

- 프로그램 맞춤 개선 방안
- 부적정 지출 방지 및 개선방안의 정기적 보고
- 부적정 지출을 줄이기 위한 분기별 또는 반기별 정책 실행 보고

○ 올해는 우선관리 프로그램으로 선정이 되었으나 이듬해 부적정 지출액이 2억 달러에 미달한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은 더 이상 우선관리 프로그램으로 간주되지 않음

□ 미국 연방정부의 부적정 지출은 부적정 지출 원인과 유형에 의해 구분될 수 있음

○ 이러한 부적정 지출 원인의 유형을 분류함으로써 기관들이 부적정 지출의 발생 원인과 각 범주의 총액 대비 비율을 파악하게 하며, 이렇게 세분화된 유형에 의해 보다 효과적인 교정 조치(corrective action)와 집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U.S. OMB, 2018, p.28)

□ 「부적정 지출 척결 및 회복법(The Improper Payments Elimination and Recover Act of 2010, IPERA)」은 2002년 부적정 지출 정보법(Improper Payments Information Act)을 수정·보완한 것으로 각 기관에게 OMB에 의해 마련된 지침에 의거하여 심각한 부적정 지출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고 있음

○ 각 부처는 프로그램별 부적정 지출 추정치 산출뿐만 아니라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정 지출을 예방하거나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에 관한 보고서를 준비토록 하고 있음

○ 또한, IPERA 시행규칙 3장에는 기관 감사(Inspectors General)로 하여금 각 기관의 부적정 지출보고를 검토하고 연간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고 있음

- 2012년 발표된 IPERIA법과 이후 개정안에 의하여, 정부 기관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 정부에서 활용 가능한 여러 데이터베이스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금 수급 자격을 확인하고 부적절한 보조금 지급 방지 활동을 할 것이 의무화됨(원종학 외, 2019, pp. 119-120)
- 이러한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데이터베이스를 모아 보조금 수급 자격요건 등을 검토할 수 있는 부정수급자 지불 방지(Do Not Pay: DNP) 시스템을 구축
  - DNP 시스템은 다양한 데이터베이스(DB)를 한 장소에서 접속하여 비교·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
  - 재무부에서 관리하는 재무부 운영체계(Treasury Working System)가 DNP의 근간으로 기능하고 있음
  - 개별 부처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여러 시스템도 포괄적으로 포함됨
  - DNP 시스템은 기관이 접속하여 지급 전 자격 및 중복 검토를 가능하게 해주며, 부정수급 감지 및 부적절한 지급의 적발을 용이하게 해줌
  - DNP는 부적격 가능성이 높은 수급자를 표시하는 형태 등으로 기관의 검토를 도움
- DNP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 보조금 지급 통합 관리(Payment Integration)
  - 보조금 지급을 위해 재무부에 제출한 명단을 검토하는 작업
  - 이 작업은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됨
- 개별 검색(Online single search) : 기관은 개별 건을 검색하여 존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부적격 여부 등을 검토할 수 있음
- 단체 검색(Batch matching) : 기관은 여러 건을 동시에 검색하여 존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검토할 수 있음
- 지속적인 관리(Continuous monitoring) : 수시로 데이터를 이용하여 검토하는 작업

□ 「지출 무결점 정보법(Payment Integrity Information Act of 2019, PIIA)」으로 인해 IPERA가 폐지('20.3.2.)되었으나, 감사(IG)에 의한 연간 이행보고서(compliance report) 등 IPERA와 유사한 부적정 지출 보고 요건을 수립

○ 범위 : 각 기관의 PIIA 준수 여부를 결정할 부수조항과 당해 연도 기관재무보고서(AFR)와 성과 및 책임보고서(PAR)에 지출 진실성 부분을 면밀히 검토함

○ 일반적인 방법론(General Methodology)

- 2020년 이행도 점검(compliance review)은 OMB 지침 A-123과 지침 A-136 등이 요구하는 조건을 조합하여 진행될 예정임
- OMB 연도별 데이터 지침(Data Call Instructions)과 OMB 지출 진실성 설문지 및 응답지, CIGIE(Council of the Inspectors General on Integrity and Efficiency)의 가이드라인을 종합하여 2020년 다음과 같은 이행도 요건(compliance requirements)을 평가할 예정임
- 첫 번째, 해당기관이 OMB 가이드라인이나 PIIA의 요건을 잘 따르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각 기관의 재무보고서와 성과 및 책임보고서의 지출 진실성 부분을 검토함
- 두 번째, OMB 지출 무결점 데이터 콜센터(payment integrity data call)를 통해 관련 정보를 검토함(<https://paymentaccuracy.gov/>)
- 세 번째, 연방법과 OMB 가이드라인, 부처의 정책 및 절차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함
- 네 번째, 적용가능한 지출 진실성 정보를 지지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는 기관의 핵심자료(source data)를 요청함
- 다섯 번째, 정확성과 완결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분석함
- 여섯 번째, 각 기관이 6개의 PIIA 준응조건(compliance requirements)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판단함
- 일곱 번째, 각 기관의 감사실(OIG)을 통해 기관의 당해 연도 보고서가 기관의 맥락에서 심각한지를 결정토록 함
- 여덟 번째, 각 기관의 감사실(OIGs)은 자체적 목표를 충족하는 범위를 결정

하는 전문적인 판단을 내려야 함. 만일 기관이 우선관리 프로그램이 존재한다면 OMB 지침 A-123에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고요건을 충족해야 함

- 아홉 번째, 기관 감사실(OIGs)의 PIIA 순응도 검토를 위해 수행해야 하는 업무의 수준을 결정해야 함
- 열 번째, 기관 감사실(OIG)은 해당기관의 연차별 재무보고서와 성과 및 책임보고서와 함께 해당기관의 부적정 지출 정보를 보고하고 있는지를 평가
- 그 과정에서 각 기관 감사실(OIG)은 심각한 부적정 지출로 분류되는 프로그램의 완결성을 평가해야 함. 예를 들면, 순응도 여부를 결정할 때, 감사실은 해당 프로그램의 부적정 지출 비율이 정확한지를 평가해야 함
- 또한, 부적정 지출의 원인을 밝히고 부적정 지출을 줄이는 것을 포함하는 교정적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부정적 지출 비율에서 개선 성과를 제시토록 하고 있음

#### □ 부적절한 보조금 추정 방법

○ 부적절한 보조금 지급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프로그램은 통계적으로 유효한 추정 방법을 설계하여 OMB에 보고토록 하고 있음

- 주요한 보고사항 및 내용(원종학 외, 2019, p. 120):
  - 부적절한 보조금 지급 추정 금액(과소 및 과대 지급 포함)
  - 표본 선정 및 추정 방법
  - 방법론은 통계학자<sup>31)</sup>에 의하여 설계되어야 함
  - 통계적으로 유효한 보조금의 부적절 지급액 추정치를 제공한다는 보증서(certification)<sup>32)</sup>와 함께 제출
  - 표본 선정 및 추정 절차를 대신하여 전수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적절한 표본 선정 및 추정 절차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31) 통계학자란 통계적 표본을 추출하고 모수 추정 및 표본 오차 등을 추정해본 경험 및 역량이 있는 자로서, 일반적으로 통계학, 수학, 혹은 경제학 등의 정량적 사회과학의 대학원 이상의 학위를 소지해야 함(원종학 외, 2019).

32) 표본에 대한 선정·추정 절차가 통계적으로 유효하다는 것을 보증하는 증서로, 기관 대표자의 서명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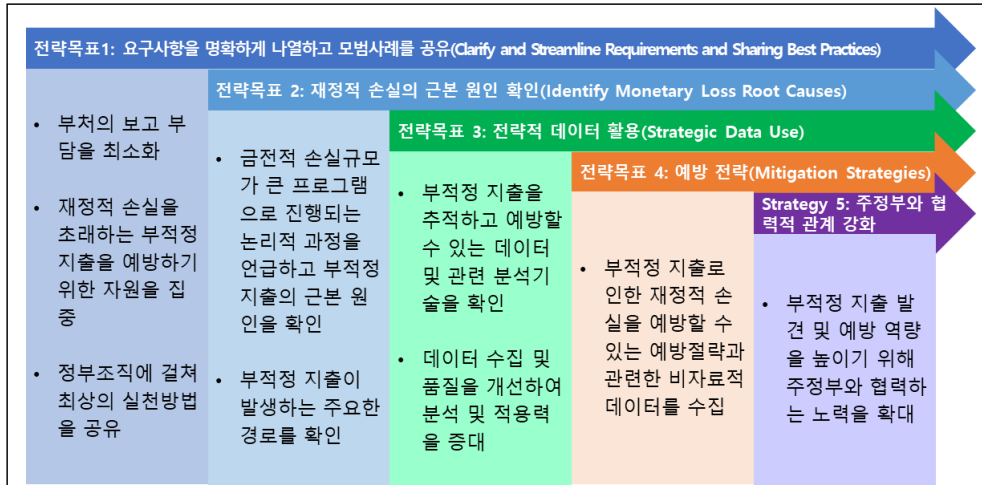
있으며, 기관 내외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대한 반영할 의무가 있음

○ 표본 선정 및 부적정 지출액 추정 방법(원종학 외, 2019, p. 121)

- 각 기관은 표본 선정 및 추정에 사용한 통계적 기법을 상세히 보고
- 통계적 방법론이 개별 정부지출 프로그램에 적절한 방법론임을 보일 의무가 있음
- 추정식이나 표 등을 통하여 표본 추출방법과 추정 방법을 제시하고 이 과정의 통계적 유효성을 보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표본 추출 방법
  - 개별 프로그램에 적합한 방식으로 표본추출
  - 단순 무작위 추출법 이외에도 층화추출법, 비확률 표본추출(unequal probability sampling) 등의 방법 사용
  - 추정치의 정확성을 위하여 충분한 표본 크기(sample size) 선정
  - 표본 크기 선정의 근거가 되는 수식 또는 근거 보고(과거 자료 등)
- 추정치의 정확성 : 통계적으로 유효한 계획의 추정치는 95% 신뢰 수준에서 표본오차가  $\pm 3\%$  이내이어야 함
  - 단, 특별한 경우에는 표본오차가 3% 이상, 혹은 통계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추정 방법론도 OMB에 의해 일부 허용될 수 있음
  - 표본 추출 및 추정 계획 모두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 감사가 재추정할 수 있도록 모든 절차에 대하여 충분히 서술되어야 함

□ 정부지출 무결성 우선지구(Payment Integrity Priority Area)를 위해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총괄위원회(ESC)가 총괄기구로서 운영되며, 총괄위원회를 통해 다음과 같은 부적정 지출 예방 및 해결을 위한 노력들이 수행되고 있음(U.S. CFOC, (2020d).

[그림 5-13] 부정정 지출 예방을 위한 전략목표 체계



자료: U.S. CFOC. (2020d). Getting Payments Right. Retrieved from [https://www.performance.gov/CAP/action\\_plans/september\\_2020\\_Getting\\_Payments\\_Right.pdf](https://www.performance.gov/CAP/action_plans/september_2020_Getting_Payments_Right.pdf). 2020. 12. 05.

○ 전략목표1 :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나열하고 모범사례를 공유

- 부처의 보고 부담을 최소화
- 재정적 손실을 초래하는 부정정 지출을 예방하기 위한 자원을 집중
- 정부조직에 걸쳐 최상의 실천방법을 공유

○ 전략목표2 : 재정적 손실의 근본 원인 확인

- 금전적 손실규모가 큰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논리적 과정을 언급하고 부정정 지출의 근본 원인을 확인
- 부정정 지출이 발생하는 주요한 경로를 확인

○ 전략목표3 : 전략적 데이터 활용

- 부정정 지출을 추적하고 예방할 수 있는 데이터 및 관련 분석기술을 확인
- 데이터 수집 및 품질을 개선하여 분석 및 적용력을 증대

○ 전략목표4 : 예방 전략

- 부정정 지출로 인한 재정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예방절락과 관련한 비자

### 료적 데이터를 수집

#### ○ 전략목표5 : 주정부와 협력적 관계 강화

- 부적정 지출 발견 및 예방 역량을 높이기 위해 주정부와 협력 확대

## 5. 소결

### □ 위험관리 접근에 근거한 부정수급 예방방식

#### ○ 정기적이고 종합적인 위험관리 체계 구축 및 활용

- 국가재정위원회(CFOC)나 종합적 위험성 관리(EMR) 체계 도입 등 다부처 통합적인 접근을 통해 부적정 지출 위험에 대해 포괄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부적정 지출 발생 후 사후적인 대응보다는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사전적 예방노력을 체계화하여 부적정 지출 위험을 최소로 관리토록 노력하고 있음
- 정부지출 무결점 우선지구(Payment Integrity Priority Area) 구축을 위해 재무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총괄위원회(ESC)를 구성하고 있으며, 다부처 실무자가 참여하는 다양한 워킹그룹(WG)을 구축하여 부적정 지출 예방을 위한 공동의 전략목표를 수립하고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고 있음

#### ○ 효과적이고 유의미한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의 개발 및 활용

- OMB 지침(OMB circular A 123 Appendix C, OMB circular A 136)에 근거한 통일된 적용기준을 제시, 부적정 지출에 대해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
- 부적정 지출 위험이 높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우선관리 프로그램(High-Priority Program)으로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음
- 부적정 지출 위험이 높은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연방정부 홈페이지(<https://www.paymentaccuracy.gov>)를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공개하여 관련 부처로부터 경각심을 높이고 해당 프로그램의 부적정 지출 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유인하고 있음

- 해당 프로그램의 현재 부적정 지출의 상태 점검
- 최근의 분기별 성과 공개
- 최근 3년간 재정적 손실액의 종단적 비교
- 부적정 지출의 원인의 유형 분석 및 해결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
- IPERA에 제시된 6가지 기준원칙(criteria)에 따라, 각 부처기관의 감사관(IGs)으로 하여금 각 부처 내 개별 프로그램별 위험도 사정(risk assessments)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부처의 재무보고서(AFR)나 성과 및 책임보고서(PAR)를 통해 발표토록 하고 있음
- 또한, 부적정 지출의 원인을 유형화하여 각 부처들이 부적정 지출의 발생 원인과 각 유형별 부적정 지출 비율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적정 지출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교정계획(corrective action)을 수립토록 하고 있음

#### □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인 부적정 지출 관리체계 구축 및 활용

##### ○ DNP(Do Not Payment) 시스템의 구축과 포괄적 조사 방법의 활용

- DNP를 통한 보조금 지급 통합 관리(Payment Integration) 실시
- 위험성 평가(risk assessment)시 고려해야 하는 요소로 사업의 신규 여부 및, 복잡성, 연간 지급 규모, 보조금 지급 주체, 사업 주요 변경 사항, 담당자의 교육 수준, 기관 감사 내용이 포함토록 하고 있음(원종학 외, 2019)
- 모든 부처기관은 3년에 1회 모든 프로그램에 체계적인 검토(Systematic Method)를 시행토록 하고 있음
- 정량적 방법(Quantitative Method) 또는 정성적인 방법(Qualitative Method)인 방법을 적절하게 혼합하여 위험도 및 추정치를 분석하고 있음



### 제3절 호주의 사회보장 부정수급 관리와 합의<sup>33)</sup>

#### 1. 부정수급 현황

##### 가. 부정수급 정의

- 호주에서 사회보장 부정수급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 첫 번째는 복지사기(welfare cheat)로서 비자격 수급자가 의도적으로 급여를 청구 및 수급하는 경우임
  - 두 번째는 수급자 실수(cumstomer error)로서 수급자가 의도성 없이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정보를 제공하여 부정확한 급여가 초래되는 경우임
  - 셋째는 공식적인 실수(official error)로서 행정기관에서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수급자로부터 제공된 정보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해 부정확한 급여가 제공된 경우임(Bourn, 2008)
- 사회보장 부정수급의 유형구분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 경계는 모호함
  - 특히, 사기와 실수를 가려내는 데에 있어 의도성(fraudulent intent)을 포착하기는 어려움. 가장 협의의 개념으로 부정수급을 의도성이 분명한 사기로 한정한다 하더라도 그 의도성은 다양한 스펙트럼 속에 존재함
    - 다시 말해, 부정수급은 욕심(greed)과 욕구(need)의 심리 환경적 선상에서 나타난 행위로 볼 수 있음(Tunley, 2011).
  - 욕심에 의한 부정수급은 수급자의 목적의식적이고 계획적인 실행의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욕구에 의한 부정수급은 경제적인 욕구 해소가 절박한 상황에서 비합법적인 선택을 한 경우로 볼 수 있음
    - 예를 들어, 빈곤선 주변의 소득을 가진 이가 작은 수입활동을 하면서 이를 철저하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함(임완섭 외, 2019)

33) 본 절은 임완섭 외(2019a)의 '제4장 해외사례' 중 '호주' 부분을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음.

- 이러한 미준수(non-compliance) 행위는 분명 부정수급에 해당하지만, 욕심과 욕구 사이에 큰 회색지대(grey area)를 창출하고 있으며, 실제 유죄판결 과정에서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호주 법무부(Attorney-General's Department)는 정부에 대한 일반적인 부정행위(fraud)를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dishonestly) 혜택을 획득하거나 기망(deception) 혹은 다른 방법으로 정부에 손해를 초래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Attorney-General's Department, 2017)
- 부정행위는 반드시 의도성이 내포되어야 하며, 단순 실수나 의도성이 확인되지 않은 행위들은 규정 불이행(non-compliance)으로 간주하고 부정행위가 아님을 명시하고 있음
    - 부정행위는 정부 관료 혹은 서비스 계약자가 연루된 내적인(internal) 부정행위와 서비스 공급자, 클라이언트, 혹은 일반 대중이 범하는 외적인(external) 부정행위로 구분됨
  - 부정행위는 또한 중대한(significant) 부정행위와 경미한(trivial) 부정행위로 구분되며, 경미한 부정행위는 부정행위의 기술적 정의에 부합하지만 정부의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수반하지 않는 부정행위를 의미함
- 호주의 사회보장 부정수급에 대한 정의 역시 상기의 부정행위에 대한 접근법을 따라 의도적 사기 개념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짐
- 우선, 호주범죄연구원(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은 사회보장 부정수급을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이가 급여를 받기 위해 정부 당국에 허위의(false) 또는 기만적인(misleading) 정보를 제공하거나, 요구되는 정보를 누락하는(omitting)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Lindley, Jorna, & Smith, 2012)
  - 사회보장 부정수급에 대한 법적인 의미는 사회보장행정법(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Act 1999) 212조부터 216조에 걸쳐 제시되어 있음
    - 사회보장행정법은 다음 다섯 가지가 사회보장행정법 위법행위(offences)를

구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Federal Register of Legislation, 2013)

- ① 급여 청구와 관련하여 허위 진술을 하는 것,
- ② 기만하거나(deceive) 급여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허위진술 하는 것,
- ③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은(reckless) 문서를 제출하는 것,
- ④ 급여자격 요건이 전혀 혹은 일부 안되는 경우에 급여를 받는 것,
- ⑤ 신분사칭(impersonation)이나 사기적인 기법 등의 수단을 통하여 급여를 받는 것

## 나. 부정수급 유형

□ 호주 복지부(Services Australia)<sup>34)</sup>는 사회보장 부정수급의 세 가지 유형을 예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음(Services Australia, 2020d)

○ 첫 번째 유형은 소득보장 급여 부정수급임

- 이에는 허위 신분이나 타인의 신분을 이용하여 급여를 신청하거나, 허위 또는 오도된 정보를 제공하거나(소득 과소신고 등), 자산이나 소득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부관계인 가족 구성원을 신고하지 않거나, 이미 사망한 자의 급여를 계속 받거나, 여행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호주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급여를 받는 경우 등이 포함됨

○ 두 번째 유형은 아동지원제도(Child Support Scheme)와 관련됨

- 아동지원제도는 이혼한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일정한 수준의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보통 자녀와 동거하지 부모의 임금의 일부를 자녀에게 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 자녀 지원 의무를 진 부모는 아동 지원금을 줄이기 위해 자신의 임금을 실제보다 낮추려는 동기가 있을 수 있음. 이를 위해 고용주와 결탁(collusion)하여 고용상태나 급여를 허위로 조작하는 경우가 있음

34) Department of Human Services를 전신으로 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새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음.

## ○ 세 번째 유형은 보건(Health) 관련 부정수급임

- 본인이 실제로는 이용하지 않은 의료서비스를 메디케어(Medicare)에 청구하거나, 타인의 메디케어 신분을 이용하여 의료서비스를 받거나, 의약품 할인급여(Pharmaceutical Benefits Scheme)를 받기 위해 처방전을 위조하거나, 본인이 복용하지 않을 의약품을 의약품 할인급여를 통해 취득한 후 이를 제 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등이 보건 관련 부정수급 사례임

○ 부정수급은 센터링크(Centrelink)를<sup>35)</sup> 통해 지급되는 소득보장급여에 집중되어 있음

- 최근 전반적인 부정수급 관리활동의 효율성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즉, 부정수급 평가(evaluation) 사례는 감소하고 있으나, 부정수급 조사(investigation)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메디케어 분야에서 최근 부정수급 조사 건수가 크게 증가함

〈표 5-9〉 부정수급 유형별 규모

구분		2016-2017	2017-2018	2018-2019
전체평가 건수		3,813	3,301	2,408
부정수급 조사 건수		1,189	748	921
유형별	사회보장급여	1,104	686	752
	아동지원제도	4	3	7
	메디케어	81	56	157

자료: 1)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2017). 2016-17 Annual Report. 2) Services Australia. (2018). 2017-18 Annual Report. 3) Services Australia. (2019). 2018-19 Annual Report.

#### 다. 부정수급 현황 : 추이 및 규모

- 호주의 사회보장 수급자 수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음. 특히, 노령연금(Age Pension), 장애인 지원 연금(Disability Support Pension) 그리고 가족 급여(Carer's Payment) 수급자의 증가가 전반적인 수급자 수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Whiteford, 2017)

35) 센터링크는 호주 소득보장을 집행하는 책임을 지고 있음. 모든 공공부조성 소득보장 급여는 센터링크를 통해 신청, 심사 및 지급되며, 소득 및 자산조사를 통한 급여자격심사와 모니터링은 센터링크의 주요 업무임.

- 2020년 현재 대략 1천 8백만 명이 사회보장 급여 수급자로 등록되어 있음  
(Data.gov.au, 2020)
- 호주 사회보장제도는 높은 대상 포괄성이 장점이지만 세부적으로 범주화된 급여 체계와 급여들 간의 복잡한 연계는 부정수급에 대한 유인 효과를 지닐 수 있음
  - 사전 기여에 의해 자격요건이 이미 결정되어 있지 않은 다양한 공공부조성 급여가 운영 중이기 때문에 수급자는 부정수급 기회를 포착하려는 동기가 강한 제도적 환경 속에 있다고 볼 수 있음
  - 복잡한 급여체계는 급여 대상자 선정 및 자격요건 관리 과정에서 행정적 실수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음
    - 실제 사회보장 부정수급은 수급자의 고의에 의해 발생하는 것보다 제도상 허점이나 관리운영의 실수에서 기인한 사례가 훨씬 많음(Prenzler, 2016a)
- 검찰(Commonwealth Director of Public Prosecutions)로 기소 의뢰된 사회보장 부정수급 건수는 2015-16년 한 해에 약 1,300건에 이룸
  - 이 중 실제 부정수급으로 판결된 사례는 814건으로서 기소성공율은 약 60%임

〈표 5-10〉 사회보장 수급자 및 부정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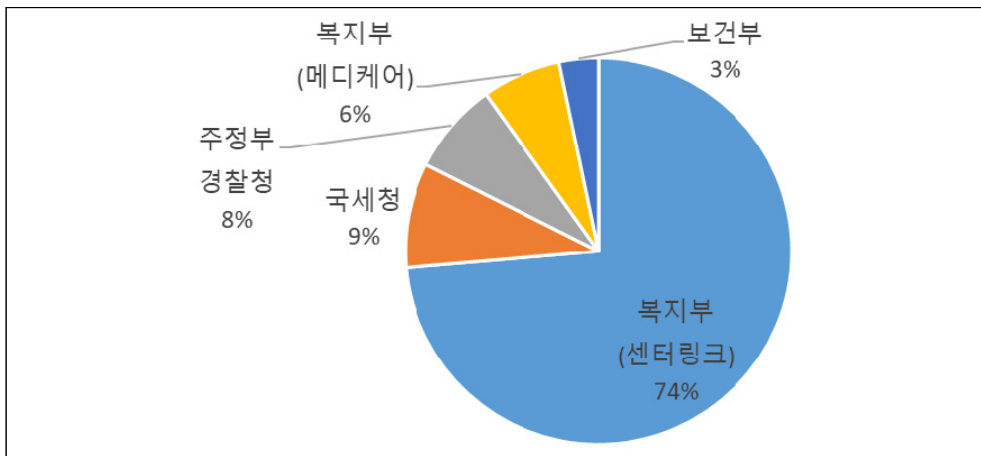
기간	수급자	기소 의뢰	기소율	부정수급 판결	부정수급율
2007-2008	4,163,902	5,312	0.12	3,146	0.07
2008-2009	4,416,709	5,082	0.11	3,857	0.08
2009-2010	4,527,312	4,608	0.10	4,019	0.08
2010-2011	4,595,861	1,273	0.02	2,847	0.05
2011-2012	4,677,395	1,235	0.02	1,186	0.02
2012-2013	4,830,225	1,165	0.02	927	0.02
2013-2014	5,015,966	1,071	0.02	863	0.01
2015-2016	5,114,307	1,366	0.02	814	0.01

자료: Prenzler. (2016b). Welfare fraud prevention in Australia: A follow-up study; 임완섭 외. (2019a). p.195 〈표 4-6〉 재인용.

- 검찰 기소 의뢰된 부정수급 사례수와 최종 부정수급 판결 건수는 지난 10년간 지속적 감소 추세에 있음

- 특히 2010년을 기점으로 기소 건수는 약 80%까지 감소했으며, 부정수급 판결 건수도 약 75%까지 감소하여 급격한 변화가 관찰됨. 이후 부정수급기소는 대체로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음
- 검찰로 기소된 사회보장 부정수급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지만 검찰로 기소된 사건의 비율로 보면, 여전히 복지부가 주를 이루고 있음. 2019-20년 통계에 의하면, 복지부는 전체 검찰 기소 건수의 18%를 차지하고 있음
- 이 중 호주 정부의 재정을 왜곡하는 기소(Revenue and Benefits Fraud)의 퇴와 관련하여 복지부는 전체 기소 의뢰 건수의 67%를 차지하여 가장 주요한 원천이 되고 있음

[그림 5-14] 재정 왜곡 기소 의뢰 원천



자료: Commonwealth Director of Public Prosecutions. (2020). 2019-2020 Annual Report.

- 최근에는 온라인을 이용하거나 허위 신분(multiple identities) 이용하는 등의 복잡한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 과학수사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Commonwealth Director of Public Prosecutions, 2020)
- 복지부로부터의 기소 의뢰도 세부 분야별로 다양함
  - 사회보장 현금 급여에 대한 부정수급뿐만 아니라 보육서비스(family day

care), 메디케어(medicare), 그리고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 등의 분야에서 기소 의뢰가 이뤄짐

- 부정수급은 수급자에 의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복지부 내부 직원에 의해 발생하기도 함. 아래 사례는 내부(internal) 부정수급의 사례임

#### 내부(internal) 부정수급 사례

Teece 씨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뉴사우스웨일즈주(New South Wales)의 여러 센터링 크지사에서 근무함. 이 기간 동안 그녀는 장애연금(Disability Support Pension)을 받기 위해 허위로 자격요건을 만들. 2012년 하반기에 코프스 하버(Coffs Harbour) 지사에서 근무하면서 Rebecca O'Grady라는 이름으로 심각한 시력 장애가 있다는 가짜 안과 리포트를 제출함. 이 신청은 승인되었고, 2012년 12월부터 15년 5월까지 그녀는 장애연금을 수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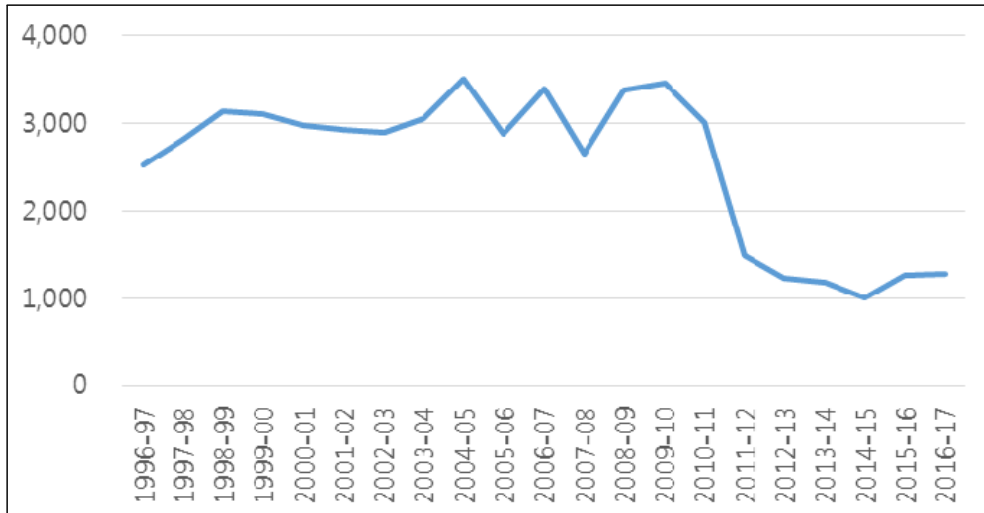
그녀는 2014년에 포츠빌(Pottsville) 지사에 근무하는 동안 또 다시 Rachel Lewis라는 허위 이름으로 전맹(blindness) 장애 명목으로 장애연금을 신청했으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바 있음. 2015년 3월에 그녀는 다시 Margaret Lewis라는 이름으로 장애 돌보미 급여(Carer Payment)를 신청하여 승인받음. 그녀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금액은 총 87,481 호주달러(약 8 천만원)에 달함.

자료: Commonwealth Director of Public Prosecutions. (2020). 2019-2020 Annual Report.

- 최근 호주의 사회보장 부정수급의 현저히 감소는 몇 가지 중요한 정책적 변화와 관련되어 있음
  - 즉, 2011년까지 센터링크는 사회보장 초과 지급분(부정수급) 회복에 관한 실적을 운영했으며, 이에 따라 센터링크 조사원들은 일정 건수 이상을 기소 의뢰토록 요구되었음
  - 예를 들어, 2000-01년 센터링크의 핵심성과지표(Key Performance Indicators)에는 4,000 건수를 기소 의뢰하도록 목표치가 제시됨
    - 이를 달성하기 위해 조사원들은 일인당 연간 최소 96개 사례를 조사하고, 최소 6개 사례를 기소 의뢰하도록 요구됨
    - 다시 말해, 목표치 달성을 위해 의심되는 사례가 있으면 가급적 기소 의뢰가 이루어졌음
  - 이런 불합리한 관례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더 심각하고,

더 명백한 부정수급 사례에 집중하여 조사 및 기소의뢰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개선됨(Wilcock, 2018)

[그림 5-15] 사회보장 부정수급 기소 추세



자료: Wilcock, (2018). Why prosecutions for welfare fraud have declined in Australia.; 임완섭 외. (2019a).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방안 연구. p. 196 [그림 4-3] 재인용.

- 부정수급 대응 전략은 불합리한 양적 목표치를 제거하고,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예방적 접근과 조기 개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 기소를 당한 개인은 심리적, 재정적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고용기회의 제약 등 일상생활의 심각한 제약을 경험하게 되므로, 기소는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임
- 대안적인 접근으로서 예방(prevention)과 조기 감지(early detection) 기능을 통해 기소 이전에 센터링크 내에서 우선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법 제안됨 (Legal Aid NSW, 2010)
- 부정수급 기소 감소는 우선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됨
- 호주는 부정수급에 대한 덜 처벌적인 접근으로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적 변화는 지역사회와 호주 정부의 전향적인 소통의 결과로 이해됨



- 예방과 조기개입 강화 전략의 채택으로 부정수급 기소 감소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기대됨.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변화가 수급자 중심의 접근법으로의 질적 변화를 의미하지는 않음
  - 즉, 사회보장 수급자를 잠재적 부정수급자로 인식하는 접근법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
    - 예를 들어, 사회보장 비준수행위에 대해 벌점제(demerit system)가 새롭게 도입되어 일정수준 이상의 벌점에 대해 급여 제재가 있음(Henriques-Gomes, 2019)
- 일부 강경론자들은 부정수급에 대한 무관용 정책(zero tolerance)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최근 부정수급 감소는 고무적이지만 여전히 부정수급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강력한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는 주장도 존재함(Prenzler, 2016b)

## 2. 부정수급 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

### 가. 법적 관리

- 호주의 사회보장 부정수급을 관장하는 법은 ‘사회보장행정법(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Act 1999)’임. 사회보장행정법은 부정수급 행위의 정의 유형, 그리고 처벌을 규정하고 있음. 부정수급 관련 주요 규정은 아래와 같음
- 2011년부터 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상황 변화 보고 의무가 추가됨
  - 동법 66조에 의거, 수급자는 급여 자격과 급여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적 변화가 발생할 경우 이를 14일 이내에 복지부(센터링크)에 보고해야 함(Federal Register of Legislation, 2013)
- 사회보장 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 : 연락처, 은행계좌, 가족관계(결혼, 별거, 이혼 등), 돌봄 관계, 종사상 지위, 학업, 성정체성, 거주형태(자가, 임대 등), 해외 출국, 일시적 수입, 배우자의 소득이나 자산

- 사회보장행정법은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 법원이 급여환수 명령을 할 수 있고, 최대 12개월 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 사회보장 부정수급에 ‘형사법(The Criminal Code Act 1995)’ 적용도 가능
  - 사회보장 수급 관련 위법 행위는 동법 134조와 135조에 규정되어 있음
  - 부정수급은 기만(deception)으로 소유물이나 재정적인 이익을 획득한 경우, 그리고 부정한(dishonest) 행위로 타인에게 손실을 초래한 행위로 간주됨.
    - 기만으로 재정적 이익을 취득한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10년의 징역형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재정적인 이익에 대해서는 최대 12개월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음(Federal Register of Legislation, 2019)
  - 행정적인 차원에서 호주 복지부는 자체적으로 ‘부정행위 통제 계획(Fraud Control Plan)’을 운영하고 있음
    - 이 계획에 의거, 복지부의 모든 직원 그리고 복지부와 서비스 공급 계약을 맺은 자들은 의무적으로 부정행위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서비스 이용자와 공급 기관 직원에 의한 의심스러운 행위를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짐
    - 특히, 부정수급 통제, 감지, 조사 등 부정수급 관리활동을 하는 이는 특별 교육과 훈련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수행하지 않을 시 ‘호주 공무원 행위규범(Australian Public Service Code of Conduct)’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나. 부정수급 관리 주체

- 복지부에서 부정수급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청렴전담반(Taskforce Integrity)’으로서, 2015년에 설립되어 사회보장 급여 행정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전략 수립과 활동을 수행함
- 청렴전담반은 연방경찰청으로부터 지원되는 부정수급 대응 특수조직으로 볼 수 있음. 연방경찰청(Australian Federal Police)의 부경총(Assistant Commissioner)이 복지부로 파견되어 청렴전담반을 지휘하게 됨. 청렴전담반은 복지부의 ‘청렴 및 정보(Integrity and Information)’국의 ‘청렴업무(Business Integrity)’과에 소속되어 있음

[그림 5-16] 복지부 조직 구조

	Payments Reform John Murphy Deputy Secretary	Service Delivery Operations Michelle Lees A/g Deputy Secretary		Health and Aged Care Paul Creech A/g Deputy Secretary	Integrity and Information Annette Musolino A/g Deputy Secretary
◆ Chief of Staff Lisa Carmody	<b>Business Transformation</b> John Kliner, A/g GM Business Design and Architecture Leigh Allison, A/g NM Commercial Partnerships and Engagement Jacinda Still, NM <b>Programme Delivery</b> Stephen Planincic, GM Programme Office Christine Kruse, A/g NM Project Delivery Andrew Zorko, NM Data and Digital Projects Aaron Wilkins, NM Business Transformation Susan Morrison, NM	<b>Face to Face Services</b> Sandy Mamo, A/g GM Central NSW Tricia Flanagan, NM Central Queensland Ian McInnes, NM Eastern Victoria Jane Steinkamp, NM North NSW Julie Hockey, A/g NM Northern Australia Katrina Zander, NM Northern Queensland Peter Searston, NM Northern Victoria Sue Kitchin, NM South Australia Brenton Halliday, NM South Queensland Jody Taylor-Robinson, NM Southern NSW Tracey Sheather, NM Sydney Scott Chant, NM Tasmania David Mole, NM West Victoria Stan Neely, NM Western Australia Denise Craig, A/g NM <b>Child Support Smart Centres</b> Bruce Young, A/g GM Child Support Smart Centres, VIC and TAS Stuart Brazendale, NM Child Support Smart Centres, WA, SA and QLD Tara Pamula, NM Child Support Smart Centres, NSW and ACT Sally Berry, A/g NM Customer Service Ian Bailey, NM	<b>Smart Centres, Indigenous and Intensive Servicing</b> Jennifer Bufati, GM Smart Centres South Paul McNae, NM Smart Centres East Louise Hamilton, NM Smart Centres Central and West Kyle Gruber, A/g NM Smart Centres North Narelle Cameron, NM Assessment Services and Smart Centres Coordination John Hughes, A/g NM Social Work and Multicultural Services Caroline Manning, A/g NM Indigenous and Remote Servicing Lauren Callinan, NM <b>Operations Management</b> Bridget Brink, GM Operational Planning Gavin Wolfe, A/g NM Operational Performance Perdi Mitchell, NM Operational Projects Craig Kelly, NM ■ Future Operational Capability Patrick Collins, A/g NM <b>Service Delivery Strategy</b> Chris Horsley, GM Channel Strategy and Transformation Mark Cousins, NM Business Process and Change Susan Brooks, A/g NM Capability Improvement Hamid Heydarian, NM <b>Modernisation</b> Vacant, GM	<b>Health and Aged Care Programmes</b> Danielle Regeling, A/g GM Aged Care Programmes Vanessa Beck, NM Pharmaceutical Benefits and Digital Health Shareez Farouk, NM Population Health Steve Farrell, NM <b>Health Strategy</b> Nick Henderson, A/g GM ■ Health Modernisation Strategy Stuart Turnbull, NM Medicare and Veterans Health Javier Ribalta, A/g NM ■ Medicare Enrolment and Eligibility Multidisciplinary Team Kylie Finnigan, A/g PM Health Data Analysis and Strategy Tony Piazza, NM <b>Health Service Delivery</b> Susan Black, GM Aged Care and Allied Health Jill Simpson, NM Delivery Support Karen Lock, NM Medicare Delivery Stephen Kelly, NM	<b>Business Integrity</b> Damian West, GM Taskforce Integrity and Fraud Investigation Kate Buggy, NM Fraud Control and Assurance Alex Dolan, NM <b>Customer Compliance</b> Craig Storen, GM Compliance Risk Bo Robertson, A/g NM Compliance Programme Sheree Harrison, NM <b>Information, Debt and Appeals</b> Karen Harfield, GM Information Management Nicky Bell, A/g NM Debt Management Pauline O'Neill, NM Appeals Deborah Winkler, NM <b>Integrity Modernisation</b> Jason McNamara, GM Integrity Strategy and Engagement Lara Purdy, NM Implementation and Operations Matt Corkhill, NM <b>Chief Data Officer</b> Maria Milosavljevic, A/g GM Data Strategy Mark Morrison, NM ■ Data Pilot Sherial Hughes, A/g PM

자료: Services Australia. (2019). 2018-19 Annual Report. Services Australia. p.314, Figure 3.

- 이들의 실질적인 활동은 심각한 위법과 복지 사기 행위에 초점을 두고 있음.  
청렴전담반은 단순한 실수로 유발되는 부정수급보다는 의도적인 부정수급을 통해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왜곡하는 이들을 표적화하고 있음
  - 즉, 부정수급 위험도가 높은 지역을 식별하여 그 지역의 수급자들을 심층조 사하고 있음
  - 더불어 사회보장 수급자들이 센터링크에 정확한 정보를 신고하도록 교육하 고 지원하며, 비고의적으로 신고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이들로 하여금 성실 신고 의무를 이행하도록 지원함
- 청렴전담반은 부정수급 관리(debt management) 및 부정수급 된 급여 회수 (debt recovery)를 위한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범죄 행위에 대한 증거

가 있을 경우 이를 검찰에 의뢰하는 기능을 수행함

- 청렴전담반 수장은 ‘연방 경찰청(Australian Federal Police)’에서 파견된 경찰 신분 보유자로서, 부정수급 방지 및 회수를 위한 다양한 법적, 행정적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
- 예를 들어, 부정수급자가 취득한 부당한 급여에 이자를 부과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분 회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외부 추심기관(external collection agents)에 사례를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출국금지명령(departure prohibition order)을 내릴 수도 있음
- 또한, 아동지원제도 규정을 위반한 경우 부정수급자의 임금 또는 세금미납분을 차압(garnish)할 수도 있음(Services Australia, 2020f)

○ 호주 복지부는 청렴전담반 운영과 관련하여 다양한 정부 및 민간 기구들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음

- 특히, 소득 정보와 개인 정보 열람 및 수집 활동, 그리고 법적 강제 활동을 위해 호주 연방 경찰청(Australian Federal Police)과 업무협약 중에 있음
- 경찰청과의 협업은 부정수급의 의도성을 판정하고, 부정수급이 개인을 넘어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밝혀내는 능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짐
- 이 외에도 수급자의 소득을 다루는 국세청(Australian Taxation Office)과 고용노동부(Department of Education, Skills and Employment), 그리고 수급자의 소득의 원천이 되는 민간기관들로부터의 정보를 활용함
- 더불어 장애인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별도의 청렴전담반(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 Fraud Taskforce)을 운영하고 있음(Services Australia, 2020a)

#### 다. 행정적 관리 전략

□ 호주 사회보장 부정수급 관리는 센터링크 설립의 목적과 연관되어 있으며, 부정수급 관리 행정은 센터링크가 설립된 1990년대 중반부터 이미 시행되어 왔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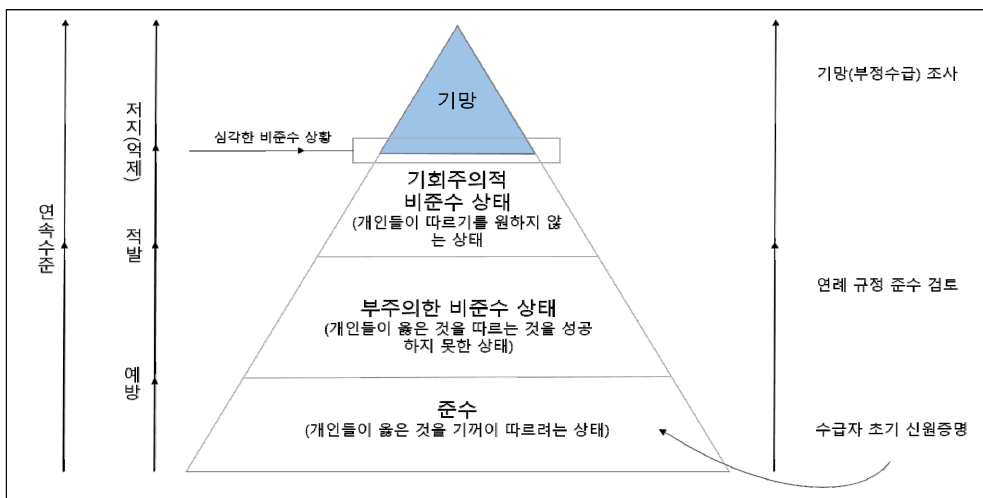
○ 센터링크는 ‘연방정부 부정행위 관리 지침(Commonwealth Fraud Control

Guidelines 2002)’에 의거 ‘사회보장 부정수급 관리계획(Centrelink Fraud Control Plan 2008-10)’을 발표함

- 이 계획은 부정수급에 대한 호주 정부의 전략과 접근법, 그리고 관리방안을 세 가지 단계적 접근법에 기초하여 체계화하고 있음

- 일차적으로 부정확한 급여나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prevention), 다음으로 부정확한 급여나 부정행위 탐지(detection)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마지막으로 예방과 탐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경우 사후적 적절한 억제책(deterrence)을 가동(Cetnrelink, 2008)

[그림 5-17] 부정수급 분류 모델



자료: Australian National Audit Office. (2010). Centrelink Fraud Investigations. p.19, Figure S1.

□ 센터링크의 단계적 접근법은 기본적으로 사회보장 수급자들이 규정을 준수할 의향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에 기초하고 있음

- 부정수급 분류모델에 따르면, 피라미드 상부로 이동할수록 부정수급의 의도성이 분명해짐

- 맨 아래 준수 단계에서는 예방책이 가동되며, 중간단계의 비의도 혹은 부주의에 의한 부정수급에 탐지와 준수 강화 개입이 행해지며, 최상부의 사기행위에 대해서는 후속적인 부정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개입이 시행됨

## 1) 부정수급 관리 인프라 개선

- 호주 정부는 부정수급 관리 강화를 위해 사회보장 전달체계를 개선해 오고 있음
  - ‘복지급여 인프라 개선사업(Welfare Payment Infrastructure Transformation)’은 사회보장 전달체계의 근대화(modernisation)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 구체적으로 정보통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센터링크의 업무 절차를 간소화하고 디지털화하여 사회보장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음
    - 1980년대 도입된 노후화된 소프트웨어를 교체하는 작업은 이 사업의 일부로 추진됨
- 복지급여 인프라 개선사업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7년간 총 5단계 사업으로 시행되어 오고 있음
  -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세 번째 단계 사업이 완료되고, 2020년 현재 네 번째 사업 단계에 있음. 온라인을 이용한 디지털 서비스 확대와 사회보장 급여의 자동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
  - 복지급여 인프라 개선사업은 그 자체로서 부정수급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볼 수는 없고, 수급자들의 대기시간을 줄이고, 직원들의 업무 흐름을 개선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임
    - 그러나, 복지급여 인프라 개선사업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부정수급 탐지와 규제 준수 기능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함 (Arthur, 2015; Services Australia, 2018)
  - 센터링크는 과거 비자동화된 방식으로 일년에 약 2만 건의 부정수급을 탐지했지만, 자동화된 방식을 통해서는 동일 건수를 일주일 만에 탐지가능(Hickey, 2019; Senate Standing Committees on Community Affairs,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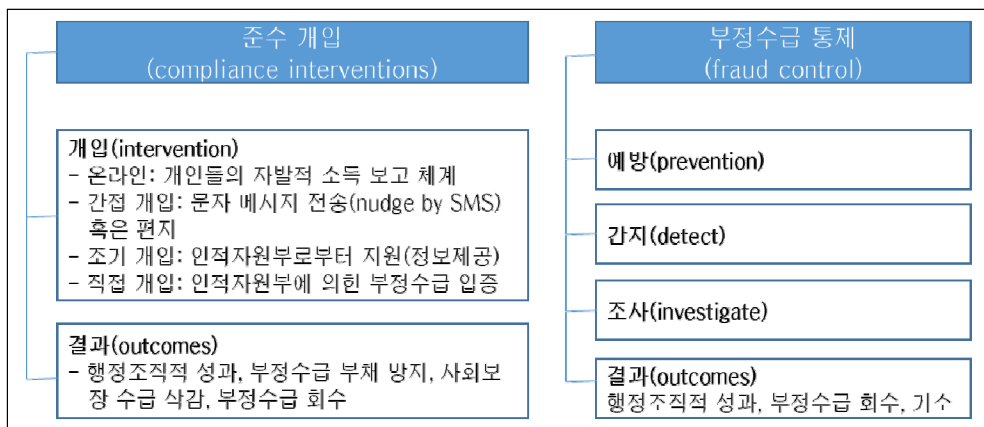
## 2) 부정수급 모니터링 시스템

- ‘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은 복지부가 사회보장 부정수급을 감지

하고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통칭하고 있음

- 신고된 소득과 이에 기초한 급여 간의 불일치 혹은 에러는 호주 사회보장 체계와 행정의 주요한 이슈임
- 준수 프로그램은 의도적으로 혹은 의도하지 않게(inadvertently) 과잉 지급된 급여를 회수하는 것을 실질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준수 프로그램은 미준수 행위에 대한 개입(예방)과 사후 회수 개입(통제) 등 두 가지 방향에서 접근하고 있음

[그림 5-18] 준수 프로그램 접근법



자료: Australian National Audit Office. (2018). Human Services' Compliance Strategies. p.16, Figure 1.1.

- 최근 호주 복지부는 과학수사실(Digital Forensics Laboratory)을 도입, 운영하기 시작함(Robert, 2019)
- 2015년에 캔버라(Canberra)에 처음 도입한 이후 2019년에 브리즈베인(Brisbane)에 두 번째 과학수사실을 설립함
- 과학수사실은 개인의 부정수급보다는 조직적인 부정수급에 대한 대응임
  - 조직적인 부정수급은 주로 보육급여나 장애인 사회서비스 분야 등 정부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방식에서 발생하는 경향이 있음
- 또는, 최근 사이버 범죄 기법을 도입한 전문적인 부정수급이 포착됨에 따라 과

학수사실을 확대하고 있음. 과학수사실의 업무 소관은 청렴전담반의 내부 조사를 지원하는 데에 있음

### 3) 부정수급 제보

- 복지부는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위해 자체의 행정적인 역량과 더불어 외부로부터의 제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산하의 센터링크는 설립 직후 1998년부터 제보 시스템(Tip-Off System)을 도입함
  - 부정수급 제보는 센터링크의 내부 조직에 의한 부정수급 관리 행정체계를 보완하는 민간 부정수급 관리체계로 볼 수 있음
  - 전화, 우편, 이메일 그리고 센터링크 웹사이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수집하고 있으며, 제보는 부정수급 관리체계에서 실질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 현재는 복지부 전화 제보(Services Australia Tip-Off Line)와 온라인 제보([https://www.centrelink.gov.au/wps/portal/clk\\_common/TORS#stay](https://www.centrelink.gov.au/wps/portal/clk_common/TORS#stay)) 등이 제보의 주요 경로임
    - 대체로 전화보다는 온라인을 이용한 제보가 두 배 정도 많은 수준임
- 부정수급 제고 건수는 급속히 증가하다가 최근에는 감소추세에 있으며, 최근 복지부는 한 해에 약 9만여 건의 부정수급 제보를 받고 있음
  - 센터링크는 제보전담팀(specialist tip-off team)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제보는 제보전담팀에 의해 사정되고, 추가적인 조사 및 기소 등 부정수급 회수 절차로의 회부 여부가 결정됨
  - 부정수급 제보는 디지털 과학수사실(Digital Forensics Laboratory)과 청렴전담반(Taskforce Integrity) 등의 공식 행정체계를 보완하는 민간 부정수급 관리체계로 볼 수 있음
  - 부정수급 제보는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실제 부정수급으로



확인되어 회수 절차로 이어지는 사례는 0.1% 이하에 머물러 실효성이 높은 제도로 평가하기는 어려움(Reynolds, 2017)

〈표 5-11〉 부정수급 제보 건수

경로	2016-17	2017-18	2018-19
복지부 전화 제보	38,838	33,123	31,093
우편, 온라인 등 다른 경로	75,227	76,181	59,0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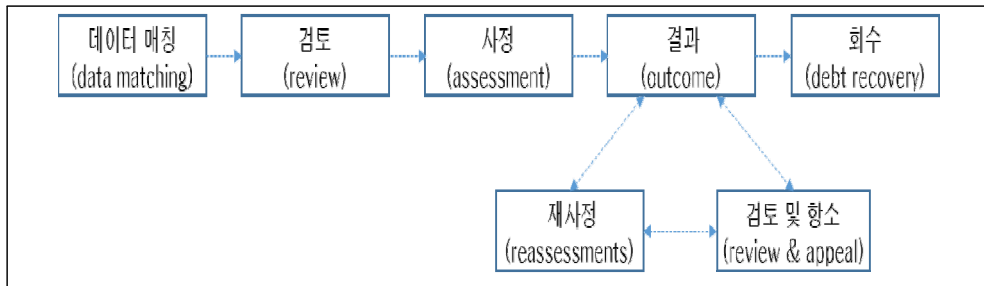
자료: Services Australia. (2019). 2018-19 Annual Report. p.165, Table 52.

#### 4) 조기 접촉과 상환 유도

- 외부로부터의 제보 이외에 복지부 내부 행정을 이용한 부정수급 감지 방법으로 먼저 무작위 샘플 서베이(random sample survey)를 꼽을 수 있음
  - 주요 급여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특정 시점에 연락하여 수급자들의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현재 자격요건과 일치하는 지를 검토함
  - 이 과정은 급여의 정확도(payment correctness)를 점검함으로써 복지부가 미리 설정해 놓은 급여의 질을 수준(payment quality standards)을 달성했는지 평가하는 과정임
  - 복지부는 95%의 정확도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9-20년에는 98.53%의 매우 높은 정확도를 달성함(Services Australia, 2020e). 이 수치는 부정수급의 확률이 낮을 것을 암시하고 있음
- 상기 서베이 방식은 수급자들의 진술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객관적인 방식으로 점검될 필요가 있음. 이 과정은 데이터 매칭(data-matching) 방법을 이용하고 있으며, 데이터 매칭이 사실상 부정수급 감지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 데이터 매칭은 호주 국세청이라는 제3자의 개입으로 이루어짐. 즉, 사회보장 수급 목적으로 복지부에 신고된 소득 및 자산 정보와 국세청의 실제 소득 정보를 비교하여 불일치 발생 여부를 확인함

- 불일치 감지는 즉각 조사 및 부정수급 회수 절차로 회부되지 않고, 감지된 사례에 대한 재분석 및 데이터 교정을 거친 후 다음 단계로 진행됨

[그림 5-19] 준수 프로그램 흐름도



자료: Services Australia. (2020c). Income Compliance Program. p.6 Diagram 1.

- 검토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회수 절차 시발을 알리는 최초 통지(initiating letter)가 편지 혹은 전화 메시지 형식을 통해 수급자에 전달됨
  - 이 편지는 곧장 부정수급 회수 의무를 고지하는 편지가 아니며, 데이터 매칭을 통해 신고소득과 실제소득 간에 불일치가 발견되었으며, 이를 교정하기 위해 센터링크에 소득상황의 변화를 신고할 것을 권고하는 절차임(부록 5 참고)
  - 소득상황 변화에 대한 신고는 전화 혹은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며, 온라인은 웹사이트(my.gov.au) 혹은 센터링크 모바일 앱(Express Plus Centrelink)을 이용할 수 있음(부록 6 참고)
    - 온라인을 통해 소득 상황을 신고하는 이 절차는 '소득 최신화 온라인 프로그램(Check and Update your Past Income, CUIPI)'으로 지칭되고 있음(부록 7 참고)
    - 소득 최신화 온라인 프로그램은 2018년부터 시행됨.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수급자와 센터링크 직원 간의 접촉이 수반되지 않아 신속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방식으로 평가되고 있음(Services Australia, 2020c)
- 만약 수급자가 최초 통지에서 고지된 불일치를 소득 최신화 온라인 프로그램을 통해 해소치 않으면, 수급자에게 최종적으로 환불 고지서(debt notice)가 전달됨

- 고지서에는 부정수급 사유, 부정수급액, 그리고 수급액 환불 방법 및 기한 등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음(부록 8 참고)
- 부정수급 환수 금액에는 부정 수급액의 10%의 수수료(recovery fee)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음. 만약 기한 내에 미납할 경우 추가로 연기된 날짜분에 대한 이자가 부과될 수 있음. 환수 수수료는 근로연령층 부정수급자에게만 부과되고 있음
  - 기존에는 환수 수수료가 부정수급 고지서에 자동적으로 부과되었으나, 제도 개선의 요구에 따라 단순 실수로 인한 부정수급에는 면제되고 있음
  - 2017-18년 자료에 의하면, 전체 환수 고지의 37%에 환불수수료가 부과됨 (Commonwealth Ombudsman, 2019)
- 부정수급 회수는 수급자와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며, 수급자는 일시금 혹은 현재 수급중인 사회보장 급여의 삭감 등의 방식으로 상환할 수 있음
  - 환불고지서를 받은 수급자는 센터링크의 부정수급 환수팀(Centrelink debt line)에 연락하여 환수조치에 대해 상의할 수 있음. 만약 상환 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센터링크는 외부의 추심업자(debt collectors)에 의뢰할 수 있음
  - 부정수급 조치에 동의하면, 센터링크 온라인 계좌(Centrelink online account)나 센터링크 모바일 앱(Express Plus Centrelink mobile app)을 이용하여 상환할 수 있음
  - 만약 센터링크의 환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재심관(Authorised Review Officer)에게 재심을 신청할 수 있음
  - 재심관의 결정에도 동의하지 않는 이는 행정법원(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에 제소할 수 있음
    - 사회보장 항소심을 전담하던 '사회보장법원(Social Security Appeals Tribunal)'은 2015년부터 행정법원에 통합운영되고 있음(Social Security Rights Network, 2017)

### 3. 부정수급 추정방법

- 호주의 부정수급 조사는 최근 들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자동화된 방법으로 급속히 전환됨. 데이터 매칭 프로그램은 호주의 부정수급 관리체계의 핵심이라 볼 수 있음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2019; 임완섭 외, 2017)
- 사회보장 급여 자격 및 급여 수준은 일차적으로 신청자의 신고소득에 의해 결정되지만, 신고소득의 정확성은 다양한 소득 데이터와의 교차점검을 통해 사후적으로 검토됨
- 호주의 수급자 소득 점검 체계는 ‘데이터 매칭 프로그램법(Data-matching Program (Assistance and Tax) Act 1990)’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 법에 의거하여 1991년에 데이터 매칭 기구(Data Matching Agency)를 설립함
- 당시 데이터 매칭 기구에는 ‘사회보장부(Department of Social Security, 센터링크의 전신)’와 개인 소득자료를 관리하는 ‘국세청(Australian Tax Office)’이 참여했음
- 이후 보훈급여를 담당하고 있는 ‘보훈부(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가 가담했으며, 현재는 개인소득을 다루는 다양한 정부기관들의 협조 체제가 구축되어 있으며, 센터링크가 데이터 매칭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음

〈표 5-12〉 데이터 매칭 외부데이터 원천(external sources)

- 호주금융위원회(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
- 호주국세청(Australian Taxation Office)
- 기업연금공단(Commonwealth Superannuation Corporation)
- 교육기술고용부(Department of Education, Skills and Employment)
- 고용부(Department of Jobs and Small Business)
-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 이민부(Department of Home Affairs)
- 보훈부(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 국방부(Defence Housing Australia)
- 공사립학교(Public and private education providers)
- 교정서비스(State and territory departments of corrective services)
- 출생사망결혼등록서비스(State and territory registrars of births, deaths and marriages)
- 토지등록서비스(State and territory land titles offices)

자료: Services Australia. (2019). 2018-19 Annual Report.

- 데이터 매칭은 크게 세 가지 기능을 통해 부정수급을 탐지함
  - 첫째는 중복급여 점검으로서 동일한 수급자격을 이용하여 수급해서는 안되는 또 다른 급여를 수급하고 있는지 판단함
  - 둘째는 소득정보의 정확성 점검으로서 센터링크에 신고된 소득이 국세청을 비롯한 다양한 정부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소득 정보를 비교하여 정확한 급여액이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함
    - 급여의 정확성 점검은 과잉급여(overpayment)뿐만 아니라 과소급여(underpayment) 여부도 확인함
  - 셋째는 수급자 신원 일치 검사(Personal Identity Discrepancies)로서 국세청이 보유한 개인 신상과 센터링크 등록 정보의 일치를 확인(Prenzler, 2011)
- 초기 데이터 매칭 프로그램은 센터링크 직원이 센터링크 신고소득과 국세청의 소득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 전통적인 데이터 매칭 방식에 의하면, 센터링크는 국세청에 수급자의 개인식별정보(identity information)를 제공하고, 국세청은 이에 기초하여 센터링크에 해당 개인의 소득정보를 제공함. 센터링크는 보유하고 있는 소득신고과 국세청의 소득정보를 비교하여 불일치 여부를 확인함
  - 두 소득자료 사이에 불일치가 확인되면, 센터링크는 수급자의 고용주에게 수급자의 급여명세서(pay-as-you-go statements)를 요구하여 보유하고 있는 소득자료와 다시 대조함
- 2016년부터 호주의 데이터 매칭 프로그램의 공식명칭은 ‘온라인 준수 개입(Online Compliance Intervention)’ 프로그램으로 변경됨(Senate Standing Committees on Community Affairs, 2017)
  - 온라인 준수 개입은 그 명칭이 시사하는 것처럼 데이터 매칭 과정에 인적 개입이 최소화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의미함
    - 즉, 기존에는 소득 대조 과정에 센터링크 직원이 직접(manually) 관여했지만, 온라인 준수 프로그램 도입에 따라 그 절차는 자동화되고 비대면화됨

○ 현재의 자동화 방식은 전통적인 방식과 다음 세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음

- 첫째, 소득정보 확인의 주체가 센터링크로부터 수급자로 변경됨
  - 즉, 기존에는 소득불일치가 확인되면 센터링크 직원이 고용주를 접촉했지만, 현행 방식에서는 수급자에게 소득불일치 공지가 전달되면 수급자 본인이 고용주에게 연락하여 급여명세서를 받아 센터링크에 제출해야 함
- 둘째, 수급자의 소득 자료 소통은 온라인으로 처리됨
  - 호주 정부는 최근 행정서비스의 디지털화를 추진해오고 있으며, 개인 온라인 계좌를 통해 행정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함(myGov.gov.au). 사회보장 서비스 역시 동일한 변화가 수반되고 있으며, 수급자가 소득자료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센터링크 사무소를 방문하기보다는 센터링크 온라인 포털에 접속하여 근거자료를 제출하게 됨
- 셋째, 온라인 방식의 도입은 센터링크 직원의 업무량을 감소시킴으로써 운영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과거에 비해 훨씬 많은 양의 데이터매칭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됨(Senate Standing Committees on Community Affairs, 2017)

○ 온라인 준수 개입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진행되기 때문에 자동화된 부정수급 환수(automated debt recovery) 프로그램으로 불리어지고 있음

- 데이터베이스에만 의존하여 기계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인적 개입을 통한 재확인 및 점검 과정이 생략되어 상당한 오류가 발생하여 지역사회에 비판에 직면함
- 또한, 부정수급 회수 과정에서 센터링크와 클라이언트 간의 인적 상호작용이 부재하다는 점에 온라인 준수 개입 프로그램은 로봇 회수(robo-debt recovery) 프로그램으로 비하됨(Farrell & McDonald, 2019; Goldie, 2019)

□ 호주 정부의 사회보장 부정수급 관리체계는 최근 조직화되고 고도화된 복지 사기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 이를 위해 정부기관 간 협조와 정보통신기술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 최근 센터링크는 ‘호주금융정보분석원(Australian Transaction Reports and Analysis Centre)’과 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구축함
  - 호주금융정보분석원은 돈세탁, 범죄조직 거래, 그리고 조세회피 등 부정 경제 거래 행위를 감시하는 기구임
    - 호주금융정보분석원과의 협조체계는 개인 차원의 부정수급 행위를 넘어서서 조직적인 범죄로서의 사회보장 부정수급으로 정책적 관심이 이동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금융정보분석원과의 협업은 센터링크의 ‘실시간 위험 인식(Real Time Risk Profiling)’ 능력을 향상시킴
- 2016년 금융정보분석원의 합류로 부정수급 감지에 관한 디지털 서비스 네트워크가 집결했다고 볼 수 있음
- 즉, 기존에 복지부와 국세청의 정보 공유는 단지 소득 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했다면, 금융정보분석원은 부정수급으로 의심되는 사례의 재무 거래를 밝혀내고, 신고되지 않은 수급자의 소득이나 재산을 탐지함으로써 부정수급 회수 기능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실시간으로 수급자의 재무 상황에 접근함으로써 복지 시스템에 대한 체계적이고 의도적인 공격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강화됨(Department of Human Services, 2016)

#### 4. 부정수급 규모 추정 및 공표

- 호주 정부는 사회보장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예산을 운영 중임. ‘부정수급 방지 예산(Strengthening the Integrity of Welfare Payment Budget)’은 2015-16 회계연도부터 7년 동안 실행 중인 장기 지원 사업으로서 2022년까지 사회보장 급여 체계의 디지털화와 부정수급 방지에 소요될 예산을 책정하고 있음
- 전술한 사회보장 급여 인프라 개선사업은 바로 이 예산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며, 사회보장 급여 체계가 온라인화 됨으로써 행정 과정이 간소화될 뿐만

아니라 국세청과 교육고용부(Department of Education, Skills and Employment) 등 부처 간 데이터 교환도 촉진될 것을 기대됨

- 부정수급 방지 및 환수 조치 노력에 집행되는 예산과 그 성과는 매년 센터링크를 관장하고 있는 복지부의 연차보고서(Annual Report)를 통해 공개되고 있음
- 전반적으로 준수개입 건수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가 2019-20년에 감소 추세로 전환됨
- 2019-20 회계연도에 조기 개입으로 부정수급 지출이 사전에 예방된 금액은 5천 2백 7십만 호주달러(약 5백억원)임. 부정수급으로 회부된 건수(debts raised)는 142,155 건으로 금액으로는 3억 6천 4백만 호주달러(약 3천억원)에 이름
- 복지 사기 혐의로 형사 조사(criminal investigations)에 넘겨진 경우는 총 1,014건이며, 이 중 564건은 복지부 행정조사(administrative investigations)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454건은 연방 검찰청(Commonwealth Director of Public Prosecutions)으로 회부됨

〈표 5-13〉 준수 프로그램 활동 (호주달러)

구분	2017-18	2018-19	2019-20
준수 개입 건수	1,263,926	1,693,110	898,574
급여 감소 건수	49,230	101,859	71,841
급여 감소분의 가치	\$20.5 million	\$26.5 million	\$25.2 million
부정수급 지출 예방	\$36.4 million	\$72.2 million	\$52.7 million
부정수급 회부 건수	209,313	325,677	142,155
총 부정수급분 가치	\$468.7 million	\$885.8 million	\$364.4 million

자료: Services Australia. (2020e). 2019-20 Annual Report. p. 67, Table 36.

- 2019-20 회계연도 자료에 의하면, 총 1백 7십 5만 건이 부정수급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2십 4억 호주달러(약 2조원)에 달함
- 부정수급 환수 조치를 통해 실제 회수한 금액은 약 절반인 1십 7억 호주달러(약 1조 5천억원)임
- 대체적으로 부정수급 건수와 환수금액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 복지부의 절



차에 따라 부정수급 분을 상환하지 않아 외부 추심 기관에 의뢰된 사례와 외부 추심기관에 의한 회수 금액 역시 감소하고 있음

- 이는 예방과 조기 탐지 강화를 통한 문제해결 접근법이 성공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단순 부주의 등으로 인한 부정수급을 복지사기로부터 가려내냄으로써 검찰 기소 사례 수가 줄어드는 현상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됨

〈표 5-14〉 부정수급 대응 성과 (호주달러)

구분	2017-18	2018-19	2019-20
부정수급 건수	2,493,474	2,270,117	1,758,484
부정수급 금액	3.2 십억	\$3.4 십억	\$2.4 십억
총 회수금액	1.70 십억	\$1.85 십억	\$1.75 십억
외부 추심기관에 의한 회수	\$125.7 백만	\$147.8 백만	\$105.0 백만
외부 추심기관 회수 비중	7.4%	8.0%	6.0%

자료: Services Australia. (2020e). 2019-20 Annual Report. p. 68, Table 37.

## 5. 시사점

□ 호주 사회보장 부정수급 관리체계는 다음 몇 가지 사항으로 요약될 수 있음

- 첫째, 행정 체계 측면에서 디지털 기술 활용을 강화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동시에 인적 개입의 여지를 최소화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
- 둘째, 부정수급 사례가 전반적으로 급감하고 있으며, 특히 복지사기로 칭해지는 의도적 제도 왜곡 현상이 줄어들고, 이는 형사기소로 이어지는 심각한 부정수급의 감소로 이어짐
- 셋째, 과거의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적 접근보다는 조기 개입 및 자발적 교정을 지원하는 예방적 접근이 강화되는 추세임

□ 호주의 부정수급 관리체계는 대체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주목할 점은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들이 단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 행정 주체의 시행착오, 정책 수립자, 수급자, 그리고 사회보장 관련 시민

단체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갈등 관계 속에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결과라는 점임

□ 처벌적 접근에서 교정적 접근으로의 변화는 분명히 고무적인 정책적 변화로 평가되지만 다음 몇 가지 사항과 관련하여 여전히 논란과 개선의 여지가 많음

○ 첫째, 소득 불일치 확인 과정 자체의 심각한 결함임. 부정수급에 대한 탐지와 검토의 시발은 수급자가 복지부에 신고한 소득과 국세청이 확보한 소득 간의 일치 여부임

- 호주의 사회보장 급여는 2주 주기로(fortnightly) 지급되며, 급여율은 사전에 수급자가 신고한 소득에 기초하여 결정됨. 수급자의 소득은 일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 상황에 변화가 있을 경우 변화 발생 후 27일 이내에 센터링크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Services Australia, 2020g)
- 문제는 비교 준거가 되는 국세청 소득 자료는 2주일 단위가 아니라, 분기, 반기 혹은 연단위로 확보된다는 점임
- 따라서, 두 소득의 비교를 위해 국세청의 소득은 2주치로 환산되어야 하며, 이는 소득의 평균화(averaged income)를 수반함
- 즉, 실제 소득이 아닌 소득을 실제 소득의 준거로 이용하여 비교하기 때문에 두 소득 간의 불일치는 흔히 발생함
  - 준수 프로그램 도입 초기에 복지부는 이 사실에 대한 고려없이 곧장 수적 불일치에 근거하여 부정수급 회수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수급자와 지역사회로부터 심한 비난을 받음
  - 현재 두 소득 간에 상당한 불일치(significant discrepancy)가 확인되어야만 부정수급 사례로 검토되고 있으나, 여전히 평균소득 이용의 타당성에 대해 논란이 있음
- 더 나아가 실제소득이 아닌 평균소득이 사회보장 급여의 자격을 결정하는 법적인 근거가 될 수 있는지 법적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임(Parliament of Australia, 2020)

- 둘째, 준수 프로그램은 절차상의 불공정(procedural unfairness)을 내포함
  - 수급자는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신의 소득 상황의 변화를 상대적으로 유연하고 편리하게 최신화 할 수 있으나, 이 과정은 오로지 수급자의 책임과 의무임
  - 준수 프로그램은 사회보장 급여를 받는 모든 이에게 적용되지만, 실제 소득 정보 최신화를 수행해야 하는 이들은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빈곤계층임
    - 이들은 대체로 소득과 무소득을 오가며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항상 모든 소득의 변화를 최신화하기 어려운 계층임
  - 게다가, 소득 최신화 앱들은 급여명세서와 은행 잔고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이 서류들에 대한 접근이 항상 용이한 것은 아님
- 셋째, 부정수급 회수 절차에 있는 수급자들은 무력감(disempowerment)과 심각한 권력의 불균형(power imbalance)을 경험하고 있음
  - 부정수급 결정에 대해 재검과 항소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나, 많은 수급자들은 이 절차에 대한 인지도가 낮을뿐더러 인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 이 절차를 요청하는 것을 쉽지 않음
  - 정부를 상대로 법적인 소송을 할 수 있는 시간적, 경제적 여유와 법적 대리인에 대한 접근성이 있는 취약계층은 많지 않음
- 넷째, 부정수급 행정의 위압적인 접근 방법은 수급자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들로부터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음
  - 수급자가 부정수급 최초 편지를 받게 되면, 심각한 스트레스와 감정적인 격변을 경험하게 됨. 준수 프로그램은 수급자들의 정신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
  - 공포상태(state of fear) 경험은 수급자들의 경제적 곤궁을 악화시키고, 더욱 빈곤하게 만드는 효과로 귀결됨. 부정수급은 결코 정당화되거나 옹호될 수 없지만, 수급자들과의 상호작용 과정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특히, 최근 복지부는 경찰청과 협업을 하고 있으며, 수급자와 교신하는 과정에서 경찰청의 로고를 사용하고 있으며(부록 5 참고), 수급자들의 심

리적 압박감을 가중시키고 있음

- 다섯째, 준수 프로그램은 수급자를 사회보장의 권리 담지자로 보기 보다는 잠재적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시킴
  - 복지부는 부정수급 문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금융정보분석원 등 재정 범죄를 다루는 정부 기관들과의 협업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음
  - 부정수급 불일치 사정의 불합리성과 행정 실수들, 그리고 무고한 사회보장 수급자들에게 죄의식을 부과함으로써 지역사회는 사회보장 체계에 대한 신뢰 상실을 경험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사회보장체계의 근본적 역할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 제4절 한국의 현금급여 부정수급 관리와 함의

### 1. 국내 사례 연구의 필요성

- 본 연구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보장급여법) 제19조의2에 근거하여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수급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기 위한 것임
- 실태조사에는 부정수급 발생 현황 및 유형, 부정수급 사후관리, 부정수급 관리 조직 및 운영, 그 밖에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함(「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 실태조사는 부정수급의 정도, 수급권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음(「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 본 연구에서는 2020년 첫 실태조사인 점을 고려하여 현금급여(78개)를 중심으로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현금급여 대상 사업 중 100억원 이상

예산 사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39개)를 실시하였음

- 기본조사와 실태조사는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근거한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수급의 부정수급 발생 현황 및 유형, 부정수급 사후관리, 부정수급 관리 조직 및 운영 등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용이
- 하지만, 부정수급의 발생 원인과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본 장에서는 사회보장급여의 보장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부정수급의 원인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표적집단면접(FGI)를 실시함
- 본 절에서는 한국에 대한 사례연구로, 2020년 부정수급 실태조사의 분석 대상인 현금급여를 중심으로 부정수급 및 관리 실태를 제시하고자 함
- 실태조사 조사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문헌 및 홈페이지(복지로 등) 자료 중심의 사례연구는 물론 인터뷰(표적집단면접)를 통한 사례연구를 병행하여 보다 포괄적인 형태의 사례연구를 수행

## 2.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수급 관리 개요

### 가. 법적 검토

-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르면, 사회보장급여는 신청(제5조)-조사(제6~7조)-결정(9조) 단계를 따름
- 사회보장급여는 ‘지원자와 그 친족, 또는 후견인 등’이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에 신청에 근거하며(제5조), 신청을 받으면 보장기관은 지원대상자의 사회보장요구와 건강상태, 가구 구성 등 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해야 함(제6조).
- 보장기관은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 등에 대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급자격을 확인하기 위해서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소득·재산·근로능력 및 취업상태,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 등을 조사함(제7조①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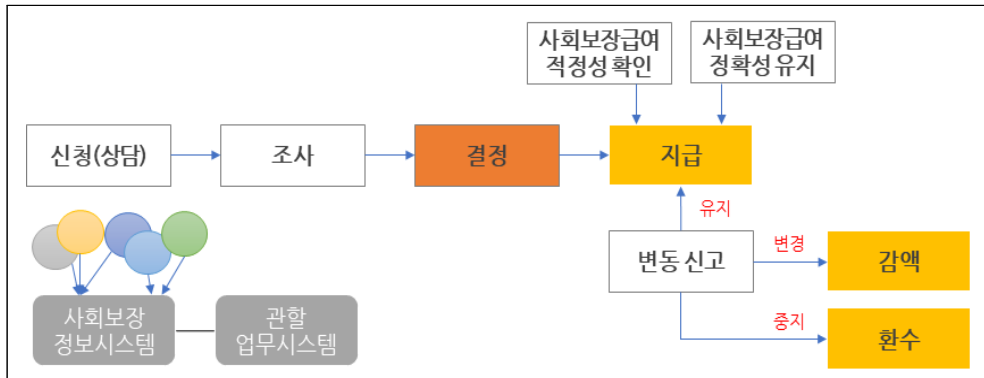
- 수급자격의 조사를 위해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하여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할 수 있음(제7조④항)
- 이와 함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금융정보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함(예,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 신용정보 중 채무액, 보험정보 등)
- 보장기관의 장은 제6조와 제7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여부 및 제공 유형을 결정하되, 제공하고자 하는 사회보장급여는 지원대상자가 현재 제공받고 있는 사회보장급여와 보장내용이 중복되도록 하여서는 안됨(제9조)
-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르면, 사회보장급여의 관리는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조사(제19조)-수급자의 변동 신고(제20조) 단계를 따르며, 그 결과에 따라 사회보장급여의 변경·중지(제21조)-사회보장급여의 환수(제22조)를 시행함
- 보장기관의 장은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급자격의 조사’내용에 해당하는 정보를 조사할 수 있으며(제19조),
  -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는 수급자는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 상태, 근로능력, 다른 급여의 수급이력 등 ‘수급자격의 조사’사항이 변동되었을 때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제20조)
-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조사 및 수급자의 변동신고에 따라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종류·지급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에는 사회보장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그 종류·지급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음(제21조)
- 수급자가 변동 신고를 고의로 회피하거나 속임수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보장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회보장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사회보

장급여를 제공한 보장기관의 장은 그 사회보장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회보장급여를 받거나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음(제22조①항)

- 수급권이 없는 자에게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거나 그 변경·중지로 인하여 수급자에게 이미 제공한 사회보장급여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제공받은 사람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함(제22조의②항)
-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여러 부처에서 수행하는 400여개의 사회보장사업의 보장기관이 수급권자의 선정 및 급여 관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사회보장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며(제23조), 사회보장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해야 함(26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는 근거 법령, 보장대상 및 내용, 예산 등 사회보장급여 현황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사회보장급여 상담-신청-조사 및 자격의 변동관리에 필요한 인적사항·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단체·시설의 사회보장급여 제공 현황 및 보조금 수급이력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등을 포함
    - 보건복지부 사업이 아니어도 관할 업무시스템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정보보유기관의 장은 사회보장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정보를 주기적으로 갱신해야 하며, 그 정보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천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한 정보보유기관의 장에게 해당 자료 또는 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제26조)
- 사회보장급여의 보장기관은 법령에 위반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사회보장급여를 수급한 자를 신고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자 등에 대한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및 신고포상금 제도를 홍보해야 함(제53조의2)
- 「사회보장급여법」에 제시된 사회보장급여의 업무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음

-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부정수급은 수급자격의 조사와 변동 신고,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과 사회보장급여의 정확성 유지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그림 5-20] 사회보장급여 업무 프로세스



자료: 저자 작성.

- 이와 함께 사회보장급여의 업무 프로세스 수행을 위해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혹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나, 정보의 확인이 늦거나 사회보장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부정수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나. 현금급여의 부정수급 유형화

□ 본 절에서 실태조사에 포함된 현금급여의 부정수급 유형화는 네 가지 변수로 구분함. ① 예산, ② 부정수급 인프라, ③ 부정수급 행위 유형, ④ 보장기관 유형

- ① 예산은 각 사회보장급여의 2019년 예산 총액(국비+지방비)을 뜻하며, 표적집단단점을 위한 유형화 작업에서는 예산에 log값을 취함
- ② 부정수급 인프라는 각 사회보장급여 근거 법령의 부정수급 및 환수 관련 조항의 유무와 사업 지침에 제시된 부정수급 및 환수 관련 조항의 유무, 사회보장급여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신고제도 운영 등을 재분류하였음
- ③ 부정수급 행위 유형은 고의적 부정수급 총액과 비고의적 부정수급 총액임



- ④ 보장기관 유형은 지자체와 소속 산하기관, 그 외로 구분하고, 2개 이상의 기관이 관여하는 경우를 별도로 구분함

## 1) 예산

- 전체 분석대상 사회보장급여(316개) 중 현금급여의 수는 상대적으로 적으나(78개, 24.7%), 예산 비중(예산집행액 대비)은 상당히 높음(현금급여 38.2%, 그 외 급여 61.8%)
- 현금급여 사업의 50%를 선정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나, FGI는 전체 현금급여 사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포함되지 않았어도 부정수급 관리 차원에서 중요도 또는 정책함의가 큰 사업도 대상에 포함하여 조사를 실시
- 실태조사의 대상 선정 기준은 ‘100억 원 이상 예산 편성’사업임
  - 현금급여 중 실태조사 대상 사업의 예산은 최소 111억 원에서 최대 14조 원까지 다양하나, 실태조사 대상이 아닌 사업은 최소 9천만 원에서 최대 1조 3천억 원으로 비교적 적은 금액을 보이고 있음
  - FGI 조사를 실태조사로 한정할 경우 현금급여의 부정수급 유형화가 과소 설명될 우려가 있으므로, FGI 대상 선정 기준에는 실태조사와 관계없이 모든 현금 급여를 포함. 다만, 예산은 하나의 변수로 유형화에 포함하고자 함

〈표 5-15〉 실태조사 대상 여부에 따른 예산

구분	그룹 1(실태조사 대상)	그룹 2(실태조사 비대상)
최대	14,902,040백만 원	1,307,081백만 원
평균	1,102,752백만 원	68,716백만 원
최소	11,142백만 원	90백만 원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a).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위한 기본현황 조사(원자료).

- 한편 「사회보장급여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보장급여에서 부정수급이 발생할 가능성은 사회보장급여의 조사, 변동 신고,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 및 사회보장급여의 정확성 유지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상답)과 변동 신고는 수급자의 의무이므로, 수급자의 고의에 따른 부정수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과 사회보장급여의 정확성 유지는 시스템을 통한 정보의 연계를 통해 이뤄지므로 행정오류에 따른 부정수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2) 부정수급 인프라(법·지침·시스템) 현황

- 부정수급 인프라는 개별 사회보장급여에서 법 및 지침 등을 통해 부정수급을 관리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관할 업무 시스템의 이용을 중심으로 살펴봄. 한편,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 체계를 구축하는지를 조사하였음
- 근거 법령이 있는 사업은 전체 78개 사업 중 50개이며, 근거 지침이 있는 사업은 55개임. 근거법령과 근거지침 모두 없는 사업은 13개로 해당사업들의 경우 부정수급 관리의 근거 마련이 요구됨
- 전산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업은 51개인데, 이 중 15개 사업이 통합보훈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으며, 7개의 사업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6개 사업은 보조금 관리통합 시스템인 e나라도움을 이용하고 있음
  - 이 외에 일자리통합정보시스템인 일모아시스템, 고용보험시스템,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국세행정시스템을 등을 이용하고 있음
- 신고체계를 갖춘 사업은 54개로, 개별 사업의 홈페이지 및 개별 부처의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 ‘부정수급신고센터’, ‘국민신문고’, ‘복지로 부정수급신고시스템’ 및 ‘레드휠슬헬프라인’ 등을 활용하고 있음

〈표 5-16〉 부정수급 관리의 근거 및 신고체계 여부에 따른 현금급여 사업 현황

구분	근거 법령	근거 지침	전산시스템	신고체계
있음	50	55	51	54
없음	28	23	27	24
계	78	78	78	78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a).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위한 기본현황 조사(원자료).

### 3) 부정수급 현황

□ 환수결정액은 평균 5.6억 원이며, 최소 0원에서부터 최대 201억 원까지 다양함

○ 부정수급액은 환수결정액 기준 평균 약 1억 원 이며, 최대 26억 원임

- 이에 비해 오류수급은 환수결정액 기준 평균은 약 4.5억 원이며, 최대 189 억원으로 부정수급액에 비해서 상당히 큰 편임
- 부정수급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지만, 오류수급의 규모가 크다는 것은 오류수급을 포함한 부정수급 관련 관리 기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정수급 관련 인프라의 중요성 및 개선방안에 시사하는 바가 큼

○ 환수실적액은 평균은 약 3억 원이며, 최대 약 109억 원임

- 눈여겨볼 점은 환수결정액(최대 201억원)에 비해 환수실적액(최대 109억 원)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임.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에서는 사회보장급여를 환수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 자체를 환수하되, 가액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11조)
- 그러나 동법 제22조에서는 이미 소비하였거나 그 밖에 수급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표 5-17〉 현금급여 환수결정액 및 환수실적액 : 최대, 평균

구분	환수결정액	부정수급		환수실적액
		부정수급	오류수급	
최대	20,145백만 원	2,631백만 원	18,963백만 원	10,877백만 원
평균	561백만 원	112백만 원	449백만 원	317백만 원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a).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위한 기본현황 조사(원자료).

### 4) 보장기관 유형

□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보장기관은 개별법에서 제시하고 있음. 보장기관이 복잡할 수록 사각지대 및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가 복잡해지므로 보장기관의 유형은 부정수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됨

- 현금급여 사업 중 7개는 중앙부처 혹은 부처 산하기관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32개 사업은 시도 및 시군구의 지방자치단체를 보장기관으로 함
  - 28개의 사업은 보훈지(방)청과 같은 시군구 외 별도의 지방관서 및 지방교육청을 보장기관으로 하며, 8개 사업은 공공기관이 보장기관으로 되어 있음
  - 2개 이상의 보장기관이 결합된 사업이 3개임

〈표 5-18〉 현금급여의 보장기관 유형

구분	단일 기관				2개 이상 기관	계
	중앙부처 직접관리 및 부처산하기관	지자체	지자체 외 지방관서	공공기관		
사업 수	7	32	28	8	3	78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a).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위한 기본현황 조사(원자료).

### 3. 현금급여 사례 연구

- 본 연구에서는 실태조사 대상 사업 중에서 대표적인 현금 급여 사업인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중심으로 사례를 분석하고자 함
  -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으로 이뤄지며, 본 연구에서는 현물서비스인 의료급여는 포함하지 않고 주요 소득보장제도인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만 분석의 초점으로 함
  - 기초생활보장제도 외의 현금급여는 주요 내용에 대해 개괄적으로 제시하였음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헌 및 홈페이지(복지로 등) 제공 자료 분석 그리고 사업 담당자에 대한 표적집단면접을 수행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사례연구를 실시함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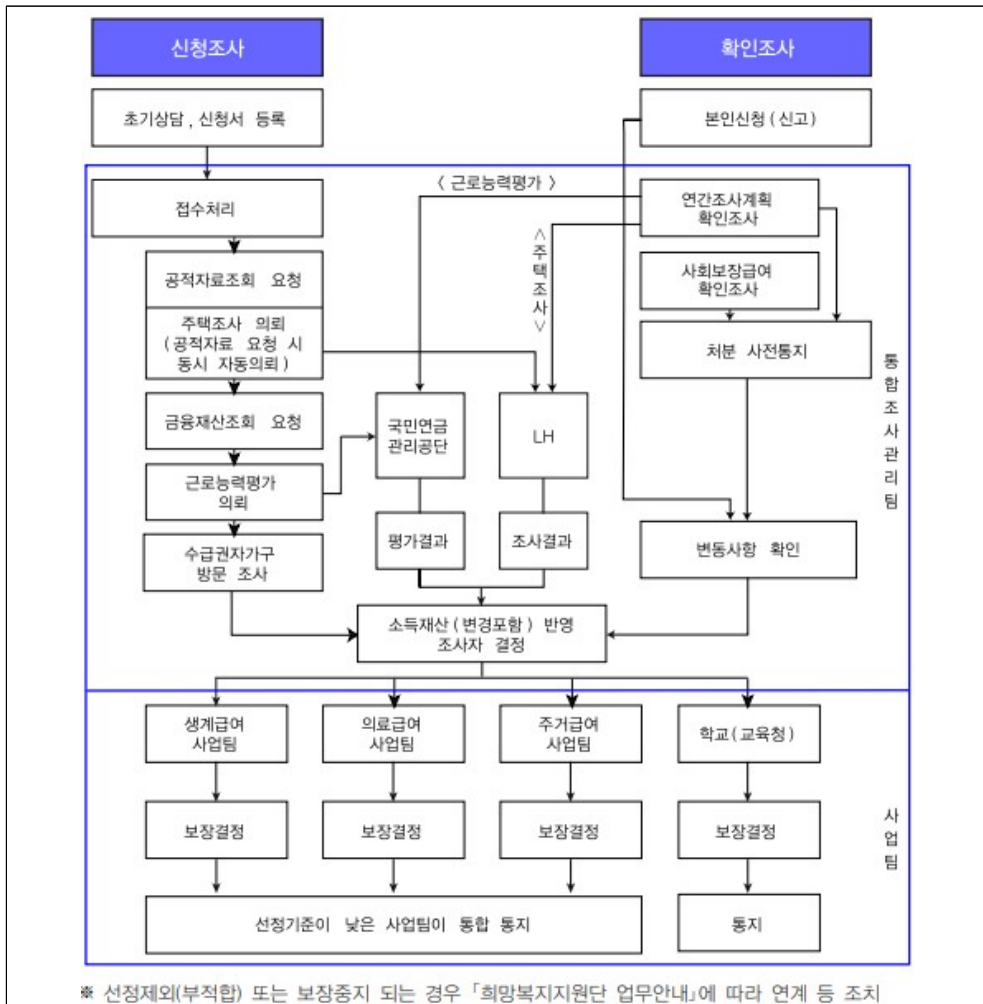
### 1) 업무 프로세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 업무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음(보건복지부, 2020a)

- 신규 신청자는 읍면동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함. 이 때 제출하는 서식1(사회보장급여 신청서)은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등 개인 정보와 함께 가족사항(동거여부, 건강상태, 취업상태, 배우자 관계 등), 부양의무자(수급자와의 관계 등), 급여계좌, 통지방법 등을 제출함
  - 이와 함께 현재 받고 있는 사회보장급여의 내용을 제출하는데, 기초생활보장, 영유아, 아동수당,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족, 기타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음
  - 신청서에는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사회보장급여법」 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것임을 명시하고 있음
- 서식1과 함께 서식3(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을 작성하는데 이는 신청시 수급권자의 가구원
  - 이 때 활용하는 개인정보 동의요청 범위는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재산·근로능력·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하는 정보를 뜻함
- 신청서 등록 후 통합조사관리팀으로 이관하면,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접수 처리된 신청에 대해서 공적자료를 조회 요청함

- 소득·재산 등의 확인을 위해 추가로 제출받을 서류가 있는 경우 가구 방문 시 징구하거나 민원인이 읍면동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도록 함
- 공적자료가 불충분하거나 공적자료로 파악이 어려운 사항 등에 대해 가구 방문을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데, 대표적으로 지출실태조사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활동능력평가 정보수집 등임
-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반영, 급여종류별 대상자 선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결정함
  - 수급자의 결정 및 결과 통지는 시군구 급여종류별 사업팀과 학교(교육청)가 담당하게 됨
  - 생계·의료·주거급여 종류별로 해당 사업팀에서 각각 결정하되 결정통지는 수급권자가 신청한 급여 중 선정기준이 낮은 급여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팀에서 발송함
  - 단, 교육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보장 결정은 시도교육감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실시하고 결정통지도 시도교육감이 발송함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이 결정된 후에도 수급자의 공적자료 변동 등을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재산정하고 있음
  - 변동 사항 적용 및 관리 대상은 소득·재산 변동, 가구원 인적변동 등이며, 공적자료의 변동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자동 알림으로 설정되며, 공적자료가 아닌 자료는 소득산정된 자(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부과자 등)는 연간조사계획에 따른 확인조사로 변경하여 실시함
  - 교육급여 수급자의 소득·재산·가구원 변동사항은 시도교육감의 업무 위임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하나 이외 입·퇴학 등 학적 변경, 전·입학 등 변동사항은 시·도 교육감이 처리함

[그림 5-2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업무 프로세스



자료: 보건복지부. (2020a).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이러한 공통적인 프로세스에서 있어서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의 차이가 발생함. 이를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함. 먼저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기준으로 일반적인 프로세스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음

#### ○ 수급자에 대한 조사 및 변동조사

-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통합조사팀”에서 신청자에 대한 상담 및 수급자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수급이 결정된 후에 사업팀으로 통보하

는 프로세스임. 따라서 사회보장급여의 업무 수행 과정 중 신청과 지급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만 수행하고 있음. 중간에 조사 업무를 통합조사팀으로 이관한 것은 그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음

○ 사회보장급여의 사후관리(정확성 및 적정성 확인)

-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경우 변동조사 및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는데, 변동조사는 ‘수급자격에 대한 조사’와 동일한 내용에 대해 조사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으나, 업무의 소관 부서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음
- 즉 사회보장급여 신청 당시의 조사는 통합조사팀에서 갖고 있으나, 변동조사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어 일선에서는 혼돈이 있음
  - 변동조사가 통합조사팀으로 이관하거나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통합조사팀의 업무 처리에 소요되는 협조 수준에 따라 사회보장급여의 사후관리에 대한 정확성이 결정됨
- 다만, 생계급여와 주거급여가 시군구에서 관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마다 운영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음
  - 대도시의 경우 사회복지과에서 지급부터 제재조치까지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반면, 도농지역의 경우 사회복지과가 아닌 경우도 있고, 지급/사후관리/제재조치 등이 각각 분절적으로 이뤄지기도 함
- 실제 본 연구에서 FGI를 실시한 결과, 2개의 지자체에서는 변동조사를 다 시 통합조사팀으로 이관하거나, 협조를 요청하는 반면, 2개의 지자체에서는 사업부서(신청)에서 변동조사를 확인하고 있음

○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에 대한 부정수급 관리는 법과 제도에서 제시한 내용이 미흡하며, 정보시스템의 활용성은 크지 않음. 한편,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는 주로 사업팀에서 담당하고 있음

-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담당자는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를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근거해서 수행하고 있지만, 선제적인 예방을 위한 급여의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부정적임
  -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지침에서 명확하게 누구의



업무인지 명시하지 않는 상태에서 보장기관의 장이라고 제시하고 있기 때문임

- 일 년에 두 번 확인조사, 매월 정기적으로 월별 조사를 실시하는 체계를 만들었지만, 실상은 보건복지부에서 자료를 내려주는 것을 활용함
- 주된 유형은 소득재산 미신고, 부양의무자(연락 끊김), 근로능력 없음, 사실혼 배우자, 렌트카(재산) 미신고, 재산 타인명의로 이전, 위장 이혼, 미거주/위장전입 등임

○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모두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신청-조사-지급 등의 정보가 일원화되어 있는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행복e음 시스템 대신 별도의 시스템을 이용하기도 함

- 한편,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시스템의 부정수급 관리 기제는 사용하지 않으며, 사업안내에도 제시되지 않음
-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행복e음 시스템만 확인하고 있어 e-나라도움 등 보다 포괄적인 법에 근거한 부정수급 관리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않고 있음
- 행복e음을 통해 모든 부정수급자, 부적정수급자를 관리하고 있고, 통계도 나오고, 자체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인식함
  - 이를 통해 반납 받을 급여가 발생하면 확인할 수 있음. 행복e음 시스템 내에 부정수급 관리 탭이 별도로 있어 인적사항, 금액, 환수방식 등을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음
- 한편 주거급여는 주거급여정보시스템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시군구 건축 관련 과(전세 임대 등 포함)에서 주로 이용하고 있음<sup>36)</sup>
  - 이 시스템은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LH에서 전세임대를 신청할 때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은 시스템 권한이 제한되어 건축직, 토목직, 시설직이 접수를 받고 있음(경북)

36) 시청 및 읍면동에서는 주거급여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사통망(행복e음)에 국토부 업무지원 탭을 이용해서 매입임대, 전세임대 같은 것을 신청·접수하고 있음. 주거급여 및 주택 공급 자체는 행복e음을 이용할 수 있으나, 시군구 소관 부처에 따라서 주거급여정보시스템을 이용하기도 함.

- 그러나 서울에 근무하는 주거급여 담당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주거급여정보시스템 사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음. 주거급여 담당자는 사회복지직, 임대주택 담당자는 일반행정직으로 업무를 분리하고 있으므로 사용의 필요성 등에서도 들어 본 적이 없음

#### ○ 부정수급 관리 노력과 애로사항

- 일반 국민들이 129나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로 홈페이지 등에 부정수급을 하면, 급여 담당자가 접수를 하고, 조사관리팀의 협조를 받아 수급자격의 조사 및 변동 사항 신고 등을 확인하고,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하고 결과를 통보하는 절차를 수행하고 있음
- 일부 담당자는 외부에서 부정수급에 대한 문의가 와도 조사팀으로 이관하기 때문에 부정수급 적발 자체가 본인의 업무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음
- 실제로 현장에서 조사팀과 급여팀 간에 업무의 책임소재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사후관리 부분임

[그림 5-22]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자료: 보건복지부. (2020a).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를 참고하여 FGI를 토대로 저자 재구성.

□ 교육급여는 근본적으로 시도 및 시군구에서 수행하는 통합조사 결과에 따른 선정 결과를 전달받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교육급여의 결정은 시도 교육감이 담당하고 있음. 이는 수급자에 대한 조사 및 변동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실질적이지는 않음

#### ○ 수급자에 대한 조사 및 변동조사

- 시도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교육급여는 시군구에서 관리하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에 비해서도 적은 정보를 갖게 되는데, 시군구에서 교육급여 대상으로 결정된 정보를 이관 받고, 이에 따른 지급 업무를 담당할 뿐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

○ 정보시스템과 정보 접근 권한

- 교육급여는 NEIS(교육정보시스템)를 이용하고 있으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되지 않고, 일부의 정보(교육급여 대상자 통보)만 제공받음
- 이런 이유로 교육급여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없고, 사회보장급여의 정확성 및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 따라서 변동 조사 및 부정수급 적발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유지/중지/변경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학생 및 학부모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어도 시군구로 이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NEIS시스템을 이용하여 아동의 출결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장점이 있으나, 행복e음과 실시간 연계되지 않고, 확인할 수 있는 정보도 한정되어 있어 매년 개선을 요구하지만 개선되지 않음
- 다만, 아동의 입학 및 전·퇴학, 출석 등은 NEIS 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생성되는 실시간 정보를 행복e음에 연계하면 다양한 ‘아동’관련 사업의 부정수급 관리에는 매우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예, 지역아동센터, 학교밖 청소년 등)
- 교육급여는 조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부정수급에 대한 사전적 적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신고도 3년 간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 NEIS시스템을 통해서 재학 중인지 여부를 확인만 하고 있어 부정수급 관리 노력은 권한도 책임도 없다고 인식하고 있음

[그림 5-23] 교육급여



자료: 보건복지부. (2020a).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를 참고하여 FGI를 토대로 저자 재구성.

## 2) 시사점

□ 부정수급 실태조사의 결과와 FGI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자산조사형 현금급여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 첫째, 자산조사형 현금급여에서 신청 당시의 ‘조사’와 급여 지급 단계에서의 ‘변동조사’가 구분되어 있는데, 실제로 업무 담당자가 구분된 경우 업무권한 및 위임 등의 이유로 ‘변동조사’가 제한되며, 이런 경우 행정오류에 의한 부당 청구의 가능성이 존재함

-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및 조사업무 처리규정」에 근거하여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은 부정수급 조사팀을 설치하고, 부정수급 조사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비해 생계급여 등에 대해서는 부정수급 조사 업무에 대한 권한은 별도로 없음

○ 둘째, 사회보장급여는 공통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조사 및 변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시스템의 권한이 제한될 때, 해당 부처(기관) 및 부서에서 별도의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시스템 간 연계’ 수준에 따라 부정수급에 대한 선제적 관리 및 사후관리 정도가 영향을 받음

- 교육급여는 NEIS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 시스템은 수급자에 대한 정보가 연계되지 않는 한계가 있으나, 별도의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 한편, NEIS시스템은 “아동”과 관련한 다른 급여에서 출결에 대한 정보를 연계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교육정부시스템 간 상호 협력해야 하는 정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

○ 셋째,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보장기관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정립이 필요함. 「사회보장급여법」 제2조에서 보장기관이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말함

- 이 때 국가기관은 「정부조직법」에 따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

육감 및 하급교육행정기관을 뜻함

- 자산조사형 현금급여의 보장기관은 시도 및 시군구의 장(長)과 시도교육감임. 그러나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조사와 변동조사 권한이 시도 및 시군구에 일원화되면서 시도교육청의 역할이 매우 보수적으로 설계되어 있음
- 일선 현장에서 업무 담당자는 조사 권한이 없어 급여의 결정 및 사후관리의 책임이 없다고 인식할 수 있으나, 해당 지역의 교육급여에 대한 결정은 시도교육감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권한과 역할, 정보 제공 등 협력의 수준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특히 아동 수 및 학교 등 인프라의 구축에서 시도별 격차, 시도 내 시군구별 격차가 커지고 있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안과 밖의 사업에 있어 협력이 필요하며 교육급여는 그 기초가 되는 정보임

## 나. 기타<sup>37)</sup>

### 1) 아동보호·지원사업 : 어린이집 운영 지원

#### □ 어린이집 운영지원

- (목적) 보육교사, 교사겸직원장에 대한 근무환경개선비 지원을 통한 근로여건 개선
- (대상) 근무시간 기준 등을 충족하는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받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 등
- (지원내용)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월 22만원, 교사겸직원장지원 월 7.5만원

#### □ 업무 프로세스

- 수급자에 대한 조사는 ‘자격 취득’으로만 결정되며, ‘변동 조사’는 수행하지 않음
  - 교사 근무 환경 개선 및 교사 겸직 원장 지원 사업은 평일 8시간 이상 근무, 월 15일 이상 근무 시 지급하는데 실제로 출석부를 확인하고 승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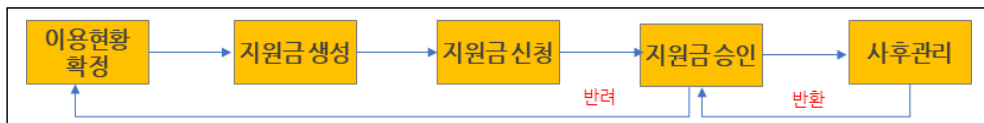
37) 표적집단면접 결과 및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 제시된 사업 내용 등을 토대로 작성

- 이에 따라 이용 현황을 확정(출석부 확인)하고 지원금을 생성한 후 지원금을 신청하고 승인하는 방식임

○ 수급자 정보의 정확성 유지 및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

- 어린이집 종사자의 출석 여부 및 담임 여부 등은 어린이집 내부에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사후 점검 때 CCTV나 현장 점검 등에 나가서 재직자를 일일이 확인하는 절차를 함.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종사자에 들어가고 있어서 운영 정지된 경우도 있음

[그림 5-24] 어린이집 지원



자료: 보건복지부. (2020b).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를 참고하여 FGI를 토대로 저자 재구성.

□ 부정수급 관리 관련 사항

○ 부정수급 유형

- 어린이집 운영 지원과 관련한 부정수급은 주로 자격증 허위 등록,페이백, 영수증 조작, 주소가 다른 경우, 출석부 조작, 임명 기간 허위 등록, 명단 오기입 등에서 주로 발생 가능

○ 법 제도 및 지침의 명확성

- 사업담당자가 부정수급을 관리하는 것은 업무량과 민원 등의 문제로 어려움 있어 부정수급 전담 팀 등을 고려할 필요 있음
- 조사팀의 조사가 수행되지만, 결국 사업 담당자가 조사 결과에 따른 환수 등 후속 조치를 담당해야 함. 즉, 조사와 환수가 이원화되어 있어 책임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아, 이러한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 필요
- 어린이집이 부정수급으로 운영 정지를 당했어도 자격증 정지가 아니기 때문에 몇 개월 내에 새로운 시설을 운영 신청할 수 있음
-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어린이집 명칭을 변경하면 아무도 찾아낼 수 없음.

보육포털시스템에서도 동일 지역, 동일 시설, 동일 원장일 때는 운영 정지 이력이 나오지만, 원장이 다른 이름으로 시설을 차리면 이력을 확인할 수 없음. 즉 이력은 종사자가 아니고 시설 이력이기 때문에 확인하기 어려움

○ 어린이집 운영 지원은 두 개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음

- 신청-승인-지급은 별도의 시스템(사회복지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보육통합시스템은 간혹 이용하고 있음. 사통망에서 보는 정보는 보육통합시스템 정보의 '금액'과 관련된 부분이 연계됨
- 사통망은 개개인에 대한 지원 내역이 적혀있지만, 어린이집 지원은 공급자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에 따라 사통망, 보육통합시스템을 각각 살펴봄. 보육정보시스템은 현재 정보를 즉각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움(사통망, 행복이음은 가능)
- 하지만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은 규모가 작고 영세한 경우가 많아 이들에 대한 부정수급 관리와 관련하여 사후점검이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임

## 2) 재정지원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아동안전지킴이 등

###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 (목적)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영위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노인에 대해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 (대상) 참여요건을 충족한 만 65세 이상 노인(일부 사업 만60세 이상)
- (지원내용) 크게 공익활동, 시장형, 인력파견형, 사회서비스형으로 구분하고 특성에 맞는 일자리와 급여를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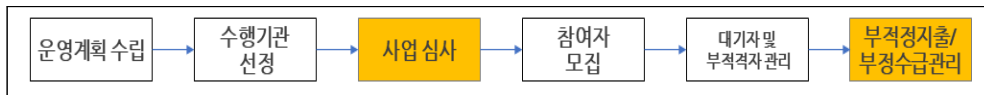
### □ 아동안전지킴이

- (목적) 은퇴한 노인전문인력을 범죄다발 지역 등에 대한 집중순찰을 통해 안전 취약 계층에 대한 안전한 환경 조성 및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에 기여

- (대상) 은퇴한 노인전문인력으로 신체 건강한 대상자(경찰·군·소방·학교 근무 경험자 등)
- (지원내용) 참여자에게 활동수당 월 501,000원(1일 3시간 주 5회, 월 20일) 지급, 민간상해보험 가입 등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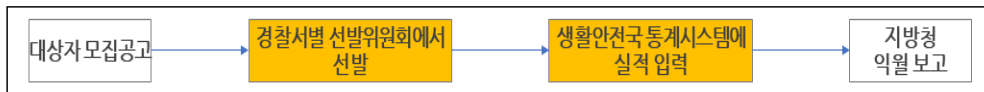
#### □ 업무 프로세스

[그림 5-25]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자료: 보건복지부. (2020c). 2019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를 참고하여 FGI를 토대로 저자 재구성.

[그림 5-26] 아동안전지킴이



자료: 경찰청. (2018). 2018년 아동안전지킴이 사업 안내를 참고하여 FGI를 토대로 저자 재구성.

#### □ 부정수급 관리 관련 사항

- 노인이나 장애인의 경우 건강상의 문제(노화, 질병 등)로 더 이상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더라도 강제로 중단 시킬 수 없고, 본인이 참여 중단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건강상태의 악화에도 일자리에 참여하면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며, 수요처에서는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취업자에 대한 불만을 수행기관에게 제기하기도 함
- 노인일자리시스템에 개인정보를 등록하면 일자리 참여가 적합한지 등을 확인할 수 있음(기초생활수급자는 중복 불가)
  - 공익형은 기초연금 수급이 조건이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는 일자리를 할 수 없는데, 이러한 항목들은 확인할 수 있음
  - 다만,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사통망을 통해서 정보를 연계하고 있는데, 건강



보험 가입 정보가 몇 개월 전의 것인 경우가 있음. 이런 경우 국민건강보험 공단을 통해 확인 가능

- 시도에서 사업을 담당하더라도 시도 권한이 있는 정보(예, 생년월일, 뒷자리, 앞자리)만 볼 수 있음(시행기관은 주민번호까지 확인 가능)
-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우 부정수급 관리는 주로 '조사' 단계에서 사회보험 가입 이력 및 중복 제한 수혜 정보 등을 확인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한편, 아동안전지킴이는 출결관리의 경우 작업반장이 수행하고 있는데, 작업반장이 출결체크를 통해 대상자의 결석 등을 확인할 수 있으나 대상자가 직무를 다했는지를 점검하는 것은 아님
  - 공통적으로 두 사업 모두 대상자의 충실한 직무 여부를 관리감독하기 어려우며, 공모(수행기관, 대상자)에 따른 부정수급 위험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음

### 3) 고용주지원 사업 :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모성보호 육아지원 등

#### □ 모성보호 육아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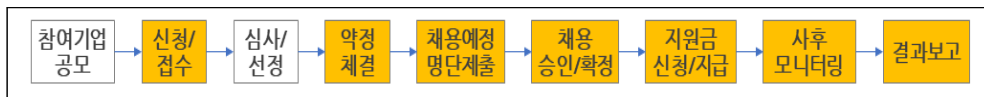
- (목적) 출산으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이직 및 사업주의 여성고용 기피요인 해소, 모성보호의 사회분담화,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통한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 출산·양육부담이 가중되는 취업여성의 경력단절현상 방지
- (대상)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포함),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
- (지원내용)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급여 지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급
  - 출산전후휴가 급여 : 통상임금의 100%
  - 육아휴직 급여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 지원(상한액 150만원/하한액 7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50만원)

#### □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 (목적)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대국민 사회서비스를 확대를 위해 성장가능성이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등 재정을 지원
- (대상)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신규 채용 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 비율 50% 이상
- (지원내용)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및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의 일부(지원약정 일로부터 12개월 원칙)
  - 인증여부, 지원연차에 따라 지원금의 지원비율을 차등 적용 : 예비사회적기업 : 50% (취약계층 +20%), 사회적기업 : 40% (취약계층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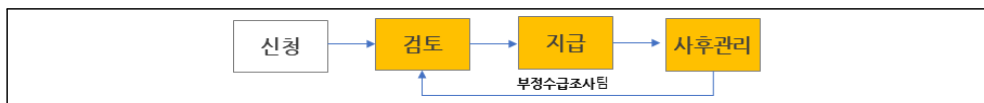
#### □ 업무 프로세스

[그림 5-27]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자료: 고용노동부. (2019a). 2019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을 참고하여 FGI를 토대로 저자 재구성.

[그림 5-28] 모성보호 육아지원



자료: 고용노동부. (2019b).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을 참고하여 FGI를 토대로 저자 재구성.

#### □ 부정수급 관리 관련 사항

##### ○ 부정수급 유형

- 사회적기업 : 대상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미인지, 타 사업 중복 지원 미심사
- 모성보호육아지원 : 육아휴직 중 근로 및 소득 발생, 상실처리 소급적용, 단순 착오 신고, 서류조작(허위 취득 등), 시스템상 수기로 확인하여 오류 발생, 모호한 법령, 지침 변경 등
- 60세 이상 고령자지원 : 상실처리 소급적용, 대상자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미인지, 단순 착오 신고, 부당이득(감원 방지 등), 서류조작, 수기확인으로

인한 오류 발생, 타 사업 중복 지원, 모호한 법령, 지침 변경

- 고용주 지원 사업은 사업주가 정책 대상이 발생하는 경우 신청을 하게 되므로 수급자에 대한 조사 및 변동조사를 직접 수행하지 않음
- 고용주지원사업의 경우 신청 시점에서 고용센터는 사업주의 신청 서류에 근거하여 고용보험 가입 여부, 임금 대장 등을 확인하고 지급을 결정하기 때문에 고용주-대상자 간 공모에 대해서 확인하기 어려움
  - 이들 사업들은 개인에 대한 기록에 비해 회사에 대한 기록은 확인하기 어렵다는 공통점이 존재
  - 지원금을 받는 중간에 기업 혹은 대상자에게 변동 사항이 발생하여도 기업의 고용주가 제출한 서류를 주로 의존해야 하며, 직접적인 변동 조사의 권한은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기
- 정보시스템과 정보 접근 권한
  - 사회적기업의 경우 심사과정 중에 다른 공모 사업에 지원을 받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없음
  - 고용주지원 사업들의 경우 정보시스템은 신청 단계에서 확인하는 데는 유용하나, 중간에 변동되는 것에 대한 정보는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
    - 예를 들어 육아휴직의 경우 처음 신청이 들어왔을 때 혼인 관계이고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였다가 중간에 이혼했거나 등본이 분리된 것까지 확인하면 지급 중지를 해야 하나 변동에 대한 알림은 없음
    - 중간에 특이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따로 통지되는 기능 필요
- 법·제도 및 지침의 명확성 : 고용보험법 및 관련 제도의 지침은 상당히 구체적이지만, 다양한 가족형태의 변화 및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다양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
  - 예를 들어, 이혼 후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상실한 부(父)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사례 등 발생하였는데 이를 확인하는데 과정에서 시간소요(등본 조회, 세대분리 이유, 양육권 등) 발생





## 제6장

### 결론 : 주요 결과와 정책함의

제1절 기본조사

제2절 실태조사

제3절 사례연구

제4절 주요 영역별 함의 및 향후 실태조사 추진 방향



## 제6장      결론 : 주요 결과와 정책함의

### 제1절 기본조사

#### 1. 개요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에 등록된 21개 소관부처 359개 사회보장사업의 소관과(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기본조사(공문을 통한 집계조사) 실시
- 이중 기본조사 결과표가 회신된 사업은 353개이며, 조사 결과 예러체킹 등의 선별작업 후 최종적으로 분석대상이 된 사업 수는 316개임
  - 분석대상 사업 316개 사업 중 부정수급 규모를 파악하여 회신한 사업은 모두 198개임(부정수급을 파악하지 않은 사업 118개)
- 주요 결과는 316개 사업을 통해 제시하되, 부정수급의 규모는 부정수급 규모를 파악하여 제출한 198개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

#### 2. 주요 결과와 함의

- 기준변수
- 제시된 기준변수 중 사업지원 형태와 보장기관은 기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산기준의 경우 각 사업별 선정기준을 파악하여 제시한 값임
- 사업지원 형태
  - 전체 316개 분석대상 사업 중 프로그램이 29.1%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현금(24.7%)과 현물(23.1%) 등의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났음
  - 하지만 예산집행액 차원에서는 현금의 예산규모가 가장 크고(약 44.6조원) 그 다음이 현물(약 31.1조원), 대여/감면(약 18.6조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자산기준 여부

- 전체 분석 대상 중 141개(44.6%) 사업은 급여선정기준에 자산기준이 적용됨. 반면, 175개(55.4%) 사업은 자산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 전체 316개 사업 중 보장기관이 지자체 또는 교육청인 경우가 126개(39.9%)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79개, 25.0%)과 기타<sup>38)</sup>(60개, 19.0%)가 뒤를 이었음
- 예산 집행액 규모 역시 지자체 및 교육청(약 58.9조원), 공공기관(약 28.7조원)과 기타(12.2조원)의 순인 것으로 나타남

〈표 6-1〉 주요 기준 변수별 현황 : 2019년 기준

(단위: 개, %, 백만원)

구분		빈도	퍼센트	예산집행액*
사업지원 형태 1	현금	78	24.7	44,584,505
	비현금	238	75.3	72,018,009
사업지원 형태 2	현금	78	24.7	44,584,505
	현물	73	23.1	31,108,351
	바우처	23	7.3	12,376,146
	프로그램	92	29.1	9,647,387
	시설임소	12	3.8	324,108
	대여/감면	38	12.0	18,562,017
	자산기준 여부			
자산기준 여부	자산기준 있음	141	44.6	73,398,999
	자산기준 없음	175	55.4	43,203,515
보장기관	지자체 또는 교육청	126	39.9	58,932,030
	특별지방행정기관	38	12.0	9,911,007
	공공기관	79	25.0	28,689,814
	기타	60	19.0	12,196,208
	2개 이상의 보장기관	13	4.1	6,873,455
전체		316	100.0	116,602,514

주: 예산 집행액의 경우 예산정보를 제출한 310개 사업의 예산 집행액임.

## □ 부정수급 관리 근거

### ○ 근거법령 유무

- 전체 316개 사업 중 45.9%(145개)가 부정수급 관리에 대한 개별 근거법령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54.1%(171개)의 사업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38) 본 연구에서 '기타'는 중앙부처가 직접 관리하는 사업, 보장기관이 부처 부속기관 또는 민간기관인 사업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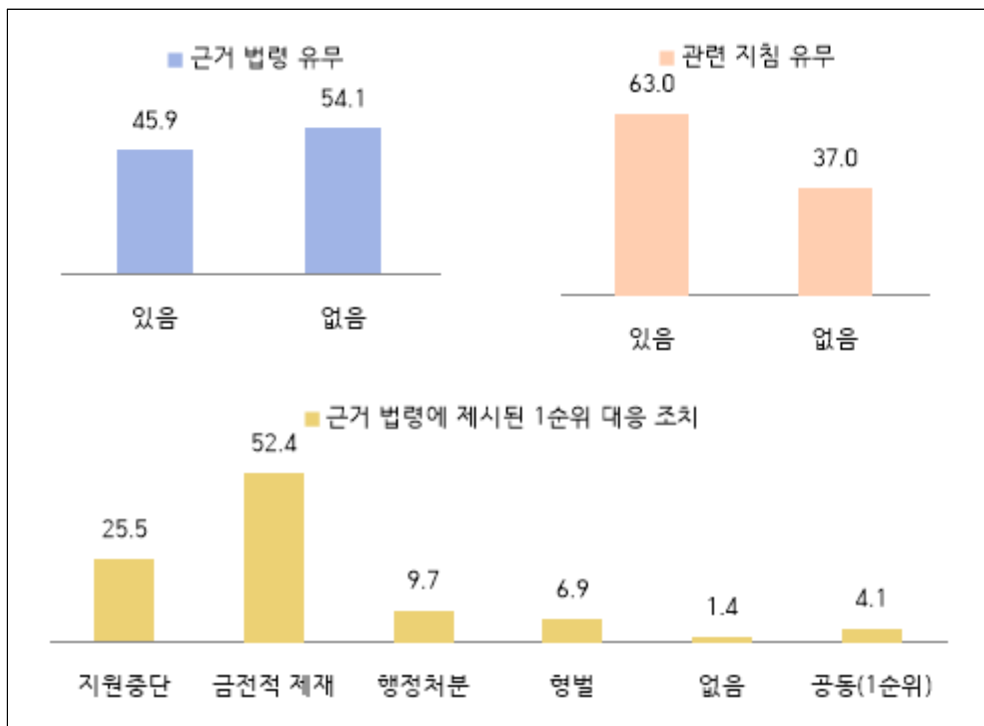
## ○ 근거법령에 제시된 1순위 대응조치

- 전체 316개 사업 중 근거법령이 있는 145개 사업을 대상으로 주요대응조치를 분석한 결과, 52.4%의 사업에서 환수, 징수,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등의 금전적 제재를 부가하고 있었음
- 25.5%의 사업은 급여 지원중단을, 또 다른 9.7%의 사업은 행정처분(경고, 영업정지, 자격정지, 시설의 등록·인가·자격 취소 등)을 1순위로 조치

○ 관련 지침의 경우 전체 사업 중 63.0%(199개)의 사업에 부정수급 관리 지침이 있는 것으로, 37.0%(117개) 사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6-1] 개별 근거법령 유무, 근거법령에 제시된 1순위 대응조치\*, 관련지침 유무

(단위: %)



주: 1) 전체 사업 316개 중 근거법령이 있는 145개 사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임. (2) 공동 1순위로, 복수의 주요 대응조치를 응답한 사례들 중 1순위를 매길 수 없다고 응답한 사례들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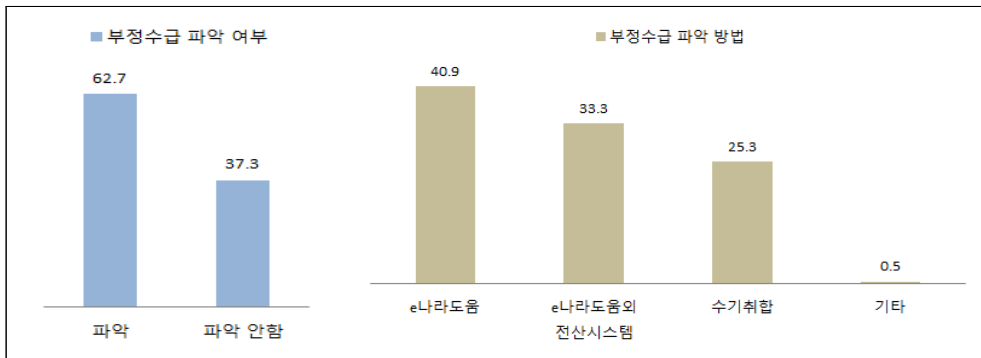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a).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위한 기본현황 조사(원자료).

## □ 부정수급 파악 여부 및 방법

- 전체의 62.7%(198개 사업)이 부정수급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바우처의 응답 비중이 87.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현금 82.1%, 프로그램 55.4%, 대여/감면 52.6%, 현물 52.1%, 시설입소 41.7% 순으로 나타남
  - 전체의 37.3%인 118개 사업은 부정수급을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

[그림 6-2] 부정수급 파악 여부 및 파악 방법

(단위: %)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a).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위한 기본현황 조사(원자료).

- 부정수급 파악 방법
  - 부정수급을 파악하고 있다고 응답한 198개 사업의 부정수급 파악 방법을 살펴보면, ‘e나라도움’이 40.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e나라도움 외 전산시스템’ 33.3%, ‘수기취합’ 25.3%으로 나타남
  - 수기취합 비중이 전체의 4분의 1이상이라는 것은 전산시스템 상에 부정수급 현황 관리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황관리의 개선이 필요함을 의미

## □ 중앙부처 담당부서의 부정수급 미파악 사유

- 부정수급을 파악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118개 사업의 부정수급 미파악 사유를 분석한 결과(미파악 사유를 중복으로 응답한 경우를 포함, 138개 사례 분석),
  - ‘사업성격상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음’이 58.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집행기관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18.1%)가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 ‘환수에 대한 규정 또는 지침이 없음’의 경우 2.9%에 불과하기 때문에, 중앙부처 담당과의 부정수급에 대한 미파악은 자의적 판단에 근거할 가능성이 높음을 유추해 볼 수 있음

〈표 6-2〉 부정수급 미파악 사유 (중복 응답)

(단위: %)

구분	급여형태		자산조사		보장기관유형					전체
	현금	비현금	적용	비적용	지자체 및 교육청	특별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	기타	2개이상 보장기관	
사업성격상 부정수급 발생하지 않음	61.1	57.5	52.7	64.1	52.6	58.3	57.6	69.7	33.3	58.0
부정수급 규모가 작음	5.6	1.7	4.1	0.0	3.5	0.0	3.0	0.0	0.0	2.2
그동안 계속 관리 해오지 않아서	11.1	0.0	0.0	3.1	1.8	8.3	0.0	0.0	0.0	1.4
집행기관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5.6	20.0	20.3	15.6	21.1	16.7	15.2	15.2	33.3	18.1
업무과중으로 부정수급 현황파악 여력 없음	0.0	0.8	0.0	1.6	0.0	0.0	0.0	3.0	0.0	0.7
환수에 대한 규정 또는 지침 없음	0.0	3.3	2.7	3.1	1.8	8.3	6.1	0.0	0.0	2.9
기타	16.7	16.7	20.3	12.5	19.3	8.3	18.2	12.1	33.3	16.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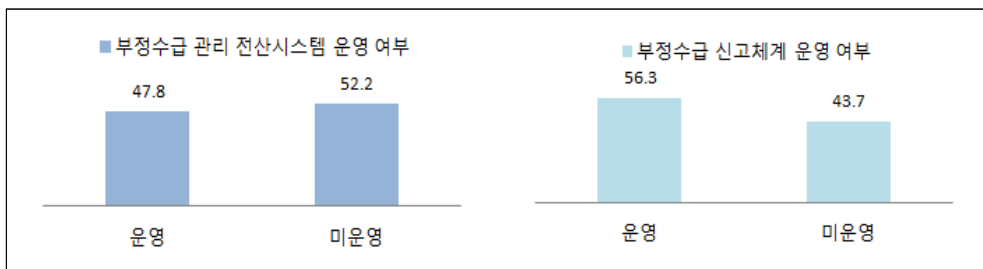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a).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위한 기본현황 조사(원자료).

## □ 부정수급 관리 전산시스템 및 신고체계 운영여부

- 316개 사업 중 부정수급 관리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은 151개(47.8%), 운영하지 않는 사업은 52.2%(165개)로 나타남(지원형태별로는 현금 65.4%, 바우처 60.9%,대여/감면 57.9% 순으로 나타남)

〔그림 6-3〕 부정수급 관리 전산시스템, 신고체계 운영 여부

(단위: %)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b).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 부정수급 신고체계를 운영하는 사업은 56.3%(178개), 운영하지 않는 사업은 43.7%(138개)로 나타남(지원형태별로 바우처 78.3% 현금 69.2%, 대여/감면 60.5% 순으로 나타남)
- 보장기관별로 부정수급 관리 전산시스템을 운영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특별지방행정기관(76.3%)이 지자체 및 교육청(46.8%), 공공기관(44.3%)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부정수급 신고체계를 운영한다는 응답비율은 공공기관(69.6%)이 다른 보장기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6-3〉 부정수급 관리 전산시스템, 신고체계 운영 여부

(단위: %)

구분		보장기관유형					전체
		지자체 및 교육청	특별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	기타	2개이상 보장기관	
부정수급 관리 전산시스템 운영 여부	운영	46.8	76.3	44.3	30.0	76.9	47.8
	미운영	53.2	23.7	55.7	70.0	23.1	52.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부정수급 신고체계 운영여부	운영	56.4	42.1	69.6	45.0	69.2	56.3
	미운영	43.7	57.9	30.4	55.0	30.8	43.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a).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위한 기본현황 조사(원자료).

## □ 부정수급 규모

- 본 연구에서 ‘부정수급’은 사회보장급여법 등에 명시된 바와 같이 행위 주체가 의도적으로 부정을 저질러 이득을 취하는, 수급자 ‘기망’과 공급자 ‘부패’에 해당함
  - 이러한 부정수급 규모는 환수결정액(또는 환수실적액) 중 수급자 또는 행정담당자의 고의로 발생한 부문을 집계하는 방식으로 파악
    - 환수결정액은 지급된 급여에 대해 환수하기로 결정한 금액을 의미하며, 기본조사에서는 각 급여별로 ‘19년(1년 동안)에 발생한 환수결정 액의 합계액을 조사하였음
    - 환수실적액은 각 급여별로 ‘19년(1년 동안)에 실제 환수된 금액의 합계액을 의미(환수실적액은 ‘19년 환수결정액은 물론 그 이전에 환수가 결정되었다

가 '19년에 실제로 환수된 금액까지 포함하여 조사)

- 기본조사 분석대상 316개 사업 중 부정수급 규모를 회신한 198개 사업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규모를 집계하였음

#### 〈환수결정액 적용시 부정수급 규모〉

- 2019년 기준 198개 사업의 환수결정액 중 부정수급은 약 292억 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환수결정액(약 944억 원)의 약 31%, 예산집행액(96조 2,828억 원)의 0.03% 수준임

〈표 6-4〉 부정수급 규모 : 환수결정액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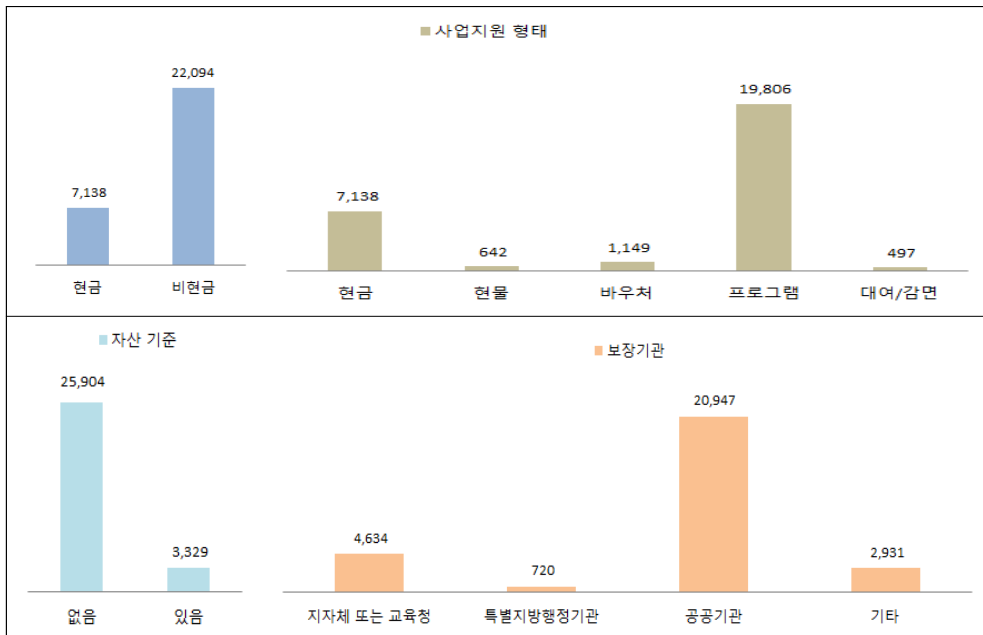
(단위: 백만 원, %)

구분	예산(A)	환수결정 (B)	부정수급 (C)	(C/B)*100	(C/A)*100
전체	96,282,834	94,383	29,232	31.0	0.030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a).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위한 기본현황 조사(원자료).

[그림 6-4] 부정수급 규모 : 환수결정액 적용

(단위: 백만 원)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a).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위한 기본현황 조사(원자료).

- 사업지원형태별로 부정수급 규모를 살펴보면, 프로그램(약 198억 원), 현금(약 71억 원), 바우처(약 11억 원) 순으로 나타남
  - 환수결정액 대비 비율은 프로그램(57.4%)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현금(55.5%), 바우처(44.9%), 현금(19.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부정수급 규모가 가장 크게 나타난 ‘프로그램’의 경우 모두 51개 사업인데, 이중 실제 부정수급이 발생한 사업은 2개이며 그중 장기요양급여사업에서 대부분의 부정수급이 발생하였음<sup>39)</sup>
  - 예산집행액 대비 부정수급 비율은 프로그램이 가장 높았으며(0.23%), 그 다음은 현금(0.02%), 바우처(0.01%) 순인 것으로 나타남
- 자산조사 기준으로 살펴보면, 자산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환수결정액은 약 503억 원으로 자산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약 441억)보다 더 크지만,
  - 부정수급 규모는 자산기준이 없는 경우 약 259억 원인 반면, 자산기준이 있는 경우 약 33억 원인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엄격한 수급자격 요건(자산조사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부정수급이 발생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의미함
- 보장기관별로는 공공기관의 부정수급 규모(약 210억 원)가 가장 크고 그 다음은 지자체 또는 교육청(약 46억 원), 기타(약 29억 원)인 것으로 나타남

#### 〈환수실적 적용 시 부정수급 규모〉

- 198개 사업의 환수실적액 중 부정수급 규모는 약 247억 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환수실적액의 약 34.5%, 예산집행액 총액 대비 0.026% 수준임
  - 환수실적액은 말 그대로 환수가 결정된 사회보장급여에 대해 실제로 환수된 금액을 나타내는 일종의 실적치이므로, 실제적인 부정수급 발생 규모를 나타내는 환수결정액을 보조하는 측면의 지표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사업지원형태별로 살펴보면, 프로그램의 부정수급 규모가 가장 컸으며(약 194

39) 장기요양급여사업의 경우 기본조사에서 하나의 조사표로 조사되었지만, 실제로는 4개의 사업을 통합하여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4개 사업의 부정수급을 합산한 금액임

억 원), 그 다음은 현금(약 43억 원)인 것으로 나타남

- 환수실적액 대비 비율은 프로그램(61.1%)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현금(48.3%), 바우처(21.5%) 및 현금(21.5%)의 순으로 나타남
- 예산집행액 대비 부정수급 비율에서도 프로그램이 가장 높았으며(0.23%), 그 다음은 현금(0.01%)인 것으로 나타남

〈표 6-5〉 부정수급 규모 : 환수실적 기준

(단위: 백만 원, %)

구분	예산(A)	환수실적 (B)	부정수급 (C)	(C/B)*100	(C/A)*100
전체	96,282,834	71,827	24,768	34.5	0.026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a).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위한 기본현황 조사(원자료).

## 제2절 실태조사

### 1. 개요

- 실태조사는 39개 현금급여의 보장기관별 업무담당자 4,679명에 대해 조사 실시
  - 기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 규모가 100억 원 이상인 현금급여 사업 중 부정수급이 발생한 사업과 함께,
  - 이중 부정수급이 발생한 사업과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거나 부정수급을 파악하지 않은 사업들에 대해서도 사업의 중요도와 정책함의 도출 그리고 선제적 예방차원에서 해당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
- 조사기간 및 방식
  - 조사기간 : '20.9.25 ~ '20.10.27
    - 코로나 19로 인해 면접원 조사(현장 수거 및 에디팅)에서 온라인조사로 변경
  - 구조화된 설문지 활용하여 조사대상자가 온라인 조사표에 자기기입식으로 조사표 기입(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접촉 방식)

- 자기기입식 온라인 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전자메일 및 유선(전화)을 통한 조사에 대한 독려와 내용 설명 실시

□ 조사완수율 : 조사대상 4,679명 중 3,192명을 조사, 완수율은 68.2%를 나타냄

## 2. 주요 결과와 정책함의

〈응답자 및 응답부서 현황〉

□ 응답자 현황

- 전체 응답자의 98%가 공무원이고 2%가 비공무원(민간인력)인 것으로 나타남
- 근무경력(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의 경우 5~10년 미만인 경우(23.5%)가 가장 많았으나, 민간인력의 경우 3년 미만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민간인력의 경력이 3년 미만에 집중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사업 및 부정수급 관리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보안방안 필요

〈표 6-6〉 응답자 특성

(단위: 명, %)

분류	구분	사례수	비율
전체		(3192)	100.0
공무원 여부	공무원	(3129)	98.0
	비공무원	(63)	2.0
근무경력 (공무원)	3년 미만	(760)	24.3
	3~5년 미만	(544)	17.4
	5~10년 미만	(735)	23.5
	10~15년 미만	(546)	17.5
	15년 이상	(544)	17.4
근무경력 (민간인력)	3년 미만	(34)	54.0
	3~5년 미만	(7)	11.1
	5~10년 미만	(11)	17.5
	10~15년 미만	(1)	1.6
	15년 이상	(10)	15.9
보장기관	지자체 또는 교육청	(2784)	87.2
	특별지방행정기관	(373)	11.7
	공공기관	(32)	1.0
	기타	(3)	0.1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a).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위한 기본현황 조사(원자료).



- 전체 응답자의 87.2%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에 소속되어 있으며, 특별 지방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소속된 응답자는 각각 11.7%와 1.0%로 나타남

#### □ 응답부서 현황

- 응답부서의 구성원 수는 평균 23.7명이며, 관리자를 제외할 경우 18.8명임
- 보장기관별로 구성원수의 평균은 지자체 또는 교육청(24.8명)이 가장 컸으며, 특별지방행정기관(16.5명), 공공기관(12.2명)은 평균보다 적게 나타남
- 응답부서가 담당하는 사회보장사업수(지자체의 자체사업 제외)는 평균 20.6개
- 지자체 또는 교육청의 경우 평균 22.9개나 되었지만, 특별지방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사업 수는 각각 4.2개와 3.1개로 지자체 또는 교육청에 비해 적음

#### □ 해당 사업 현황

- 해당 사업(실태조사 대상사업)의 월평균 신청자 수는 약 584명으로 나타남
- 보장기관별 살펴보면, 지자체의 경우 시청은 약 835명, 구청은 약 531명이었으며, 군청은 약 240명으로 지자체 중 가장 적었음
  - 공공기관과 기타는 각각 4,142명과 5,003명으로 지자체에 비해 평균 신청자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6-7〉 해당사업 담당자 수 및 부정수급 관리 부서원 수 (평균)

(단위: 명)

분류	구분	사례수	해당사업 담당자 수 (부서관리자 제외)	부정수급 관리 부서원수
	전체	(3192)	2.0	2.0
보장기관	지자체 또는 교육청	(2784)	1.4	1.7
	군청	(1026)	<b>1.2</b>	<b>1.3</b>
	시청	(885)	<b>1.4</b>	<b>1.6</b>
	구청	(857)	<b>1.7</b>	<b>2.2</b>
	교육청	(16)	1.3	0.9
	특별지방행정기관	(373)	5.9	4.9
	공공기관	(32)	3.2	2.8
	기타	(3)	4.3	4.0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b).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 해당사업 담당자수는 평균 2명, 부정수급 관리 부서원수는 평균 2명으로 나타남
  - ‘지자체 또는 교육청’을 제외하고 해당사업 부정수급 관리 부서원수가 담당자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남. 지자체의 경우(특히 구청의 경우) 부서관리자까지 포함되어 부정수급을 관리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음

〈응답부서의 해당사업 부정수급 확인 및 적발 노력〉

- 응답부서가 담당 사업의 부정수급 관련 확인 및 또는 적발을 위해 어떤 조치나 노력을 하는지를 각 조치(노력)사항에 대한 여부(‘예’, ‘아니로’)로 파악
- ‘정보시스템을 통한 변동사항 확인’으로 응답한 경우가 전체응답의 87.2%로 가장 높은 응답 비중을 나타냄
  - ‘상담 또는 전화 확인’은 68.8%로 두 번째로 응답비중이 높았으며, ‘중복 급여·서비스 확인’이 62.5%로 세 번째로 높게 응답됨
  - ‘타 부서·기관 정보시스템을 통한 변동 사항 확인요청’의 경우 네 번째로 응답비중이 높게 나타남(47.2%)
- 위 결과를 살펴보면, 부정수급 확인 및 적발을 위해 사용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정보시스템 활용임을 알 수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상담 또는 유선확인을 시도하는 것임을 알 수 있음

〈표 6-8〉 응답부서의 해당사업 부정수급 확인 및 적발 조치

(단위: %)

부정수급 확인 및 적발 노력	정보 시스템을 통한 변동 사항 확인	상담 또는 전화 확인	중복 급여·서비스 확인	타 부서·기관 정보시스템을 통한 변동 사항 확인요청	방문 확인	타기관 방문확인 요청	중점관리 대상자 관리	기관 내 전담부서에 협조 요청	기관 내 감사 부서에 조사요청
주요 조치 (개별질문)	87.2	68.8	62.5	47.2	37.3	29.9	21.6	13.9	11.8
가장 많은 시간 투입 조치	67.0	8.7	9.3	5.5	4.7	1.4	0.7	0.9	0.4
가장 효과적인 조치	64.7	5.6	10.6	6.0	7.3	1.4	1.0	1.2	0.6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b).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 이러한 부정수급 확인 및 적발 노력 중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조치는 ‘정보 시스템을 통한 변동사항 확인’으로 나타났으며(67.0%), 두 번째는 ‘중복 급여 및 서비스 확인’인 것으로 나타남(9.3%)
- 이러한 조치 중 가장 효과적인 것은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상변동 등 변동사항 확인’으로 나타났으며(64.7%), 두 번째는 ‘중복 급여 및 서비스 확인’인 것으로 나타남(10.6%)
  - 즉, 부정수급 확인·적발을 위한 가장 공통적으로 취하는 조치와 가장 투입 시간이 많은 조치 그리고 그 효과가 가장 큰 조치가 일치함을 알 수 있음
- 한편, ‘방문확인’은 부정수급 확인·적발을 위해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조치로 4.7%가 응답했지만, 가장 효과적인 조치로는 7.3%가 응답함. 반면 상담 또는 전화확인인 각각 8.7%, 5.6%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방문확인’이 투입되는 시간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효과성이 큰 것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추진과 확대(방문상담과 보건과의 연계, 정보연계 확대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향후 ‘방문확인’에 대한 시간 투입을 증대를 통해 부정수급 확인 및 적발과 관련한 효과성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음
- 부정수급 확인/적발을 위해 파악해야할 변동사항(복수응답)으로 소득/재산변동(23.2%), 중복수급(21.7%), 가족관계변동(12.5%), 거주지변동(10.5%) 순으로 응답
- ‘사망의심자확인’의 경우 전체 응답 비중으로는 7.4%에 불과하지만, 특별지방행정기관은 14.7%로 나타나 그 중요성이 다른 보장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 특히 대상자의 대부분이 고령자인 보훈사업을 관리하는 지방보훈지청 등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경우 ‘사망의심자확인’에 대한 관리 및 정보 연계를 더욱 더욱 강화시켜야 함을 유추해 볼 수 있음
- 응답부서의 해당사업 부정수급 확인·적발 과정에서의 어려움(1순위 응답)

〈표 6-9〉 부정수급 확인 적발과정에서의 어려움 (1순위)

(단위: %)

자료와 정보 부족	정보시스템 등록 정보의 시차	업무 과중 또는 인력 부족	민원 대응	강제력 부족	제한적 정보 접근 권한	정보 공유의 어려움	기타
26.8	25.0	21.6	14.5	8.2	2.4	1.0	0.5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b).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 사실관계를 확인할 ‘자료와 정보 부족’으로 응답한 비율이 26.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 수급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정보시스템에 등록되는 정보의 시차발생 문제가 25.0%, 그리고 업무과중 또는 인력부족이 21.6%로 응답됨
  - 부정수급의 확인 및 적발 과정의 어려운 점의 절반 이상은 정보 획득과 관련한 것임을 알 수 있음
- 실제, 기존 시스템 간 연계 미흡과 정보시스템에서의 등록 정보 시차로 인한 사전자격 검증에 어려움 존재

○ 이러한 결과는 부정수급 확인 및 적발을 위해 필요한 것은 제한적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 및 부정수급 확인 및 적발을 위한 강제력 강화보다는 양질의 정보를 더욱 많이 획득하고 정보시차를 축소하는 방향임을 유추해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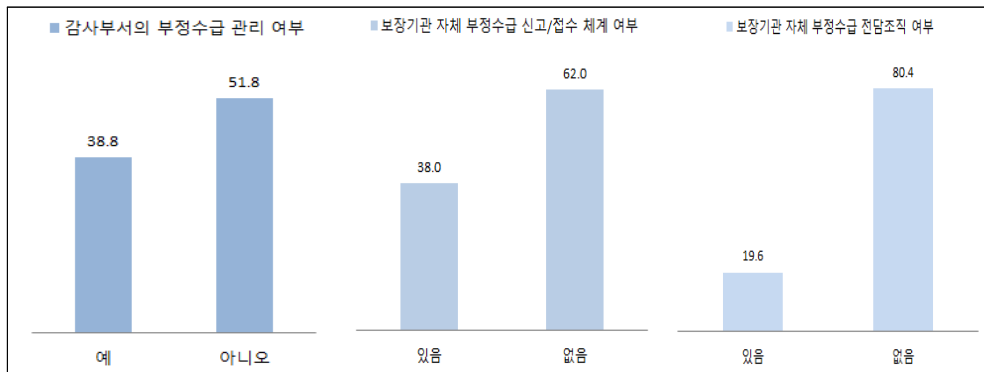
- 이는 앞서 살펴본 부정수급 대응 조치 중 가장 공통적이고,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 가장 효과적인 부정수급 확인·적발 조치인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상변동 등 변동사항 확인’에 대한 개선 및 강화가 필요함을 의미
- 이러한 정보시스템 개선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 e나라도움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는 물론 개별적인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모든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하고 각 부처의 시스템 간 원활한 연계를 위해 노력할 때 보다 효과적인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

#### 〈응답부서가 속한 보장기관 차원의 부정수급 관리〉

□ 응답부서가 속한 보장기관의 부정수급 관리 현황을 감사부서,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부정수급 신고·접수체계, 부정수급 전담 조직 측면에서 아래와 같이 파악

[그림 6-5] 응답부서가 속한 보장기관 자체의 부정수급 관리 조직 현황

(단위: %)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b).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 감사부서에서 해당 사업의 부정수급 관리한다고 응답은 전체의 38.8%
  - 보장기관별로 살펴보면 특별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 기타에서 각각 66.8%, 84.4%, 66.7%로 나타났는데,
    - 이 기관들은 단일 부처 또는 유사 사업군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감사부서가 이에 초점을 맞추기가 용이하지만 지자체(33.4~36.5%)는 광범위한 사업을 운영·관리하기 때문에 감사부서가 해당사업에 초점을 맞추기 어려움
  - 감사부서에서 다른 사회보장사업도 관리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67.8%임
- 응답부서의 38%에서 해당 보장기관이 자체적인 부정수급 신고/접수 체계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것으로 응답
  - 보장기관별로 살펴보면 시군구는 뚜렷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지만, 특별지방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서 부정수급 신고/접수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60.6%, 84.4%로 전체 평균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보장기관에서 유선(전화)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87.3%, 현장창구 운영은 61.9%, 온라인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59.8% 인 것으로 나타남
- 보장기관 중 19.6%에서 자체적인 부정수급 전담조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보장기관별로 살펴보면 시군구는 뚜렷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지만, 특별지방행

정기관과 공공기관에서 부정수급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47.2%, 53.1%로 전체 평균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지자체의 경우 약 14%~16% 정도만이 보장기관 자체 부정수급 전담조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자체의 경우 부정수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업부서(또는 사업부서가 속한 국·실) 차원의 부정수급 관리 강화 또는 별도 조직을 통한 관리 강화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 부정수급 전담조직의 설치형태는 사업부서들이 속한 국·실에 설치에 설치했다는 응답이 35.8%, 감사조직에 설치했다는 응답이 27.5%, 감사조직 외 별도 조직(부서)으로 설치했다는 응답은 17.1%로 가장 낮았음

〈표 6-10〉 응답부서가 속한 보장기관 자체의 부정수급 관리 조직 현황

(단위: %)

분류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해당 없음*
감사부서의 부정수급 관리여부	전체	(3192)	38.8	51.8	9.4
	지자체 및 교육청	(2784)	34.4	57.5	8.0
	시청	(885)	34.0	57.7	8.2
	군청	(1026)	33.4	58.7	7.9
	구청	(857)	36.5	55.3	8.2
	특별지방행정기관	(373)	66.8	12.9	20.4
	공공기관	(32)	84.4	15.6	0.0
	기타	(3)	66.7	0.0	33.3
분류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합계
보장기관 자체 부정수급 신고/접수 체계 여부	전체	(3192)	38.0	62.0	100.0
	지자체 및 교육청	(2784)	34.4	65.6	100.0
	시청	(885)	36.3	63.7	100.0
	군청	(1026)	31.8	68.2	100.0
	구청	(857)	36.2	63.8	100.0
	특별지방행정기관	(373)	60.6	39.4	100.0
	공공기관	(32)	84.4	15.6	100.0
	기타	(3)	33.3	66.7	100.0
보장기관 자체 부정수급 전담조직 여부	전체	(3192)	19.6	80.4	100.0
	지자체 및 교육청	(2784)	15.5	84.5	100.0
	시청	(885)	16.9	83.1	100.0
	군청	(1026)	14.1	85.9	100.0
	구청	(857)	15.9	84.1	100.0
	특별지방행정기관	(373)	47.2	52.8	100.0
	공공기관	(32)	53.1	46.9	100.0
	기타	(3)	33.3	66.7	100.0

주: '해당 없음'은 응답기관에 감사부서가 없는 경우를 의미함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b).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 전담부서 부서원 수는 평균 6.1명으로 조사됨. 보장기관별로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부정수급 전담조직의 부서원수가 9.4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시청(4.6명), 구청(5.3명) 순으로 나타남

#### 〈부정수급 관리 현황과 실적〉

- 환수결정액, 환수실적과 같은 부정수급 관련 현황에 대한 정기적 관리 여부는 50.3%의 응답자가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
- 환수결정액, 환수실적과 같은 부정수급 현황에 대한 관리방법은 전산시스템을 이용이 43.1%로 가장 높았으며, 전산시스템과 수기관리 병행은 34.3%, 엑셀, 문서 등으로 수기관리 한다는 응답은 18.7%였음
- 사업에서 발생하는 부정수급을 인지하는 경로는 정기조사가 평균 6.0(합계 19,142건)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정보연계가 평균 4.4건(합계 14,142건)이었음
  - 정기조사의 경우 보장기관별로 큰 차이를 보였는데, 구의 경우 정기조사로 인한 부정수급 인지 건수가 12.8건으로 나타났고, 공공기관의 경우 43.8건으로 나타나 다른 기관들에 비해 정기조사로 인한 부정수급 인지규모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표 6-11〉 부정수급 인지경로 (평균)

(단위: 건수)

구분	총계 (접수건수)	제보 (내부)	제보 (외부)	감사	현장점검	정기조사	비정기 조사	정보연계	타기관 조사의뢰	기타
평균	13.5	0.7	0.3	0.1	0.2	6.0	1.1	4.4	0.1	0.6
합계	43,233	2,103	1,100	346	653	19,142	3,406	14,142	289	2,052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b).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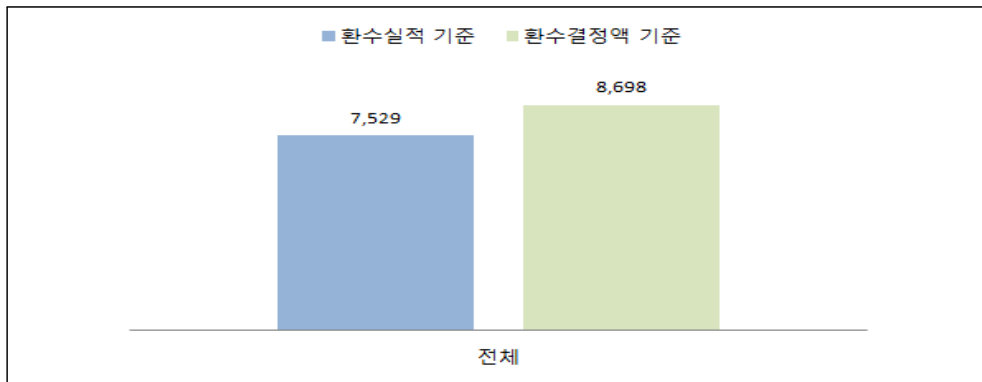
- 부정수급에 대해 일반법, 개별법 등에 규정된 조치는 환수 45.1%, 지원중단 30.9%, 수사 의뢰 및 형사고발 8.2% 순으로 응답비중이 높았음
  - 보장기관별로도 큰 차이 없이 환수와 지원중단이 높은 비중을 나타냄

□ 실태조사 대상사업의 부정수급 수준 (대상 사업 합계액)

- 실태조사 대상사업의 부정수급 수준은 환수결정액 기준으로 약 87억 원, 환수 실적 기준으로는 약 75억 원인 것으로 나타남<sup>40)</sup>
- 실태조사 사업(39개)의 부정수급 합산액을 살펴보면, 환수결정액 기준으로 부정수급 규모는 약 87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결정건수는 약 1만 건으로 나타남
  - 자산 및 진단기준별로 살펴보면(환수결정액기준), 자산기준만 적용되는 경우 부정수급 규모는 약 70.1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산기준과 진단기준이 모두 적용되지 않은 경우가 약 8.6억 원으로 나타남
  - 보장기관별로는 지자체 또는 교육청의 부정수급 규모가 약 50.6억 원으로 가장 규모가 크고 그 다음은 특별지방행정기관(32억원)인 것으로 나타남
  - 시청과 구청의 부정수급은 각각 13.5억 원, 31.2억원으로 군청(5.8억원)에 비해 최소 두 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남

[그림 6-6] 실태조사 대상사업의 부정수급 수준(합계액) : 전체

(단위: 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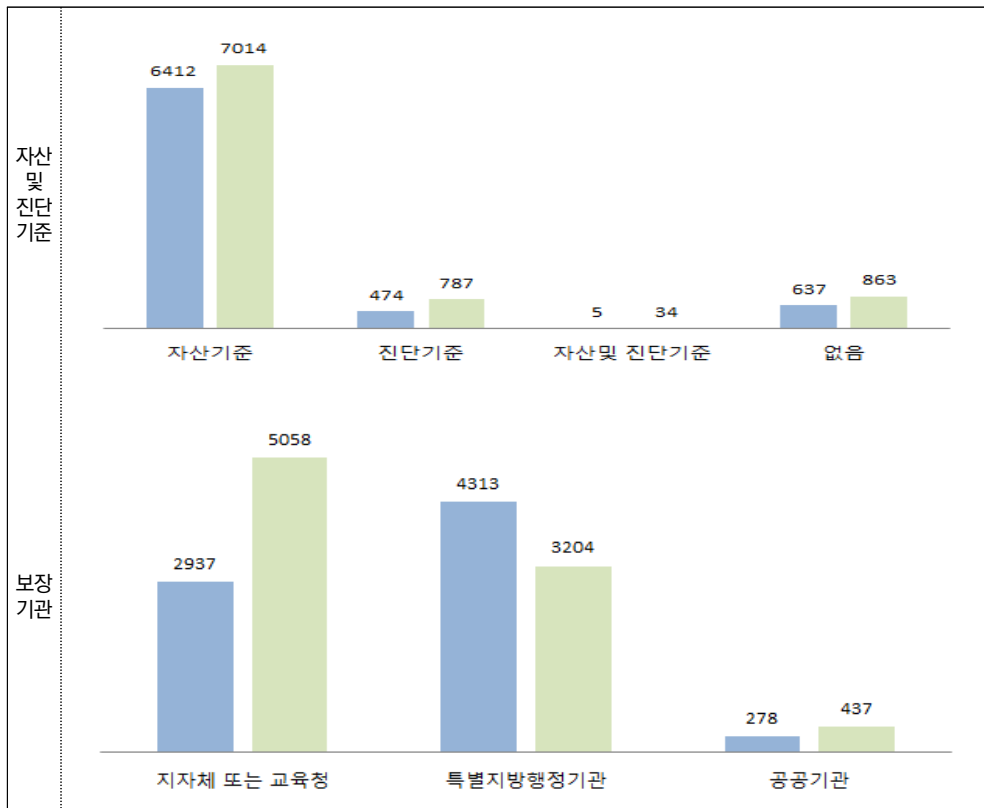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b).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40) 환수결정액은 각 급여별로 '19년(1년 동안)에 환수결정된 금액의 합계액을, 환수실적액은 '19년(1년 동안)에 환수된 금액의 합계액을 의미하는데, 환수실적액은 '19년 환수결정액은 물론 그 이전에 환수가 결정되었다가 '19년에 실제로 환수된 금액까지 포함한 것임



[그림 6-7] 실태조사 대상사업의 부정수급 수준(합계액) : 자산 및 진단기준, 보장기관

(단위: 백만 원)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b).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 환수실적 기준 부정수급 규모는 약 75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적건수는 약 7천 2백 건 으로 나타남

- 자산 및 진단기준별로 살펴보면, 환수실적 기준 역시 환수결정액과 마찬가지로 자산기준만 적용한 경우에 그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 그 다음은 자산기준과 진단기준이 모두 적용되지 않은 경우로 나타남
- 보장기관별로는 환수결정액 기준과 달리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부정수급 규모(43.1억원)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지자체 또는 교육청 (29.4억원)인 것으로 나타남

〈표 6-12〉 실태조사 대상사업의 부정수급 수준 (합계) : 자산 및 진단기준, 보장기관

(단위: 건, 백만원)

분류	구분		사례수	환수결정액 기준		환수실적 기준		
				건	금액	건	금액	
전체			(3192)	10,636	8,697.8	7,209	7,528.5	
자산 및 진단 기준	자산기준		(1791)	10,469	7,014.0	7,051	6,411.8	
	진단기준		(252)	23	786.7	19	474.4	
	자산및 진단기준		(357)	19	33.6	16	5.0	
	없음		(792)	125	863.4	123	637.3	
보장기관	지자체 또는 교육청	전체	(2784)	9,713	5,057.6	6,362	2,937.4	
		지자체	시	(885)	1,426	1,347.1	1,474	882.8
			군	(1026)	740	578.7	547	303.3
			구	(857)	7,537	3,119.8	4,330	1,741.2
	특별지방행정기관		(373)	386	3,203.7	310	4,313.4	
	공공기관		(32)	537	436.5	537	277.7	
	기타		(3)	0	0.0	0	0.0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b).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 □ 부정수급 조치 실적 : 행정처분의 평균값

- 지급정지 건수는 0.9건이었고, 과태료와 과징금은 각각 36.8만원, 24만원이었고, 기타 금전적 처분(벌칙금, 제재부가금 등)은 218.5만원으로 나타남
- 자산조사 및 진단기준별로 살펴보면, 자산기준만 적용되는 사업의 경우는 과태료가 주로 부과되었고, 진단적 구분만 적용되는 사업의 경우는 과징금과 기타 금전적 처분이 주로 부과되었음
- 보장기관별로 살펴보면 군과 구의 경우, 기타 금전적 처분이 주로 부과되었고, 시는 과태료가 주로 부과됨. 또한 특별행정기관은 과태료가 주로 부과되었고, 공공기관은 과징금이 주로 부과됨

〈표 6-13〉 부정수급 조치실적 : 행정처분 (평균)

(단위: 건, 만원)

지급정지	명단공표	금전적					
		과태료		과징금		기타	
건	건	건	금액(만원)	건	금액(만원)	건	금액(만원)
0.9	0.0	0.2	36.8	1.9	24.1	0.3	218.5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b).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 □ 부정수급 조치 실적 : 행정처분의 합계값

- 지급정지 건수는 2,838건이었고, 명단 공표건수는 135건임. 과태료와 과징금은 각각 1,175백만원, 768백만원이었고, 기타 금전적 처분은 6,976백만원임
- 명단공표의 경우 시군구 등 지자체에서 주로 적용하는 방법임을 알 수 있음

〈표 6-14〉 부정수급 조치실적 : 행정처분 (합계)

(단위: 건, 백만원)

분류	구분		사례수	지급정지	명단공표	금전적_과태료		금전적_과징금		금전적_기타		
				건	건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전체			(3192)	2,838	135	629	1,175.0	6,187	768.0	848	6,975.8	
자산 및 진단 기준	자산기준		(1791)	2,607	37	20	968.0	174	177.3	221	5,085.0	
	진단기준		(252)	79	0	0	0.0	2	495.4	2	1,079.3	
	자산 및 진단기준		(357)	38	0	0	0.0	0	0.0	0	0.0	
	없음		(792)	114	98	609	207.0	6,011	95.3	625	811.5	
보장기관	지자체 또는 교육청	지 자 체	전체	(2784)	2,536	132	21	206.4	183	272.0	148	4215.9
			시	(885)	596	82	14	189.4	4	10.0	101	34.6
			군	(1026)	685	19	1	0.0	3	12.6	23	3,372.9
			구	(857)	1,251	31	6	17.0	176	249.4	24	808.4
	특별지방행정기관		(373)	298	3	608	968.6	6,002	0.6	698	1,680.6	
	공공기관		(32)	4	0	0	0.0	2	495.4	2	1,079.3	
	기타		(3)	0	0	0	0.0	0	0.0	0	0.0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b).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 □ 부정수급에 대한 조치로 수사의뢰 및 형사고발의 합계

- 전체 수사의뢰 건수는 82건이었고, 형사고발 건수는 48건임
- 자산 및 진단기준별로 살펴보면, 자산기준만 적용되는 경우가 48건, 자산 및 진단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32건이었음
- 보장기관별로는 구가 48건으로 가장 건수가 많았고, 다음은 시로 20건이었음

〈표 6-15〉 부정수급 조치실적 : 수사의뢰 및 형사고발 (합계)

(단위: 건)

분류	구분		사례수	수사의뢰_건수	형사고발_건수
자산 및 진단 기준	전체		(3192)	82	48
	자산기준		(1791)	48	18
	진단기준		(252)	2	5
	자산및 진단기준		(357)	0	0
	없음		(792)	32	25
보장기관	지자체 또는 교육청	전체	(2784)	76	34
		지	(885)	20	13
		시	(1026)	8	4
		군	(857)	48	14
	특별지방행정기관		(373)	5	8
	공공기관		(32)	1	6
	기타		(3)	0	0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b).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 □ 환수결정 이후 원활한 환수 여부

## ○ 전체응답의 52.4%가 원활한 환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 자산 및 진단기준별로 살펴보면, 자산 및 진단기준이 없는 경우가 71.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진단기준만 적용되는 경우가 55.6%였음
- 보장기관별로는 군의 57.7%가 원활한 환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시와 구는 다소 낮았음. 특별지방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은 각각 53.4%, 71.9%가 원활한 환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

〈표 6-16〉 환수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원활한 환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응답한 47.6% 대상)

(단위: %)

환수 대상자의 항의 등 민원대응	환수와 관련된 강제력 부족	실제 환수금 납부 능력이 없는 경우	업무과중 또는 인력부족	환수방법의 한계	환수 대상자 소재 불분명
30.2	20.8	15.3	12.7	8.5	6.4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 ○ 한편 환수과정에서 어려움으로 ‘환수 대상자의 항의 등 민원대응’이 가장 높았으며, ‘환수와 관련된 강제력 부족’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

- 사업의 사각지대 측면으로 볼 수 있는 ‘실제 환수금 납부 능력이 없는 경우’도 약 15%를 차지

## 〈부정수급 예방 및 관련 교육〉

- 해당 사업에 대한 초기상담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가 속한 보장기관이 급여 제공시 초기상담을 담당한다는 응답이 67.9%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 해당 응답자를 대상으로 초기상담 시 부정수급 관련 주의사항 안내에 조사한 결과 93.6%가 해당 안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6-17〉 초기상담 여부 및 부정수급 관련 주의사항 안내 여부

(단위: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초기상담 여부		(3192)	67.9	32.1
부정수급 관련 주의사항 안내 여부	해당 보장기관	(2167)	93.6	6.4
	다른 기관 포함	(3192)	91.1	8.9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b).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 한편, 초기상담을 다른 기관에서 할 경우도 포함하여 살펴보면, 전체 91.1%가 초기상담 시 부정수급 관련 주의사항 안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수급자의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조사 실시 여부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 응답자의 81.7%는 급여제공 시 수급자의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 보장기관별로는 군의 83.7%가 수급자 자격 및 적정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특별지방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은 각각 81.8%, 90.6%가 적정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
    - 다른 주요 변수별 특성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음(자산, 진단 기준 등)
  - 수급자의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조사 시 대상 범위를 살펴보면,
    - 조사시 대상범위는 수급자 전부라고 응답한 비중이 77.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2.9%가 수급자 일부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표 6-18〉 수급자 자격 및 급여 적정성 조사 시 대상 범위

(단위: %)

수급자 전부	부정수급 고위험자	수급자 일부	기타
77.0	9.0	12.9	3.8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b).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 전체 대상자 대비 적격성 확인조사 대상 비율은 전체 대상의 61.5%인 것으로 나타남. 보장기관별로는 공공기관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70.1%)

## □ 부정수급 교육 현황

○ 응답자의 18%는 부정수급 교육에 참석했다고 응답하였음

- 보장기관별로는 군이 20.8%로 시군구 중에서 부정수급 교육 참석 비중이 가장 높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은 각각 25.5%, 40.6%의 응답자가 부정수급 교육에 참석했다고 응답

〈표 6-19〉 부정수급 교육 참석 여부

(단위: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체	(3192)	18.0	82.0
지자체 또는 교육청	(2784)	16.7	83.3
시	(885)	14.1	85.9
군	(1026)	20.8	79.2
구	(857)	14.7	85.3
특별지방행정기관	(373)	25.5	74.5
공공기관	(32)	40.6	59.4
기타	(3)	33.3	66.7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b).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 한편, 부정수급 예방 교육에 참석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경우 평균 1.4회 부정수급 교육에 참여했다고 응답하였음

- 응답자의 개인특성을 살펴보면, 정규직 민간인력이 2.3회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약직 민간인력이 2회였음

## □ 응답자가 참여한 부정수급 교육 주최

○ 정부부처가 주최한 경우는 37.5%였고 해당 기관 자체 교육이 36.7%였음

〈표 6-20〉 응답자가 참여한 부정수급 교육 주최

(단위: %)

사례수	정부부처	광역 시도	특별지방 행정기관	해당 기관 자체 교육	기타
(675)	37.5	18.7	4.1	36.7	3.0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b).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 부정수급 교육 참여자를 대상으로 교육이 부정수급 관리 및 예방에 도움이 되는 정도를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 응답자의 62.8%는 조금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으며, 32.9%는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음

## □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응답자의 22.9%는 부정수급은 범죄라는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12.6%는 초기 상담시 부정수급 관련 주의사항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

〈표 6-21〉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단위: %)

부정수급은 범죄라는 인식확산	초기 상담시 부정수급 주의사항 안내강화	부정 수급 관련 인력 확대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마련	확인 조사 강화	보다 강력한 환수 조치	처벌 강화	선정 과정의 엄격성 강화	부정 수급 적발 강화	관련 기관간 정보 공유	관련 규정 정비	기타	신고 포상금 도입 또는 확대
22.9	12.6	9.8	9.2	8.2	7.6	7.6	6.1	5.2	4.8	4.1	1.0	0.8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b).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 부정수급 관련 인력확대는 9.8%로 세 번째로 응답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확인조사 강화는 네 번째로 응답비중이 높았음

○ 환수 및 처벌 강화는 각각 7.6%의 응답 비중을 보여주고 있는데,

- 보장기관 담당자들은 사후적 처벌 또는 제재 강화보다는 인식전환과 상담을 통한 주의사항 안내 등이 부정수급 예방차원에서 필요성이 더 큰 것으로 응답

## 제3절 사례연구

### 1. 개요

- 기본조사와 실태조사가 정량적 분석을 통해 개별사실들에 대한 유형화된 또는 공통적 속성을 파악했다면, 사례연구는 대상국가의 부정수급 관련 현황과 관리체계에 대한 특성을 맥락적 차원에서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 어떠한 사례연구 대상이든지 절대적인 성공 사례 또는 실패사례로 간주하기 어려운 상대적인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례국의 부정수급 관리 성과 및 우수성과 문제점과 그 원인을 객관적인 관점에서 정리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우리나라의 현금급여에 대한 부정수급 대응 및 관리체계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앞서 살펴본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완하고 보다 실질적인 정책함의를 제안할 수 있음
- 본 장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해외사례의 경우 선진국의 부정수급 예방 또는 관리 조치 중 정책함의가 큰 제도와 방안에 관한 것이며, 한국의 경우 현금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대응 및 관리체계 파악과 이를 통한 정책함의 도출임
  - 해외 선진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부정수급 정책 발굴 및 우리 상황에 맞게 변형·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 한국 사례연구를 통해 현금급여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의 보완 및 보다 구체적인 정책함의 제시
  - 본 연구에서는 부정수급 관련 사례 연구 국가로 미국, 호주, 한국을 선택
    - 이들 국가들은 선별적 복지를 특징으로 하는 국가들로, 선별적 복지제도들은 자산조사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거나, 근로를 조건으로 급여를 지급받거나, 급여지급에 기간제한이 부여 되는 등, 까다로운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급여가 지급되는 특성을 가짐

-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부정수급이 발생하게 되며, 정부는 이러한 부정수급에 대해 보편적인 복지를 지향하는 국가들에 비해 적극적인 예방 및 관리정책을 수행하고 있음

## 2. 미국

□ 위험관리 접근에 근거한 부정수급 예방방식에 대한 접근방법에 대한 검토 필요

○ 정기적이고 종합적인 위험관리 체계 구축 및 활용

- 미국은 국가재정위원회(CFOC)나 종합적 위험성 관리(EMR)접근방법을 다 부처 통합적인 접근을 통해 부적정 지출 위험에 대해 포괄적으로 대응
- 부적정 지출 발생 후 사후적인 대응보다는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사전적 예방노력을 체계화하여 부적정 지출 위험을 최소로 관리토록 노력하고 있음
- 정부지출 무결성 우선지구(Payment Integrity Priority Area) 달성을 위해 재무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총괄위원회(ESC)를 다부처 총괄기구로서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총괄위원회를 통해 부적정 지출 예방을 위한 전략목표를 수립하고 단계별로 관리하고 있음

○ 효과적이고 유의미한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의 개발 및 활용

- 예산관리청(OMB) 지침에 근거한 통일된 적용기준을 제시하여 부적정 지출에 대해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음
- 부적정 지출 위험이 높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우선관리 프로그램’으로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음
- 부적정 지출 위험이 높은 프로그램은 연방정부 홈페이지(<https://www.paymentaccuracy.gov>)를 공개하여 경각심을 높이고 해당 프로그램의 부적정 지출 노력에 힘쓰도록 유인하고 있음
- 해당 프로그램의 현재 부적정 지출의 상태 점검, 최근의 분기별 성과 공개, 최근 3년간 재정적 손실액의 종단적 비교, 부적정 지출의 원인의 유형 분석

및 해결전략의 구체적 제시 등

- IPERA에 제시된 6가지 기준원칙(criteria)에 따라, 각 부처기관의 감사관(IGs)으로 하여금 각 부처 내 개별 프로그램별 위험도 사정(risk assessments)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부처의 재무보고서(AFR)나 성과 및 책임보고서(PAR)를 통해 발표토록 하고 있음
- 또한, 각 부처들이 부적정 지출의 발생 원인과 각 유형별 부적정 지출 비율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적정 지출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교정계획(corrective action)을 수립토록 하고 있음

#### □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인 부적정 지출 관리체계 구축 및 활용

- 위험성 평가(risk assessment)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 요소로서 사업의 신규 여부, 사업의 복잡성, 연간 지급 규모, 보조금 지급 주체, 사업의 주요 내용의 변경 사항, 담당자의 교육 수준, 기관 감사 내용이 포함토록 하고 있음
- 모든 부처기관은 3년에 1회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Systematic Method)를 시행토록 하고 있음
- 정량적 방법(Quantitative Method) 또는 정성적인 방법(Qualitative Method)을 적절하게 혼합하여 위험도 및 추정치를 분석하고 있음
- 부적절한 보조금 지급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프로그램은 통계적으로 유효한 추정 방법을 설계하여 OMB에 보고토록 하고 있음
  - 주요한 보고사항 및 내용(원종학 외, 2019, p. 120)
    - 부적절한 보조금 지급 추정 금액(과소 및 과대 지급 포함), 표본 선정 및 추정 방법(표본 선정 및 추정 절차를 대신하여 전수 조사 가능)

### 3. 호주

- 최근 호주의 사회보장 부정수급의 현저히 감소는 몇 가지 중요한 정책적 변화와 관련되어 있음

- 2011년까지 센터링크는 조사원들은 일정 건수 이상의 기소의뢰가 요구되었음
    - 예를 들어, 2000-01년 센터링크의 핵심성과지표에는 4,000건의 기소의뢰가 목표치로 제시됨
      - 이를 달성하기 위해 조사원들은 일인당 연간 최소 96개 사례를 조사하고, 최소 6개 사례를 기소 의뢰하도록 요구되었음
    - 즉, 목표치 달성을 위해 의심되는 사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기소 의뢰가 이루어졌음
  - 이런 불합리한 관례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더 심각하고, 더 명백한 부정수급 사례에 집중하여 조사 및 기소의뢰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개선됨(Wilcock, 2018)
    - 부정수급에 대한 대응 전략은 불합리한 양적 목표치를 제거하고,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예방적 접근과 조기 개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지향
    - 대안적인 접근으로서 예방(prevention)과 조기 감지(early detection) 기능을 통해 기소 이전에 센터링크 내에서 우선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법이 제안됨(Legal Aid NSW, 2010)
- 이러한 정책 방향의 전환과 더불어 호주 사회보장 부정수급 관리체계는 다음 몇 가지 사항으로 요약될 수 있음
- 첫째, 행정 체계 측면에서 디지털 기술 활용을 강화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동시에 인적 개입의 여지를 최소화함으로써 공평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
  - 둘째, 부정수급 사례가 전반적으로 급감하고 있으며, 특히 복지사기로 칭해지는 의도적 제도 왜곡 현상이 줄어들고, 이는 형사기소로 이어지는 심각한 부정수급의 감소로 이어짐
  - 셋째, 과거의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적 접근보다는 조기 개입 및 자발적 교정을 지원하는 예방적 접근이 강화되는 추세임

- 호주의 부정수급 관리 체계는 대체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들이 단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 행정 주체의 시행착오, 정책 수립자, 수급자 그리고 사회보장 관련 시민단체와 지역 사회 구성원들의 갈등 관계 속에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결과라는 점임
- 처벌적 접근에서 교정적 접근으로의 변화는 고무적인 정책적 변화로 평가되지만, 여전히 아래와 같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음
  - 소득 불일치 확인 과정의 문제점
    - 사회보장급여는 2주 주기로 지급되지만, 급여산정 및 환수의 근거자료가 되는 국세청 소득자료는 분기, 반기, 연단위 등으로 확보되어 두 소득 간 불일치 발생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
  - 준수 프로그램의 불공정성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준수 프로그램에서 수급자는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신의 소득 상황의 변화를 상대적으로 유연하고 편리하게 갱신할 수 있으나, 이 과정은 오로지 수급자의 책임과 의무임
    - 또한 앱을 통한 소득 변화 갱신을 위해 급여명세서와 은행 잔고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취약계층에 있어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측면이 존재
  - 또한 부정수급 회수 절차에 있는 수급자들은 무력감(disempowerment)과 심각한 권력의 불균형(power imbalance) 경험, 수급자를 사회보장의 권리 담지자로 보기 보다는 잠재적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시키는 점은 여전히 개선사항으로 남고 있음

#### 4. 한국

- 본 연구에서는 2020년 첫 실태조사인 점을 고려하여 현금급여(78개)를 중심으로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현금급여 대상 사업 중 100억원 이상 예산 사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39개)를 실시하였음
- 기본조사와 실태조사는 부정수급 발생 현황 및 유형, 부정수급 사후관리, 부정수급 관리 조직 및 운영 등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용이하지만, 부정수급의 발

생 원인과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의 보장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부정수급의 원인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음
  - 이러한 심층면접조사와 심층면접조사 사업 중 주요 사업에 대한 제도적 접근을 병행하여 현금급여에 대한 사례연구를 수행함
- 사례연구를 통해 현금급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 첫째, 자산조사형 현금급여에서 신청 당시의 ‘조사’와 급여 지급 단계에서의 ‘변동조사’가 구분되어 있는데, 실제로 업무 담당자가 구분된 경우 업무권한 및 위임 등의 이유로 ‘변동조사’가 제한되며, 이런 경우 부당청구 가능성 존재
  - 둘째, 사회보장급여는 공통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조사 및 변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시스템의 권한이 제한될 때, 해당 부처(기관) 및 부서에서 별도의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시스템 간 연계’ 수준에 따라 부정수급에 대한 선제적 관리 및 사후관리 정도가 영향을 받음
    - 별도의 시스템 이용시 ‘시스템 간 연계’ 수준이 부정수급 관리 측면이 있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해당 사회보장급여의 관계 부처들은 각 시스템간의 연계성 제고를 위한 기술적 노력과 함께 부처간 소통 강화의 노력이 필요
  - 셋째,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보장기관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정립이 필요함
    - 예를 들어 보장기관이 시도 및 시군구의 장(長)과 시도교육감인 사업에서,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조사 권한이 시도 및 시군구에 집중되면서, 시도교육청의 경우 보수적이고 소극적인 역할에 머무를 가능성이 큼
    - 따라서 권한과 역할, 정보 제공 등 협력의 수준이 강화를 통한 부정수급 관리의 제고 필요
  - 넷째, 같은 현금급여라도 현금급여의 대상 및 지급방식 등에 따라 다양한 부정수급의 형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수급 관련 담당자가 여러 사회보장급여를 담당하는 것보다 관련 분야 전문가가 해당 분야에 대한 부정수급을 담당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보장기관에 부정수급 전담조직을 만들거나, 부정수급 전담인력을 배치할 경우 담당자가 광범위한 분야에 부정수급을 관리하게 하기 보다는 분야별 전문성에 따라 해당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게 할 필요가 있음

## 제4절 주요 영역별 합의 및 향후 실태조사 추진 방향

### 1. 주요 영역별 합의

#### 가. 공통 영역

- 부정수급 관리의 근거를 마련하고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개별 근거법령 혹은 관련 지침 등에 부정수급 관리 및 대응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기본조사 분석대상 316개 사업 중 개별 근거법령 또는 관련 지침에 지원중단, 환수 등과 같은 부정수급 관리에 대한 근거가 모두 없는 사업이 75개에 달했으며, 이중 66.7%에 해당하는 50개 사업은 기본조사 시 부정수급 규모를 파악하지 않았음
  - 이는 부정수급이 발생해도 부정수급에 대한 대응 및 관리 근거가 없어 해당 사업들의 부정수급을 파악하지도 관리하지도 않을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
- 따라서 부정수급 관리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관리근거를 근거법령 또는 관련 지침 등에 마련하고 부정수급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 개별적 성격의 근거법령과 관련 지침의 유무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근거법령 또는 관련 지침이 없는 사업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령 또는 지침 등에 관리근거를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관련 지침을 통한 관리근거는 법령에 대한 개정보다 상대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관리근거를 마련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에 대한 개별적 성격의 근거법령이 없고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령에도 부정수급 관리근거가 없을 경우 관련 지침에 부정수급 관리 근거를 우선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부정수급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및 관리를 위해서는 적발 등의 사후적 대응 또는 관리 보다는 사전적 예방이 중요
  - 부정수급이 범죄라는 인식 변화가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보장기관 담당자는 물론 관련 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부정수급 관련 교육(예방, 관리 등)이 필요
    -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가장 필요한 것으로 ‘부정수급은 범죄라는 인식 확산’이 응답됨(응답자의 22.9%)
  - 이러한 인식변화와 함께 앞서 언급되었던 정보시스템의 고도화와 시스템간의 연계성 제고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며,
  - 또한 특별사법경찰 등의 전담인력을 배치 및 확대를 통해 사후적 관리의 효과성 제고는 물론이고 사전적 측면에서의 부정수급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특별사법경찰의 경우 아래서 언급하고 있는 부정수급 전담조직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 한편 부정수급과 사각지대 문제는 별개가 아닌 동전의 양면과 같은 문제이므로 사회보장제도의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두 문제를 통합적으로 접근해서 다뤄야 할 것임
  - 제도의 효과성은 물론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도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한데, 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시된 부정수급 실태조사의 결과들은 사각지대 관련 함의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임
  - 예를 들어, 앞서 살펴본 환수과정에서의 어려움에 대한 응답에서 사각지대 측면으로 볼 수 있는 ‘실제 환수금 납부 능력이 없는 경우’가 세 번째로 높은 응답 비중을 차지하였음
    - 또한, 이론적으로 제도의 복잡성(수급 조건의 강화 등)이 높아지면 부정수급은 감소하고 사각지대는 증가하는 관계를 보이는데,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수급요건 기준에 자산기준만 적용되거나 진단기준만 적용되는 사업보다 자산기준과 진단기준이 모두 적용되는 사업의 경우 부정수급 규모가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남

- 향후 실태조사에서는 부정수급 실태에 집중하되 사각지대와 포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조사표의 내용 등을 추가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나. 자산조사형 급여 : 시군구가 보장기관인 공공부조 제도 중심

□ 자산조사형 공공부조제도에 대한 부정수급 실적과 관리 현황을 보면, 일정수준에서 부정수급이 발생하고 있으며, 관련 사업부서에서 부정수급에 대한 조치들이 주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감사조직 및 별도 조직을 통한 관리보다는 사업부서에서의 부정수급 발굴과 환수실적 등이 많다는 점에서 사업부서에서의 관리가 더 효과적인 것으로 보임

- 이는 공공부조제도라는 복잡한 제도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하지만 사업부서에서 사업집행에서 부정수급 발굴까지 관리하는 것은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게 됨

- 자산조사형 공공부조제도에 대해서는 별도 조직보다는 사업부서 내에서 부정수급을 발굴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과 인력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

- 부정수급 관리에 있어 전산시스템과 부정수급 예방교육은 일정한 효과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정부에서도 차세대 정보시스템 개발을 통해 전산시스템을 보완하고 있지만, 부정수급 발굴의 측면에서는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 받음으로써 재원의 누수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이 갖추어질 필요가 있음

- 또한 부정수급에 대한 정기적 조사와 예방교육은 성과가 있다는 점에서 자산조사형 공공부조제도 담당자들의 주기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제도적 측면에서 자산조사형 공공부조 사업의 부정수급 최소화를 위해서는 실시간으로 소득파악이 가능한 체계구축이 필요

- 현재와 같이 시차를 두고 파악되는 수급자들의 소득파악은 필연적으로 부정 또는 오류 수급을 발생시키게 되며, 관련 조사를 하느라 사업담당자들의 업무



과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발전을 위해서는 자산조사형 사업에 대해서는 가능한 실시간으로 소득이 파악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로 급여에 반영함으로써 부정적 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체계 구축이 필요
- 자산조사형 공공부조제도는 다른 사회복지 혹은 사회보험제도에 비해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
  - 빈곤층에게 직접 현금과 현물을 무상으로 지원하기에 자산조사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자산조사가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 역시 발생할 수 있음
  - 향후 자산조사형 급여에 대한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마련되어야 작동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방향성은 공공부조는 물론 자산조사가 포함되는 광범위한 자산조사형 사업의 실태조사 방향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자산조사형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방향성
  - 먼저, 자산조사 사업에 대한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이전, 먼저 사전 점검 연구와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 언급하였듯이 공공부조제도 등 자산조사형 급여는 복잡한 자산조사의 형식을 취하고 있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에서 적용하고 있는 자산조사 방식 또는 그 결과를 차용하고 있음. 자산조사에 대한 방법과 기준 역시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경되어 오고 있음
      - 대표적인 차이는 소득인정액 제도를 운영하는 제도들 간의 재산 인정 및 적용범위, 환산율 산출 방식 등의 차이가 있음
    - 따라서 부정수급 실태조사의 방향, 목적, 대상, 방법 등을 구축하기 위해 사전적으로 자산조사형 부정수급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정의하고 서로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산조사 방식을 어떠한 기준에 의해 조사하고 부정수급으로 판별할 것인지에 대한 사전 연구와 조사가 필요

○ 둘째, 자산조사형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범위의 사전 설정 필요

- 정부는 최근 몇 년간 자산조사형 사업을 확대하거나 할 예정이며, 더불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예정임
  - 대표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2021년부터 대상자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2021년 새로운 자산조사형 사업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도입될 예정으로 자산조사형 사업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 다음 조사에서는 자산조사형 사업의 부정수급 실태조사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사전에 설정하고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더불어 주요한 점은 2000년대 이후 늘어나고 있는 현물성 급여를 역시 동일하게 부정수급 실태조사에 포함 할 것인지 검토 필요
  - 대표적으로 자산조사 사업 중 의료급여의 경우 관련 예산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특정그룹에 의한 과도한 의료비 남용의 문제가 주기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주거급여를 통한 임대료 지원 사업 역시 확대되고 있으므로 자산조사형 사업 중 현물성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포함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

○ 셋째, 둘째 범주와 연계되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자산조사형 사업은 중앙정부에서만 운영하고 있지 않고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등에서도 운영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중앙정부 중심의 자산조사형 사업을 대상으로 했다면 다음 조사에서는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산조사형 사업을 조사 범주에 포함 할 것인지 검토 필요
  - 지방정부 자체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방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취약계층 지원제도 등과 공공기관 사업인 학자금 지원사업, 서민금융진흥원 생계비 지원, 예술인복지재단의 저소득 예술인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이 운영되고 있음
- 이와 같이 다양한 영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산조사형 사업을 어디까지 어

떨게 포함해 부정수급 관련 조사를 진행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

#### 다. 장애인과 보훈대상 제도 : 진단적 기준 적용 사업 중심

##### 1) 진단기준만 적용되는 사업에 대한 부정수급 현황 관리 강화

- 현재 진단적 기준 적용 사업의 부정수급 규모 자체는 자산조사 적용 사업에 비해 월등히 적음
  - 그러나 기준을 좀 더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자산기준과 진단기준을 동시에 적용한 사업의 경우 부정수급 규모가 매우 작게 나타나지만,
    - 진단기준만 적용되는 사업은 자산기준만 적용되는 사업에 비해 부정수급의 규모는 작지만 단순히 진단적 기준 여부와 자산조사 기준 여부만으로 구분했을 때보다 상대적으로 그 규모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즉, 진단기준 적용 사업이 자산기준과 같이 적용되는 경우는 해당 사업의 급여 수급조건의 엄격성 강화로 부정수급이 적게 나타나는 것이고 진단기준만 적용되는 경우 엄격성 완화로 부정수급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진단적 기준만 적용되는 사업에 대한 관리가 현재보다 더욱 요구됨
  - 이러한 사업들의 부정수급 관리 현황을 살펴보면,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는 비율이 자산기준과 진단기준이 동시에 적용되는 사업 그리고 자산기준만 적용되는 사업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대신, 수기관리만 하는 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진단적 기준만 적용되는 사업에 대한 ‘전산시스템’의 적용 확대가 필요함을 알 수 있음
    - 이러한 전산시스템의 확대와 보완에 있어 호주와 같이 디지털 기술의 활용을 강화하고 행정 효율성을 고려한 전산시스템의 개발(업무에 따른 오류 등의 감소 포함)이 요구됨

## 2) 상담 시 수급자 대상 부정수급 관련 정보의 공지 등의 노력 유지

- 현재 진단적 기준을 적용한 사업의 경우, 상담시 부정수급 관련 정보 및 부정수급 주의사항 안내 등을 공지하고 있음
  - 최근 복지전달체계가 읍면동으로 단일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공지가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즉, 부정수급에 대한 예방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이는 진단적 기준 적용 사업에 대해서는 일반법 등 규정된 부정수급 관련 조치가 타 사업에 비해 비교적 잘 되어 있으며, ‘진단’ 관련 의료체계와의 협력 및 관련 체계를 적절히 구성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짐
  - 향후 수급자의 사업기간 내 변동 등에 대한 ‘고지 의무’ 강화로 사업기간 동안 발생될 수 있는 오류수급의 사례 등에 대해서도 대비할 필요가 있음

## 라. 사회서비스 : 시군구 중심

- 시군구 중심의 분석이 필요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부정수급 관리에 있어 특별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특화되어 있지 못하여, 전담기관이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 차원에서의 검토가 필요
- 부정수급 관리조직 및 운영 특성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보장기관 차원의 부정수급 관리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구청이 시청과 군청에 비해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특히 군청의 감사부서 관리, 자체 운영 부정수급 신고·접수 체계, 전담조직 설치 비율이 가장 낮다는 점에서, 군청의 특성을 반영한 부정수급 관리 체계가 수립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
    - 군청은 전산시스템으로 부정수급 현황을 관리하는 경우에서 부정수급 조치 실적이 높게 나타남. 부정수급 전담 조직과 인력의 확보가 어렵다면, 전산

### 시스템을 통한 부정수급 관리 효율화를 도모할 필요

- 시군구의 부정수급 관리조직 및 운영의 특성은 사회서비스 사업의 부정수급 현황에 상이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부정수급 유형별 차이가 있음을 확인함
  - 부정수급(환수)은 감사조직이 관리하거나, 자체 운영 부정수급 신고·접수체계가 있거나, 부정수급 현황 관리를 정기적으로 하는 시군구에서 조치 실적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오류수급(환수)은 감사조직 관리, 자체 운영 부정수급 신고·접수체계, 부정수급 관련 전담조직이 없는 시군구의 조치 실적이 높음
  - 이러한 결과는 보장기관의 조직적 지원이 있을 경우 사회서비스 사업의 부정수급 관리가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
    - 부정수급은 허위, 공모, 임의처리, 가족 간 거래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정기조사나 현장점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및 인력의 확보가 필수적
  - 동시에 오류수급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 관리 노력이 병행될 필요
    - 오류수급은 전담조직과 신고 체계보다는 부정수급 관리의 정기성 여부가 더 중요할 수 있으므로, 사회서비스 사업의 부정수급 현황 파악의 빈도를 높이고, 사업 특성에 따라 월별, 분기별 보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
- 다만 부정수급 발생 비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부정수급 관리조직 및 운영 특성에 따른 부정수급 현황 분석 결과는 경향성을 보는데 유용하나 일반화 된 해석에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부정수급 관리의 정책 방향은 부정수급 적발이 목적이 되기보다는 부정수급 예방에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함
  - 부정수급 관리 노력을 기울일수록 적발되는 부정수급 건수는 높아져, 그 결과가 예산이나 평가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시군구에서는 부정수급 관리에 소극적일 수 있음

- 따라서 궁극적으로 부정수급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적 차원의 조직 및 인력 지원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함

#### 마. 고용/일자리보장 사업

- 고용 및 일자리 보장 사업은 세부 사업 특징에 따라 부정수급의 발생 형태와 관리, 보장 기관 등이 상이하므로 각 유형에 맞는 접근이 요구됨
- 특별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보장기관인 사업은 부서 내에서도 일부 부정수급을 관리하지만, 감사부서나 부정수급 전담 부서를 통해 부정수급을 관리하고 있어 기관 내 긴밀한 업무 협조가 부정수급 방지 및 관리를 위해 필수적으로 보임
- 지자체를 통해 관리되는 고용 및 일자리보장 사업 중 일자리 사업 역시 부정수급이 주로 정보연계를 통해 적발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관 내, 기관 간 긴밀한 협조망이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중요할 것으로 보임
- 아울러, 일자리 사업의 경우, 최근 그 중요성이 증대하고 수도 늘어나고 있으나 부정수급을 관리할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부정수급 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고용 및 일자리보장 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정보시스템의 개편을 꾀하는 것도 필요해 보임
- 부정수급 확인 및 적발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할 자료와 정보의 부족이 소득보장 영역보다 두드러진 어려움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임
- 고용 및 일자리보장 사업에서도 소득보장 영역과 마찬가지로 상담이나 유선을 통한 확인, 방문확인 등에 소요하는 시간이 많은 것에서도 유추할 수 있는 지점임
- 방문이나 유선을 통한 조사로도 확인하기 어려운 정보들이 많으므로 전산망상 확인 가능한 정보를 확대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정보 연계를 확대하는 것 등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음

## 2. 향후 실태조사 추진방향

### 가. 2020년 실태조사와 향후 실태조사의 기본방향

- 2020년 부정수급 실태조사는 사회보장급여법 제19조의2에 나타난 부정수급 발생 현황, 피해사례 등을 조사하여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방지 및 각 보장기관의 대책을 마련(사회보장급여법 제19조의2)하기 위해 수행되었음
-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방대한 사회보장사업과 이러한 사회보장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원인의 부정수급을 다양한 분류 방법을 통해 유형화 시키고, 이를 통계로 제시하였음
- 본 실태조사 연구는 사회보장사업의 관찰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사실에 대한 공통적 속성 또는 평균적 특성을 통계적 접근방법을 활용하여 밝히는 변수중심방법(Variable-oriented method) 위주로 접근하였음
  - 이를 위해 1차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과 같은 전산시스템에서 추출이 가능한 사회보장사업의 기본적 특성(예산, 부정수급 유형별 규모 등)에 대한 집계자료 추출을 실시하고 이를 분석(본 연구의 기본조사에 해당)
  - 또한 자기기입식 온라인 조사를 통해 기본조사에서 파악하지 못한 사업별 세부적 부정수급 발생 현황 및 유형, 부정수급 사후관리, 부정수급 관리조직 및 운영, 그 밖에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을 파악하였음
- 또한 변수중심적 방법의 한계인 맥락적 특성 파악을 통한 함의 도출을 위해 표적집단면접, 주요국 연구와 같은 사례연구를 실시하였음
- 이러한 정량적 접근과 정성적 접근의 병행은 사업대상의 특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정책함의 도출을 위해 용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의 실태조사 역시 분석대상의 공통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정량적 접근과 함께 개별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정성적 접근의 병행 필요
- 이를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수행된 기본조사, 실태조사, 표적집단면접 등의 접

근 방식을 향후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기본조사의 경우 그 목적이 부정수급의 규모 파악에 있기 때문에, 해당 조사연도의 조사 대상에 따라 조사 범위를 결정
- 실태조사는 기본조사 대상 사업 중에서, 표적집단면접의 경우 실태조사 대상사업을 중심으로 그 대상을 선정하고 수행
- 조사 대상의 범위는 조사 실시 이전 연도에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공신력 있는 협의체 또는 위원회에서 논의 후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1차 조사에서는 기본조사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고, 실태조사는 이들 사업 중 예산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현금급여를 중심으로 조사를 수행하였음
  - 이후의 조사는 1차 조사와의 연속성과 부정수급과 관련 현안을 모두 고려하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공신력 있는 협의체 또는 위원회에서 논의 후 결정
- 하지만, 사회보장사업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재된 약 360개 사업 이외에도 공단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는 사회보험 그리고 지방자치 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광범위한 분야의 사회보장 사업들도 수행되고 있음
  - 이에 대한 효과적 조사를 위해서는 적절한 대상사업 또는 대상 기관의 선택과 이들 사업 또는 기관에 대한 앞서 언급한 조사방법의 적절한 적용이 필요함

## 나. 향후 실태조사의 조사 내용 및 대상사업

### □ 기본 방향

- 본 실태조사에서 적용된 정량적 접근과 정성적 접근의 병행은 사업대상의 특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정책함의 도출을 위해 용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의 실태조사 역시 분석대상의 공통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정량적 접근과 함께 개별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정성적 접근의 병행 필요
- 이를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수행된 기본조사, 실태조사, 표적집단면접 등의 접근 방식을 향후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기본조사의 경우 그 목적이 부정수급의 규모 파악에 있기 때문에, 해당 조사연도의 조사 대상에 따라 조사 범위를 결정
  - 실태조사는 기본조사 대상 사업 중에서, 표적집단면적의 경우 실태조사 대상사업을 중심으로 그 대상을 선정하고 수행
- 조사 대상의 범위는 조사 실시 이전 연도에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공신력 있는 협의체 또는 위원회에서 논의 후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1차 조사에서는 기본조사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고, 실태조사는 이들 사업중 예산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현금급여를 중심으로 조사를 수행하였음
  - 이후의 조사는 1차 조사와의 연속성과 부정수급과 관련 현안을 모두 고려하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공신력 있는 협의체 또는 위원회에서 논의 후 결정
- 하지만, 사회보장사업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재된 약 360개 사업이외에도 공단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는 사회보험 그리고 지방자치 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광범위한 분야의 사회보장 사업들도 수행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효과적 조사를 위해서는 적절한 대상사업 또는 대상 기관의 선택과 이들 사업 또는 기관에 대한 앞서 언급한 조사방법의 적절한 적용이 필요함

#### □ 조사내용

- 향후 실태조사에도 조사의 내용은 크게 ‘부정수급 규모’와 ‘부정수급 관리 실태’로 구분할 수 있음
- ‘부정수급 규모’는 사업별 부정수급의 유형별 현황을 의미하며, ‘부정수급 관리 실태’는 개별사업 또는 유형별 사업군에 대한 부정수급 사후관리와 부정수급 관리조직 및 운영에 대한 실태를 의미함
  - 사업별 ‘부정수급 규모’와 ‘부정수급 관리 실태’는 본 연구에서 적용된 사업별 기본조사와 사업별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이 가능하며, 이러한 정량적 접근방식으로 특성이 파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경우 표적집단면접 등 정성적 접근이 여전이 요구됨

## □ 조사 대상 및 방법

- 향후 실태조사 추진방향에 있어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은 조사대상이 되는 사회보장급여의 범위에 관한 문제임
  - 첫 번째 실태조사(기본조사 포함)에서는 지자체 자체 사업과 사회보험 주요 급여는 제외되었는데, 향후 실시될 실태조사에서 이 사업들을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
-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복지사업의 경우 2019년 수행된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방안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 약 5만 7천개 이상 추정되는(정홍원 외, 2017) 지자체 자체 복지사업을 면접조사 방식으로 조사하는 것은 여전히 시간적, 물리적 제약으로 불가능
  - 이러한 지방자치단체 자체 부정수급 규모는 본 연구에서 수행한 기본조사 방식으로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를 위해서는 전산시스템을 통한 지자체 자체 사업의 부정수급 관리와 이를 통한 데이터 추출을 전제로 함
    - 지자체 각각에 데이터를 요청하여 집계하는 방식은 시간적·물리적으로 실현가능성이 떨어지므로 지자체의 부정수급 관련 데이터가 모두 집계되는 중앙 처리된 정보시스템에서의 데이터 추출이 필요함
    - 또한 지자체의 자체 복지사업의 부정수급 실태 파악을 위해서는 해당 사업들에 대한 유형화 작업이 선제되어야 하는데 이는 실태조사 사업의 범위를 넘는 광범위한 작업이므로, 실태조사에 지자체 자체사업의 부정수급 규모가 포함되는 것은 이러한 유형화 작업이 선행된 후에 가능함
- 주요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급여들의 경우 다른 사회보장급여들에 비해 대체로 부정수급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 전 국민에게 적용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적용범위가 보편적인 사회보험제도의 특성상 정책 체감도가 매우 큰 사업들이기에 해당 급여들을 향후 조사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조사의 방향성과 조사 주제에 따라 사회보험의 주요 사업들을 조사

##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 ○ 조사대상 기관과 조사방법(안)은 아래 표와 같음

〈표 6-22〉 부정수급 조사대상 기관과 조사방법(안)

조사범위		조사대상 기관(작성기관)	조사방법
부정수급 규모 (예산 등 기본정보 포함)	359개 사회보장사업	21개 중앙부처	기본(집계)조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주요 사회보험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고용정보원 등	기본(집계)조사 (자체 시스템 활용)
부정수급 관리실태	보장기관이 지자체(시군구)인 경우	250개(17개 광역시도, 233개 시군구) 지자체	실태조사표 조사 (조사원 면접 조사, 사례연구)
	지자체가 아닌 보장기관	보훈(지)방청 27개소, 보건소(전국 254개소), 17개 교육청 등	실태조사표 조사 (조사원 면접 조사, 사례연구)
	주요 사회보험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고용정보원 등	기본(집계)조사 (사례연구)

주: 조사대상 기관 현황은 2019년 12월 기준.

- 또한 2차 실태조사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점은 해당 실태조사는 광범위한 사회보장사업을 여러 부처(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므로 소관 부처의 적극적인 조사 협조가 중요함

- 기본조사 분석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사기간이 예상보다 3배 이상 순연되었는데, 이는 첫 번째 조사라는 특성과 함께 각 소관부처 또는 소관과의 소극적인 태도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 부정수급 실태조사는 개별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소관 부처 또는 부서의 부정수급 관리를 평가하는 조사가 아닌 부정수급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책 자료 및 함의를 제시하는 조사이기 때문에 해당 조사의 성격을 조사 실시 이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공유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실태조사에 대한 정보 공유와 함께 조사 실시 이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조사협조 요청을 병행하여 실태조사 수행의 효율성과 조사결과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강수련, 이상학. (2020. 12. 17.). '방배동 모자' 발견 복지사 "도움 거절하던 최씨 '엄마' 꺼내  
자 말문.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152726>에서 인출.
- 경찰청. (2018). **2018년 아동안전지킴이 사업 안내**.
- 고용노동부. (2019a). **2019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 고용노동부. (2019b).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
- 고용노동부. (2019c). **2019년 재정(예산)사업 고용영향평가 가이드라인**.
- 고용정책기본법. 법률 제16412호 (2019)
- 관계부처합동. (2018.2). **범부처 사회서비스 발전 방향. 사회보장위원회 보고안건**.
- 관계부처합동. (2019.10).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방안**.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7.12). **요양급여 청구 부당사례 모음집**.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153호 (2020).
-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17196호 (202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제16734호 (2019).
- 국회예산정책처. (2019). **2019 대한민국 공공기관**.
- 권오성, 강정석, 김성근, 박상철, 민지혜, 김미곤 ... 신우경. (2013). **복지사업 부정수급 근절방  
안 수립**.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 (2020).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시행 2019. 5. 1.).  
<http://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177912>에서  
2020. 3. 11. 인출.
- 기획재정부 재정성과평가과. (2020).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시행 2020. 1. 2.).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185006>  
에서 2020. 3. 11. 인출.
- 기획재정부. (2018). **2018 나라살림 예산개요**.
- 기획재정부. (2019a). **2019 나라살림 예산개요**.
- 기획재정부. (2019b). **e나라도움 부정수급 「유형별 표준 DB」 부처 지자체 설명회 자료**.
- 기획재정부. (2020a). **2020 나라살림 예산개요**.
- 기획재정부. (2020b). **2021년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기준**
- 김문길, 김미곤, 윤상용, 유진영, 오혜인. (2015). **재정효율화를 위한 보건복지 부정수급 근절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상호. (2017). **사회보장급여 부정 수급 현황 및 관리 방안: 호주 사례를 중심으로**. Global Social Policy Brief, 54, 1-4.
- 김태완, 김문길, 윤상용, 송치호, 김성아, 이주미. (2013). **저소득층 현금 및 현물서비스 복지지출의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제17173호 (2020).
-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2018. 12. 27.). 전국 모든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빠짐없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47126&SEARCHKEY=TITLE&SEARCHVALUE=%EC%B0%BE%EC%95%84%EA%B0%80%EB%8A%94](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47126&SEARCHKEY=TITLE&SEARCHVALUE=%EC%B0%BE%EC%95%84%EA%B0%80%EB%8A%94)에서 인출.
- 보건복지부. (2019). **2019년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a).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위한 기본현황 조사(원자료)**.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b).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c).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FGI**.
- 보건복지부. (2020a).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보건복지부. (2020b).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2020c). **2019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39호 (2020).
- 복지로.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https://www.bokjiro.go.kr>
- 사회보장기본법. 법률 제17202호 (2020).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884호 (2018).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730호 (2020).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091호 (2020).
- 오윤섭, 안창보, 이 오, 김건수, 김찬수, 원성연, 이혜승. (2009). **사회복지관련 비리에 대한 주요 선진국의 접근방법 비교**. 서울: 감사연구원 연구부.
- 오윤섭, 함영진, 강지원, 이세미, 이규환, 하현상 ... 박상철. (2016). **부정수급 및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사각지대 모니터링 - 사회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원종학, 허경선, 강동익. (2019). **보조금(정부지출사업) 부정수급 관리방식의 국제비교**. 세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의료급여법. 제16374호 (2019).

- 이오. (2011). **미국·영국의 부정적 지출 관리체계 비교**. 감사연구원.
- 임동현. (2019.9.5.). 고독사, 살인... 없어지지 않은 '장애인 사각지대'. 시사주간.  
<http://www.sisaweekly.com/news/articleView.html?idxno=21681>에서 인출.
- 임완섭, 김현경, 김인춘, Theo Papadopoulos, Antonios Roumpakis, 박형준. (2016). **경제 위기 극복 과정에서 복지제도의 역할에 대한 사례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임완섭, 오윤섭, 김문길, 황주희, 윤여선, 김명중 ... 이규환. (2017). **사회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적격성 제고 및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모니터링 - 공공부조 제도(소득보장)를 중심으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임완섭, 김태완, 강지원, 이아영, 김혜승, 고경표, 최요한, 이규환. (2018). **사회보장제도 수급 적격성 제고 및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모니터링 - 주거복지(주거급여 중심) 분야를 중심으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임완섭, 김태완, 김문길, 최현수, 함영진, 황도경 ... 안영. (2019a).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방안 연구**.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임완섭, 황남희, 정은희, 이아영, 안영, 최은혜 ... 신봉하. (2019b). **사회보장분야 사각지대 축소와 부정적 지출 관리 방안 연구 - 노인에 대한 공공부조제도를 중심으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091호 (2020).
- 정부조직법. 제17472호 (2020).
- 정책위키. (2020). 예비타당성조사.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5960>에서 2020.3.10.인출.
- 정홍원, 박중서, 김동진, 강지원, 김진희, 윤자은. (2017). **2017년 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조사 및 사회보장예산 실태분석**.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지방자치법. 제16057호 (2018).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6682호 (2019).
- 최현수, 임완섭, 이서현. (2011). **복지급여 사후관리 체계 구축 및 통합 운영방안 연구**. 서울: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표준국어대사전. (2019). **부정(不正)**. 2019.11. 04. 인출.
-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 (2020). **고용영향평가 소개**.  
<https://www.kli.re.kr/eia/contents.do?key=303>에서 2020. 3. 13.인출.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2019. 7).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2020. 9).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전국 2,216만 가구에 14조 2,357

역원 지급완료.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2020).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 <https://www.org.go.kr/>에서 2020. 11. 인출.  
DHS 홈페이지 2019. 8. 인출.

Arthur, D. (2015). Changes to welfare system compliance and ICT systems. *Budget Review 2015-16 Index*, 138-139. Parliament of Australia.

Attorney-General's Department. (2017). *Commonwealth Fraud Control Framework*. Attorney-General's Department.

Australian National Audit Office. (2010). *Centrelink Fraud Investigations*. Attorney-General's Department.

Australian National Audit Office. (2018). *Human Services' Compliance Strategies*. Australian National Audit Office.

Bourn, J. (2008). *Progress in tackling benefit fraud*. National Audit Office, Great Britain.

Cetnrelink. (2008). *Centrelink Fraud Control Plan 2008-10*. Centrelink.

Commonwealth Director of Public Prosecutions. (2020). *2019-2020 Annual Report*. Commonwealth Director of Public Prosecutions.

Commonwealth Ombudsman. (2019). *Centrelink's Automated Debt Raising and Recovery System*. Commonwealth Ombudsman.

Data.gov.au. (2020). *DSS Payment Demographic Data*. Retrieved from <https://data.gov.au/dataset/ds-dga-cff2ae8a-55e4-47db-a66d-e177fe0ac6a0/details> 2020. 11. 28.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2016). *2015-16 Annual Report*.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2017). *2016-17 Annual Report*.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2019). Centrelink data matching activities: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Dingwall, D. (2017). *Centrelink sending 'intimidating' texts to clients in fraud crackdown*. Sydney Morning Herald. Retrieved from <https://www.smh.com.au/public-service/centrelink-sending-intimidating-texts-to-clients-in-fraud-crackdown-20170809-gxsfc.html> 2020. 11. 28.



- Farrell, P., & McDonald, A. (2019). Centrelink robo-debt system is 'extortion', says former tribunal member. *Sydney Morning Herald*. Retrieved from <https://www.abc.net.au/news/2019-06-27/centrelink-robo-debt-system-extortion-former-tribunal-member/11252306> 2020. 11. 28.
- Federal Register of Legislation. (2013).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Act 1999*. Federal Register of Legislation.
- Federal Register of Legislation. (2019). *Criminal Code Act 1995*. Federal Register of Legislation.
- Goldie, C. (2019). *Robodebt is an abuse of power. It should never have seen the light of day*. The Guardian. Retrieved from <https://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19/aug/28/robodebt-is-an-abuse-of-power-it-should-never-have-seen-the-light-of-day> 2020. 11. 28.
- Henriques-Gomes, L. (2019). *Homeless Australians given financial penalties under Coalition's welfare regime*. Retrieved from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19/jan/31/homeless-australians-given-financial-penalties-under-coalitions-welfare-regime> 2020. 11. 28.
- Hickey, S. (2019). *Centrelink's Flawed Robo-Debt System is Killing Our Most Vulnerable*. Retrieved from <https://www.sydneycriminallawyers.com.au/blog/centrelinks-flawed-robo-debt-system-is-killing-our-most-vulnerable/> 2020. 11. 28.
- Kleven, H. J., & Kopczuk, W. (2008). Transfer Program Complexity and the Take Up of Social Benefits. *NBER Working Paper*. Massachusett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Kleven, H. J., & Kopczuk, W. (2011). Transfer Program Complexity and the Take Up of Social Benefits. *American Economic Journal*, 3(1), 54-90.
- Legal Aid NSW. (2010). *Early intervention and diversion as an alternative to social security prosecution*. Legal Aid NSW.
- Lindley, J., Jorna, P., & Smith, R. G. (2012). *Fraud against the Commonwealth 2009-10 annual report to government*. 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
- National Audit Office. (2015).
- Parliament of Australia. (2020). *Centrelink's compliance program*. Retrieved from [https://www.aph.gov.au/Parliamentary\\_Business/Committees/Senate/Comm](https://www.aph.gov.au/Parliamentary_Business/Committees/Senate/Comm)

- unity\_Affairs/Centrelinkcompliance/Second\_Interim\_Report 2020. 11. 28.
- PaymentAccuracy. (2020). *Annual Improper Payments Datasets*. Retrieved from paymentaccuracy.gov 2020. 12. 05.
- Prenzler, T. (2011). *Detecting and Preventing Welfare Fraud*. 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
- Prenzler, T. (2016a). Reducing welfare fraud. An Australian case study. *Security Journal*, 30(2), 569-584.
- Prenzler, T. (2016b). Welfare fraud prevention in Australia. A follow-up study. *Crime Prevention and Community Safety*, 18(3), 187-203.
- Reynolds, E. (2017). Nation of dobbers: What's wrong with Aussies spying on their neighbours. *News.com.au*. Retrieved from <https://www.news.com.au/finance/money/tax/nation-of-dobbers-whats-wrong-with-aussies-spying-on-their-neighbours/news-story/d0b032c3ca70887bc2a244c6c69f8b4a> 2020. 11. 28.
- Robert, S. (2019). *Media release: New Digital Forensics Lab launched in Brisbane to tackle organised crime and serious fraud in welfare*. Services Australia.
- Senate Standing Committees on Community Affairs. (2017). *Design, scope, cost-benefit analysis, contracts awarded and implementation associated with the Better Management of the Social Welfare System initiative*. Parliamentary of Australia.
- Services Australia. (2018). *2017-18 Annual Report*. Services Australia.
- Services Australia. (2019). *2018-19 Annual Report*. Services Australia.
- Services Australia. (2020a). *Compliance program*. Retrieved from <https://www.servicesaustralia.gov.au/individuals/subjects/compliance-program> 2020. 11. 28.
- Services Australia. (2020b). Express Plus Centrelink mobile app help - Upload documents. Retrieved from <https://www.servicesaustralia.gov.au/individuals/online-help/centrelink/upload-documents> 2020. 11. 28.
- Services Australia. (2020c). *Income Compliance Program*. Submission to the Senate Community Affairs References Committee, Services Australia.
- Services Australia. (2020d). *Reporting fraud*. Retrieved from

- <https://www.servicesaustralia.gov.au/individuals/contact-us/reporting-fraud#welfarefraud> 2020. 11. 28.
- Services Australia. (2020e). *2019-20 Annual Report*. Services Australia.
- Services Australia. (2020f). *Taskforce Integrity*. Retrieved from <https://www.servicesaustralia.gov.au/organisations/about-us/taskforce-integrity> 2020. 11. 28.
- Services Australia. (2020g). *When to report your income to Centrelink*. Retrieved from <https://www.servicesaustralia.gov.au/individuals/topics/when-report-your-income-centrelink/53206> 2020. 11. 28.
- Social Security Rights Network. (2017). *Social Security Appeals Tribunal merges with the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Retrieved from <http://www.nssrn.org.au/social-security-rights-review/social-security-appeals-tribunal-merges-with-the-administrative-appeals-tribunal/> 2020. 11. 28.
- Tunley, M. (2011). Need, greed or opportunity? An examination of who commits benefit fraud and why they do it. *Security Journal*, 24(4), 302-319.
- U.S. CFOC. (2016). *Playbook: Enterprise Risk Management for the Federal Government*. Retrieved from <https://cfo.gov/wp-content/uploads/2016/07/FINAL-ERM-Playbook.pdf> 2020. 12. 05.
- U.S. CFOC. (2019). Cash Loss to the Government. Retrieved from [www.cfo.gov/payment-integrity](http://www.cfo.gov/payment-integrity) accessed 2020. 12. 05.
- U.S. CFOC. (2020a). *About CFO.gov*. Retrieved from <https://www.cfo.gov/about-the-council/> 2020. 12. 05.
- U.S. CFOC. (2020b). Earned Income Tax Credit Getting Payment Right Scorecard. Retrieved from <https://www.cfo.gov/wp-content-2/uploads/2020/06/Earned-Income-Tax-Credit-Getting-Payments-Right-Scorecard-FY-2020-Q1> 2020. 12. 05.
- U.S. CFOC. (2020c). Executive Steering Committee. Retrieved from <https://www.cfo.gov/payment-integrity> 2020. 12. 05.
- U.S. CFOC. (2020d). Getting Payments Right. Retrieved from [https://www.performance.gov/CAP/action\\_plans/september\\_2020\\_Getting\\_P](https://www.performance.gov/CAP/action_plans/september_2020_Getting_P)

- ayments\_Right.pdf. 2020. 12. 05.
- U.S. CFOC. (2020e). Org. Structure. Retrieved from  
<https://www.cfo.gov/about-the-council/#orgstructure> 2020. 12. 05.
- U.S. GAO. (2018a). *Analysis of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Circular No. A-123*. Appendix C, Requirements for Payment Integrity Improvement. | GAO-20-33.
- U.S. GAO. (2020a). *PAYMENT INTEGRITY: Federal Agencies' Estimates of FY 2019 Improper Payments Report to Congressional Committees*.
- U.S. GAO. (2020b). *PAYMENT INTEGRITY: Selected Agencies Should Improve Efforts to Evaluate Effectiveness of Corrective Actions to Reduce Improper Payments Report to Congressional Addressees*.
- U.S. OMB. (2018). *OMB Circular A-123*. APPENDIX C. Requirements for Payment Integrity Improvement.
- U.S. White House. (2009). *Executive Order 13520—Reducing Improper Payments November 20, 2009*.  
<https://www.govinfo.gov/content/pkg/DCPD-200900942/pdf/DCPD-200900942.pdf>.
- Whiteford, P. (2017). *Social security and welfare spending in Australia: Assessing long-term trends*.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 Wilcock, S. (2018). *Why prosecutions for welfare fraud have declined in Australia*. The Conversation.
- World Bank. (2010). Toolkit on Tackling Error, Fraud and Corruption in Social Protection Programs. Christian van Stolk, Emil D. Tesliuc.
- Yamakawa, N. (2018). *Comparative Study on Approaches to Counter Fraud and Corruption*. John. F Kennedy School of Government. Harvard University.



## [부록 1] 정부 주요 심사의 예산 규모 기준

### 1. 신규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 기획재정부<sup>41)</sup>

□ 신규보조사업에 대한 적격성 심사 대상

- 아래 제시된 사업들을 원칙으로 심사하되, 필요 시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심사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음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2020.1.2. 시행, 기획재정부 재정성과평가과)**

#### **제10조(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 ① 중앙관서의 장은 총사업비 또는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금액 중 국고보조금 규모가 **100억 이상인 신규 보조사업**을 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적격심사를 거쳐야 한다.
- ② 적격성 심사의 심사대상, 심사절차, 심사방법, 등 심사기준은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③ 기획재정부 장관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심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수행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거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최종결과는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 한다.
- ⑤ 각 부처는 적격성이 인정된 사업에 한하여 예산을 요구 할 수 있다.

- (신규보조사업) 보조사업 적격성심사는 총사업비 또는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금액 중 국고보조금\* 규모가 100억 이상인 신규 보조사업

- 국고보조금 : 민간경상보조(320-01목), 민간자본보조(320-07목),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목), 자치단체 자본보조(330-03목), 해외경상이전(340-01목), 해외자본이전(340-03목)

41) 기획재정부(2020b) '2021년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기준'을 발췌

- 사업기간의 정합이 없이 계속 추진되는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국가재정운용 계획 기간('19~'23년) 중 국고보조금 합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
- (적격심사를 거치지 않고 반영된 사업) 적격성 심사를 받지 않고 '19년 예산에 반영된 국고 100억 이상(중기계획상 5년간 100억원 이상사업 포함) 신규보조사업
  - 예산집행지침 : 적격성심사를 받지 않고 '19년 예산에 반영된 국고지원 100억원이상(중기계획상 5년간 100억원 이상사업 포함)인 신규보조사업에 적격성심사를 거쳐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 (시범사업 후 본사업) 심사 대상규모에 미달하여 심사 없이 추진 중인 시범 사업이 총사업비 또는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금액 중 국고보조금 규모가 100억 이상인 신규 보조사업 추진하는 경우

#### □ 심사대상 사업단위

- 국고보조금이 포함된 예산 및 기금의 과목구조상의 '세부사업'이 원칙이며, 신규 내역사업의 경우 세부사업 내의 타 내역사업과 사업목적, 지원내용 등이 상이하 여 중앙관서의 장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심사대상으로 할 수 있다

#### □ 심사제외 대상

- 국가재정법 제7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의무지출사업
- 국가재정법 제22조에2항제4호의2에 따른 예비비 사용
-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및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대상사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 균형발전특별회계(생활기반, 경제발전, 세종시, 제주도 계정) 사업 중 지자체 자율편성 사업
- 개별 법률에 따라 중앙관서 주관으로 사전 타당성 평가를 수행한 사업
- 기타 기존 사업의 회계·기금변경, 기존 사업의 분리 및 통합, 격년제 사업, 심사 중 보조금外 비목으로 변경되거나 또는 국고 100억미만의 사업으로 축소

되는 등 심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는 심사에서 제외

## 2. 예비타당성 조사 : 기획재정부<sup>42)</sup>

### □ 대상사업

- 총사업비 규모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이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이 대상이다.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정보화 사업(「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5조제1항)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등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실시한다.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고 300억 원 이상 신규사업
  - ① 토목, 건축 등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예: 철도, 도로, 공항, 항만 건설공사 등)
  - ② 정보화 사업(「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5조제1항) (예: 정보망구축사업, 통신망 구축사업)
  - ③ 국가연구개발사업(「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예: 순수·기반구축(연구시설·장비)·R&D)
- 신규사업 중 중기사업계획 500억 원 이상 기타 재정사업
 

프로그램 예산체계 분류 상, ① 사회복지 ② 보건 ③ 교육 ④ 노동 ⑤ 문화 및 관광 ⑥ 환경 보호 ⑦ 농림해양수산 ⑧ 산업·중소기업 분야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4조(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① 예비타당성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규 사업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 정보화 사업
2. 국가재정법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재정지출(이하 '중기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이하 '기타 재정사업'이라 한다.)

42) 정책위키. (2020). 예비타당성조사.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5960>에서 2020.3.10. 인출.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 (2020).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시행 2019. 5. 1.).

<http://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177912>에서 2020. 3. 11. 인출.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은 토목, 건축 등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을 말하며, 정보화사업은 '예산안편성 세부지침'의 '세부사업유형별 지침'에 따라 정보화 예산으로 편성되는 사업을 말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재정사업은 프로그램 예산체계의 분야·부문 분류에 따라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해당되는 사업 중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 정보화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말한다.

### 3.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 행정안전부<sup>43)</sup>

####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 지방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과 각종 투자 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92년 도입된 제도로써
- 주요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은 예산편성 전에, 현물만 출자(투자) 되는 사업은 사업시행 전에 그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

#### □ 타당성 조사(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은 투자심사의뢰 전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 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는 것이 의무화됨(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
- (대상)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
  - 총사업비에는 공사비(낙찰차액미적용), 보상비, 설비비(시설부대경비, 장비구축·구입비 등), 용역비(설계비, 감리비, 입찰공고비 등), 제세공과금, 예비비(공사비+보상비+설비비+용역비+제세공과금의 10%) 등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과 관련된 모든 경비를 포함
- ※ 국가재정법 제38조의 예비타당성조사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 관리센

4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2019. 7).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



터의 적격성 조사 또는 제안서 검토를 거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적격성 조사 또는 제안서 검토 결과로 대체

- ※ 다만, 자치단체 실무계획상 500억원 미만의 사업이라도 유사사업의 단가, 물량규모 등 감안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으로 증가될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타당성 조사 이행(예비비10%를 포함)

#### 4. 고용영향평가 : 고용노동부<sup>44)</sup>

##### □ 개요

-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정책·사업이나 법·제도 등의 수립·추진으로 인해 예상되는 고용효과를 분석하여, 해당 정책 조치들이 본래 의도한 고유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일자리의 양과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 개선 권고를 제시함

##### □ 법적 근거

- 2009년 「고용정책기본법 제 13조」 및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2조~23조」를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2010년 각 부처 주요사업에 대한 시범평가를 거쳐 2011년 이후 본격적인 평가 시행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고용영향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정책이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이하 “고용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1.〉

44)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 (2020). 고용영향평가 소개.  
<https://www.kli.re.kr/eia/contents.do?key=303>에서 2020. 3. 13.인출.  
 고용노동부. (2019c). 2019년 재정(예산)사업 고용영향평가 가이드라인.

□ 평가 대상 사업

- ① 2019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전체
- ② 2020년 부처요구액 기준 연간 100억 이상 SOC 사업
- ③ 2019년 인력양성, 창업기업지원, 사업화지원, 기업 50% 이상 참여사업 유형으로 구분한 R&D사업 전체
- ④ 2020년 부처요구액 기준 연간 100억원 이상 문화·예술 및 보건·복지분야 일자리 창출 사업
- ⑤ 2019년 기재부·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결정한 재정사업

□ 평가 실익이 적은 다음 사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① 기관 인건비 및 기본경비
- ② 국가안보 및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업
- ③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른 사업
- ④ 재난예방·복구 사업
- ⑤ 법정 의무지출 사업
- ⑥ 2019년 신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 ⑦ 기타 평가 실익 등을 감안 일자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업

## [부록 2] 다사업 등 처리 현황

〈부표 1〉 여러 개 사업을 1개의 조사표로 보내준 경우(다사업)의 처리 결과

순번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법정부)			처리 결과
	번호	소관부처	사업명*	
1	100	여성가족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b>통합</b> (여러 개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처리)
	147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148	여성가족부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149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서비스	
	150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158	여성가족부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2	104	보건복지부	기타재가급여(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b>통합</b>
	259	보건복지부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260	보건복지부	시설급여	
	261	보건복지부	재가급여	
3	110	보건복지부	장애인 특화형 일자리 제공	<b>통합</b>
	142	보건복지부	일반형 일자리 지원	
	143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	
4	116	보건복지부	시간연장형보육료지원	<b>통합</b>
	126	보건복지부	방과후보육료지원	
	235	보건복지부	만0-5세 보육료지원사업	
	298	보건복지부	다문화보육료지원	
	300	보건복지부	장애아보육료지원	
5	144	여성가족부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b>분리</b> (사업별로 다시 분리 처리) (단, '청소년한부모고교생 교육비지원' 사업은 집행된 바 없어 조사에서 제외)
	146	여성가족부	청소년한부모고교생교육비지원	
	153	여성가족부	미혼모·부 초기지원(권역별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운영)	
6	168	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복지지원(장학금)	<b>분리</b>
	169	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직장복귀지원	
	170	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합병증등예방관리	
	172	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직업훈련	
	174	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7	251	보건복지부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b>분리</b>
	359	보건복지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8	255	보건복지부	장애인보조견전문훈련기관지원	<b>분리</b>
	257	보건복지부	중도시각장애인재활훈련지원	
	258	보건복지부	시각장애인음악재활센터지원	
	268	보건복지부	척수장애인재활훈련지원	
9	278	보건복지부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b>분리</b>
	279	보건복지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280	보건복지부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372 2020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순번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법정부)			처리 결과
	번호	소관부처	사업명*	
10	266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및 내일키움통장)	통합
	267	보건복지부	청년희망키움통장	
11	28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장애비지원	통합
	29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주거지원	
	30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해산비지원	
	31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의료지원	
	32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생계지원	
	33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34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35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교육지원	
12	299	보건복지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통합
	301	보건복지부	어린이집지원(교사근무환경개선비, 교사겸직원장지원비)	
13	346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업인건강보험료지원	분리
	348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업인연금보험료지원	
14	62	보건복지부	의료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	통합
	63	보건복지부	의료급여장애훈련보장구 지원	
	127	보건복지부	의료급여(본인부담 상한금)	
	128	보건복지부	의료급여틀니·치과임플란트	
	129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중증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지원	
	130	보건복지부	의료급여(본인부담 보상금)	
	131	보건복지부	의료급여(의료급여건강생활유지비)	
	132	보건복지부	의료급여(의료급여대지급금지원)	
	133	보건복지부	의료급여(의료급여)	
	134	보건복지부	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	
	135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15	250	보건복지부	의료급여(요양비)	분리
	78	여성가족부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	
	79	여성가족부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81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운영	
16	82	여성가족부	청소년전화1388 및 모바일문자상담 운영	분리
	97	보건복지부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 배부	
17	354	보건복지부	난임부부시술비지원	분리
	303	보건복지부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305	보건복지부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지원	
18	306	보건복지부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분리
	225	교육부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240	교육부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서비스	

순번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법정부)			처리 결과
	번호	소관부처	사업명*	
19	24	중소벤처기업부	여성창업지원	분리
	25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운영	
20	283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교육지원	분리
	284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21	50	보건복지부	장제급여	통합
	52	보건복지부	해산급여	

\* 사업명의 경우 '통합'된 사업명은 데이터 입력 시 원래 사업명 모두를 기입함 (예를 들어 '장제급여'와 '해산급여'는 데이터 입력 시 '장제급여 해산급여'로 입력됨). '분리' 처리된 사업은 원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의 사업명을 기입.

〈부표 2〉 조사표를 각각 보내주었으나 통합이 필요한 사업 처리 결과

순번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법정부)			처리 결과
	번호	소관부처	사업명	
1	213	국토교통부	버팀목전세자금대출	통합* (하나의 사업으로 처리)
	214	국토교통부	내집마련디딤돌대출	
	215	국토교통부	주거안정월세대출	

\* 해당 사업들이 통합된 이유는 위 3개의 사업은 소관 부서로부터 예산 분리가 불가능하다는 응답을 받았으며, 사업지원형태, 보장기관, 부정수급관리시스템 등이 동일하여(3개의 기본 조사표 내용이 동일)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하여 분석 실시.

### [부록 3] 기본조사표

사회보장사업명
세부사업명(0000-000)

#### ① 사업 담당자

소관부처	실·국	과(팀)	과장	사무관	주무관
			이름	이름	이름
			연락처 000-000-0000	000-000-0000	000-000-0000

#### ② 사업 및 예산 정보

※ 2019년 결산 공통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 사회보장사업의 직접 수행에 해당하는 예산 모두 기입(여비, 운영비, 연구용역비 등 해당없는 항목 제외. 필요시 줄 추가)

구분	회계	세부 사업	내역 사업 <sup>1)</sup>	목	세목	2019년 집행액(단위: 백만원)		
						계	국비 <sup>2)</sup>	지방비
명칭	일반 회계	00사업	▲▲사업	330	01			
			계					

1) 내역사업의 경우 해당되는 경우만 기입하고 없을 경우 공란으로 처리

2) 국비에는 일반회계, 기금, 특별회계 포함

#### ③ 사업 지원 형태 (기입란에 '1'로 표기, 지원형태에 대한 설명은 '참고자료' 참조)

※ 지원형태가 복수일 경우 표기란에 예산규모가 가장 큰 지원형태는 '1', 그다음은 '2'로 기입 (2순위까지만 기입)

	현금	현물	바우처	프로그램	자원봉사	시설입소	대여/감면
기입란							

#### ④ 부정수급\* 관리 근거

\* 부정수급은 수급자와 행정담당자가 의도적으로 부정을 저지른 경우와 비의도적으로 급여를 수령하거나 지급한 경우 모두를 포함

근거법령 <sup>1)</sup>		근거법령에 수록된 대응 조치 (해당 모든 조치 '√'로 기입)	주요 대응 조치 (2순위까지 기입)				관련 지침 등 <sup>2)</sup> (부정수급 관리 지침이 있는 사업안내 및 매뉴얼)	
			1순위		2순위			
유무 (○, ×)	법령명	(     ) 지원중단 (     ) 금전적 제재(환수, 징수,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등)	① 지원중단 ② 금전적 제재(환수, 징수,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등)				유무 (○, ×)	지침명

근거법령 <sup>1)</sup>	근거법령에 수록된 대응 조치 (해당 모든 조치 '√'로 기입)	주요 대응 조치 (2순위까지 기입)				관련 지침 등 <sup>2)</sup> (부정수급 관리 지침이 있는 사업안내 및 매뉴얼)
		1순위		2순위		
〇〇법 제〇〇조 〇〇법 시행령 제〇〇조	( ) 행정처분(경고, 영업정지, 자격정지, 시설의 등록·인가·자격취소 등) ( ) 벌금, 징역 등 형벌 ( ) 명단공표 ( ) 기타 : 기입 ( ) 없음(근거법령 없음)	③ 행정처분(경고, 영업정지, 자격정지, 시설의 등록·인가·자격취소 등) ④ 벌금, 징역 등 형벌 ⑤ 명단공표 ⑥ 기타 : 기입 ⑦ 없음(근거법령 없음)				

1) 「사회보장급여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이 사회보장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령은 제외

2)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보조금 통합 관리지침 등은 제외

#### ⑤ 부정수급 관리 주체(보장기관)

지자체	소속·산하기관	그 외
(예시) 시군구, 보건소	00지청, 00공단	부처 직접 관리 등

※ 지자체와 소속·산하기관, 그 외 중 해당 난에 기재

#### ⑥ 부정수급 관리 전산시스템 및 신고체계 운영

전산시스템		신고체계	
운영여부 (○, ×)	시스템명 (복수일 경우 모두 기입)	운영여부 (○, ×)	신고체계 명칭 (복수일 경우 모두 기입)
(예시) ○	00시스템	○	00시스템

※ 신고체계 : 해당 사업의 부정수급을 신고할 수 있는 신고체계(부정수급 신고센터, 신고 홈페이지, 신고담당부서 등)

#### ⑦ 부정수급 규모 : '붙임' 작성 (자체 조사양식이 있는 경우 함께 제출('19년 실적))

파악여부 (○, ×)	파악방법 <sup>1)</sup> (파악시)	미파악시 사유 (번호기입)
	( ) e나라도움 ( ) e나라도움 외 전산시스템 ( ) 수기 취합	① 사업성격상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음 ② 부정수급 규모가 작음 ③ 그 동안 계속 관리해오지 않아서 ④ 집행기관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⑤ 업무 과중으로 부정수급 현황 파악 노력 없음 ⑥ 환수에 대한 규정 또는 지침이 없음 ⑦ 기타 (기입: )

1) 해당하는 파악방법에 '√'로 표기, 중복 표기 가능

## 붙임

## 2019년 부정수급 적발 상세현황

## □ 사회보장급여명 :

단위: 건, 백만원(국비+지방비)

유형 구분				부정수급액 (환수결정액 <sup>1)</sup> )		환수실적 <sup>2)</sup>	
고의성 여부	행위 주체	대분류	중분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고의성	수급자	기망	소계				
			허위				
			공모				
			임의처리				
			가족간 거래				
	행정 담당자	부패	소계				
			허위				
			공모				
			임의처리				
			가족간 거래				
비고의성	수급자	수급자 오류	소계				
			관리미비				
			업무미숙				
			증빙미비				
			착오				
			중복처리				
	행정 담당자	행정 오류	소계				
			관리미비				
			업무미숙				
			증빙미비				
			착오				
			중복처리				
합계							

1) 환수결정 기준 : '19년도에 발생한 환수결정액

2) 환수실적 기준 : '19년도 내 환수한 금액(납부액 + 결손처분액)

※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정수급 현황을 위 분류에 따라 재구분하여 작성

※ 중분류에 따른 부정수급 규모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분류에 따른 '소계'는 반드시 기재



※ 참고 : 보조금 부정수급 유형 분류 (기획재정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망, 부패 (고의성, 협의의 부정수급)	허위	허위 등록, 허위 신청, 허위 선정, 허위 계약, 허위 청구, 허위 집행, 허위 작성, 가격 부풀리기, 자부담금 대납, 위·변조, 카드강 등
	공모	편중거래, 부정당업체 계약, 특혜 선정, 내부자 공모, 거래처 공모 등
	임의처리	무단 담보, 무단 양도, 무단 임대, 무단 인출, 임의처분, 임의사용 등
	가족간 거래	가족 등록, 가족 선정, 가족 지급, 가족 채용 등
수급자 오류, 행정오류 (비고의성, 광의의 부정수급)	관리미비	자격관리 미흡, 평가관리 미흡, 선정관리 미흡, 타당성 미검토, 규정 미비, 집행 오류, 정산 오류, 과다 집행, 분리 계약 등
	업무미숙	업무처리 미숙, 절차 미숙, 사용 미숙, 규정 미숙지 등
	증빙미비	전자세금계산서, 영수증 미비, 기타 증빙 등
	착오	행정 착오, 판단 착오, 거래처 착오, 인식 착오 등
	중복처리	중복 등록, 중복 신청, 중복 선정, 중복 청구, 중복 증빙, 중복 결제 등

참고

지원형태 설명자료

□ 지원형태 설명

○ 현금급여

- 본인에게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시장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자에게 화폐 형태(현금)로 급여를 지급하는 급여형태로, 급여의 목적과 상관없는 용도로의 사용이 가능
- 급여의 대상이 해당 급여(서비스)의 수요자인 개인 또는 가구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현금형태(현금, 계좌이체 등)로 급여를 받은 경우를 의미

(예시)

- 생계급여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금전으로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
- 주거급여 중 임차료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실제 임차료를 현금을 직접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

□ 현물급여

○ 지원 대상자에게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직접 제공

- 예를 들어 교과서 지원사업에서 교육청이 학생에게 교과서대를 직접 이전하고 학생이 그 돈을 학교에 교과서대로 지불하게 되면 현금급여 사업이 되지만, 교육청이 학교에 교과서대를 지불하고 학교가 학생에게 교과서를 지급하게 되면 이는 현물급여가 됨

(예시)

- 학교우유급식 : 200ml 우유(현물)를 학교급식으로 연간 250일 내외 무상지원
- 주거급여 중 수선유지급여 : 대상이 되는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LH에서 공사를 시행)

□ 바우처

- 바우처는 이용 가능한 서비스의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표로, 급여지원형태로서 바우처는 정해진 용도 내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정부가 비용을 대신 지급하거나 보조하기 위해 제공한 증표(이용권)를 의미함

\* 선택의 폭이 현물급여에 비해 넓고, 현금급여에 비해 제한적

**(예시)**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기저귀(월 6만4천원)·조제분유(월 8만6천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

**□ 대여/감면**

- (대여) 일정한 조건을 갖춘 지원 대상 집단에 대해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통상적인 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대여해 주는 것

**(예시)**

- 장애인자립자금대여 : 일정 요건의 장애인에게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 등을 무보증 또는 보증으로 대출해주는 제도(소득요건에 비해 낮은 이자로 대출 가능)

- (감면) 일정한 조건을 갖춘 급여 수혜자 집단에 대해 어떤 재화나 서비스의 구입비용을 줄여주는 것(면제 포함)(수급자 지원)

**(예시)**

- 이동통신요금감면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의 이동통신요금을 일정 비율 감면
- 국가유공자 교통시설 이용지원 : 민영버스, 내항여객선, 고속철도를 무임 또는 감면 이용 지원

**□ 시설입소**

- 지원 대상자가 입소(거주) 형태로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을 공급자가 운영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운영비(인건비, 부식비, 관리비 등) 등에 대한 관련 지원을 의미
  - 관련 지원에 서비스 제공 비용도 포함되므로 아래 제시된 ‘프로그램’과 구분하기 모호한 측면이 발생. 따라서 급여 내용이 입소시설 운영과 해당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관련된 경우 ‘시설입소’로 선택

**(예시) 노숙인 등 복지지원 :**

- 노숙인 재활/요양시설 운영을 위해 필요한 종사자 인건비, 공공요금, 자활프로그램비 지원
- 노숙인 재활/요양시설 환경개선 및 관계법령 기준 충족을 위한 시설 신/증축, 개/보수, 장비구입 지원

□ 프로그램

- 급여 수혜자가 이용하는 프로그램(사회서비스)을 제공하는 공급자(사회보장 관련 기관 포함)에게 해당 프로그램 단위로 예산(서비스 제공비용, 운영비 등) 등을 지원

\* 사업(프로그램) 성격에 따라 다양한 지원형태 포함 가능

(예시)

- (북한이탈주민)자립자활지원 :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지원을 위해 취업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지원, 취업희망자에 대한 바우처 지원 및 온라인 교육지원, 단기 연수사업, 영농정착지원, 창업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을 포괄적으로 수행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지원 : 청소년체험활동, 기초학습지원활동, 급식 및 상담, 부모교육 및 캠프 등 특별활동, 귀가지도 등 프로그램 단위의 포괄적 지원 수행

□ 자원봉사

- 자원봉사를 통한 서비스 공급

(예시)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 대학생 자원봉사를 활용하여 다문화/탈북학생의 학습 및 생활지도 지원

## [부록 4] 실태조사표

ID	1	-			
----	---	---	--	--	--

##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보건복지부(복지급여조사담당관) 주관으로 『2020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는 한국고객만족경영학회입니다.

본 조사는 사회보장급여법 제19조2에 의거하여, “속임수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보장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회보장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 대하여 보장기관이 효과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그 발생 현황, 피해사례 등”에 대해 매 3년 마다 실시되는 실태조사입니다. 해당 실태조사에서는 사회보장분야 부정수급 축소를 위한 방안 모색 및 관리체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온라인 조사 및 면접 조사 등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한 “부정수급 발생 현황 및 유형”, “부정수급 사후관리”, “부정수급 관리조직 및 운영”, “그 밖에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을 조사·파악하고자 합니다.

선생님께서 응답하신 내용 중 개인 관련 내용은 외부에 유출되지 않으며, 통계법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됩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시간을 내어 설문에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 9월

조사주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

조사시행 : 한국고객만족경영학회 리서치센터 평가그룹

##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 ① 통계의 작성 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 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별도의 페이지로 구성)

※ 설문 응답 시 주의사항

1. 본 설문은 뒤로가기 및 응답수정이 되지 않으므로, 설문에 신중히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2. 응답 중 설문을 중단하시게 되면, 기존에 응답된 내용은 자동으로 저장되며 추후 응답이 중단되었던 부분에서부터 다시 설문에 응하실 수 있습니다.(Q8, Q10번의 경우 응답해야 할 자료들을 미리 준비하신 후에 설문에 응하실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3. 해당 사업의 담당자가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19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본 실태조사에서의 『부정수급』은 수급자 또는 행정담당자의 기망 또는 부패와 같이 ‘고의성’을 특징으로 하는 혐의의 부정수급을 의미합니다.

성별	① 남      ② 여	나이	만 _____ 세
직장주소	_____ 시도 _____ 시/군/구 _____ 읍/면/동		
소속기관 시도	①서울 ②부산 ③대구 ④인천 ⑤광주 ⑥대전 ⑦울산 ⑧경기 ⑨강원 ⑩충북 ⑪충남 ⑫전북 ⑬전남 ⑭경북 ⑮경남 ⑯제주 ⑰세종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명			
연락처	연락처 기입시 '-'하이픈 없이 기입하란 안내 문구 필요		

### 응답부서 및 사업 현황과 업무량

※ 본 설문은 뒤로가기 및 응답수정이 되지 않으므로, 설문에 신중히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Q1. (보장기관별) 응답부서의 현황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Q1-1. 귀 부서의 구성원은 모두 몇 명입니까? (현원 기준)

※ 시군구청 '과', 보훈(지)청 '과', 근로복지공단 '부', 국유림관리소 '팀'  
등 주된 조직단위로 응답(앞 페이지에 제시되어 있는 '부서'와 동일)  
계약직 포함(이후 항목 동일)

	명
--	---

Q1-2. 귀 부서에서 과장·팀장 등 부서관리자를 제외한 구성원 수는 모두 몇 명  
입니까? (현원 기준)

	명
--	---

Q1-3. 귀 부서에서 담당하는 복지 또는 사회보장 사업(중앙부처 사업으로 지자체의 자체사업은 제외) 수는 총 몇 개입니까?

총		개
---	--	---

Q1-4. 귀 부서에서 해당 사업의 업무 담당자는 몇 명입니까?  
(과장·팀장 등 부서관리자 제외, 현원 기준)

	명
--	---

Q1-5. 해당 사업의 월평균 신청자 수(또는 신청 건)는 몇 명(건)입니까?  
(총신청자(건)수/12개월)

월평균		명(건)
-----	--	------

Q1-6. 해당 사업의 예산 집행액과 수급 규모를 작성해 주십시오.

2019년 예산 집행액 (국비 + 지방비)	2019년 수급자 수 (연도말 기준, 명)	2019년 누적 참여인원*
백만원	명	명

\* 참여 기간과 상관없이 2019년 한 해 동안 수급한 전체 수급자수를 중복하지 않고 기입(예를 들어, 만약 어떤 사람이 2월에만 수급했다면 1명으로, 2월부터 3월까지 수급하고 다시 12월에 수급해도 중복하지 않고 1명으로 계산)

Q1-7. 해당 사업의 부정수급을 관리하는 부서원은 몇 명입니까?

	명
--	---

### 응답부서의 부정수급 적발 노력 및 관리에 대한 업무량

※ 본 설문은 뒤로가기 및 응답수정이 되지 않으므로, 설문에 신중히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Q2. 귀 부서는 해당 사업의 부정수급 관련 확인 또는 적발을 위해 아래와 같은 노력(조치) 들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아래 사항을 모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Q2-1. 아래 노력(조치)중 귀 부서에서 수행하신 사항들을 모두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 후 ➡ Q2-2)	보기	
	예	아니오
①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상변동 등 변동사항 확인 <input type="text"/>	①	②
② 기관 내 다른 부서, 타 기관 등에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상변동 등 변동사항 확인 요청 <input type="text"/>	①	②
③ 방문확인(가정방문, 신상변동의심자 현장점검 등) <input type="text"/>	①	②
④ 기관 내 다른 부서, 타 기관 등에 방문확인 요청(가정방문, 신상변동의심자 현장점검 등) <input type="text"/>	①	②
⑤ 상담 또는 유선(전화)을 통한 확인 <input type="text"/>	①	②
⑥ 기관 내 감사부서에 부정수급 관련 감사 또는 조사 요청 <input type="text"/>	①	②
⑦ 기관 내 부정수급 전담부서(감사부서 제외)에 부정수급 관련 확인 등 협조 요청 <input type="text"/>	①	②
⑧ 중복 급여·서비스 확인 <input type="text"/>	①	②
⑨ 중점관리대상자 관리 : 부적정수급자 검색 및 부적정수급 의심자 등록 등 <input type="text"/>	①	②
⑩ 상급기관(부처 등)에 조사의뢰 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input type="text"/>	①	②
⑪ 기타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①	②





### 응답부서가 속한 보장기관 차원의 부정수급 관리

※ 본 설문은 뒤로가기 및 응답수정이 되지 않으므로, 설문에 신중히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필요시 질문내용과 관련된 부서의 협조를 받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Q4. 해당 사업의 부정수급을 귀 기관의 감사실 등 감사부서에서도 관리\*하고 있습니까? ( )

\* 부정수급 적발 목적의 감사, 사업부서의 가정방문·현장조사 등 지원,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각종 업무 및 체계 점검 등

① 예 ( ➡ Q4-1)    ② 아니오 ( ➡ Q4-1)    ③ 해당 없음(감사조직 없음) ( ➡ Q5)

Q4-1. 귀 기관의 감사실에서는 해당 사업을 제외한 다른 복지 또는 사회보장 분야 사업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 ) 응답 후 ➡ Q4-2

① 예                      ② 아니오

Q4-2. 감사실 등 감사부서의 부서원은 모두 몇 명입니까?

	명
--	---

Q4-3. 감사실 등 감사부서에서 복지분야(또는 사회보장분야) 부정수급을 관리하는 부서원은 몇 명입니까?

	명
--	---

Q5. 귀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중인 부정수급 신고·접수체계가 있습니까? ( )

※ 중앙 부처 차원의 신고·접수체계는 제외합니다(단, 응답부서가 중앙 부처인 경우 해당 신고접수 체계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Q5-1. 해당 신고·접수체계의 명칭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응답 후 ➡ Q5-2)

--

Q5-2. 해당 신고·접수체계의 운영 형태를 응답해 주십시오.

① 예 ➡

신고·접수체계 종류		보기	
		예	아니오
① 온라인	<input style="width: 80px;" type="text"/>	①	②
② 유선(전화)	<input style="width: 80px;" type="text"/>	①	②
③ 현장 창구 운영	<input style="width: 80px;" type="text"/>	①	②

Q5-3. 온라인 신고접수체계에 '①' 응답하신 경우 해당 신고접수 체계의 URL-주소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http://
---------

② 아니오 ➡ Q6

Q6. 귀 기관에는 부정수급을 전담하는 조직이 있습니까? ( )

(Q5에서 응답한 신고·접수 체계 제외, 응답부서가 전담조직인 경우도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Q6-1. 전담조직명을 기입해주시시오.

(응답 후 ➡ Q6-2)

① 있음 ➡

Q6-2. 부정수급 전담조직의 설치 형태를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응답 후 ➡ Q6-3)

- ① 감사조직에 설치                      ② 감사조직 외 별도 조직(부서)으로 설치  
③ 사업부서들이 속한 국·실에 설치      ④ 기타( )

Q6-3. 부정수급 전담조직의 관리영역에 해당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 )

(응답 후 ➡ Q6-4)

- ① 예                      ② 아니오

Q6-4. 부정수급 전담부서의 부서원은 모두 몇 명입니까?

	명
--	---

② 없음

## 부정수급 관리 현황과 실적

※ 본 설문은 뒤로가기 및 응답수정이 되지 않으므로, 설문에 신중히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귀 부서가 속한 기관 차원에서 해당 사업의 부정수급 관리 현황과 실적에 대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필요시 다른 부서의 협조를 받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Q7. 해당 사업의 부정수급 현황(환수결정액, 환수실적 등)은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 )

(응답 후 ➡ Q7-1)

- ① 예 (정기적으로 현황 관리)      ② 아니오 (비정기적으로 현황 관리)

Q7-1. 해당 사업의 부정수급 현황(환수결정액, 환수실적 등)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 )

- ① 전산시스템                      ② 수기관리 (엑셀, 문서 등으로)  
③ 전산시스템과 수기관리 병행      ④ 기타 ( )

Q8. (공통) 해당 사업의 2019년 1년간 발생한 부정수급 인지(접수) 경로를 작성해 주십시오.

(단위 : 건)

총계 (접수건수)	접수 경로 (인지 또는 접수 건수 입력)								
	제보*		감사	현장점검	정기조사	비정기 조사	정보연계	타기관 조사의뢰	기타
	내부	외부							

\* 해당 기관으로 제보가 접수되는 경우(내부)와 복지로, 국민신문고 등 외부에서 접수되는 경우를 구분해서 기입

\* 해당 값이 없을 경우에는 0을 입력해주세요.

**\* 본 설문은 뒤로가기 및 응답수정이 되지 않으므로, 설문에 신중히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까지 응답은 저장되므로, 본 설문에 응하시기 전 자료를 찾으신 후에 다시 응답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Q9.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부정수급에 대해 일반법(보조금법, 사회보장급여법), 개별법 및 사업안내 (지침) 등에 규정된 조치는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조치 모두 기재: , , )

- ① 지원중단(지급중지)                      ② 환수  
③ 환수를 제외한 금전적 제재(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등)  
④ 벌금, 징역 등 형벌                      ⑤ 명단공표  
⑥ 수사의뢰 및 형사고발                      ⑦ 기타 : 기입  
⑧ 없음(근거법령 및 관련 사업안내 없음) (다른 보기와 선택 불가)

Q10. 해당 사업의 2019년 1년간 이뤄진 부정수급 관련 조치실적을 작성해 주십시오. (선급기)

(단위: 건, 천원)

환수					행정처분					수사 의뢰	형사 고발
고의성 여부	환수결정*		환수실적**		비금전적		금전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유형	건수	금액	건수	건수	
고의적					지급 정지		과태료				
							과징금				
비 고의적					명단 공표		기타				

\* 환수결정 기준 : '19년도에 발생한 환수결정액

\*\* 환수실적 기준 : '19년도 내 환수한 금액(납부액 + 결손처분액), 환수결정액 발생시점과 상관없이 '19년도에 환수한 금액

\*\*\* 해당 값이 없을 경우에는 0을 입력해주세요.

\* 본 설문은 뒤로가기 및 응답수정이 되지 않으므로, 설문에 신중히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까지 응답은 저장되므로, 본 설문에 응하시기 전 자료를 찾으신 후에 다시 응답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Q10-1. 해당 사업의 경우 환수결정 이후 환수가 원활하게 이뤄집니까?

- ① 예 → (Q11)      ② 아니오 → (Q10-2)

Q10-2. 환수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개까지 복수응답 : , )

- ① 환수 대상자의 항의 등 민원대응      ② 환수 대상자 소재 불분명  
 ③ 환수와 관련된 강제력 부족      ④ 환수 대상자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⑤ 업무과중 또는 인력부족      ⑥ 환수방법의 한계  
 ⑦ 서류상 무재산 등 대상자의 재산은닉      ⑧ 경제적 취약성 등 실제로 환수금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  
 ⑨ 기타 (기입: )

※ Q10관련 참고 사항 : 보조금 부정수급 유형 분류 (기획재정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망, 부패 (고의적, 혐의의 부정수급)	허위	허위 등록, 허위 신청, 허위 선정, 허위 계약, 허위 청구, 허위 집행, 허위 작성, 가격 부풀리기, 자부담금 대납, 위·변조, 카드깡 등
	공모	편중거래, 부정당업체 계약, 특혜 선정, 내부자 공모, 거래처 공모 등
	임의처리	무단 담보, 무단 양도, 무단 임대, 무단 인출, 임의처분, 임의사용 등
	가족간 거래	가족 등록, 가족 선정, 가족 지급, 가족 채용 등
수급자 오류, 행정오류 (비고의적, 광의의 부정수급)	관리미비	자격관리 미흡, 평가관리 미흡, 선정관리 미흡, 타당성 미검토, 규정 미비, 집행 오류, 정산 오류, 과다 집행, 분리 계약 등
	업무미숙	업무처리 미숙, 절차 미숙, 사용 미숙, 규정 미숙지 등
	증빙미비	전자세금계산서, 영수증 미비, 기타 증빙 등
	착오	행정 착오, 판단 착오, 거래처 착오, 인식 착오 등
	중복처리	중복 등록, 중복 신청, 중복 선정, 중복 청구, 중복 증빙, 중복 결제 등

##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활동

※ 필요시 질문 내용과 관련된 부서 또는 기관의 협조를 받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Q11-1. 귀 기관은 해당사업의 초기상담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① 예 ➡

Q11-2. 귀 기관에서는 해당 사업에 대한 초기상담 시 부정수급과 관련한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까? (      ) 응답 후 ➡ Q11-4

① 예                      ② 아니오

② 아니오 ➡

Q11-3. 해당 사업에서 초기상담은 어느 기관이 담당하고 있습니까?

(복수응답 가능:      ,      ) 응답 후 ➡ Q11-4

① 특별지방행정기관 : 지방 보훈(지)청, 지방고용노동(지)청 등

② 시군구청                                      ③ 읍면동

④ 공공기관 :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

⑤ 고용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⑥ 지방교육행정기관 (17개 시도교육청)

⑦ 기타 (                      )                      ⑧ 담당기관 없음

Q11-4. 귀 기관(또는 초기상담을 담당하는 기관)에서는 해당 사업 수급자에게 부정수급과 관련한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까? ( )

Q11-5. 해당 안내의 대상 범위를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응답 가능) 응답 후

➔ Q11-6

① 예 → ① 수급자 전부                      ② 부정수급 고위험자  
③ 수급자 일부(수급자의 일정비율)      ④ 기타 (                      )  
2번과 3번만 함께 선택가능 (안되면 단수로 구성)

Q11-6. 2019년 기준으로 안내대상에 대한 평균 안내 횟수를 기입해 주십시오.

(응답 후 → Q11-8) (대상당 평균 회)

Q11-7 해당 사업 수급자에게 변동사항 신고 등 부정수급과 관련한 주의사항 안내  
는 어느 기관이 담당하고 있습니까? ( ) 응답 후 → Q11-8

② 아니오 → ① 특별지방행정기관 : 지방 보훈(지)청, 지방고용노동(지)청 등  
② 시군구청 ③ 읍면동  
④ 공공기관 :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  
⑤ 고용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⑥ 지방교육행정기관 (17개 시도교육청)  
⑦ 기타 ( ) ⑧ 담당기관 없음

Q11-8. 해당 사업의 경우 수급자의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조사, 현장조사 모두 포함)가 실시되고 있습니까? ( )

Q11-9. 해당 조사의 대상 범위를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응답 가능)

(응답 후 ➡ Q11-10)

① 예 →      ① 수급자 전부                                  ② 부정수급 고위험자  
                  ③ 수급자 일부(수급자의 일정비율)        ④ 기타 (                                  )

Q11-10. 2019년 기준으로 전체 수급자 대비 적정성 확인조사 대상비율을 기입해  
주십시오. (            %)    응답 후 ➡ Q12

② 아니오 → Q12

##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교육

Q12. 귀하는 2019년에 부정수급 교육(관리, 예방, 조사기법 등)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까? ( )

※ 정부부처, 광역시도 등 다른 기관은 물론 귀 기관의 자체 교육도 포함

① 예 ➡ Q12-1 부정수급 관련 교육을 총 몇 회 참석하셨습니까? 총 \_\_\_\_\_ 회(➡ Q12-2)

② 아니오 ➡ (Q12-4)

Q12-2. 부정수급 교육의 주최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 회수가 2회 이상인 경우 최근 개최된 부정수급 교육의 주최를 2개까지만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① 정부부처    ② 광역시도  
③ 특별지방행정기관 : 지방 보훈(지)청, 지방고용노동(지)청 등  
④ 해당 기관 자체 교육                          ⑤ 기타 ( )

Q12-3. 해당 교육이 부정수급 관리 및 예방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 , )

- ① 크게 도움이 되었다                      ② 조금 도움이 되었다  
③ 도움이 안 됨

Q12-4. 효과적인 부정수급 관련 교육이 이뤄지기 위해 교육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자유롭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응답자 일반 현황

DQ1. 귀하의 현재 고용 상태를 응답해 주십시오. ( )

- ① 정규직 공무원(⇒ DQ2)      ② (무기)계약직 공무원(⇒ DQ2)  
③ 정규직 민간인력(⇒ DQ4)      ④ 계약직 민간인력(⇒ DQ4)

DQ2. 귀하의 직급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9급 ② 8급 ③ 7급 ④ 6급 ⑤ 5급 ⑥ 그 외( )

DQ3. 귀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하신 총 경력은 얼마나 되셨습니까? ( ) ➡ DQ5

- ① 3년 미만 ② 3~5년 미만 ③ 5~10년 미만 ④ 10~15년 미만 ⑤ 15년 이상

DQ4. 귀하께서 현재 업무에 종사하신 기간은 얼마나 되셨습니까? ➔ DQ5

- ① 3년 미만 ② 3~5년 미만 ③ 5~10년 미만 ④ 10~15년 미만 ⑤ 15년 이상

DQ5. 설문내용에 응답해 주신 답례로 모바일 쿠폰(5천원 상품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번호를 남겨주시지 않으면 조사가 종료되며 별도의 쿠폰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모바일 쿠폰을 수령하시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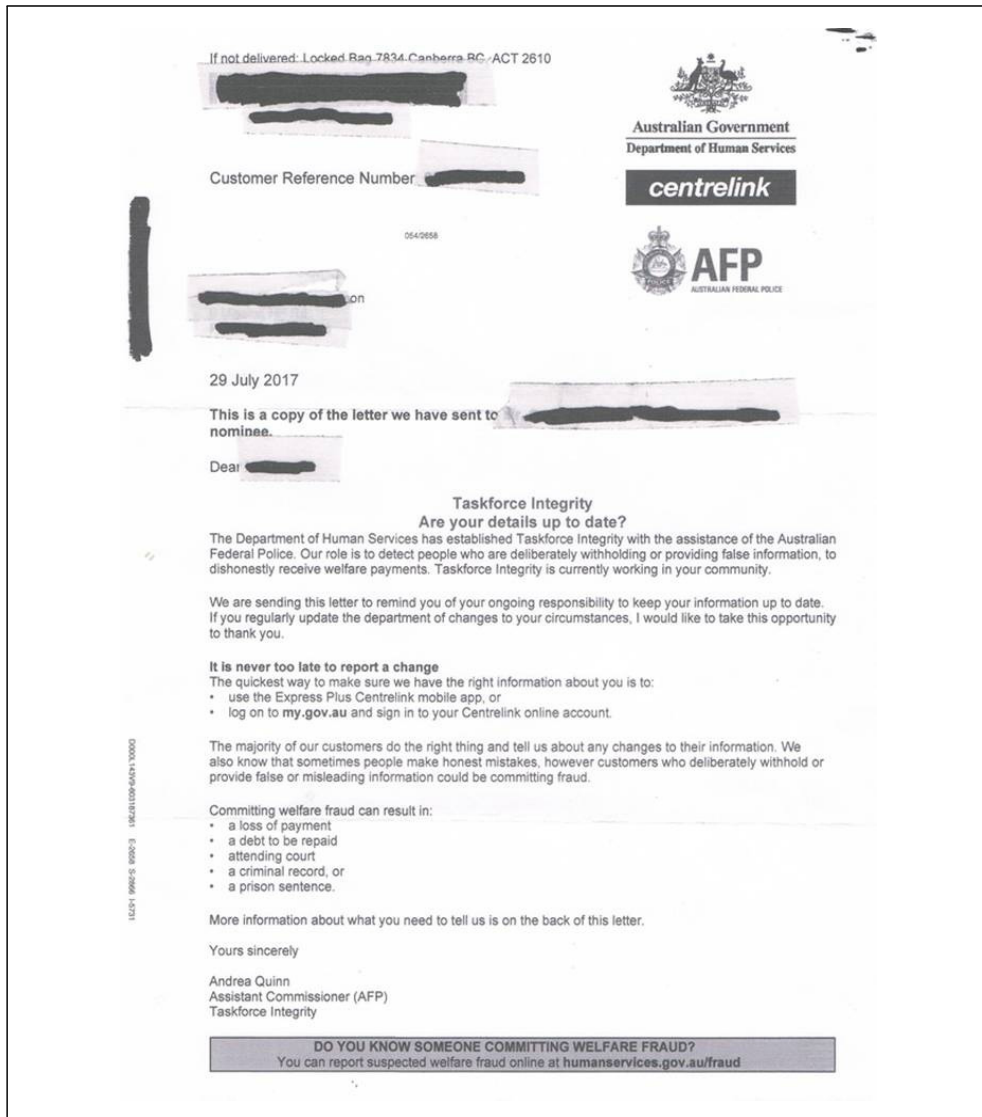
- ① 예 ➡ DQ5-1    ② 아니오 ➡ 조사종료

DQ5-1. 모바일 쿠폰 수령을 위해 휴대폰 번호를 적어주십시오

- \*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선생님의 휴대폰 번호는 모바일 쿠폰(상품권) 발송 목적 및 검증 목적 이외에 외부로 유출 또는 타 목적에 의해 사용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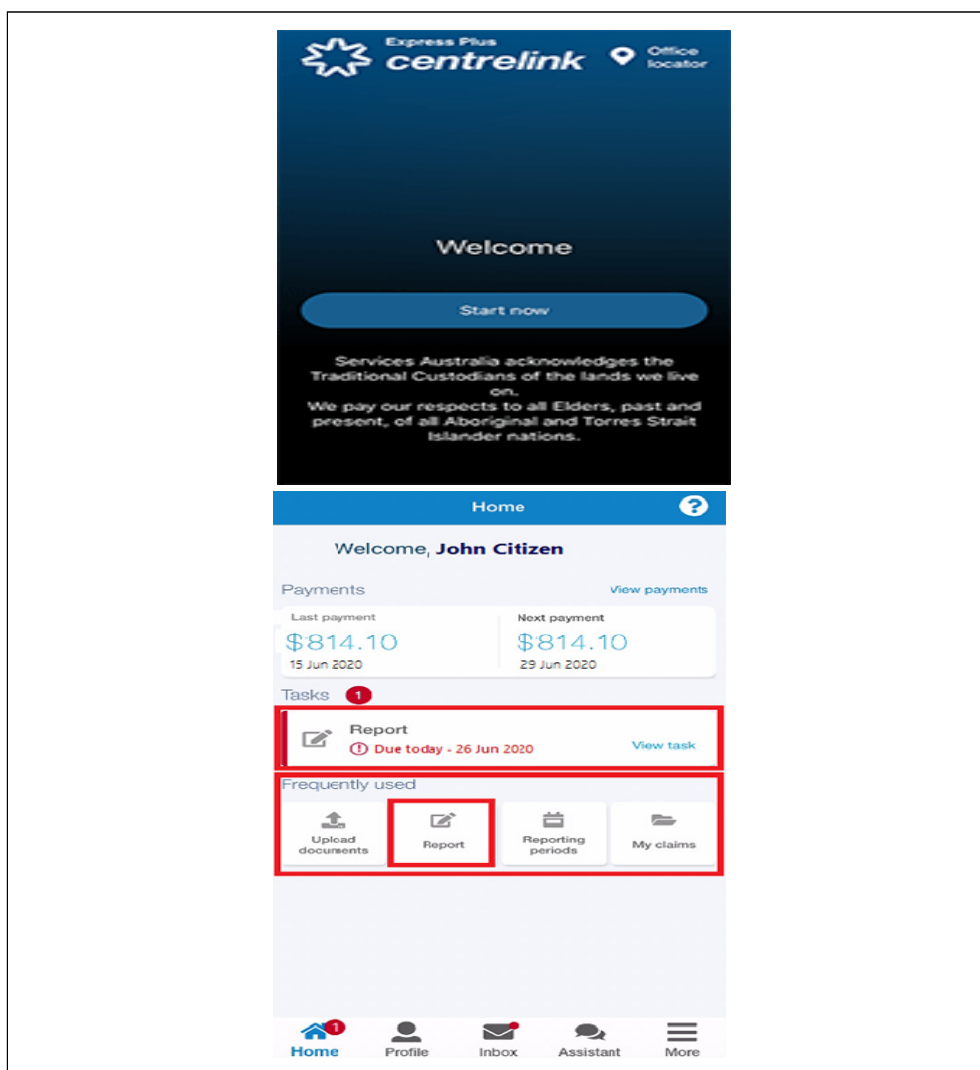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록 5] 부정수급 감지 편지(좌)와 전화 메시지(우)



자료: Dingwall, D. (2017). *Centrelink sending 'intimidating' texts to clients in fraud crackdown*. Sydney Morning Herald. Retrieved from <https://www.smh.com.au/public-service/centrelink-sending-intimidating-texts-to-clients-in-fraud-crackdown-20170809-gxsfcs.html> 2020. 11. 28.

## [부록 6] 센터링크 모바일 앱(Express Centrelink)



자료: Services Australia. (2020b). Express Plus Centrelink mobile app help - Upload documents. Retrieved from <https://www.servicesaustralia.gov.au/individuals/online-help/centrelink/upload-documents> 2020. 11. 28.

## [부록 7] 소득 최신화 과정

### Check and update your past income

Check and update your past income  
Complete these steps by 21 Aug 2019 - you have 27 days remaining.

Ask for more time

Call us

Help

1. Update your contact details

✓ Completed

[Change](#)

2. Update your employer details

[Get started](#)

3. Update your past income details

4. Review and confirm

[Save and close](#)

### Your income details

<p>What you told us in the past</p> <p><b>\$521.36</b></p>	<p>What you just told us after checking your income</p> <p><b>\$36,454.48</b></p>
<p>Centrelink payments you received in the past</p> <p><b>\$4,998.57</b></p>	<p>Centrelink payments you should've received based on your updated income</p> <p><b>\$144.93</b></p>
<p>What this means the amount you've been overpaid</p> <p><b>\$4,853.64</b></p>	

### Your result explanation

Your result explanation

The result table helps you understand how we worked out your result.


Debt Period 05 Aug 2017 to 25 May 2018

자료: Services Australia. (2020c). Income Compliance Program. Submission to the Senate Community Affairs References Committee, Services Australia.

## [부록 8] 센터링크 부정수급 고지서


Letter D: Accounts payable letter

Locked Bag 7834 Canberra Bc, ACT 2610



CLK2SS340 H070507650001

Reference Number:



Date of issue:

Dear \_\_\_\_\_

Account number:

**DUE DATE:**

**Amount due:** \$

SS340.1812

### Account Payable

We have reassessed your Age Pension. You were paid more than you were entitled to and you need to pay the money back.

**Why you owe money**  
Because of an increase in the value of your total assets due to an inheritance, you received a higher rate of the Age pension for the period to than you were entitled. You have therefore been overpaid \$. We are required to recover this amount.

**Details of amount due for Age Pension**

Period	Received	Entitled	Amount
	\$	\$	\$
to			


To discuss the reason for this debt please call 1800 072 076 (call charges may apply).

**What you need to do**  
You need to pay the amount due using one of the payment methods listed on the payment slip. If you cannot pay by , please call 1800 076 072 to discuss your payment options.

Please see important information on the next page

---

**Payment Slip**



\*802700162911 VCO

**BPAY** Biller Code: Ref:

© Registered BPAY Pty Ltd  
ABN 65 078 127 516

**Telephone & Internet Banking-BPAY**  
Contact your bank or financial institution to make this payment from your cheque or savings account. More info: [bpay.com.au](http://bpay.com.au)

**POST billpay** Use POST billpay to pay by phone on 131 816 or on the internet at

**Pay online** - you can make a payment using [postbillpay.com.au](http://postbillpay.com.au)  
Visa or Mastercard by logging into your myGov you can create one by going to [my.gov.au](http://my.gov.au)

**Direct Debit** To arrange automatic deductions from outlet, your financial institution, log in to your myGov account or call us on 1800 076 072

**Pay in person** at any Australia Post office or postal

자료: Services Australia. (2020c). Income Compliance Program. Submission to the Senate Community Affairs References Committee, Services Australia.

## [부록 9] 환수결정액 및 환수실적

〈부표 3〉 기본조사 환수결정액 총액 : 부정수급을 파악하고 있는 198개 사업 대상

(단위: 백만 원, %)

분류	구분	예산(A)	환수결정액			예산 대비		
			전체 (B)	부정수급 (C)	오류수급 (D)	(B/A)	(C/A)	(D/A)
사업지원 형태 1	현금	44,418,534	35,897 (100.0)	7,138 (19.9)	28,759 (80.1)	0.081	0.016	0.065
	비현금	51,864,300	58,486 (100.0)	22,094 (37.8)	36,392 (62.2)	0.113	0.043	0.070
사업지원 형태 2	현금	44,418,534	35,897 (100.0)	7,138 (19.9)	28,759 (80.1)	0.081	0.016	0.065
	현물	24,508,646	1,156 (100.0)	642 (55.5)	513 (44.4)	0.005	0.003	0.002
	바우처	12,333,417	2,558 (100.0)	1,149 (44.9)	1,409 (55.1)	0.021	0.009	0.011
	프로그램	8,479,918	34,500 (100.0)	19,806 (57.4)	14,694 (42.6)	0.407	0.234	0.173
	시설입소	214,095	0	0	0	0.000	0.000	0.000
	대여/감면	6,328,224	20,272 (100.0)	497 (2.5)	19,775 (97.5)	0.320	0.008	0.312
자산기준	자산기준 없음	39,204,005	44,100 (100.0)	25,904 (58.7)	18,196 (41.3)	0.112	0.066	0.046
	자산기준 있음	57,078,829	50,283 (100.0)	3,329 (6.6)	46,955 (93.4)	0.088	0.006	0.082
보장기관	지자체 또는 교육청	58,037,446	31,665 (100.0)	4,634 (14.6)	27,031 (85.4)	0.055	0.008	0.047
	특별지방 행정기관	9,781,534	3,138 (100.0)	720 (22.9)	2,418 (77.1)	0.032	0.007	0.025
	공공기관	20,266,026	56,637 (100.0)	20,947 (37.0)	35,690 (63.0)	0.279	0.103	0.176
	기타	1,795,693	2,941 (100.0)	2,931 (99.7)	10 (0.3)	0.164	0.163	0.001
	2개 이상의 보장기관	6,402,135	1 (100.0)	0 (0.0)	1 (100.0)	0.000	0.000	0.000
전체		96,282,834	94,383 (100)	29,232 (31.0)	65,151 (69.0)	0.098	0.030	0.068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a).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위한 기본현황 조사(원자료).

〈부표 4〉 기본조사 환수실적 총액 : 부정수급을 파악하고 있는 198개 사업 대상

(단위: 백만 원, (괄호) %)

분류	구분	예산(A)	환수실적액			예산 대비		
			전체 (B)	부정수급 (C)	오류수급 (D)	(B/A)	(C/A)	(D/A)
사업지원 형태 1	현금	44,418,534	19,978 (100.0)	4,292 (21.5)	15,686 (78.5)	0.045%	0.010%	0.035%
	비현금	51,864,300	51,849 (100.0)	20,477 (39.5)	31,372 (60.5)	0.100%	0.039%	0.060%
사업지원 형태 2	현금	44,418,534	19,978 (100.0)	4,292 (21.5)	15,686 (78.5)	0.045%	0.010%	0.035%
	현물	24,508,646	609 (100.0)	294 (48.3)	314 (51.6)	0.002%	0.001%	0.001%
	바우처	12,333,417	1,313 (100.0)	282 (21.5)	1,031 (78.5)	0.011%	0.002%	0.008%
	프로그램	8,479,918	31,771 (100.0)	19,405 (61.1)	12,366 (38.9)	0.375%	0.229%	0.146%
	시설임소	214,095	0	0	0	0.000%	0.000%	0.000%
	대여/감면	6,328,224	18,156 (100.0)	495 (2.7)	17,661 (97.3)	0.287%	0.008%	0.279%
자산기준	자산기준 없음	39,204,005	37,947 (100.0)	23,141 (61.0)	14,806 (39.0)	0.097%	0.059%	0.038%
	자산기준 있음	57,078,829	33,880 (100.0)	1,627 (4.8)	32,253 (95.2)	0.059%	0.003%	0.057%
보장기관	지자체 또는 교육청	58,037,446	17,541 (100.0)	1,584 (9.0)	15,957 (91.0)	0.030%	0.003%	0.027%
	특별지방 행정기관	9,781,534	723 (100.0)	616 (85.2)	107 (14.8)	0.007%	0.006%	0.001%
	공공기관	20,266,026	50,870 (100.0)	20,005 (39.3)	30,865 (60.7)	0.251%	0.099%	0.152%
	기타	1,795,693	2,572 (100.0)	2,563 (99.7)	9 (0.3)	0.143%	0.143%	0.001%
	2개 이상의 보장기관	6,402,135	120 (100.0)	0 (0.0)	120 (100.0)	0.002%	0.000%	0.002%
전체		96,282,834	71,827 (100.0)	24,768 (34.5)	47,058 (65.5)	0.075%	0.026%	0.049%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a).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위한 기본현황 조사(원자료).

〈부표 5〉 기본조사 현금급여 환수결정액 총액 : 현금급여 78개 사업

(단위: 백만 원, (괄호) %)

분류	구분	예산(A)	환수결정액(B)			예산 대비 (B/A)
			전체	부정수급	오류수급	
자산기준	자산기준 없음	13,163,034	7,136 (100.0)	5,046 (70.7)	2,089 (29.3)	0.054%
	자산기준 있음	31,421,471	28,762 (100.0)	2,092 (7.3)	26,670 (92.7)	0.092%
보장기관	지자체 또는 교육청	30,820,366	28,496 (100.0)	3,067 (10.8)	25,429 (89.2)	0.092%
	특별지방행정기관	9,680,969	3,030 (100.0)	623 (20.6)	2,407 (79.4)	0.031%
	공공기관	654,958	1,430 (100.0)	517 (36.2)	913 (63.8)	0.218%
	기타	1,580,531	2,941 (100.0)	2,931 (99.7)	10 (0.3)	0.186%
	2개 이상의 보장기관	1,847,681	0	0	0	0.000%
	전체	44,584,505	35,897 (100.0)	7,138 (19.9)	28,759 (80.1)	0.081%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a).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위한 기본현황 조사(원자료).

〈부표 6〉 기본조사 현금급여 환수실적 총액 : 현금급여 78개 사업

(단위: 백만 원, (괄호) %)

분류	구분	예산(A)	환수실적(C)			예산 대비 (C/A)
			전체	부정수급	오류수급	
자산기준	자산기준 없음	13,163,034	4,741 (100.0)	3,384 (71.4)	1,357 (28.6)	0.036%
	자산기준 있음	31,421,471	15,237 (100.0)	908 (6.0)	14,329 (94.0)	0.048%
보장기관	지자체 또는 교육청	30,820,366	15,794 (100.0)	1,055 (6.7)	14,739 (93.3)	0.051%
	특별지방행정기관	9,680,969	644 (100.0)	544 (84.5)	100 (15.5)	0.007%
	공공기관	654,958	849 (100.0)	130 (15.3)	719 (84.7)	0.130%
	기타	1,580,531	2,572 (100.0)	2,563 (99.7)	9 (0.3)	0.163%
	2개 이상의 보장기관	1,847,681	119 (100.0)	0 (0.0)	119 (100.0)	0.006%
	전체	44,584,505	19,978 (100.0)	4,292 (21.5)	15,686 (78.5)	0.045%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a).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위한 기본현황 조사(원자료).



## 〈부표 7〉 실태조사 대상사업의 부정수급과 오류수급 수준 (평균)

(단위: 건수, 만원)

환수결정				환수실적			
부정수급		오류수급		부정수급		오류수급	
건	금액(만원)	건	금액(만원)	건	금액(만원)	건	금액(만원)
3.3	272	10.8	784	2.3	236	7.6	742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b).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 〈부표 8〉 실태조사 대상사업의 부정수급 및 오류수급 규모 (총액)

(단위: 건, 백만원)

분류	구분	사례수	환수결정액				환수실적					
			부정수급		오류수급		부정수급		오류수급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전체		(3192)	10,636	8,697.8	34,563	25,003.9	7,209	7,528.5	24,312	2,3649.0		
자산조사	적용	(2148)	10,488	7,047.6	33,548	24,076.0	7,067	6,416.8	23,503	2,2956.9		
	미적용	(1044)	148	1,650.2	1,015	927.9	142	1,111.8	809	692.0		
진단적 기준	적용	(609)	42	820.3	456	2,840.7	35	479.4	353	6,743.8		
	미적용	(2583)	10,594	7,877.4	34,107	22,163.2	7,174	7,049.1	23,959	16,905.2		
자산 및 진단 기준	자산기준	(1791)	10,469	7,014.0	33,224	21,547.1	7,051	6,411.8	23,243	16,392.9		
	진단기준	(252)	23	786.7	132	311.8	19	474.4	93	179.8		
	자산및 진단기준	(357)	19	33.6	324	2,528.9	16	5.0	260	6,564.0		
	없음	(792)	125	863.4	883	616.1	123	637.3	716	512.3		
보장기관	지자체 또는 교육청	전체	(2784)	9,713	5,057.6	29,744	19,233.3	6,362	2,937.4	19,628	19,861.5	
		지자체	시	(885)	1,426	1,347.1	14,900	4,687.5	1,474	882.8	7,471	4,603.7
			군	(1026)	740	578.7	2,232	1,185.1	547	303.3	2,097	2,213.6
			구	(857)	7,537	3,119.8	12,611	13,357.3	4,330	1,741.2	10,059	13,041.8
	특별지방행정기관		(373)	386	3,203.7	4,804	5,767.8	310	4,313.4	4,670	3,786.6	
	공공기관		(32)	537	436.5	10	1.0	537	277.7	14	0.9	
	기타		(3)	0	0.0	5	1.9	0	0.0	0	0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b).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 [부록 10] 기본조사 포함 사회보험 사업

〈부표 9〉 기본조사 포함 사회보험 사업

사회보험명	순번	사업명	소관부처	보장기관
국민연금	1	노후연금자금 대부사업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2	노후준비서비스		
산재보험	3	(산재근로자)케어센터지원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4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5	산재근로자복지지원(장학금)		
	6	산재근로자직장복귀지원		
	7	산재근로자합병증등예방관리		
	8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9	산재근로자직업훈련		
	10	진폐근로자보호		
	11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국민건강보험	12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경감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13	보험급여(국민건강보험 장애인보장구)		
장기요양보험	14	기타재가급여(장기요양보험복지용구),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시설급여 재가급여		
고용보험	15	모성보호육아지원(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포함) 급여, 육아휴직등 급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16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근로복지공단
	17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고용센터
	18	직업훈련생계비대부		근로복지공단

## [부록 11] 부정수급 규모 미파악 사업 리스트

〈부표 10〉 기본조사 부정수급 규모 미파악 사업 리스트 (118개 사업)

순번	사회보장사업명	소관부처 (미파악 사업수)	보장기관	자산조사 여부
1	(산재근로자)케어센터지원	고용노동부 (4)	근로복지공단	없음
2	산재근로자직장복귀지원		근로복지공단	없음
3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직접 수행 (고용센터)	없음
4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		광역자치단체	없음
5	소외계층 통신접근권 보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한국정보화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총괄)	없음
6	온라인 정보화교육		한국정보화진흥원	없음
7	다문화가정, 농어업인 정보화 교육		한국정보화진흥원	없음
8	고교 학비 지원	교육부 (8)	17개 시도교육청	있음
9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17개 시도교육청	있음
10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17개 시도교육청	있음
11	취약계층 우수인재 육성사업(꿈사다리장학제도)		시도교육청	있음
12	WEE 클래스 상담지원		전국 초·중·고 상담실	없음
13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17개 시도교육청	있음
14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국립특수교육원	없음
15	급식비		17개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	있음
16	국가유공자보철구지급	국가보훈처 (16)	소속기관	없음
17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증 발급		시군구	있음
18	교통시설 이용지원(버스, 내항여객선, KTX 등)		국가보훈처	없음
19	위탁병원진료		부처 직접 관리	없음
20	국가유공자재가복지지원		부처 직접 관리	있음
21	양로지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없음
22	보훈요양원 이용지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있음
23	고엽제특별지원		보훈지청	있음
24	보훈병원진료		부처 직접 관리	없음
25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7개 보훈관서	없음
26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무료법률구조지원		부처 직접 관리	있음
27	장기복무제대군인취업지원		지방 보훈관서 보훈과	없음
28	국가유공자등대부지원		보훈지(방)청	있음
29	영주귀국정착금		보훈(지)청	있음
30	재해위로금 지급		보훈지(방)청	없음
31	국가유공자등 취업지원		부처 직접 관리	없음
32	장기전세주택공급	국토교통부 (8)	광역자치단체 또는 시군구, 주택도시보증공사, LH, 지방공사	있음

순번	사회보장사업명	소관부처 (미파악 사업수)	보장기관	자산조사 여부
33	주주택지원(응자)		부처직접관리	없음
34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주택도시보증공사, 수탁은행 (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	있음
35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지원사업		광역자치단체 또는 시군구, 주택도시보증공사, LH, 지방공사	있음
36	행복주택 공급		광역자치단체 또는 시군구, 주택도시보증공사, LH, 지방공사	있음
37	영구임대주택 공급		광역자치단체 또는 시군구, 주택도시보증공사, LH, 지방공사	있음
38	국민임대주택공급		광역자치단체 또는 시군구, 주택도시보증공사, LH, 지방공사	있음
39	공공주택공급(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광역자치단체 또는 시군구, 주택도시보증공사, LH, 지방공사	있음
40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금융위원회 (2)	한국주택금융공사	있음
41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있음
42	농촌주택개량자금지원	농림축산식품부 (1)	시군구, NH 농협은행	없음
43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	대검찰청 (1)	전국 59개 검찰청	없음
44	소외계층 방송 접근권 보장	방송통신위원회 (1)	시청자미디어재단	있음
45	권역재활병원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지원	보건복지부 (43)	권역재활병원	없음
46	저소득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사업		시군구(사업팀)	있음
47	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		시군구보건소	있음
48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시군구보건소	있음
49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시군구보건소	없음
50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부처 직접 관리	있음
51	의사상자지원		시군구	없음
52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드림스타트)		시군구	있음
53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 배부		시군구보건소	없음
54	노후준비서비스		국민연금공단	없음
55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보건소(대상자선정)	있음
56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국민건강보험공단	있음
57	재가암관리		보건소	없음
58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시도, 시군구	없음
59	노숙인등 복지지원		17개 시도, 및 시군구	없음

순번	사회보장사업명	소관부처 (미파악 사업수)	보장기관	자산조사 여부
60	다함께 돌봄 사업		시도, 중앙부처	없음
61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한국장애인도우미연합회	없음
62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시군구	없음
63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시각장애인협회	없음
64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없음
65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경감		국민건강보험공단	있음
66	노숙자 등 알코올중독자 사례관리 사업		시도, 시군구	없음
67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시도, 시군구	있음
68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 (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 포함)		시도, 시군구	없음
69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척수장애인협회	없음
70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시군구	있음
71	취학전 아동 실명예방		민간기관(한국실명예방재단)	있음
72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및환아관리, 선천성난청검사및보청기지원		시군구 보건소	있음
73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및환아관리, 선천성난청검사및보청기지원		시군구 보건소	있음
74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및환아관리, 선천성난청검사및보청기지원		시군구 보건소	있음
75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없음
76	여성장애인지원사업		시군구	있음
77	여성장애인지원사업		시군구	없음
78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시군구	있음
79	전립선 등 노인성질환 예방관리		부처직접관리	없음
80	노인보호전문기관		시군구	없음
81	장애인거주시설 실비입소료 지원		시군구	있음
82	사할린한인지원		시군구	없음
83	노인무릎관절수술비 지원		보건소	있음
84	장애인자립자금		금융기관	있음
85	재난의료비 지원사업		국민건강보험공단	있음
86	난임부부수술비지원		시군구 보건소	있음
87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시도	있음
88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산림청 (4)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있음
89	산림서비스도우미		시군구	없음
90	산림보호지원단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없음
91	공공산림가꾸기		시군구	있음

순번	사회보장사업명	소관부처 (미파악 사업수)	보장기관	자산조사 여부
92	사회복지시설신재생에너지보급	산업통상자원부 (3)	17개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 한국에너지공단	없음
93	공공(임대)주택신재생에너지지원 (구 보급자리주택신재생보급)		한국에너지공단, LH 및 지방공기업	있음
94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		지자체(광역·기초)	있음
95	내일이룸학교	여성가족부 (9)	한국생산성본부	없음
96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시군구	없음
97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운영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있음
98	미혼모·부 초기지원 (권역별미혼모부자거점기관 운영)		시군구	있음
99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시군구	있음
100	취약위기가족돌봄지원(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	있음
101	청소년유해환경개선		시도	없음
102	성폭력피해아동청소년 전용쉼터운영지원		시도, 시군구	없음
103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재활사업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부처 직접 관리	없음
104	소상공인지원(용자)	중소벤처기업부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없음
105	납북피해자 지원	통일부 (8)	통일부 직접 관리	없음
106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없음
107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정착금)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없음
108	북한이탈주민 상담지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없음
109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없음
110	북한이탈주민 정착자산형성(미래행복통장)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있음
111	(북한이탈주민) 자립자활지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없음
112	(북한이탈주민)주택알선 지원		부처 직접 관리	없음
113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해양수산부 (3)	수협중앙회, 해양수산부	없음
114	도시민여객선운임지원		8개 광역지자체	없음
115	어촌 가사도우미 지원		수협중앙회	있음
116	지방세비과세·감면	행정안전부 (2)	시군구	없음
117	풍수해 보험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민간보험사	있음
118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환경부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a).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위한 기본현황 조사(원자료).